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Policy Strategies for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Living Hubs
to Enhance the Living Population in Depopulation Regions

장민영 Jang, Minyoung

방보람 Bang, Boram

김영하 Kim, Youngha

(auri)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Policy Strategies for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Living Hubs
to Enhance the Living Population in Depopulation Regions

지은이	장민영, 방보람, 김영하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5년 10월 26일, 발행: 2025년 10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www.auri.re.kr>
가격: 25,000원, ISBN: 979-11-5659-512-0

연구진

연구책임

장민영 연구위원

연구진

방보람 부연구위원

김영하 부연구위원

외부연구진

설문조사 지원: (주)эм브레인리서치

연구보조원

이동윤 서울시립대학교 박사

이유리 한양대학교 박사

연구심의위원

오성훈 부원장

성은영 지역재생본부장

조영진 공간AI·빅데이터본부장

정 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자문위원

문승규 블랭크 대표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엄선용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부교수

윤병훈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윤소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주선 충남대학교 조교수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단장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준형 도시공감협동조합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창민 사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이사

정성준 미스터멘션 대표

정혜영 지역입지분석연구소 대표

지남석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는 2020년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의 인구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저하와 지역발전 정체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는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24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산출·공표하였으며, 지방시 대위원회 산하에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생활인구 제도 도입을 위한 틀 마련에 주력해 왔으나, 생활인구 정책을 인구감소지역에 어떻게 적용하고 작동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상당 부분이 정주인구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전략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체류인구 대상 사업들은 대부분 단기 관광객 유치나 체류시간 연장을 목표로 하는 관광사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워케이션 사업의 경우에도 일부 공공주도 조성 시설에서 수요 확보 및 운영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체류 공간 조성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생활인구의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거주 형태를 반영한 공간 설계 및 운영전략은 여전히 부족하다. 생활인구는 유연거주를 기반으로 하거나 정주인구와 다른 거주 패턴과 공간 수요를 가지고 있으나, 대다수 사업에서 조성된 공간들은 관광객 대상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구성이나 운영전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생활인구의 다양한 체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과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생활거점'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활인구의 정주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운영방안 및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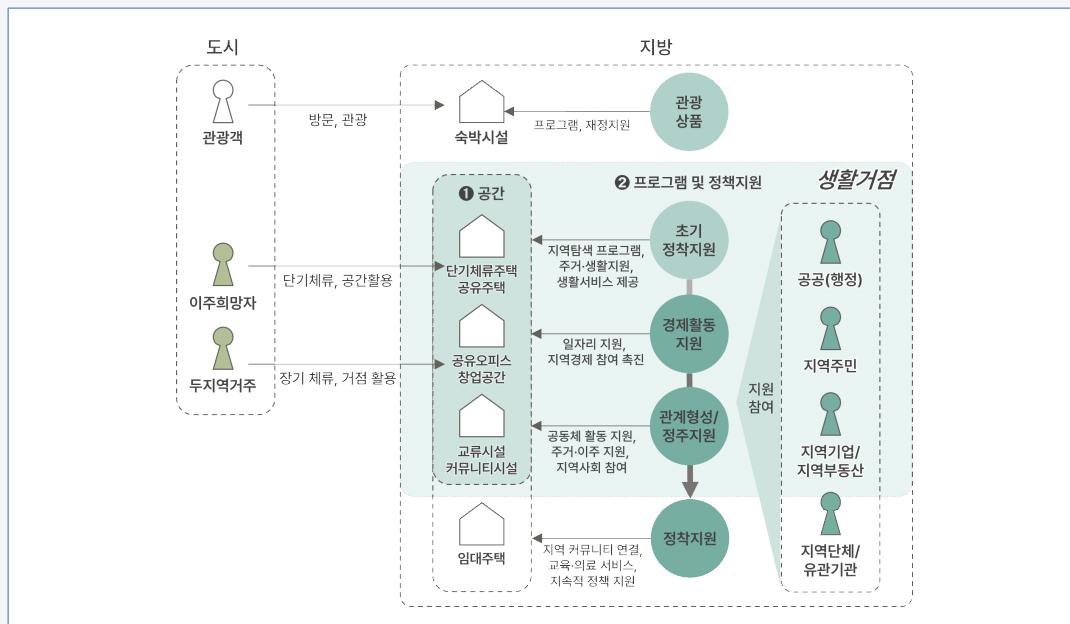
제2장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과 구성요소

ii

2장에서는 이론고찰을 통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 민간 부문 생활거점 조성·운영 동향을 검토하여 생활거점 조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 정립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인프라 발달과 디지털 전환으로 이동성과 유연성이 확대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 활력에 기여하는 인구를 포괄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생활거점'은 단순한 임시 숙박공간이 아니라 체류형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일정 기간 머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거점을 '체류-관계형성-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사회적 인프라이자 종합적인 생활지원 플랫폼으로 정의한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생활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지원이 통합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활거점 개념도

출처: 姫野由香(2023, p.54)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개념에 맞게 연구진 작성

■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정책 동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생활인구'를 제도적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올래, 지역활력타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등 다양한 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과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전담조직 운영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생활인구 활성화공모사업이나 경상남도의 지역 특화형 생활거점, 강원도의 강원스테-이 시범사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과 체류기반 조성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도 공동소유 세컨하우스, 공유숙박 플랫폼, 빙집 큐레이션 플랫폼 등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주거·체류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며, ICT 규제특례를 활용한 공유숙박 실증사업 등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정책 동향으로는 일본의 ‘두지역거주(二地域居住)’ 활성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두지역거주를 ‘특정거주’로 제도화하였고, 지자체가 ‘특정거주촉진계획’을 수립하고 ‘특정거주거점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규제 특례 적용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생활거점 조성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생활거점은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서비스)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숙박·주거시설뿐 아니라 공유오피스, 커뮤니티시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물리적 기반으로서 공간 조성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지역 체험, 일자리 연계, 문화 교류 등 생활인구와 지역 간 관계 형성과 정착을 유도하는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일자리 연계, 정착 지원금, 생활정보 제공 등 생활인구의 지역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높이는 행·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세 가지 축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때 생활거점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역 여건과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성 및 유연한 운영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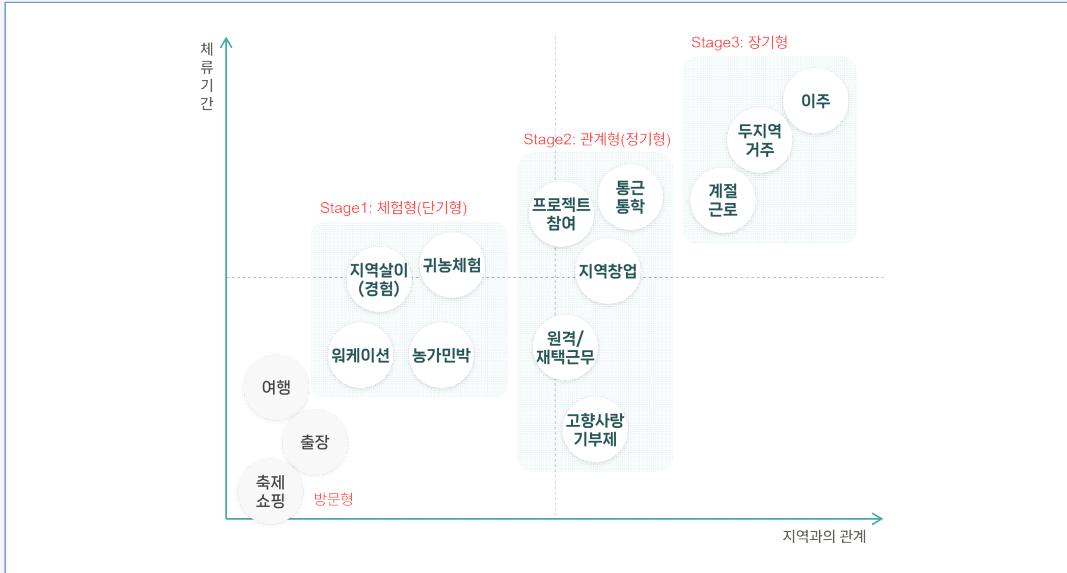
제3장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및 생활거점 수요 분석

3장에서는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과 생활인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을 분석하고, 생활거점의 공간, 프로그램, 정책지원 요소별 수요를 도출하였다.

■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분석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K-means 군집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연령 구성, 유입지역, 체류행태의 세 가지 속성에 따라 차별화된 양상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 중심형은 대도시 내 구(區) 지역과 강원 관광지역 및 접경 군부대 지역 등에서 주로 나타나며, 고령층 중심형은 전라·경상권 농산어촌 지역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유입지역별로는 타시도 유입형(외부 유입 의존형), 동일시도 비인접(주로 도서지역, 물리적·지리적 접근성 한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체류특성별로는 중장기 체류형(높은 재방문율, 숙박일수, 소비), 단기 체류형(긴 체류시간, 낮은 숙박 및 재방문율), 단기 방문형(전반적으로 낮은 체류·소비 수준)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생활인구 연령, 유입경로, 체류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역별 다양한 특성을 나타내므로, 생활거점 조성은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 특성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체류기간 및 지역과의 관계에 따른 체류형 생활인구 구분

출처: 立科町とのつながりmenuマッピング -事業施策、シェアリングシティカレッジ第4回, <https://sharing-economy.jp/ja/report/20220824> (검색일: 2025.02.08.)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생활인구의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식 및 생활거점 수요 분석

설문조사는 체류형 생활인구의 4가지 유형(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의 체류 목적, 기간, 빈도 등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유형별 생활거점 구성요소 수요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건강·보건시설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장기형은 주거비 지원과 주거공간 제공 등 정착지원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였다. 관계형은 지역사회 교류 및 반복 방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공연·전시공간,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및 문화기반 시설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모든 유형이 관광·휴양 활동에 가장 많이 참여했지만, 관계형은 학습·커뮤니티·창업 등 다양한 지역 활동 참여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정책지원 측면에서도 장기형은 주거와 의료·돌봄 지원 등 정주 전환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 정착 기반 강화 정책의 우선순위 대상임을 시사한다.

3장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지역별로 매우 다른 특성과 체류 행태를 보여 유형별·속성별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생활인구 수요를 반영한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정책지원이 종합적으로 작동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 사례 분석

4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거점의 조성 및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공간, 프로그램, 정책지원 요소가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역적 특성과 추진 주체가 다른 세 곳(전남 강진군 병영마을,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경남 남해군)을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도의 다양한 생활거점 모델을 비교·분석하였다.

강진군 병영마을은 도시재생사업 및 지자체의 강진품에 빙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한 주거·숙박시설 조

성과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사업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기회 제공 등이 맞물려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계기를 만들었다. 4도 3촌 병영스테이 등의 숙소 제공은 로컬 창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강진을 방문하는 청년들을 위한 생활기반으로 작용하였고, 월 1만원 임대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육아수당 등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지원이 함께 맞물리면서 체류형 생활인구가 정착까지 이어지는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은 도시재생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통해 조성된 이바구캠프와 청년 창업공간, 이바구플랫폼을 기반으로 단계적인 지역재생이 추진되어 왔다. 특히 이바구플랫폼을 운영하는 민간기업이 공간 운영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10개 팀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지역의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창업공간의 수익 공유 방식 도입은 입주 청년 간의 협업 생태계 조성으로 이어져, 공공-민간 협력형 창업·정착 거점으로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경남 남해군은 민간 부문과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체험 및 문화 거점 모델로서, 문화·상업공간 운영, 공공사업 참여를 통한 경제적 자립모델 구축과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정착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의 문화기획자와 청년기업인 돌창고, 팜프라촌, 소도읍 남해 등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을 통해 지역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고, 특히 돌창고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이주 네트워크에서는 약 70명의 지역 유입·정착 성과를 낳았다. 한편, 주민 공동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두모마을에서는 농촌체험마을 운영과 서울농장 사업을 연계하며 지속가능한 운영모델로 발전하였고, 마을의 이장과 사무장이 관계안내소의 역할을 하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정착의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었다.

사례 분석 결과, 생활거점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이 아니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정착을 촉진하는 통합적 지원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지역 여건에 따라 공간 조성 전략과 공공주도, 민관협력, 민간주도 등 운영체계가 달라져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적 인센티브, 중간지원조직의 매개 역할, 민간 네트워크의 지속성이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거점은 공공-민간-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층적 운영구조와 지역 체류에서 이주·정착의 이행경로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때 지속가능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역 특성과 생활인구 유형 맞춤형 거점 모델의 확산이 향후 정책의 핵심 방향임을 제시하였다.

제5장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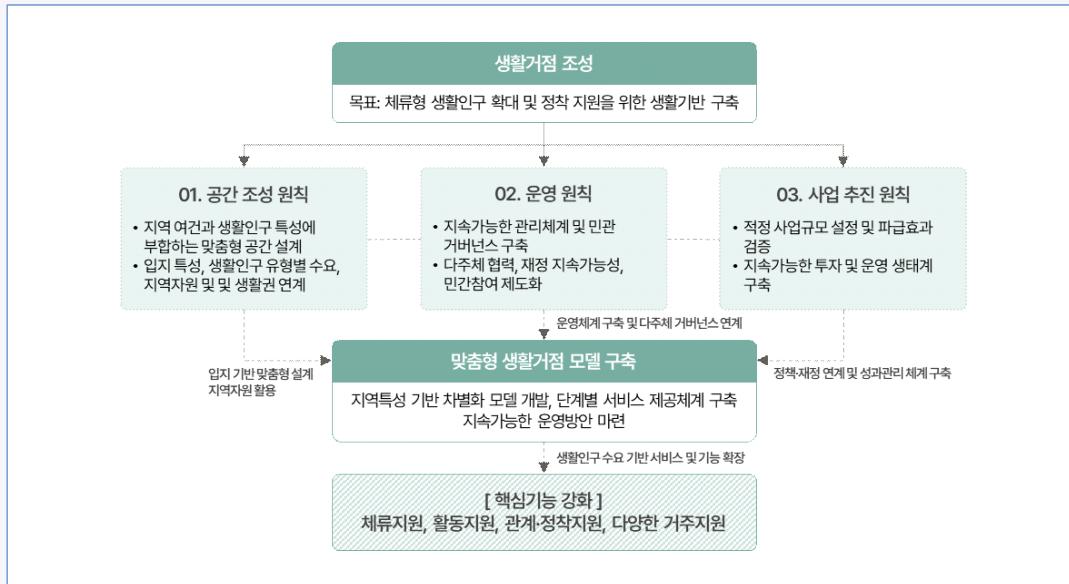
5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의 기본방향과 사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 생활거점 조성 기본방향

생활거점 조성의 목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과 확대를 촉진하고, 중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공간 조성 원칙(지역 여건과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간 설계), 운영 원칙(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

영체계 마련), 사업 추진 원칙(사업규모의 적정화 및 관련 정책 연계성 강화)을 제시하였다.

생활거점의 핵심기능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체류지원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양한 체류 기간에 대응하는 유연한 주거 옵션과 생활환경을 제공하며, 활동지원은 업무·창업·학습 인프라와 지역 자원 연계 기반을 제공한다. 관계·정착지원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과 정착지원을 담당하고, 다양한 거주방식 지원은 두지역거주, 계절성 체류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한다.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사업 추진 방향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를 통해 생활인구 유형(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별 수요와 입지 특성(도시적 기반 갖춘 중심지,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 자연환경 인접지역)을 교차 분석하여 지역별 맞춤형 생활거점 사업모델을 설계하기 위한 분석 도구를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 도심 복합형(구도심 유휴건물 활용, 주거·업무·문화 복합공간, 체험형·관계형 대상), 마을 연계형(빈집·폐교 등 분산 배치, 공동체 기반 정착지원, 관계형·장기형 대상), 생활권 연계형(권역 단위 네트워크, 중심-기초 생활거점 위계 구축, 장기형·관계형 대상)을 살펴볼 수 있다.

생활거점 조성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다양한 재원조달 구조가 필요하다. 생활거점 사업은 지자체(사업 총괄 및 행·재정 지원), 민간사업자(운영관리 및 전문 서비스), 주민(운영 참여 및 공동체 기반)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며, 재원조달은 단기 보조금 중심의 재정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 민간 및 사회적 자본 참여 확대, 자립형 수익모델 구축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고향올래’ 사업과 연계하여 생활권 단위 모델로 발전시키고, ①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실증, ②생활거점 조성·운영의 2단계 지원체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생활거점 조성·운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첫째, 「인구감소지역법」에 노후·유형 시설 정비 및 활용 특례 규정 신설을 통해 용도 변경과 복합적 활용을 유연하게 허용하고, 둘째,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공유숙박 및 내국인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특례를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 요건 하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책지원 방안으로는 생활인구 세부요건 개선(3시간 이상 체류 기준 보완, 관광과 구분되는 체류형 개념 명확화)과 데이터 고도화(체류 목적·활동 유형·방문 빈도 등 메타데이터 확보, 국가승인통계 전환)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가칭) 생활인구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주거공간, 정책정보, 지역 데이터를 연결하는 원스톱 정보·매칭 시스템 마련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인구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생활인구' 제도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생활거점'의 조성·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활인구 정책의 개념적 틀을 넘어,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과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연구 수행 과정에서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인구감소지역별 산업구조, 사회적 관계망, 주민역량 등의 변수를 정량적으로 반영하는데 제약이 있었으며, 생활인구 통계가 구축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장기 체류자나 관계형 인구의 미시적 행태를 심층 분석하기 어려웠다. 또한 생활거점 관련 사업이 최근 본격화되면서 장기 운영성과와 정착효과에 대한 실증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후속 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빅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통계 고도화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둘째, 생활거점 유형별 시범사업 추진 및 실증연구 수행, 셋째, '(가칭) 생활거점 특별구역' 제도 도입 및 관련 사업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활거점은 단순한 체류 공간을 넘어 정주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인구유입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다. 나아가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견인하는 전략적 거점모델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생활거점, 관계인구, 지역체류, 두지역거주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6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 추진절차	9
3. 선행연구 검토	10
1) 선행연구 현황	10
2) 본 연구의 차별성	11

제2장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과 구성요소 15

1.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 정립	16
2.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동향	20
1) 생활인구 관련 정책 동향	20
2) 생활거점 조성사업 및 운영 동향	29
3) 민간 부문의 생활거점 조성·운영 동향	39
4) 일본의 두지역거주 활성화 정책 동향	41
3.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52
1)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계획 및 사업, 선행연구 검토	52
2)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도출	63
4. 소결: 체류형 생활인구 관련 주요 쟁점 및 생활거점의 필요성	67

제3장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및 생활거점 수요 분석 69

1.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분석	70
1) 생활인구의 개념과 특성 검토	70
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73

2. 생활인구의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식 및 생활거점 수요 분석	82
1) 설문조사 개요	82
2) 설문결과	83
3)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거점 수요	94
3. 소결	97

제4장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 사례분석 99

1. 분석개요	100
2.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	104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104
2) 생활거점 조성·운영 특성	110
3)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115
3.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119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119
2) 생활거점 조성·운영 특성	124
3)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128
4. 경남 남해군	132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132
2) 생활거점 조성·운영 특성	135
3)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140
5. 종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44

제5장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운영방안 147

1. 생활거점 조성 기본방향	148
1) 생활거점 조성의 목표 및 기본원칙	148
2) 생활거점의 핵심기능	151
2.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사업 추진 방향	153
1) 생활인구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생활거점 사업유형 설정	153
2) 생활거점 사업 추진체계	162
3) 시범사업 운영 및 기존 사업 연계방안	167
3.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171
1) 생활거점 조성·운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71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175

제6장 결론 179

1. 연구성과	180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83

참고문헌 185

xi

Summary 193

부록 199

1. 생활인구의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식 및 생활거점 수요조사 199

2. 일본의 두지역거주 생활거점 사례 232

표 차례

[표 1-1] 생활인구 유형 구분	6
[표 1-2]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 구분	7
[표 1-3] 선행연구 검토	11
[표 2-1] 정부 정책·사업에서의 '생활거점'의 의미	17
[표 2-2] 지역 체류 방식별 특성과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19
[표 2-3] 부처별 생활인구 확대 정책	20
[표 2-4] 범부처 인구정책 TF 운영 개요	22
[표 2-5]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내용	23
[표 2-6] 지자체 「생활인구 기본 조례」 주요 내용	25
[표 2-7]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주요 내용	27
[표 2-8] 중앙정부 생활거점 조성사업	29
[표 2-9] 2025년 고향올래 사업 개요	30
[표 2-10] 2025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개요	31
[표 2-1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개요	32
[표 2-12]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분야별 개요	32
[표 2-13]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개요	34
[표 2-14]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요 생활거점 조성사업 개요	35
[표 2-15]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 선정지역 개요	36
[표 2-16] 일본의 「광활법」 주요 개정 내용	41
[표 2-17] 「광활법」 상의 두지역거주 촉진 관련 세부 정책	42
[표 2-18] 특정거주거점시설의 용도와 「건축기준법」의 용도규제 관계	43
[표 2-19] 특정거주거점구역 내 특정거주거점시설의 용도특례 적용요건	44
[표 2-20]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단계별 주요 내용	48
[표 2-21] 두지역거주 선도적 프로젝트 실증사업 주요 내용	49
[표 2-22]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생활인구·생활거점 관련 주요 사업 내용	53
[표 2-23]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생활거점 관련 사업의 주요 대상 및 내용	53
[표 2-24]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공간(HW) 조성사업 관련 내용	54
[표 2-25]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프로그램(SW) 및 서비스 관련 내용	54
[표 2-26]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내용	55
[표 2-27]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대상	56
[표 2-28]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공간(HW) 조성사업 분류	56
[표 2-29]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프로그램(SW) 및 서비스 관련 사업 분류	57
[표 2-30]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주요 내용	58

[표 2-31] 2025년 고향올래 사업유형별 주요 내용	59
[표 2-32]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투자방향	60
[표 2-33] 농촌소멸대응 빙집재생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60
[표 2-34] 2025년 지역활력타운 주요 내용	61
[표 2-35]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62
[표 2-36]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검토 결과	63
[표 2-37]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66
[표 3-1] 선행연구 상의 체류인구 유형 구분	71
[표 3-2] 선행연구 상의 생활인구의 유형별 특성 및 대상지역	71
[표 3-3] 선행연구 상의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72
[표 3-4] 군집분석을 위한 활용 데이터	74
[표 3-5] 생활인구 연령별 군집 특징	75
[표 3-6] 생활인구 유입지역별 군집 특징	77
[표 3-7] 생활인구 체류특성별 군집 특징	79
[표 3-8]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분석표	84
[표 3-9]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시설별 만족도	87
[표 3-10]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고려 방향	95
[표 3-11]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거점 수요 및 정책과제	98
[표 4-1] 생활거점 사례 분석항목	101
[표 4-2] 분석 대상지 개요	103
[표 4-3] 강진군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105
[표 4-4] 강진군 및 병영면 인구 현황 비교	106
[표 4-5] 강진군 생활인구 규모 및 구성	106
[표 4-6] 강진군 생활인구의 체류기간별 규모	106
[표 4-7] 강진군 생활인구의 숙박기간별 분포	107
[표 4-8] 강진군 생활인구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107
[표 4-9] 강진군 생활인구 대상별 정책 및 성과	108
[표 4-10] 강진군 인구 유입을 위한 주요 정책 내용	109
[표 4-11]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의 공간요소 중 숙박·주거시설	110
[표 4-12]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의 공간요소(숙박·주거시설 외)	112
[표 4-13]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의 프로그램 요소	114
[표 4-14] 강진군 병영면 생활거점의 정책지원 요소	115
[표 4-15] 부산시 인구 현황	120
[표 4-16] 부산시 동구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120
[표 4-17]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 규모 및 구성	121
[표 4-18]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의 체류기간별 규모	121
[표 4-19]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의 숙박기간별 분포	121
[표 4-20]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122
[표 4-21] 부산시 동구의 생활인구 대상별 주요 정책	122
[표 4-22]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24
[표 4-23]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일대의 주요시설 현황	124
[표 4-24]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핵심 공간요소	125
[표 4-25]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공간요소	127
[표 4-26]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프로그램 요소	127
[표 4-27]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정책지원 요소	128

[표 4-28] 경상남도-남해군 인구 변화 비교	133
[표 4-29] 경상남도-남해군 고령화 수준 비교	133
[표 4-30] 남해군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134
[표 4-31] 남해군 생활인구 규모 및 구성	134
[표 4-32] 남해군 생활인구의 체류기간별 규모	134
[표 4-33] 남해군 생활인구의 숙박기간별 분포	135
[표 4-34] 남해군 생활인구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135
[표 4-35] 남해군 생활거점의 공간요소 중 숙박·주거시설	136
[표 4-36] 남해군 생활거점의 프로그램 요소	138
[표 4-37] 남해군 생활거점의 정책지원 요소	139
[표 4-38] 생활거점 사례 종합분석	146
[표 5-1]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의 핵심 기능	152
[표 5-2]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인구(수요) × 입지 매트릭스	154
[표 5-3] 사업유형별 생활거점 조성방향	161
[표 5-4] 생활거점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전략(공간-프로그램-정책 연계)	167
[표 5-5] 주거·숙박시설의 건물 유형별 업종 및 특징 비교	171
[표 5-6] 체류형 생활인구의 숙박·주거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향	174
[표 부록-1]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199
[표 부록-2] 생활인구 유형별 방문지역 선정 이유	200
[표 부록-3]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시설 만족도	203
[표 부록-4]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시 필요한 공간(HW) 인식	205
[표 부록-5]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프로그램(SW)이 미치는 영향	206
[표 부록-6]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정책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인식	206
[표 부록-7]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 체류경험 이용시설 만족도	214
[표 부록-8]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 생활거점 구성요소 우선순위 인식	215
[표 부록-9]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시 필요한 공간(HW) 인식	216
[표 부록-10]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프로그램(SW)이 미치는 영향	217
[표 부록-11]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정책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인식	217
[표 부록-12] 나가노현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233
[표 부록-13] 시오자리시의 특정기주거점시설 및 관련시설 개요	236
[표 부록-14] 시오자리시의 두지역거주 관련 단체	238

[그림 1-1] 체류기간 및 지역과의 관계에 따른 체류형 생활인구 구분	7
[그림 1-2] 지방이주 단계 구분	8
[그림 1-3] 연구 추진절차	9
[그림 2-1] 생활거점 개념도	18
[그림 2-2] '제 1 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21
[그림 2-3] 연도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31
[그림 2-4]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현황	33
[그림 2-5] 귀농어·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자체 주거지원정책	37
[그림 2-6] 두지역거주 촉진 제도 전체 구상도	47
[그림 2-7]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대응체계 이미지	48
[그림 2-8] 후루사토 주민등록제도 도입 검토과정	50
[그림 2-9] NPO 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및 운영 홈페이지(FURUSATO)	51
[그림 2-10] 이바라키 이주·정주 포털사이트(Re:BARAKI)	51
[그림 3-1] 생활거점 수요 설문조사 절차(안)	82
[그림 3-2] 응답자 특성	83
[그림 3-3] 체류형 생활인구별 특성	84
[그림 3-4]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숙소 유형 및 선택 이유	85
[그림 3-5]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숙소 위치 및 선택 이유	86
[그림 3-6]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참여한 활동 참여율	86
[그림 3-7]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시설 이용률	87
[그림 3-8] 생활인구 유형별 이용한 시설 만족도	87
[그림 3-9]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대해 만족한 점	88
[그림 3-10]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대해 불편했던 점	88
[그림 3-11]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시 필요한 공간(HW) 수요	89
[그림 3-12]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프로그램(SW)이 미치는 영향	90
[그림 3-13]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정책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인식 그래프	90
[그림 3-14]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우선순위	90
[그림 3-15] 향후 거주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정착 의향	91
[그림 3-16]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91
[그림 3-17]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 및 체류 시 선호하는 숙박시설	92
[그림 3-18]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 정착 희망 체류 특성	92
[그림 3-19]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93
[그림 3-20]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방해요소	93

[그림 4-1] 분석의 틀	101
[그림 4-2]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권 현황	104
[그림 4-3]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 중 숙박·주거시설 전경	111
[그림 4-4] 부산시 동구 행정구역 현황	119
[그림 4-5] 이바구마을 주요시설 현황	125
[그림 4-6]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의 주요시설 전경	126
[그림 4-7] 남해군 행정구역 현황	132
[그림 4-8] 남해군 생활거점의 숙박·주거시설	137
[그림 4-9] 남해군 내 정착인구가 창업하여 운영 중인 공간	140
[그림 5-1] 생활인구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생활거점 조성 방향	150
[그림 5-2] 생활거점 조성 기본방향	152
[그림 5-3] 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절차	164
[그림 부록-1]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숙소 유형, 위치 및 선택 이유	201
[그림 부록-2]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참여한 활동 및 이용시설	202
[그림 부록-3]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만족한 점	203
[그림 부록-4]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불편했던 점	204
[그림 부록-5]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우선순위 인식	207
[그림 부록-6] 향후 거주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정착 의향	207
[그림 부록-7]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 및 체류하려는 이유	208
[그림 부록-8]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208
[그림 부록-9]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 및 체류 시 선호하는 숙박시설	209
[그림 부록-10]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시 선호하는 지역 및 주택유형	209
[그림 부록-11]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210
[그림 부록-12]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방해요소	210
[그림 부록-13]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체류기간	211
[그림 부록-14]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체류목적	211
[그림 부록-15] 체류목적을 위해 해당 인구감소지역 방문 선택 이유	212
[그림 부록-16]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체류 숙소 및 선택 이유	212
[그림 부록-17]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참여한 활동 및 이용시설	213
[그림 부록-18]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환경에 만족한 점	214
[그림 부록-19]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환경에 불편한 점	215
[그림 부록-20]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기간, 목적, 지역 선택 이유	216
[그림 부록-21] 라이프스타일별 향후 이주·정착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218
[그림 부록-22] 라이프스타일별 향후 이주·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218
[그림 부록-23]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방해요소	219
[그림 부록-24] 시오지리시 특정거주촉진구역 및 특정거주거점시설	234
[그림 부록-25] 시오지리시 특정거주 촉진구역	235
[그림 부록-26] 시오지리시의 특정거주거점시설 및 관계시설 사례	237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저하 및 지역발전 문제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도입

우리나라는 2020년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으로 인구의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지방의 인구문제는 지역 간 인구이동의 영향력을 더 크게 작용 받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저하와 지역발전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인구의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였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이나 통학을 위해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관광이나 기타 목적으로 일정 기간 그 지역에 머무르며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행정안전부, 2023a). 이러한 접근은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의 생활유형을 반영(행정안전부, 2023a)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활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인구 제도의 구체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3년에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 통계 산출 및 공표를 통해 정책적 활용 기반을 강화하였다. 같은 해 지방시대위원회 산하에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문제에 대한 조직 운영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마련하였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각종 특례 발굴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통한 재정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은 단순히 정주인구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 전략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정책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필요

그간 생활인구를 어떻게 측정하고 산정할 것인지 제도 도입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으나, 생활인구 정책을 인구감소지역에 어떻게 적용하고, 작동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광객 유치나 주민등록인구 대상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

활인구 정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의 상당 부분이 정주인구인 주민등록인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소현 외, 2022). 또한 현재 체류인구 대상 사업들은 대부분 단기 관광객 유치나 체류시간 연장을 목표로 하는 관광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관광명소나 관련 인프라 확충에 예산을 집중시키고, 결과적으로 지역별 특색 없이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경향을 냥고 있다¹⁾. 이로인해 유사 사업에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실질적인 생활인구 유입 효과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생활인구 유치사업인 워케이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공공 주도로 조성된 시설에서 수요 확보 및 운영 지속성에 많은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A시의 공공 워케이션 센터는 조성 후 8 개월간 일평균 이용률이 1명 미만일 정도로 이용률이 저조하여 임차료 및 숙박·관광 바우처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지적받았으며, B군에서는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공간을 조성하였으나 시설 노후화와 인프라 미흡으로 운영의 활발한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²⁾. 또한 다수 인구감소지역의 워케이션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지원 유치를 통해 운영되면서, 생활인구의 실수요 유입보다 행·재정적 지원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 중심의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역의 민간 공급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촘촘한 지원책 마련과 정책 지원, 행정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³⁾.

생활인구는 특정한 관계나 목적에 따라 지역을 오가는 유동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적 확대보다는 이들의 방문 특성과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 지원에 그치지 않고 생활인구가 지역과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역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및 입법 설계가 필요하다(하예영·임준배, 2024, p.18).

■ 생활인구 체류를 위한 공간 조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생활인구 특성과 지역에 맞춘 조성·운영 전략은 여전히 미흡

생활인구 유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 확대되면서,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공간 조성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 워케이션 사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체험·문화 시설, 생활편의시설 등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간이 조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의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공간 조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의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거주 형태를

1)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지방 특색에 맞춘 창의적 사업을 모아보자는 취지와 달리 유사한 건설 사업들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관광지를 조성하는 문화관광 분야가 22.3%(112개) 사업이 가장 많았고, 청년창업을 돋구나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 산업일자리 분야가 21.9%(112개), 기숙사나 임대주택을 짓는 주거 분야가 13.9%(71개)로 뒤를 이었다(김민준, 2024).

2) 차근호(2024, 12월 25일 기사), OO군 관계자 인터뷰(2025.08.20.)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3) 신민재 외(2023, 3월 3일 기사)

반영한 공간 설계 및 운영 전략은 여전히 부족하다. 생활인구는 '유연거주(flexible living)'를 기반으로 하는 대안적 인구 집단으로, 정주인구와는 다른 거주 패턴과 공간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업에서 만들지는 공간들은 관광객 대상의 숙박시설과 차별화된 공간 구성이나 운영 전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기본적인 체류 인프라 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아 빙집이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류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며(안소현 외, 2022),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거주 형태, 정책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역시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공유주거, 공유오피스 등 생활인구 체류 시설의 조성 과정에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생활인구의 다양한 체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최근 지방 소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로컬 라이프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으며, 워케이션과 디지털 노마드와 같은 새로운 생활방식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간 조성 과정에서는 이러한 생활인구 특성이나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매력 요소를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하기 보다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만 치중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 그 결과 지역별로 뚜렷한 차별성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실질적인 생활인구 유입 효과나 장기 체류·정주 전환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조성 사례(청년마을 공유주거)

-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거공간 조성
 - (사업규모) 100억원(개소당 특교세 10억원, 지방비 10억원)
 - (대상지역) 강원 영월, 전남 강진, 경북 영덕(2022), 강원 홍천, 충북 보은, 경북 경주, 경남 의령, 경남 함양(2023), 경북 의성, 전북 군산, 충남 공주(2024)
 - (조성방식) 신축, 리모델링(빙집 및 유휴공간 대상)
 - (공간구성) 주거·창업공간, 생활편의·문화시설 등
- (영덕군 STAY 374) 청년(19세 이상 45세 이하) 대상, 입주기간 2년, 1인실 당 12~16만원(총 17개실)



출처: 청년 정착지원 공유 주거시설 준공 [STAY 374], 영덕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ydcounty/223642374835?trackingCode=rss>, 검색일: 2025.01.31.), 행정안전부(2024c, 8월 1일 보도자료)

■ 생활인구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 필요

생활인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체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이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사회 기여로 이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생활인구를 임시 거주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역발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핵심 주체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체류 공간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시설 구축 위주의 단기 성과에 치중하면서 생활인구의 실질적 유입과 지역과의 중장기 관계 형성, 나아가 정주 전환의 성과를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

년 9월,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단기 체류형 인구에서 정주인구까지 폭넓게 유입시킬 수 있도록 지방소
멸대응기금의 운용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공식 발표하였다⁴⁾.

5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생활인구의 실질적인 유입과 지역과의 관계 형성을 가능하
게 하는 종합적 거점으로서 '생활거점⁵⁾'의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생활인구
의 체류 목적, 활동 특성, 지방이주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 구성과 운영 방식을 차별화하
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 특히, 단기 체류자가 필요로 하는 공간 및 서비스와 장기 정주 희망
자가 요구하는 인프라를 구분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생활인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
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지
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 연구목적

제1장
서론

■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 정립 및 과제 도출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과 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거점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기능과 역할, 필요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생활거점은 단순히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생활인구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형성하고 정주 전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체류형 생활인구의 특성에 따라
구분한 유형별 수요를 분석하고 생활거점이 갖추어야 할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내외에서 조성·운영되고 있는 공유주거, 오피스, 생활편의시설 등의 사례를 조사하여,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과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지 공간 조성과 운영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드러나고
있는 주요 이슈들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운영방안과 지원방안 모색

본 연구는 생활인구의 정주수요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운영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체류형 생활인구의 특성과 지역적·정책적 요
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생활거점 조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 특성과 강점에 적합한 생활인구 타겟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생활인구
유형별 거주 선호 요인과 지역의 물리적 여건, 특히 빈집이나 유휴공간 등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맞춤형 생활거점의 조성 및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생활거점 조성·운영의 실효성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 사업의 개선방안, 제도개선 방안을 제
시하고자 하며, 체류형 생활인구의 확대와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 행정안전부(2025b, 8월 30일 보도자료)

5) 체류형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고, 나아가 '체류·관계 형성·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
적·사회적 인프라이자 종합적인 생활지원 플랫폼(2장에 구체적으로 정의)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거점 사례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거점 사례를 선별·분석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거점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운영 요소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추진 중인 두지역거점 관련 계획과 중소도시 생활거점 조성 사례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해외의 유사 정책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한다.

■ 내용적 범위

- 생활인구 중 '체류인구'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 따라 주민,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주인구에 해당하는 등록인구(주민, 외국인)를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체류형 생활인구, 즉 '체류인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 1-1] 생활인구 유형 구분

구분	내용	비고
주민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정주인구·등록인구
체류인구	•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월 1회(시행령), 하루 3시간(고시) 이상 머무는 사람	비정주인구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정주인구·등록인구

출처: 행정안전부(2023a, 5월 17일 보도자료)

- '탐색·이주단계'의 체류형 생활인구

관련 법령에서는 체류인구를 체류일수와 체류시간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평균 체류일수, 평균 체류시간, 평균 숙박일수, 재방문율 등을 활용해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으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나 체류인구의 카드 사용액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 지표만으로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인구의 특징, 지역과의 관계, 지방이주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거점의 구성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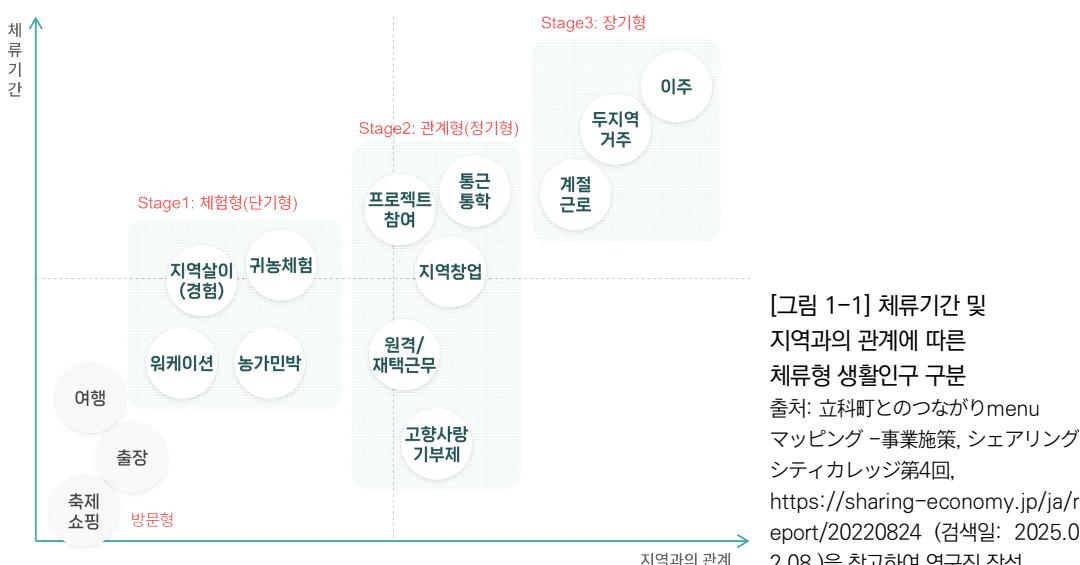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선행연구 및 해외 사례를 참고하였다: ① 체류일수별 주요 활동 목적을 기준으로 생활인구를 단기형(12일), 중기형(310일), 정기형(11~20일), 장기형(21일 이상)으로 구분한 연구(윤소연 외, 2023; 이원도 외, 2023), ② 지방이주 과정을 '탐색 → 이주 → 정착 → 정주 지속'의 단계로 구분한 연구(장민영 외, 2021), ③ 일본의 두 지역거주 실태 파악에 따른 체류일수 구분('장기'는 월 1회 이상 방문 및 1주 미만 체류, 1회 방문에 1주 이상 체류한 경우, '단기'는 월 1회 미만 방문, 1주 미만 체류)(国土交通省, 202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체류형 생활인구를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표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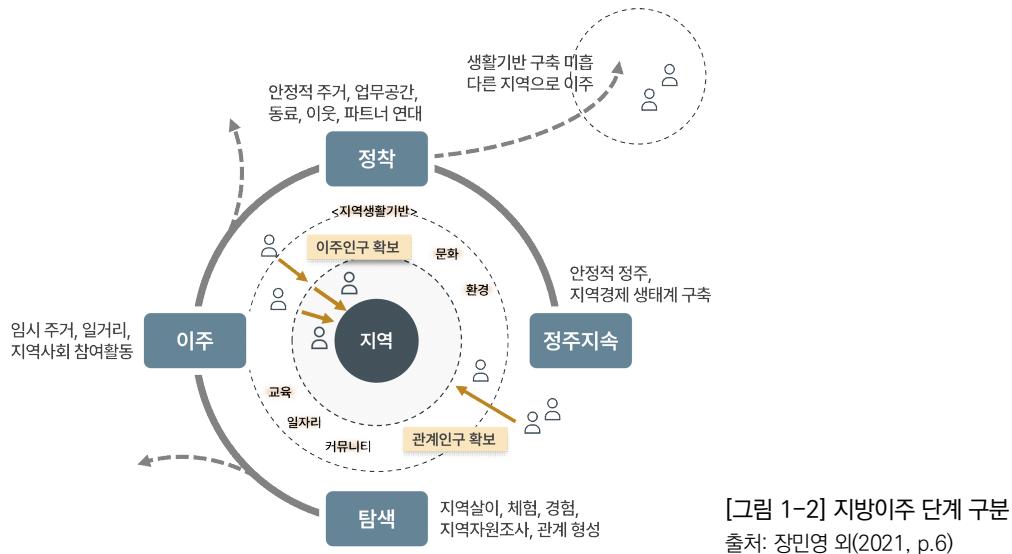
[표 1-2]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 구분

구분	특징	지역과의 관계	체류기간	지방이주 단계
방문형	관광, 축제, 쇼핑 등 목적의 일시적 방문	• 지역에 대한 관심 • 지역과의 관계 형성 미약	1~2일	-
체험형 (단기형)	워케이션, 로컬 체험, 지역 탐색 목적의 단기 지역 체류형 방문	• 지역에 대한 관심 증가 • 일정 기간 체류하며 지역 경험 •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 이해도가 높아지는 단계	단기*	탐색단계
관계형 (정기형)	통근·통학자, 프로젝트 참여자(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활동가 등), 정기적 업무 수행을 위해 방문	• 지역과 정기적 관계 형성 • 일정한 경제활동 수행 • 이주 및 정착을 준비하는 단계	장기**	탐색·이주단계
장기형	주민등록지와 다른 지역에 실질적으로 취업·거주하는 인구, 계절근로자, 장기 프로젝트 참여자	•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 • 체류 생활 유지 • 정주 전환 가능성 높음		

*단기: 월 1회 미만 방문, 1주 미만 체류 / **장기: 월 1회 이상 방문 및 1주 미만 체류, 1회 방문에 1주 이상 체류

출처: 윤소연 외(2023, pp.78~79), 이원도 외(2023, p.126), 장민영 외(2021, pp.20~22)를 참고 및 보완하여 작성





[그림 1-2] 지방이주 단계 구분
출처: 장민영 외(2021, p.6)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국내 생활인구 정책·사업 동향과 국외 관계인구·생활인구의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비교·검토
- 생활거점 개념 정립 및 핵심 구성요소 도출을 위해 기존 연구 및 정책자료 검토·분석

■ 통계분석

- 생활인구 특성과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 공공데이터 분석
- 사례지역의 인구구조, 경제활동, 주거환경, 지역산업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생활거점 조성 필요성과 연계하여 분석

■ 현장조사

- 사례지역의 생활거점 입지 특성 및 주변 환경 조사
- 생활거점의 조성 현황, 공간구성,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운영 주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역별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심층적으로 점검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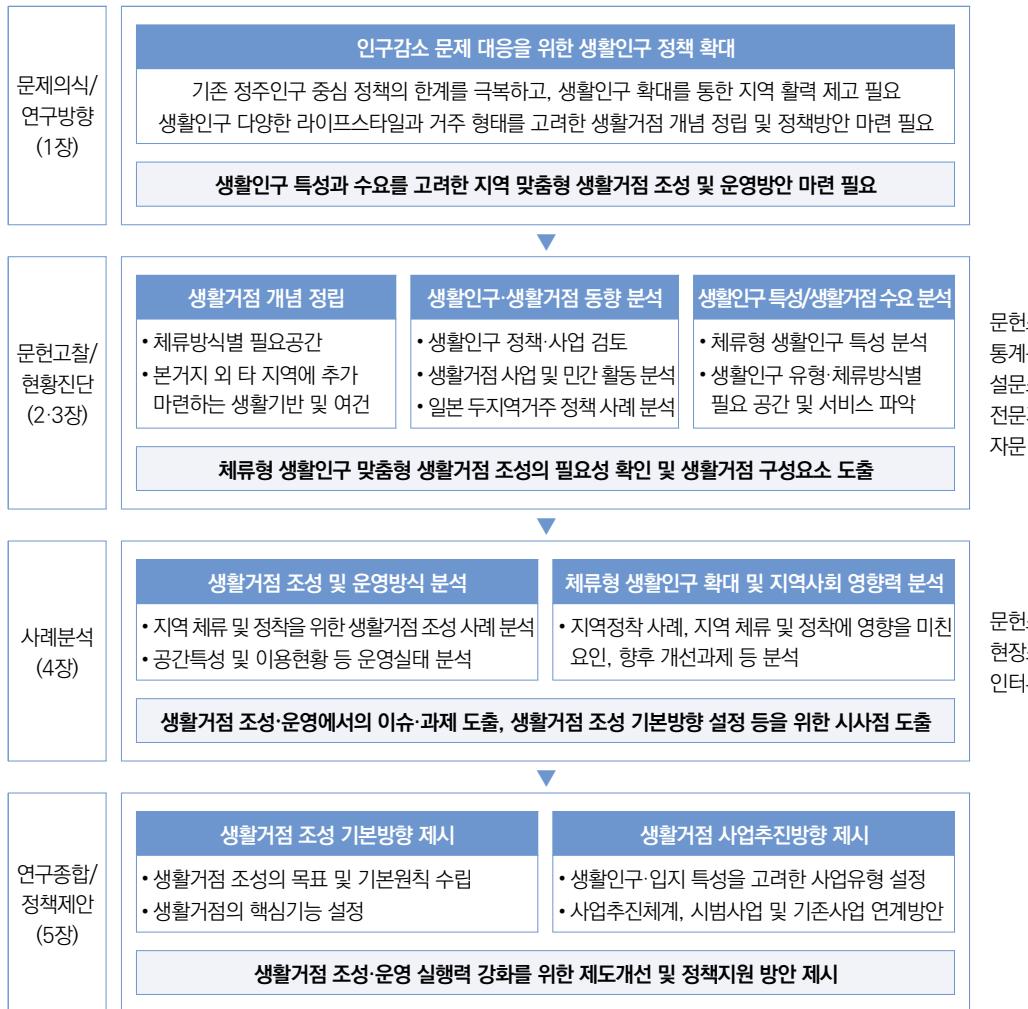
-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거점 구성요소의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생활거점의 운영주체(공공·민간), 실제 이용자,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조성·운영 과정에서의 경험과 의견 수렴

■ 전문가 활용

- 생활인구 특성 및 생활거점 유형 구분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생활인구 유입, 생활거점 조성·운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과 정책 실현 가능성은 검토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공무원 협의 진행

3) 연구 추진절차

9



[그림 1-3] 연구 추진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3.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현황

■ 생활인구 특성 구분 및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되는 과정에서 생활인구 유형 및 특성을 구분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활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생활인구의 유형 구분을 위한 연구로 윤소연 외(2023)에서는 지역 여건과 관련된 지표(인구, 산업·일자리, 주거·생활인프라, 자원·서비스, 제도·커뮤니티, 접근성)와 체류 일수에 따라 생활인구를 단기·중기·정기·장기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생활인구의 내재적 특성을 함께 살펴본 연구로는 문성남 외(2023)에서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을 참고하여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을 '지역기반 활동', '개인의 내적 동기', '직주 및 체류 경험', '지역 내 네트워크'라는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고, 거주지역과 가구구성에 따라 생활인구 활성화 수준 차이를 규명하였다.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를 단기간에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방문·체류·정주의 매력도를 높이는 '공간' 정책을 강조하고, 교류거점 조성이나 빈집 및 농어촌 민박을 활용한 체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연구(안소현 외, 2023), 체류지역을 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으로 유형화하고, 체류인구 비중이 높은 유형에 초점을 맞춰 체류인구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연구(안소현 외, 2022) 등이 있다.

또한 생활인구 개념을 재정·제도와 연계하는 관점에서, 이원도 외(2023)는 생활인구 개념을 인구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산정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 정착 단계별 지원체계를 제안하였고, 이삼수 외(2024)는 생활인구 산정과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통해 생활인구와 정주인구 간의 차이를 규명하고, 도시·지역정책에서의 생활인구 활용방안을 구체화하였다.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생활거점 조성방안 연구

생활거점 조성 관련 선행연구들은 지방이주 과정의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 설계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장민영 외(2021)는 인구감소 위기 지방중소도시로의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지방이주 과정을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공간 및 프로그램 지원, 청년 수요를 반영한 공간 조성, 생활권 범위 내 공간 조성 등 청년활동공간 조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석환·윤진희(2023)는 복수거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통한 주거지원 확대, 다양한 주택 선택지 제공, 주거수요에 대응하는 주거공급 전략 및 관리체계 마련 등을 정책과제로 제안하였다. 문준경 외(2024)는 귀촌 관심 단계 및 연령대별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활력타운을 휴양형, 교육연계형, 일자리연계형, 자율·특화형으로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사업모델 개발 구상안을 제시하였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검토 결과, 기존 연구들은 지방소멸 위기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새로운 인구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도적·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생활인구 제도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을 세분화하거나, 생활인구 특성에 따라 정책 방향과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빈집 활용, 복수거점 생활인구 유입, 지역활력타운 유형화 등 지방이주 단계와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정책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다만, 생활인구가 실제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는 '생활거점' 중심의 정책 설계와 공간·운영 모델을 제시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탐색-이주-정착-정주지속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제한적이며, 숙박시설·주거시설 중심의 기존 제도 하에서 생활인구를 위한 공간 운영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 재원 확보 및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인구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전략 중 하나로 '생활거점'에 주목하여, 지역 및 생활인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방향과 실현 가능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지방이주 단계별 접근과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생활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토대로, 생활인구 특성을 세분화하고, 정주수요를 분석하여 생활거점 조성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관광객 대상 숙박시설 및 이주자 대상 주거시설과는 차별화되는 생활인구를 위한 주거공간 운영에 있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인구 제도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표 1-3] 선행연구 검토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생활인구 특성 구분 및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	1 - 과제명: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표 발굴 및 사례분석 - 연구자(연도): 윤소연 외(2023) - 연구목적: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정립 및 전략 제시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통계분석	- 인구감소지역 여건 및 생활인구 동향 조사 -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지표 개념 정립 및 지표 발굴 - 생활인구 시범지역 사례분석 -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및 정책을 위한 생활거점 조성방안 연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체류형 생활인구 설명요인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 연구자(연도): 문성남 외(2023) - 연구목적: 관계인구를 토대로 생활인구 개념을 한국적 상황에서 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내용분석 - 탐색적 요인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멸시대 인구정책 변화 검토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주소개념 변화 검토 및 재정립 - 해외 복수주소 관련 제도 분석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주소제의 법적 쟁점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안소현 외(2023) - 연구목적: 「인구감소지역법」상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 이슈를 발굴,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사례조사 - 자문회의 및 실무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 제도와 지역발전 논의 고찰 - 생활인구 관련 정책사업 조사, 현황 분석 -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 주요 이슈 분석 - 생활인구를 활용한 지역활력 증진 방안 및 제도개선 제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 연구자(연도): 안소현 외(2022) - 연구목적: 인구감소시대 지역쇠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으로서 체류인구의 가능성을 고찰하고, 지역과 체류인구 상생을 위한 전략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키워드분석 - 현지조사 - 인터뷰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인구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정책사례 분석 - 체류인구 속성을 이용한 체류지역 유형 구분 - 체류지역 유형별 체류인구 사례분석 - 체류인구 관련 정책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도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이원도 외(2023) - 연구목적: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 정립 및 구체적 활용방안 제시, 정책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정책 시나리오 작성 및 실증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개념의 이론적 검토 - 생활인구를 활용한 보통교부세 산정(안) 제시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고도화 및 발전방향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이삼수 외(2024) - 연구목적: 생활인구 관련 개념 및 정책 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 및 지역정책 방향성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빅데이터 분석 - 시뮬레이션 및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 관련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생활인구 산정 및 시뮬레이션 - 생활인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영향분석 - 도시 및 지역정책에서 생활인구 활용방안 검토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원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장민영 외(2021) - 연구목적: 청년 지역정책 및 이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이슈 및 쟁점 도출, 정책지원방안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현지조사 - 사례조사 - 인터뷰,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이주 및 정착현황, 청년지원정책 분석 - 청년활동공간 특성 및 운영실태 분석 - 청년 지역정책 및 공간조성 사례 분석 - 지방중소도시의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지원방안 제시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 주거거점 현황과 이슈 - 연구자(연도): 박석환·윤진희(2023) - 연구목적: 복수거점 생활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수요에 맞는 합리적 주거공간 확보 가능성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현장답사 - 심층면담 및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인구 개념 및 복수거점 생활 사례분석 - 국내 복수 주거거점 현황 및 생활자 면담조사 - 복수 주거거점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현황 분석 - 복수 주거거점 생활방식 및 수요에 맞는 정책 방향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도시민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방안 연구 - 연구자(연도): 문준경 외(2024) - 연구목적: 수요계층 니즈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활력타운 사업모델 개발과 제도적 지원방안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활력타운 및 유관 정책 동향 분석 - 지방이주 수요계층의 주거선택 특성 분석 - 유형별 지역활력타운 사업모델 개발 -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의 실행력 강화방안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명: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 연구목적: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및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통계분석 - 현장조사 -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 - 전문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 정립 -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및 생활거점 수요 분석 -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 사례분석 -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기본방향 수립 - 지역 맞춤형 생활거점 사업 추진방안과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제2장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과 구성요소

1.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 정립
2.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동향
3.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4. 소결: 체류형 생활인구 관련 주요 쟁점 및 생활거점의 필요성

1.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 정립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생활인구 개념 등장과 거주방식의 변화

교통과 기술의 발달로 지역 간 이동이 한층 용이해지면서, 기존의 주민등록 기반의 정주인구 개념을 보완하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가 도입되었다. 생활인구는 통근, 통학, 관광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실질적인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4b).

원격근무 확산과 함께 워케이션, 지방살이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하면서, 거주방식은 점차 다양하고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다(박석환 외, 2022). 일본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기존의 정주 개념을 넘어 일상생활권·통근권 외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관계인구'라 정의하고, 텔레워크(telework), 워케이션, 두지역거주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점·거주공간 조성,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지원금 지급 등 지방거주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⁶⁾.

※ 일본의 관계인구와 두지역거주

- (관계인구) 도시와 도시, 도시와 지방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리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관계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역 체류 정도에 따라 관계인구 형태를 다음 그림과 같이 살펴볼 수 있음
- (두지역거주) 관계인구 확대와 두지역거주(二地域居住) 및 다거점생활(多拠点生活)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해 새틀라이트 오피스 등 기반을 정비하고, 빈집의 관리·철거 활용 등을 추진



출처: 国土交通省(2021, pp.9-10)

6) 国土交通省(2021, 3월 17일 보도자료), 内閣官房·内閣府(2020, pp.33-50) 참고

국내에서도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유연거주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복수주소제 도입, 세컨드 흘 활성화 등의 논의는 생활인구가 단순한 임시 체류를 넘어 지역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나아가 정주로 전환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생활거점’은 거주지 외 타지역 체류를 위해 필요한 생활기반·환경으로 접근 필요

라이프스타일 변화 속에서, 본 거주지 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려는 수요는 단순 관광·축제와 같은 일시적 방문과는 구별된다. ‘5도 2촌’과 같은 두지역살이나 워케이션, 여가·체험을 목적으로 정기적·반복적으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경우, 안정적인 거주 공간뿐 아니라 업무, 생활, 여가를 위한 종합적인 생활기반과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정부 정책에서는 이를 ‘생활거점’이라 하여 ‘복합 주거거점’ 또는 ‘생활권의 중심부’로 접근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활력타운, 고향올래(두지역살이) 사업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생활거점’을 주거와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결합한 복합시설·공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농촌중심지를 지역의 ‘중심거점’으로 삼고, 이를 보완하는 2차 지역 거점을 ‘기초생활거점’으로 설정해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어촌마을에서도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생활권의 중심부를 ‘어촌생활거점’으로 설정하여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집약이 가능하도록 계획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살이, 워케이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 오피스, 생활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다양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2-1] 정부 정책·사업에서의 ‘생활거점’의 의미

구분	주요내용	관련사업(주관부처)	비고
생활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주거 + 생활인프라 + 생활서비스’ 복합 주거거점 (지원사항)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 	지역활력타운 (관계부처 합동)	복합 주거거점
생활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유휴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공간 (지원사항) 도시 거주자가 정기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추가적인 생활거점을 갖도록 지원 	고향올래(GO鄉ALL來) 중 ‘두지역살이’ (행정안전부)	
기초 생활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상위 서비스 거점(중심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지원사항)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 가능한 인프라 우선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생활권의 중심부
어촌 생활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념) 어촌생활권의 거점, 생활서비스 전달 및 로컬 창업의 중심지 (어촌생활권) 소규모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 간 교류, 주요 이용시설 등을 고려해 생활권 구분 (지원사항) 생활권별로 기초생활인프라와 의료 교육·돌봄 등 생활서비스 지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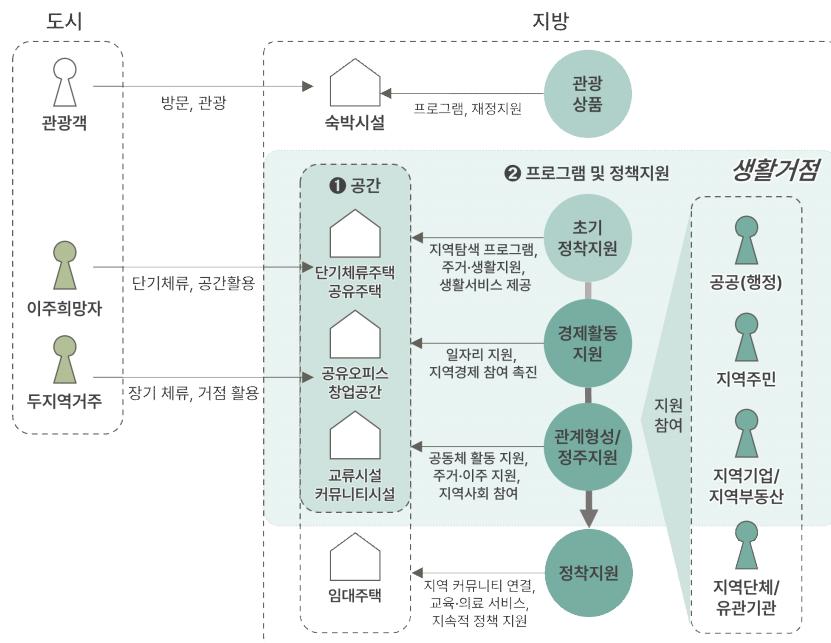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2024a,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71호), 행정안전부(2024a, 7월 10일 보도자료),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https://www.raise.go.kr/raise/index.do>, 검색일: 2025.02.02.), 해양수산부(2023, 5월 26일 보도자료)

■ 본 연구에서의 ‘생활거점’ 개념 정의

앞서 살펴본 논의를 종합하면, 생활거점은 단순한 임시 숙박공간이 아니라 체류형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일정기간 머물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거점’을 체류형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고, 나아가 ‘체류-관계 형성-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사회적 인프라이자 종합적인 생활지원 플랫폼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활거점의 주요 기능은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주거, 업무, 생활편의, 공동체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체류형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원격근무, 창업, 문화활동 등 일상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형성을 촉진하고, 생활인구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양한 지역 체류 방식(워케이션, 지역살이·농촌체험, 로컬유학·농촌유학, 귀농·귀촌 등)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거주공간(숙박시설, 단기체류주택, 임대주택 등), 업무공간(공유오피스, 창업공간 등), 커뮤니티 시설 등의 ①공간(물리적 기반, HW)이 필요하며, 체류형 생활인구의 정착을 돋는 지원체계로서 ②프로그램(SW)과 정책지원도 필수적이다(그림 2-1, 표 2-2 참조).



[그림 2-1] 생활거점 개념도

출처: 姫野由香(2023, p.54)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개념에 맞게 연구진 작성

[표 2-2] 지역 체류 방식별 특성과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

체류 방식	특성	구성요소	사례
워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와 휴식 병행 장기간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레지던스, 호텔 (업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회의실, 세미나실 등 (생활편의시설) 식당, 카페, 편의점, 세탁소 (커뮤니티시설) 휴식공간, 운동시설, 문화시설 (프로그램) 지역문화 체험, 특산물 판매(인근 연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도 세화 질그랭이센터 강원도 강릉 워케이션
지역살이· 지역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1주일~1개월) 거주 지역 문화·생활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시설) 게스트하우스, 세어하우스, 한옥체험 숙소 (생활편의시설) 병·의원, 은행, 우체국, 마트 등 일상생활 인프라 (커뮤니티시설) 장기 체류자 간, 지역주민 간 교류를 위한 공간, 공동부엌 (프로그램) 농어촌 체험마을, 전통문화 체험관,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 (교통 접근성) 대중교통 연결,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마을(강원 속초 라이프밸리, 충남 청양 로컬몬스터, 전북 원주 다음타운 등) 전남 곡성군 러스틱타운
로컬유학· 농촌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기간(6개월 이상) 농촌지역에서 생활 학업과 농촌 체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시설) 농촌형 기숙사, 품스테이 (생활편의시설) 식당, 매점, 병원 등 (체험학습 공간) 농촌체험학습장, 텃밭 등 (프로그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지역학교 공동 프로그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유학센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소백산귀농드림 타운, 영주)
귀농·귀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생활을 접고 농촌으로 이주 농업 종사 또는 농촌생활 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시설) 귀농·귀촌 체험주택, 공공임대주택, 빙집 리모델링 주택 (영농지원시설) 공동작업장, 농기계 임대소 및 창고, 농업기술센터 (생활편의시설) 병·의원, 은행, 우체국, 마트 등 일상생활 인프라 (커뮤니티시설) 마을회관, 체험농장, 지역 문화행사 및 축제 지원 공간 (프로그램)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퇴자 공동체마을 지역활력타운

출처: 행정안전부(2022), 행정안전부 (2024a, 7월 10일 보도자료), 세화 질그랭이센터(<http://www.sehwamaeulcoop.com/index.php>), 강원 워케이션(<https://worcation.co.kr/gw/program/gangneung>),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http://sbdream.kr/home/>)(검색일: 2025.02.08.)

2.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동향

1) 생활인구 관련 정책 동향

① 중앙정부 생활인구 관련 주요 정책 흐름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법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기반 마련

2021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⁷⁾ 개정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의 체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5월 인구감소지역 지원대책 수립을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하였으며,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인구감소지역 특례 및 조사·지원·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법」에서는 생활인구를 ‘특정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주민, 체류인구, 외국인으로 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5월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33호)」에서 구체적인 생활인구 산정방식을 고시하고, 2024년부터 통계청이 분기별로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밖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이다.

[표 2-3] 부처별 생활인구 확대 정책

주관부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산정,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을래 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등
국토교통부	지역활력타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등
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시대위원회)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운영 • (해양수산부) 어촌관계인구 확보, 어촌관계인구 발굴·육성(어케이션) 등 • (문화체육관광부) 위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등

출처: 연구진 작성

7) 현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06.09.)」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음(행정안전부, 2023b, 6월 6일 보도자료)

■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법정부차원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⁸⁾

2021년 10월에 제정된 「인구감소지역법」 제8조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2023년 12월 18일에 법정부 차원에서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2024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비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라는 목표로 3대 전략(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과 16대 추진과제, 43개 실천과제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 2~3조 원 규모의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맞춤형 특례 제정 등의 행·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5년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종합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그림 2-2]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전략, 추진 기반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3, p.13)

8) 관계부처 합동(2023)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범부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TF·상설조직 구성 및 운영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TF를 1~4기까지 구성·운영하며 범부처 정책 조율을 추진하였다. 2020년 우리나라 인구가 데드크로스에 들어서면서 인구감소뿐 아니라 구조변화 측면에서도 접근하기 시작하자, 2021년 제3기 TF부터는 지역소멸 선제 대응에 대한 정책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인구위기 핵심 과제 선정 및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TF를 운영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2024년부터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등도 논의 중이다.

[표 2-4] 범부처 인구정책 TF 운영 개요

구분	운영기간	주요내용
인구정책 TF	2019~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등에 대응 - (4대 전략)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제2기)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속화된 저출산 문제 극복, 인구감소와 구조변화로 구분 접근 - (4대 전략)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역공동화 선제 대응, 노동생산성 제고, 고령화 대응 산업·제도 설계 (제3기) 3대 인구리스크(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임박)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고령층 등 생산인구 보완, 지역소멸 선제 대응,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정책과제 구성 (제4기) 축소사회 가시화,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진입에 대한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연령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인구위기대응 전담반 TF	2022.06.~202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인구 비상대책회의	2024~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3대분야: ①일·가정 양립, ②돌봄, ③주거·결혼)에 대한 중점 논의 그밖에 노인돌봄인력 수요·공급 전망 및 대응방향,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 지역 지원방향 등 논의

출처: 기획재정부(2022, 10월 11일 보도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committeeActivity/meeting.do> (검색일: 2025.05.16.); 경제e정표, KDI, https://epts.kdi.re.kr/polcTmsesSrvc/?SEARCH_CTE_SEQ=72666&BIG_CD=RELT_THEME00080&MID_CD=RELT_THEME00108&SML_CD=RELT_THEME00221#this (검색일: 2025.05.16.)

그밖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인구정책기획단 구성(2023.06.),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2024.04.) 등을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부터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전방위적 정책 발굴과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추진해 가는 중이다. 2024년 5월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민간전문가·중앙부처·지방정부 담당자 11인으로 구성된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통해 농어촌 생활인구 확대 방안, 생활인구 활성화, 범부처 협업 및 행·재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 범정부 차원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2025년 5월 1일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따른 빈집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합동 빈집정비 TF를 구성하고,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2025.05.01.). 국가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군구의

빈집 정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4대 전략 (①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 ② 빈집 정비·활용 및 안전확보 지원, ③ 지자체 빈집 정비 역량 강화 ④ 민간의 자발적 정비·활용 유도)과 15개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특히, 빈집 정비·활용과 안전확보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26년 지방 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될 예정이며, 농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농어·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공간 마련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⁹⁾.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정주인구 감소에 따른 농촌소멸 극복에 체류·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2025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을 추진, 강진군, 청도군, 남해군 등 3개소를 선정 하여, 3년간('25~'27) 개소당 21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빈집을 문화·체험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¹⁰⁾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2024년부터 전라남도 완도군, 경상남도 남해군의 빈집을 청년귀어주택이나 노인돌봄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¹¹⁾, 2023년부터는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원을 투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 경제플랫폼, 어촌 생활플랫폼, 어촌 안전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¹²⁾.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의 전환: 시설 조성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¹³⁾

행정안전부는 일회성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단기 체류형 인구를 정주인구까지 확장하고 다양한 형태의 재원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로 재투자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별로 구체적 인구 유입 목표 설정과 매년 실적을 점검하도록 성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026.10.)과 기본계획 수립을 연계해, 2027년부터 기금에 대한 5년 단위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기금사업비를 연도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등 체계적인 집행을 모색하고 있다.

[표 2-5]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 내용

구분	현행	개선
기본방향	패러다임 (기대효과)	사업(인프라) 중심(HW) (지역 정주여건 개선)
	재원 순환 효과	일회성 투입·투자로 한계
	참여주체	공공(지자체) 중심
운영체계	집행률	사업지연 등으로 저조
	성과관리	시설물 구축(진행률)
	배분체계	(단년도) 투자계획 중심

출처: 행정안전부(2025b, 8월 30일 보도자료, p.2)

9) 관계부처 합동(2025. 5월 1일 보도자료, pp.1-5)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0)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빈집이 밀집된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 빈집밀집구역 내 빈집을 생활인구의 주거·워케이션, 문화·체육, 창업공간 등으로 재생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 생활인구, 귀농·귀촌(예정)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10호), 마을 주민과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 영화관, 공유 주방 등 공동이용시설 조성(2호)하고 생활인구 유입 목적의 지자체 및 타 부처 프로그램 연계 예정(농림축산식품부, 2025b)

11) 관계부처 합동(2025. 5월 1일 보도자료, p.4)

12) 해양수산부(2023, 5월 26일 보도자료)

13) 행정안전부(2025b. 8월 30일 보도자료, pp.1-2)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② 지자체 생활인구 유치·활성화 사례

■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추진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지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위해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하고, 조례 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노후·유 휴시설 활용 범위 확대, 인구 교육·홍보, 조사 및 연구 등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북 남원시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변경을 위해 생활인구 현황, 기반 시설 또는 생활편의 시설 현황, 지역 외국인 실태 파악 등의 실태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 등 인구 유입 시책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등 일부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 인구정책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매체·전단 등을 통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조례 제2079호)

□ 실태조사 등(제6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인구, 경제·사회·문화적 여건
2.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실태
3. 인구감소지역의 기반시설 또는 생활편의 시설 등의 현황
4.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현황
5. 지역 외국인 실태조사 및 사회문제 발생 사례 조사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인구감소 및 저출생·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및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 인구유입 시책 등(제13조)

① 시장은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보육·교육·보건·의료·안전·교통·주거·복지·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지역체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내·외국인 사회통합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4. 인구감소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주민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 등의 정착지원 사업
3. 법 제18조에 따른 생활환경·경관의 개선에 관한 사업
4. 법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5. 법 제28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근로자의 정주여건 및 고용확대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전라남도 해남군 조례 제3226호)

□ 인구교육·홍보(제10조)

-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 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2025년 9월 현재, 전라남도, 거창군 등 12개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별도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이나 생활인구 사업, 생활인구 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¹⁴⁾.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제정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생활인구 사업 추진과 생활인구 등록제 관련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으며, 남원, 신안을 제외하고는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생활인구 조례를 수립하였으며, 상생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생관광지원과 상생관광정보 플랫폼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원은 생활인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홍천군은 기본계획에 있어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안성시는 인구감소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표 2-6] 지자체 「생활인구 기본 조례」 주요 내용

구분	기본계획 수립	생활인구 사업	생활인구 등록제	협력체계 구축	기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비고
전라남도	●	●		●(협의회)	상생관광정보 플랫폼 구축	-	광역지자체 상생관광지원
거창군	●	●	●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김제시	●	●	●	●		김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김제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	
남원시		●	●		생활인구 지원센터	-	
부안군		●	●	●		-	
사천시	●	●	●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사천시 출 향인 교류 ·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			-	
안성시		●	●	●		-	인구감소지역 미포함
양양군	●	●	●	●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장성군		●	●	●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하동군	●	●	●	●		하동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홍천군	●	●	●	●	시행계획수립	-	

출처: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936호),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조례 제1759호),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040호),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조례 제2927호),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147호), 신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806호),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경기도안성시조례 제2131호),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980호), 하동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656호),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전라남도조례 제6256호),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조례 제3084호),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776호),

14) 전북 남원(2023.12.26.) 최초 제정 후, 강원 양양(2024.07.19.), 전북 김제(2024.11.05.), 경남 하동(2024.11.15.), 전남 신안(2024.12.31.), 전북 부안(2025.02.10.), 경남 사천(2025.03.20.), 경기 안성(2025.04.18.), 경남 거창(2025.05.07.), 전북 김제(2025.05.08.), 전남(2025.05.13.), 전남 장성(2025.07.23.), 강원 홍천(2025.07.25.) 등 12개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관련 조례 제정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조례 제 2040호)

□ 생활인구 사업(제4조)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3. 교류 및 살아보기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
4. 노후·유류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6.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7.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8. 남원누리시민 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
9.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생활인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11조)

시장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생활인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 가능

※ 강원도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조례(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980호)

□ 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제6조)

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생활인구 사업 추진(제7조)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협력체계 구축(제10조)

군수는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25년 8월, 89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 제공하였다. 해당 참고조례안은 각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의 근거 마련,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별 활성화 체계 구축 및 관련 제도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⁵⁾.

한편,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맞물려, 생활인구 유입정책 발굴,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등 인구감소지역 지자체가 발주하는 생활인구 관련 용역이 다수 추진중에 있다¹⁶⁾.

15) 행정안전부(2025c. 8월 26일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16) 국가통합전자조달 나라장터를 통해 2025년 1월 이후 발주된 용역은 ‘군위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유입 방안 연구 용역(대구 군위군)’, ‘군산시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전북 군산시)’, ‘2025년 봉화군 생활인구 빅데이터 분석 용역(경북 봉화군)’, ‘양양군 생활인구 특성 분석 및 지역소멸(인구감소)대응 연구용역(강원 양양군)’, ‘영주형 생활인구 정책수립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경북 영주시)’, ‘설악 동 생활인구 증대사업(설악동 미술거리 조성) 용역(강원 속초시)’ 등이 있음(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 2025.05.16.)

[표 2-7]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주요 내용

1)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및 운영

- 제8조(생활시·군·구민 등록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시·군·구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시·군·구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시·군·구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9조(등록증 발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시·군·구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시·군·구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시·군·구의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군·구생활시·군·구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의 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생활시·군·구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군·구생활시·군·구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시·군·구생활시·군·구민에 대한 ○○시·군·구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
3. ○○시·군·구생활시·군·구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4. ○○시·군·구생활시·군·구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생활인구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제7조(사업 추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
 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
 3. 제8조에 따른 ○○○시·군·구 생활시·군·구민(이하 "생활시·군·구민"이라 한다) 등록제도 운영
 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
 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생활시·군·구민에게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이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생활인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제5조(기본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군·구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종장기 전략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
 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 제5항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2025c. 8월 26일 보도자료) 내 참고조례안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지자체 생활인구 대응을 위한 TF·상설조직 구성 및 운영

각 지자체에서는 2019년부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원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2024), 거창군 인구교육과(2019), 인제군 지방소멸대응팀(2024), 충청남도 인구전략국(2024), 광주광역시 인구정책담당관(2024),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2024),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TF(2025) 등이 있다.

2023년 9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들이 모여 ‘인구감소지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출범되었으며,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활동하며, 2025년에는 대도시 특례시 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도농 간 교류와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였다¹⁷⁾.

2024년부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에 17명의 광역의회 의원으로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소멸 대응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¹⁸⁾.

17) 뉴시스(2025, 5월 14일 기사)

18)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https://mpccak.or.kr/boards/news_letter/view?id=2926 (검색일: 2025.05.15.)

2) 생활거점 조성사업 및 운영 동향

① 중앙정부 생활거점 조성사업

■ 인구감소지역의 주거·생활·서비스 등을 포함한 생활거점 조성 정책 추진 확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에서의 체류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빙집·폐시설 리모델링, 체류시설, 복합타운 조성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표 2-8] 중앙정부 생활거점 조성사업

주관부처	정책명	주요내용	비고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마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 청년마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청년친화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2년 3개(영월, 강진, 영덕), ‘23년 5개(홍천, 보은, 함양, 의령, 경주), ‘24년 3개(공주, 군산, 의성) 선정
	고향올래사업 (GO鄉ALL來)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주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기획 추진(총 사업비 200억) (유형) 워케이션(Workation), 런케이션(Leancation),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21건) 선정 ‘25년(12건) 선정
관계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은퇴자·청년 지방 정착 지원을 위해 이주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주거 및 생활시설·서비스 제공 지자체·공공기관이 부지를 조성하고 생활거점시설 및 주택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 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등 8개부처 협동 ‘23년(7개소), ‘24년(10개소) 선정
국토교통부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사업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감소지역 대상 민간 중심의 지역사업 지원보조 지원(국비 최대 50억원) 지역상생사업은 빙집·폐시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구 유입 모델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상생·환경·일자리 3가지 사업유형
	생활거점 사업 (舊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사업)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생활SOC 확충 및 일자리 제공을 패키지로 공급하여 신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협동 추진 29개 지구(‘23.8.기준)
농림축산식 품부	농촌소멸대응 빙집재생사업 (2025~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지역 체류·생활 인구 확대 목적으로 빙집밀집구역 내 빙집을 활용하여 주거·워케이션, 문화 체험, 창업공간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총 사업비 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년 3개 지구(강진, 청도, 남해) 선정 리모델링(빙집 10호), 공동이용시설(빙집 2호)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2025~20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체험 외 체류공간 및 지역 관광·문화자원 등과 연계한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총 사업비 30억원) 기반조성 및 소규모 체류공간 시설 건축비 지원 시군은 체류자를 모집하여 기 운영 중인 농촌체험 인프라 등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3개 지구 선정 리모델링(빙집 10호), 공동이용시설(빙집 2호)
	청년 농촌보금자리 사업 지구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농촌 정착 지원사업 보육·문화 인프라가 복합된 공공임대주택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년까지 17개지구 선정 ‘19년 시범사업 선정 4개 지구 입주 완료

출처: 행정안전부(2024c), 행정안전부(2024a), 관계부처 협동(2024a), 국토교통부(2024b), 농림축산식품부(2025b) 농림축산식품부(2025c), 농림축산식품부(2024)를 참고하여 작성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GO鄉 ALL來) 사업(2023~)¹⁹⁾

고향올래는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3년에는 21개 지자체, 2024년에는 12개, 2025년에는 12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2025년 고향올래 사업은 체류목적과 기간, 지역 특색을 반영한 워케이션, 런케이션,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등 5대 체류유형에 따라 사업 공모를 진행하였고, 생활인구 창출을 위한 활성화거점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 2-9] 2025년 고향올래 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업목적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 인구 이동성을 반영한 새로운 인구정책으로 생활인구 확대 기반 조성	「인구감소지역법」 근거
사업기간	2025.04.~2026.12.	
공모대상	생활인구 활성화를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 단, 수도권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한함	
지원내용	국비 최대 10억 원(특별교부세), 지방비 1:1 매칭	총 사업비 약 20억 원 규모 가능
심사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의 필요와 염원(20점) 민·관 파트너십 및 기획역량(20점) 사업계획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20점) 거점 후보지(입지) 매력 및 가능성(20점) 지역자원·인프라 등 연계협력 역량(20점) 가점(인구감소지역 여부, 타부처 사업 연계 최대 5점) 	서면심사 → 현장실사 → 대면심사 절차
지원분야	5대 유형 중 자유선택 ① 워케이션(Workation) ② 런케이션(Learncation), ③ 두 지역살이, ④ 로컬유학, ⑤ 로컬벤처	유형별 시설·인프라 및 프로그램 구상 등 차별화

출처: 행정안전부(2025a)

- 관계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2023~)²⁰⁾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8개 부처(행안부, 문체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등)가 함께 추진하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거점 조성 정책이다. 청년, 은퇴자, 귀촌 희망자 등 다양한 이주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정착 기반이 되는 ‘주거 + 생활인프라 +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공기관(LH 등)이 협력하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주거시설과 더불어 워케이션, 창업, 복지, 의료 등 맞춤형 인프라를 통합 조성하는 점이 특징이며, 2023년 7개소, 2024년에는 10개소가 선정되었으며, 2025년 공모는 10개 소가 선정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기존 개별적·단편적 정주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통합형 생활거점 모델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정착-소득-활동-생활이 연결되는 인프라 통합 구성이 핵심이다.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은퇴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이주수요에 대응하며, 장기 체류 및 이주 인구를 위한 인프라 중심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19) 행정안전부(2025a)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0) 관계부처 합동(2024a)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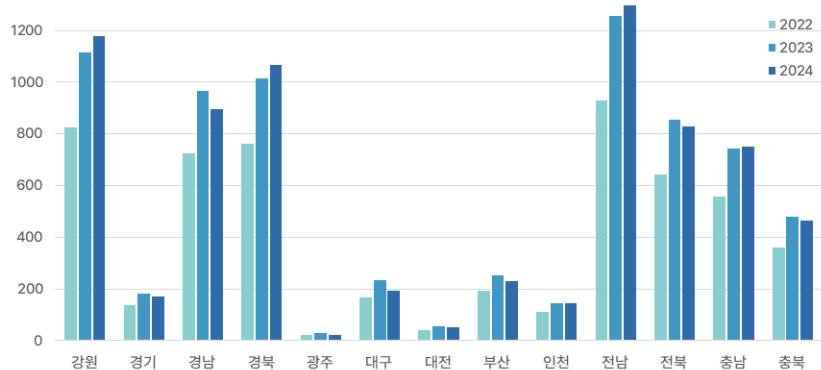
[표 2-10] 2025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지방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편리한 생활시설 마련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지원을 위해 '주거 + 생활인프라 +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생활거점 조성 	관계부처 합동,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
사업기간	3년	
공모대상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자 하는 기초지자체 단,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기초지자체는 제외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 관계부처 연계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인·허가 특례)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시 도시·군과리계획 결정, 관광단지·물류단지 지정 등 의제처리 (행정지원) 부처간, 중앙·지자체 간 협의에 의한 사업추진, 다부처 지원체계를 통한 사업컨설팅 등 지원 	각 부처 검토를 거쳐 지원규모 확정
선정기준	계획타당성(40점), 추진가능성(35점), 지속가능성 및 기대효과(25점)	서면심사 → 현장(40%)-종합평가(60%)
계획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지역 특성과 입주자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 총수, 면적, 유형, 입주대상 등 계획 (생활인프라·서비스) 취업지원, 돌봄·안전·요양서비스, 문화·체육서비스 등 제공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 반영 다부처 통합지원과 민관협력을 통한 사업성 확보 운영방식 다각화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4a)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되었으며,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총 107개 기초지자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그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²¹⁾하였다.



[그림 2-3] 연도별 인구감소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출처: 안태훈(2024, pp.128-130)을 참고하여 작성

2026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기준 72억원을 기본 배분하되, 그간 기금사업 성과와 투자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최대 88억원까지 배분할 예정²²⁾이다. 이 중 전라남도는 4년 연속

21) 행정안전부(2024d, 11월 6일 보도자료, p.1)를 참고하여 작성

22) 행정안전부(2025d, 3월 19일 보도자료)

최다 기금(총 6,312억 원)을 배정받아, 이를 활용해 전남형 만원주택(1,000호), 공공산후조리원(4개소) 등 저출생 위기 극복과 청년 정주 여건 마련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²³⁾.

[표 2-1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고
투자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거점 중점 투자) 지역 내 거점 및 중점분야 선정, 투자 집적화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연계사업) 국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 연계사업 발굴 (청년 등 정착 여건 조성 집중 투자) 주거·일자리·보육 등 청년층이 이주하여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지역 내 유휴공간 적극 활용 초광역권 사업, 지역 간 협업사업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투자대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 교육 등 정주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 ※(투자제외) 지방소멸기금 사업의 목적에 위배, 국고보조사업 매칭 재원, 소모성 경비 등, 지역 내 거점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업 	
지원기간/규모	2022~2031년(10년)/매년 1조원 규모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89개), 관심지역(18개) 등 총 107개 기초지자체	
추진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 투자계획(안) 작성·제출(지자체) 기금 투자계획(안) 평가(평가단) 및 협의·자문(심의위원회) 지역별 배분금액 확정(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조합)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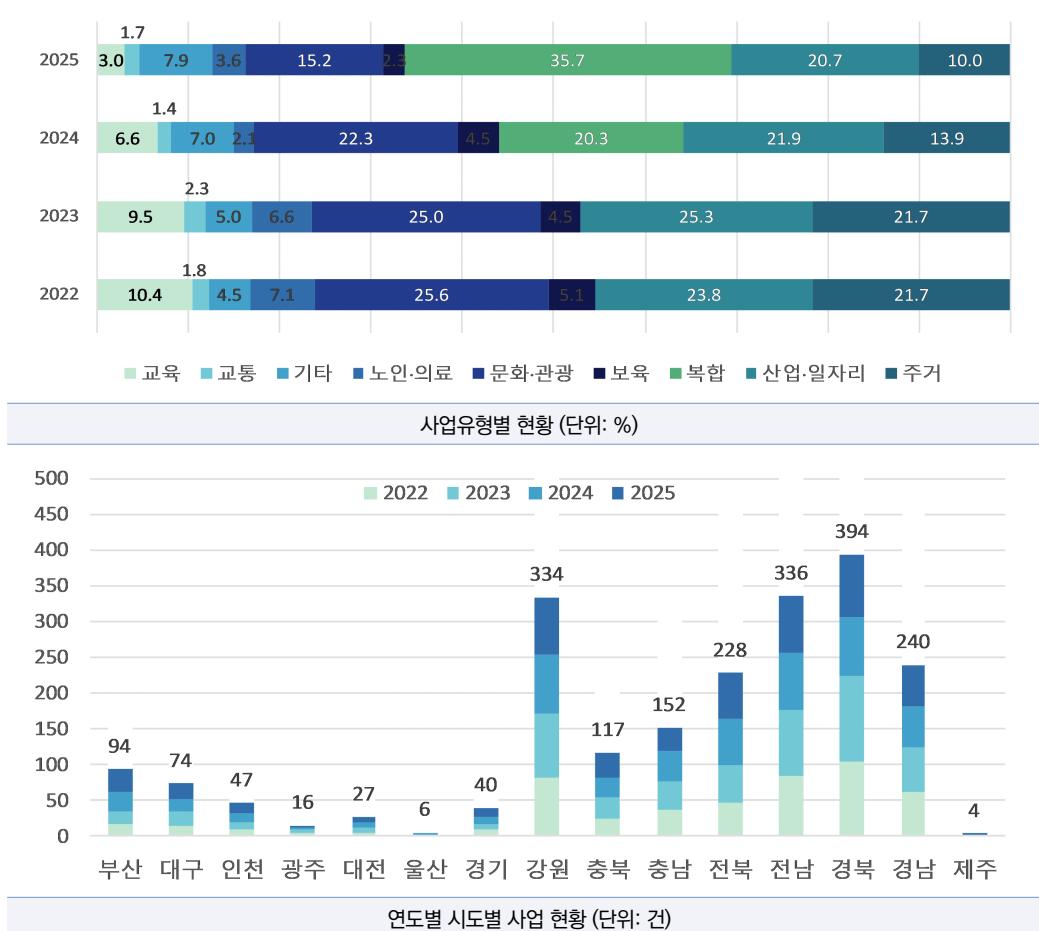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투자사업들은 주거, 산업·일자리, 보육, 문화·관광, 노인·의료, 기타, 교통, 교육 분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주거 분야는 2022~2023년까지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4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일자리와 문화·관광 분야는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청년 유입과 지역 활력의 핵심 전략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한편, 보육·교육·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비율은 낮지만, 지역정착·삶의 질 관점에서 지속 보완이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표 2-12]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분야별 개요

분야	사업 예시	연도별·분야별 사업비율(%)			
		2022	2023	2024	2025
주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귀농귀촌 보금자리, 빙집 리모델링	21.7	21.7	13.9	10.0
산업·일자리	청년창업·로컬 비즈니스, 지역특화산업 육성, 워케이션 인프라	23.8	25.3.	21.9	20.7
문화·관광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컬투어, 농촌체험 등), 폐교·폐건물 활용 문화공간 재생, 지역예술 활동	25.6	25.0	22.3	15.2
노인·의료	공공산후조리원, 방문간호, 케어센터, 원격의료 시스템	7.1	6.6	2.1	3.6
교육	지역유학, 작은학교, 청소년 커뮤니티 센터, 평생교육 플랫폼	10.4	9.5	6.6	3.0
보육	공동육아나눔터, 다문화·저출산 대응 돌봄, 아동 복합센터 조성	5.1	4.5	4.5	2.3
교통	농촌형 대중교통(100원 택시 등), 서틀·환승 인프라 개선	1.8	2.3	1.4	1.7
기타	생활인구 분석 시스템, 주민 주도 거버넌스 플랫폼 등	4.5	5.0	7.0	7.9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3) 윤성수(2024, 11월 5일 기사)



[그림 2-4]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현황

출처: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추진사업현황, 투자계획 등을 바탕으로 우수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2024년 선정된 경북 청도군은 35억원을 투자하여 개장한 ‘빛나래 상상마당 물놀이장’을 통해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였으며²⁴⁾, 충남 단양군은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둔 보건의료원 개원, 올누리센터 개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사업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사업²⁵⁾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감소지역 배분액 집행률은 31.9%(전체 배분액 7,104억 원, 집행액 2,268억 원)으로 부지 문제에 따른 대상지 변경, 토지보상절차 기간 소요 등이 주된 지연 원인이며, 사업에 따른 지자체 인구 유입 증가, 고용 창출 등의 실질적 효과가 평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²⁶⁾.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외에 다수의 재정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이로 인해 국가 재정의 비효율성과 지자체 차원에서의 혼란 우려도 문제점으로 언급²⁷⁾되고 있다.

24) 청도군청 행정소식 홈페이지, <https://www.cheongdo.go.kr/portal/board/post/view.do?bclidx=518&mid=0301070000&idx=311912> (접속일자: 2025.10.14)

25)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사업’, ‘CCU기업지원센터 건립사업’, ‘단양으로 온(ON) 프로젝트-학교로 온(ON) 1호 가평초, 2호 어상천초’

26) 송윤정(2025, pp.1-2)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2025-2027)

빈집재생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악화를 유발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빈집밀집구역을 중심으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워케이션, 체험, 창업 등 공간으로 활용하고, 공동이용시설도 함께 조성하여 지역 활력 거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공모를 진행하여 강진군, 청도군, 남해군 3곳이 선정²⁷⁾되었으며, 각 구당 21억 원(국비 6.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체류형 인프라 조성과 함께 지역주민과 민간이 협업하는 구조를 강조하며,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생활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모델이다.

[표 2-13]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고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개선) 빈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소멸 대응)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 및 생활인구 확대 (지속가능성) 민간의 창의성,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 활성화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우선정비구역 우선 지원
사업기간	2025년 ~ 2027년 (3년간)	
공모대상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군 내 빈집 밀집 마을	빈집 10호 이상 또는 20% 이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리모델링) 빈집 10호 리모델링, 생활인구, 귀농·귀촌(예정)자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 (공동이용시설) 빈집 2호, 마을 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마을도서관, 영화관, 공유주방 등 조성 (프로그램) 생활인구 유입 목적의 지자체 및 타 부처 프로그램 연계 	사업계획에 민간참여·환원계획 포함 시 가점
총사업비	지구당 총 21억 원 (국비 30%, 지방비 50%, 민간 20%)	(연차별 예산배분) 1년차 10%, 2년차 40%, 3년차 50%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집약도(30): 빈집우선 정비구역, 빈집 개소 수 입지 적절성(20):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등 유형 적합성 및 계획의 차별성(20): 지역지원 활용여부 등 지자체·참여기관의 참여 의지 및 역량(30): 역량, 사전준비, 인력배치 및 행정예산, 연계사업 등 가점(참여기관 투자 비율, 최대 5점) 	서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최종 선정심의
사업유형	(예시) ① 주거·워케이션형, ② 문화·체험형, ③ 창업형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제안, 유형 간 복합화 가능
주요특징	민간주체의 적극적 참여 유도 및 운영책임 강조	운영 수익의 지역 환원 계획 필요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5a)

② 지자체 생활거점 조성사업

■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와 지역체류 기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 중

지자체들은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활거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청년 및 귀농·귀촌인의 정착 유도, 워케이션과 같은 체류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단기 체류공간부터 지역 이주 및 정착을 위한 주택까지 다양한 층위의 공간 조성이 추진 중이며, 대다수의 사업이 체류시설 뿐만 아니라 공유오피스, 복합문화공간, 체험공간 등 생활인구가 이용가능한 시설들을 함께 조성하고 있다.

27) 김동균 외(2024, p.88)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28) 전남 강진군은 농촌체험민박과 마을호텔 등 숙박시설, 농촌 체험설, 창업 및 문화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경북 청도군은 마을호텔과 문화·체험공간을 조성, 마을 도슨트(안내인) 양성 프로그램을 계획, 경남 남해군은 워케이션 공간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만들고 시설관리 플랫폼과 마을·빈집 활동가 운영을 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5b, 4월 1일 보도자료)

[표 2-14]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요 생활거점 조성사업 개요

지자체	정책명	주요내용
경상북도	생활인구 활성화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인구감소 현장에 적합한 생활인구 정책 지원 (사업유형)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소규모마을 활성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 가르텐) 조성 (지원규모)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 총 114억원(도 57억, 시군 57억)
경상남도	지역 특화형 생활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시·군이 보유한 자원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주거·생활 서비스 선순환이 가능한 공간 조성하는 사업 (지원규모) 2024년 2곳 선정, 3년간 최대 200억원 지원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방문·체류인구 확보를 통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경제활동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지원규모) 2024년 11곳 선정, 최대 5억원 지원
강원도	강원스테-이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적)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에 적극적·능동적 대응 (지원대상)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경상보조),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자본보조) (사업기간) 2024년~2026년(3년간), 매년 공모선정 (총사업비) 30억 원(도 15억 원, 시군 15억 원), 25년 사업비 10억 원(도 5, 시군 5) (추진방법) 시군공모, 사업선정 추진

출처: 경상북도(2025, 4월 23일 보도자료), 이미지(2023, 11월 1일 기사), 강원특별자치도(2025a, 1월 6일 보도자료),

강원특별자치도(2025b, 3월 23일 보도자료) 참고하여 작성

- 경북 ‘생활인구 활성화 공모사업’²⁹⁾

경상북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을 활용해 인구감소 현장에 적합한 창의적인 생활인구 정책을 전폭 지원하는 생활 인구 활성화 공모사업 4종(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소규모마을 활성화,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은 빈집, 폐교 등 유휴자원을 고쳐 창업공간, 문화예술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청도군(유천문화마을조성), 칠곡군(왜관읍 김해여관 스테이), 안동시(워케이션센터 온유溫柔 조성), 등 6개 시군 선정하였다. ‘1시군 1생활인구 특화’는 지역과 연을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영덕군(세컨드스텝(Second Step) 프로젝트), 상주시(달두개학교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7개 시군이 선정되었다. 그밖에 관계인구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소규모마을 활성화’와 체류형 가족 정원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 경남 ‘지역 특화형 생활거점’ 및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³⁰⁾

경상남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으로 시·군이 보유한 자원 특성을 고려해 일자리·주거·생활 서비스 선순환이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지역특화형 생활거점 사업’과 방문·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이는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생활거점 사업’인 통영시 ‘통제영 수국(水國) 프로젝트’는 한산면의 제승당 방문객을 한산면 전 지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청년활력거점 조성하는 사업이며, 함양군 ‘함양사계 포유(for you)’은 스마트팜과 지방정원을 연계하여 귀농·귀촌인구 유입을 위한 지역체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복합캠핑장, 체재형 임대주택 등을 조성 중이다.

29) 경상북도(2025, 4월 23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30) 이미지(2023, 11월 1일 기사)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지역활력공간 조성사업’은 유휴시설을 활용해 방문·체류인구 확보와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 중 거창군, 함안군, 의령군에서 추진 중인 ‘경남별장’ 사업의 경우, 도내 증가하는 빈집을 매입 및 리모델링하여 장기 체류자 등을 위한 숙소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 강원 ‘강원 스테-이(GANGWON STA-E) 시범사업’³¹⁾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거주·체류하는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매년 10억 원(도 5, 시군 5)씩, 총 3년간 30억 원 규모로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 추진에 있다. 본 사업은 지역소멸 방지와 직접 관련 있는 프로그램(SW)을 지원하는 ‘인구소멸 심각 위험지역 특별지원사업’과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 또는 외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체류공간을 조성(HW)하는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강원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은 ① 주거 공간(워케이션 공동숙소, 청년지역 정착 위한 주거공간, 귀농·귀촌인 임대 주거공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참여자 주거공간 등)과 ② 공용공간(워케이션 공유 오피스, 공유주방, 청년복합공간, 농촌체험장 등) 조성을 지원한다.

[표 2-15]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 선정지역 개요

구분	지자체	사업명	주요내용
2024	영월	농촌유학 스테-이 하우스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1개소(김삿갓면) • 수혜대상: 농촌유학가족 • 사업량: 4개동(신축) • 내용: 군 유휴부지 내 농촌 유학생 주거공간 신축
	화천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함께하는 스테-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6개소(화천읍, 사내면 2, 간동면 2, 상서면) • 수혜대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 사업량: 6개소(리모델링) • 내용: 유휴 경로당 리모델링,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 등
2025	태백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1개소(계산동) • 수혜대상: 청년 • 사업량: 1개소(리모델링) • 내용: 복지회관 2층 유휴공간 리모델링, 청년창업, 네트워킹, 지역 정착 지원 거점으로 활용
	정선	청년 창업 아이디어 쇼룸 및 여행자 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1개소(정선역) • 수혜대상: 청년, 여행자 • 사업량: 1개소(신축) • 내용: 역사 외부 유휴건물 철거, 모듈러 회의공간 설치

출처: 강원특별자치도(2025a, 1월 6일 보도자료), 강원특별자치도(2025b, 3월 23일 보도자료)

■ 귀농어·귀촌인 등 지방이주 희망자를 위한 주거지원정책

- 만원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제공³²⁾

월 임대료 1만원인 ‘만원주택’, 하루 임대료 1천원인 ‘천원주택’,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반값 전세’ 등 주거비 부담을 줄여 저출생 문제 극복, 지역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 주거정책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중에 있다. 인구감소 위기의 전남 화순군에서 관내 비어있는 부영 임대아파트를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1만원 임대료로 공급한 정책이 ‘전남형 만원주택’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전주 ‘청년만원주택(청춘별채)’, 강원 태백의 ‘만원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서울, 인천 등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31) 강원특별자치도(2025a, 1월 6일 보도자료), 강원특별자치도(2025b, 3월 23일 보도자료)

32) 박지윤(2025, 3월 4일 기사) 참고하여 작성

-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임시거주 공간 제공과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완도군에서는 임시거주공간을 제공(최장 1년, 공과금 1달 15만원 부담)³³⁾하고 있으며, 신안군에서는 주택 수리비 지원(5,000천원 이내, 주택 및 부엌, 화장실 등 개보수 비용 지원)³⁴⁾, 강진군에서는 빈집 리모델링 지원(공사비 50%, 최대 3,000만원 지원)³⁵⁾ 등을 추진 중이다.



[그림 2-5] 귀농어·귀촌인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자체 주거지원정책

출처: 김경민(2023, 1월 2일 기사), 김현아(2024, 5월 19일 기사)

- 임대주택 건설 등 외 사항

그밖에 충북 괴산군에서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건설사업(행복 보금자리 조성사업),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주택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SH 골드시티 조성사업) 등이 있다.

※ 지자체 생활거점 조성사업 사례(서울-지방상생형 골드시티)

-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해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롭게 생활하려는 은퇴자의 인생 2막 및 청·장년층 이주 지원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 도시 주거문제를 동시 해소하는 조고령사회 대비 지방상생형 주거정책 모델
- 청정 자연환경, 도시 인프라를 갖춘 지방도시에 편의시설, 고품질 백년주택, 관광/휴양/요양/의료/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며, 삼척시에 시범사업 2,700세대 규모로 조성을 추진(2028년 준공 목표)



SH 골드시티 추진전략

출처: SH공사, 주거인정을 위한 골드시티 추진 및 3기신도시 참여 요청 SH톡톡. 39(<https://webzine.i-sh.co.kr/674>, 검색일: 2025.02.14.)

33) 완도군, 귀어가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http://www.jnsealife.or.kr/ko/12> (검색일: 2025.05.14.)

34) 신안군, 귀어가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http://www.jnsealife.or.kr/ko/16> (검색일: 2025.0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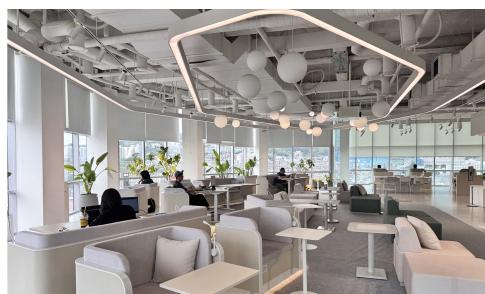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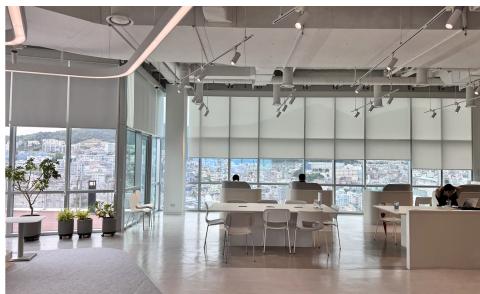
35) 빈집 리모델링 지원, 강진군청, https://www.gangjin.go.kr/www/part/onestop/residence/empty_house (검색일: 2025.05.17.)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워케이션 유치, 세컨하우스 조성 등 특화사업 발굴

부산 원도심 중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서구, 동구, 영도구의 워케이션 사업 추진, 강원·경북·충남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자체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특화 사업을 발굴·추진 중에 있다.

※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

- (운영주체) 부산시 관광진흥과(위탁운영: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 (운영장소) 동구 초량동 아스테호텔 24층(수용인원 약 60명, 업무공간 중심)
- (운영 유형) 거점센터는 공공에서 운영(부산시), 위성센터는 민간과 협업하는 공간(예: 패스파인더, 더휴일)으로, 위성센터에 대해서는 워케이션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의 임차료를 지원
- 참가자 현황 및 이용특성
 - (구성) 수도권(서울, 경기) 방문객이 많으며, IT 계열, 마케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에서 참여, 주로 기업 단위 팀 단위 방문
 - (체류 특성) 평균 체류 기간 3박(10박 프로그램은 단일 일정으로만 지원 가능, 쪼개서 사용 불가, 연 1회만 지원 가능)
- 제공 서비스 및 인프라
 - 3박 이상 체류자 대상으로 관광바우처(5만원), 웰컴키트, 자율형 상품(3만원 상당) 지원
 - 관광바우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광기업 간 업무협약을 통해 활용처 구성



출처: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워케이션TFT 담당자 인터뷰(2025.07.15.), 사진은 연구진 촬영

3) 민간 부문의 생활거점 조성·운영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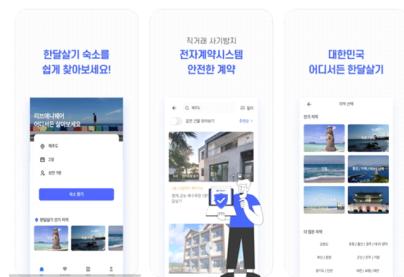
■ 빈집문제, 귀촌 수요, 워케이션 등에 대응하여 생활거점 조성 및 플랫폼 운영

지방도시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빈집을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추어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로 조성(예: 마이세컨플레이스 등), 빈집 문제와 귀촌 인구의 거주 문제를 연계한 빈집 큐레이션 플랫폼 운영(예: 유휴하우스) 등 다양한 민간 주도의 접근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워케이션·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주거문화가 변화하면서,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등 단기 거주를 위한 임대 플랫폼 운영 사례가 증가하였다. 여행·휴식 목적의 숙박시설보다 장기 체류 및 거주를 위한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거주 형태에 대응하는 민간 부문 활동이 증가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제주 구좌읍 세화 질그랭이 거점센터'는 마을협동조합이 유휴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 2층 지역 특산품 카페, 3층 공유오피스, 4층 숙박시설로 운영되며, 마을 주민이 직접 기획한 해녀투어, 밭담투어, 오름투어 등 지역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주민해설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동 소득을 도모하고 있다.

* 단기임대 플랫폼 및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 특례 등 단기 체류를 위한 공간 운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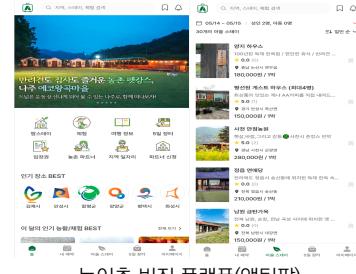
- 일주일, 한달 등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단기임대 숙소를 제공하는 플랫폼
 - 지역, 기간, 테마, 예산별 다양한 숙소를 제공
 - 리브애니웨어, 미스터멘션, 삼삼엠투 등 다양한 단기임대 플랫폼 운영 사례 증가
- 도심 내 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 특례
 -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확보, 농어촌지역 빈집 문제 완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되는 플랫폼 사례(위홈, 미스터멘션, 싸이트지니, 다자요, 액팅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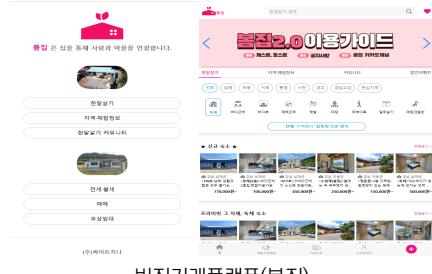
한달살기 단기임대 플랫폼(리브애니웨어)



공유숙박 실증특례(미스터멘션)



농어촌 빈집 플랫폼(액팅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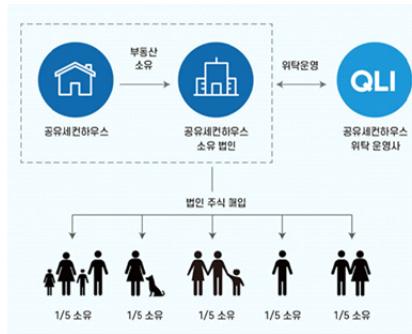


빈집거래플랫폼(봄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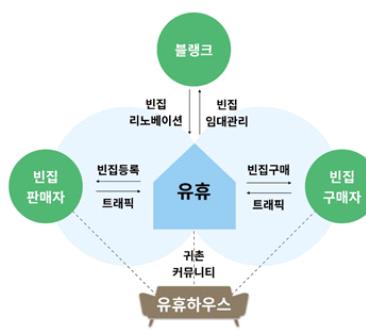
출처: 리브애니웨어(<https://www.liveanywhere.me/corp/information>), 미스터멘션(<https://www.mrmention.co.kr/>), 액팅팜 (<https://www.actinglefarm.com>), 봄집(<https://springhouse.co.kr/sh/rental/main.html>) 검색일: 2025.05.15.)

※ 지방도시의 빙집 활용 및 생활인구를 위한 스테이 공간 사례

-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마이세컨플레이스)
 - 빙집을 철거 대신 리모델링하여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로 재탄생
 - 5도 2층 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는 가구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소유하는 플랫폼 운영
- 빙집 공유 루스테이(유휴하우스)
 - 노후·유휴공간 빙집을 임대하여 리노베이션을 통해 공유주택 '유휴하우스' 공급
 - 지방의 빙집 문제와 연 20만 명 정도의 귀촌 인구 거주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
 - 귀촌 인구를 위한 세컨 라이프 커뮤니티 구축



공동소유 세컨하우스 구조



빙집 큐레이션 플랫폼 유휴 사업 개념도

출처: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란, 마이세컨플레이스(https://mysecondplace.co.kr/gongju_msp2/?bmode=view&id=x=17450955, 검색일: 2025.02.15.), 문승규(2023), 블랭크, 동네와 이웃을 잇는 공간, 건축신문(<http://architecture-newspaper.com/bk-tt-09-blank/>, 검색일: 2025.02.15.)

※ 민간 워케이션을 위한 생활거점 조성 사례

- 제주 구좌읍 세화 질그랭이 거점센터
 - 마을주민 477명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세화마을협동조합에서 2020년 제주 구좌읍 세화리 종합복지타운을 증개축, 리모델링하여, 건립·운영
 - 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업무공간, 숙소, 카페 등 포함



업무공간 질그랭이센터



숙소 '세화밖거리'

출처: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15d70c24-57c6-4472-8108-b7daf487fda8, 검색일: 2025.05.16.)

4) 일본의 두지역거주 활성화 정책 동향

■ 추진 배경

일본은 저출산·고령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 국가경쟁력 저하 등 국가가 직면한 복합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7월 28일 각의를 통해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제3차)'을 공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지역의 힘을 연결하는 국토', '원활한 거점연계형 국토' 등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으로의 인구 흐름 창출·확대'와 '디지털과 현실이 융합된 지역생활권 형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³⁶⁾. 이러한 국토형성계획의 방향성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24년 5월 22일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법률(이하 「광활법」이라 함)」을 일부 개정하여 '두지역거주' 관련 제도를 새롭게 신설하였다.

「광활법」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광역적 차원에서 인구 왕래와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7년 5월 제정되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사회에서는 UIJ턴을 포함하여 청년층과 육아세대를 중심으로 두지역거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창출·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필요성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역 내 '주거', '일자리(생활)', '커뮤니티'와 관련된 다양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두지역거주자들을 위한 주택, 코워킹스페이스, 교류시설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며, 지자체가 자신들의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환경 정비를 지원하고자 2024년 5월 「광활법」을 일부개정하였다³⁷⁾.

[표 2-16] 일본의 「광활법」 주요 개정 내용

항목	기존(2007년 법률)	개정(2024년 법률)
기반 정비 지원 대상	광역 경제 활동 중심	두지역거주 촉진 관련 시설 포함
계획 수립 주체	광역 활성화 계획 (도도부현 중심)	특정거주촉진계획 (시정촌 단위 추가)
지원 제도	광역 경제 개발 지원	특정거주촉진협의회 및 지원법인 도입
주거 관련 규제 완화	없음	빈집 활용, 코워킹스페이스, 공유오피스 등 주거 유연성 강화

출처: 国土交通省(2024a), 国土交通省(2024b)를 참고하여 작성

■ 두지역거주 관련 제도 마련³⁸⁾

두지역거주 정책은 △지방의 인구 유지 및 인재 확보(다양한 형태 거주 유도), △경쟁력 강화(가족 돌봄, 자연과의 연결 등 복합 가치 반영),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수용(성소수자 등도 포함한 사회적 다양성 존중), △재해 대응력 강화(제2의 거주지 확보를 통한 피난 및 회복력 강화)의 주요 목적을 가지고 있다³⁹⁾.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광활법」은 두지역거주 관련 주요 개념과 제도적 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정거주'는 해당 지역 외에 주소를 둔 사람이 정기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지를 설정하여 체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체류 빈도와 기간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지역별 실정과

36) 国土交通省(2023, pp. 1-6), 国土交通省(2024a, pp. 1-3)를 참고하여 작성

37) 国土交通省(2024a, pp. 1-4)를 참고하여 작성

38)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2024년 법률 제31호)를 참고하여 작성

39) 일본 국토교통성 지방정책과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2025.05.28. 인터뷰)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 다만 단순 관광처럼 1~2일에 그치는 단기 체류는 정기적인 체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지'는 해당 지역과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적 연계를 맺는 장소를 뜻하며, 일반적인 주택뿐 아니라 장기 체류가 가능한 호텔·여관 등도 포함될 수 있다. '거점시설' 한 단지의 주거시설, 특정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사업자 등의 업무시설, 특정 거주자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촉진에 기여하는 시설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광역적 특정활동'은 특정거주를 위해 필요한 주택이나 사무실 등 시설을 제공하거나, 해당 지역에서의 특정거주를 촉진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는 상당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러한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 1일 시행된 「광활법」은 두지역거주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우선, 법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두지역거주'의 개념을 정의하고, 기초지자체인 시정촌(市町村)을 주체로 하여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특정거주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 또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지역거주 지원을 전담할 '특정거주지원법인'의 지정 및 지원(제28조~제32조), 민관 공동창조 플랫폼으로 기능할 '특정거주촉진협의회' 제도(제23조)를 도입하였다. 또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기준법」 등 관련 규제의 특례(제24조~제27조)를 마련하여, 두지역거주와 관련된 인프라 정비 및 민간 참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⁴⁰⁾.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일본의 두지역거주 정책은 생활방식의 변화 수용을 넘어, 제도적·재정적 기반과 민관협력체계를 포괄하는 종합적 추진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표 2-17] 「광활법」 상의 두지역거주 촉진 관련 세부 정책

구분	주요 역할 및 내용
특정거주촉진계획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촌 단위의 주거·일자리·커뮤니티를 아우르는 지역별 맞춤형 계획 특정거주촉진구역 설정 (빈집·공공시설 활용 포함) 공동 이용 가능 시설 정비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오피스 등) 이주 희망자 및 관계인구 대상 지원 제도 구축 특정거주촉진협의회를 통한 민관 협력 체계 구축
특정거주촉진협의회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촌이 주관하며, 민간, NPO, 주민,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민간 협력 기구 이주 정착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네트워크 구축 역할 수행 이주자 및 관계인구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택 및 생활 지원 제도 설계, 지역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연계
특정거주지원법인 (제5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와 협력하여 이주·정착 지원 사업 수행 빈집 정비, 공유 주택 운영, 지역 커뮤니티 연결 역할 빈집 및 기존 건물 활용 지원 (임대, 리모델링, 주거 공간 제공) 주거 정보 제공 및 지역 매칭 (이주 희망자 대상 컨설팅) 지역 사회 및 커뮤니티 연계 (지역 주민과의 교류 활성화)
「건축기준법」의 특례 (제24조, 제2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용 건물을 특정거주거점시설로 활용할 경우, 용도규제 적용제외/변경 허가 간소화 빈집의 용도를 변경해 특정거주거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규제 완화
「지역주택특별조치법」의 특례(제2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정촌이 특정거주촉진계획에 공공임대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적용 공공임대주택의 이주체협용 주택 전환, 또는 이주 희망자 대상 저렴한 가격에 제공
지방주택공사 업무의 특례(제2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주택공사법」 제21조에 규정된 지방주택공사 업무 외 특정거주촉진계획을 수립한 시정촌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특례 적용 특정거주촉진구역 내 특정거주자를 위한 주택 정비, 임대, 기타 관리 업무 수행 가능

출처: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2024年 法律 제31호)를 참고하여 작성

40) 国土交通省(2024c, p.6), 国土交通省(2024a, pp.2-3) 바탕으로 작성

■ 특정거주거점시설의 용도규제 특례(광활법, 제24조)⁴¹⁾

일본의 「건축기준법」은 도시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종 저층주거전용지역'에서는 주택 외의 용도, 즉 코워킹스페이스나 소매점과 같은 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하려면 개별 특례허가 절차(건축기준법, 제87조 제2항·제3항)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민간사업자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활법」 제24조에서는 용도규제와 관련된 특례조항을 신설하였다.

이 특례에 따르면, 시정촌이 '용도특례 적용요건'을 사전에 건축허가 권한을 가진 특정 행정청과 협의한 뒤, 이를 '특정거주촉진계획'에 반영하고 공표하면, 이후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보다 원활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 사안마다 반복되는 복잡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주도 시설정비 활성화, 두지역거주자의 생활기반을 보다 유연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표 2-18] 특정거주거점시설의 용도와 「건축기준법」의 용도규제 관계

용도	「건축기준법」 상의 용도(참고)	주거전용지역			
		1종 저층	2종 저층	1종 중고층	2종 중고층
주택	주택	○	○	○	○
공동거주형주택(셰어하우스)	기숙사	○	○	○	○
교류시설	집회소(※2)	○	○	○	○
점포, 음식점, 커뮤니티 카페	점포, 음식점	×(※1)	①	②	③
편의점, 드럭스토어	일용품 판매점포	×	①	②	③
셰어오피스, 코워킹 스페이스	사무소(기타용도)	×	×	×	③
숙박시설	호텔, 여관	×	×	×	×

※1 점포, 찻집, 사무소(조건부)로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

점포, 찻집, 사무소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50m² 이내일 경우 가능. 점포겸용주택 등 상정

※2 근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집회소('학교, 도서관, 그밖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

①: 일용품 판매점포, 찻집의 경우에만 2층 이하, 150m² 이하일 경우 ○

②: ①에 덧붙여, 판매점, 음식점의 경우에만 2층 이하, 500m² 이하일 경우 ○

③: 2층 이하, 1,500m² 이하일 경우 ○

출처: 国土交通省(2024a, p.24)

- 용도특례 적용요건 설정기준 및 구성요소

기준 「건축기준법」상 특례허가는 ①용도지역별 시가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②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번 「광활법」 개정에서는 여기에 더해 ③사전에 설정된 '용도특례 적용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였다.

이는 두지역거주 촉진이라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각 용도지역에 맞는 도시환경을 확보한다는 용도규제 본래 목적을 동시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 시설이 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요건은 △특정거주촉진구역 내에서 가능한 건축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역

41) 国土交通省(2024a, pp.24-31)을 참고하여 작성

전체 또는 일부 지구만을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도시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표 2-19] 특정거주촉진구역 내 특정거주거점시설의 용도특례 적용요건

구성요소	주요내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거주거점시설(코워킹스페이스, 두지역거주자 대상 숙박시설 등) 특정거주자의 생활편의 증진 또는 취업 기회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용품 판매점, 두지역거주자가 새로운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커피숍, 음식점 등)
구역(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치즈코리(まちづくり) 관점에서 용도규제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한정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크게 반하는 지역 제외
도시환경 악화 방지 조치	특례 활용으로 주변 주거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소음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출처: 国土交通省(2024a, p.26) 참고하여 작성

※ 용도특례 적용요건 인정 예시: 코워킹 스페이스 설치

① 용도

- 코워킹 스페이스

② 구역(지구)

- 비즈니스 및 지역교류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
- 지역 내 주요 도로 등 연선에 위치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적은 지역
⇒ ○○시 ○○길 ~ ○○길, 시도○호선 연선

③ 도시환경 악화 방지 조치

- (소음) 건물 외 시설 이용자가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등 배려 조치 계획
- (악취) 쓰레기 배치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악취에 배려한 조치 마련
- (교통혼잡) 부지 출입이 도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교통사고 발생이나 인근 도로 노상 주차 증가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 하여 조치
- (교통위험) 부지 출입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교통 안전을 배려한 조치 마련
- (사생활보호) 사생활보호를 위해 개구부(창문 등)의 위치 설정 등 인근 주민의 사생활보호를 고려한 조치 계획
- (야간조명) 방범 및 도로 밝기, 조도 방향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야간조명을 계획

출처: 国土交通省(2024a, p.27)

- 관계기관과의 조정 및 주민의견 반영

특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주민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 특정 행정청과 협의를 거쳐 각 시설에 대해 개별 판단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건축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기존 허가사례를 공유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다. 허가 후에는 허가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점검과 필요 시 시정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위한 절차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례 허가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며, 그에 앞서 특례 적용요건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특례 조치를 통해 건물 소유자나 민간사업자들이 허가 가능성은 사전에 예측할 수 있게 되어 투자와 사업계획의 불확실성 감소와 두지역거주자를 위한 시설 정비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광역·기초지자체 단위 계획 수립

•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계획(두지역거주)⁴²⁾

일본의 '광역적 지역 활성화 기반 정비계획(이하 '광역활성화계획'이라 함)'은 「광활법」에 근거하여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은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의 기본방침에 따라 수립하며, 두지역거주 촉진을 통해 광역적 지역 활성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역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면, 기초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두지역거주 촉진에 관한 '특정거주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본 계획에 규정된 사업 추진 시 법률상의 특례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본 계획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계획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및 인허가 등의 권한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지역 실정에 맞추어 구역을 수립할 수 있다.

2025년 5월 기준, '광역활성화계획'은 7개소, '특정거주촉진계획'은 6개소에서 수립하였으며, 특정 거주지원법인은 히카이도 키타미시 1개, 아쓰마정 3개, 야마가타현 신조시 1개, 아유카와촌 1개, 나가노현 시오자리시의 3개 단체가 지정받았다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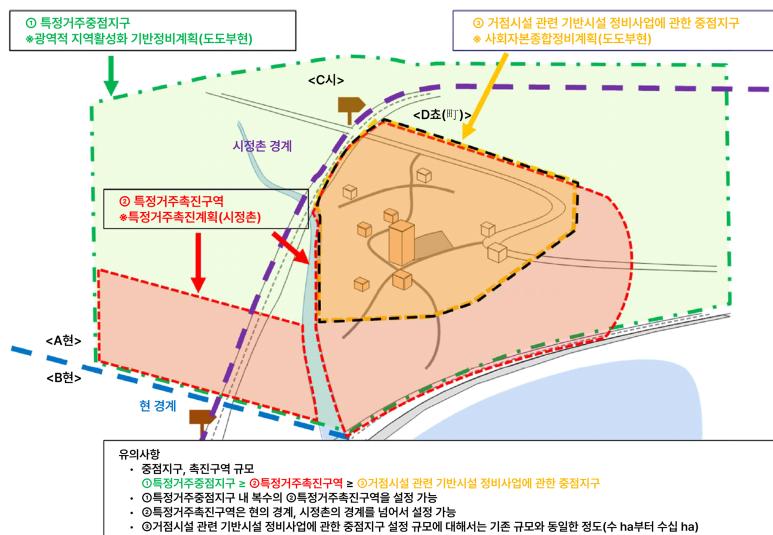
※ 일본의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특정거주거점시설과 특정거주중점지구

□ 특정거주거점시설

- 광역지자체는 지역의 마치즈쿠리 미래상, 실태, 과제 등을 바탕으로 두지역거주 촉진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생활)',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활동 거점시설(특정거주거점시설)을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판단·설정

□ 특정거주중점지구 및 특정거주촉진구역

- (특정거주중점지구) 광역지자체가 도시계획구역 마스터플랜(도시계획구역 정비, 개발, 보전방침), 입지적정화계획 등 특정거주촉진구역 설정에 관한 기준 등을 준용하여 설정
- (특정거주촉진구역) 기초지자체가 설정하는 구역으로 특정거주중점지구 범위 내에서 구역을 설정하되, 구역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장래 예상되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폭 넓게 설정할 수 있으며, 입지적정화계획 상의 거주유도구역과 같이 특정거주촉진구역을 마을 단위 집약형 정주모델로 접근하는 경우, 두 구역계 간 정합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검토할 수 있음
- (거점시설 관련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중점지구) 광역지자체가 거점시설 관련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정거주중점지구와 별도로 거점시설 관련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중점지구 설정 필요



출처: 国土交通省(2024a, p.8), 일본 국토교통성 지방정책과 관계자 인터뷰 내용(2025.05.28. 인터뷰)을 참고하여 작성

42) 国土交通省(2024a, p.7)을 참고하여 작성

43) 일본 국토교통성 지방정책과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2025.05.28. 인터뷰)

※ 일본 나가노현 시오자리시의 특정거주거점시설 사례

□ 나가노현 시오자리시 특정거주촉진계획 수립(2025.03.27. 공표)

• 배경 및 목적

- 시오자리시는 나가노현 중부 내륙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녹지(산림), 농지, 도시화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 기능은 비교적 콤팩트하게 구성됨
- 제조업(프린트 제조 중심), 와인용 포도 생산 등 농업, 전통공예 산업이 발달한 도시로, 인구는 약 65,000명 규모로 일본 지자체의 평균 수준이며, 고령화율 또한 전국 평균과 유사
- 최근 시민교류센터, 스나바, core 시오자리 등 관계인구 커뮤니티 거점 형성과 함께 새로운 지역 활동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시오자리시는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방창생을 목표로 하는 '특정거주촉진계획'을 나가노현 내 최초로 수립함

• 계획 방향: ①삶의 질 및 행복감 향상, ②교류인구, 관계인구의 방문 및 소비 증가, ③두지역거주를 포함한 생산연령 인구의 정주 증가

• 계획 목표 및 지표

- (지표1) 업무거점시설 '스나바'의 누적 등록자 수 (2025년 1월(예상) 310명 → 2030년 3월 470명)
- (지표2) 주거거점시설 이용자 수 (2025년 1월(예상) 1,363명 → 2030년 3월 4,427명)

□ 특정거주촉진구역 및 특정거주거점시설

• 특정거주촉진구역: ①다이몬지구(大門地区) ②키타오노지구(北小野地区), ③나라카와지구(榎川地区)

- 도시계획, 역사마치즈코리계획 등 기준 계획을 기반으로 전략적 중요도와 활동 기반을 고려해 3개 지구를 우선 지정
- ①다이몬지구(大門地区): 중심시가지 내 JR역 인접, 다수의 거점시설 밀집
- ②키타오노지구(北小野地区): 중산간 지역, 이주자 중심의 지역자원 재해석 및 그랜드 디자인 수립 등 시도
- ③나라카와지구(榎川地区): 고령화율 50% 이상,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포함, 폐교 리모델링 통한 거점화 추진

• 특정거주거점시설: 코워킹, 셰어하우스, 체험주택, 숙박·공방 복합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 존재

- 특정거주촉진구역별로 여려 용도의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구성, 2010년대 중반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계획 중
- 대표적인 거점시설은 다이몬지구(大門三番町) 내 코워킹스페이스 '스나바'와 셰어하우스 'en.to'가 있으며, 대부분 민간 또는 제3섹터가 운영주체로, 시는 출자나 시범사업 지원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두지역거주와 에리어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와의 연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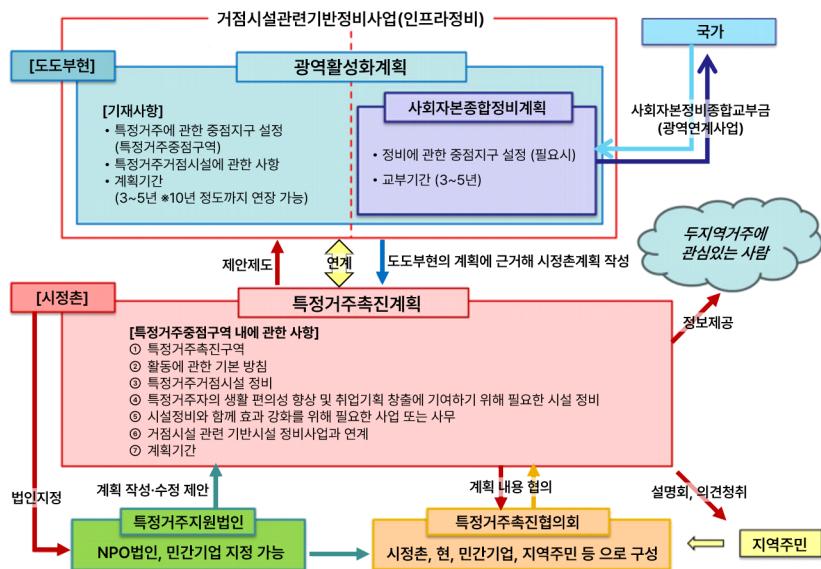
- 2025년 5월 기준, 시오자리시역 등록 중심시가지(역세권)에 대한 시가지 종합재생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숙박 중심 구역 또는 인재 육성 중심 구역 등 기능에 따라 구역 설정을 검토하고, 자율적 마치즈코리 운동과 연계한 통합적 계획 추진 예정
- 향후 두지역거주 정책과 에리어매니지먼트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모델로 발전을 도모해 나가자 함

코워킹 스페이스
'스나바'셰어하우스
'en.to'

출처: 塩尻市(2025a, 3월 27일 보도자료), 塩尻市(2025b), 시오자리시청 기획과 담당자, 시오자리시진흥공사 관계자, 합동회사 en.to 및 NPO법인 MEGURU 관계자 인터뷰(2025.05.27.)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사진은 연구진 촬영

• 광역·기초지자체 역할 분담 및 연계 체계 구축⁴⁴⁾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해 광역지자체는 광역적인 인구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으며, 구체적으로는 특정거주거점시설 설치와 특정거주중점지구 지정을 포함한 광역활성화계획 수립, 거점시설 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인구 이동을 지원한다. 기초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 정책 집행의 주체로서, 특정거주중점구역에 대한 특정거주촉진계획을 작성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시책을 시행한다. 이와 같이 광역과 기초가 분담과 협력의 구조를 갖춤으로써, 거시적 차원의 인구 이동 촉진과 미시적 차원의 생활 기반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림 2-6] 두지역거주 촉진 제도 전체 구상도

출처: 国土交通省(2024a, p.5)를 참고하여 작성

•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기초지자체의 역할⁴⁵⁾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은 두지역거주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시정촌은 두지역거주 추진을 위한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1단계) 지역 및 생활관련 정보 제공, (2단계) 상담창구 설치, (3단계) 두지역거주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 추진, (4단계) 구체적 사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시정촌은 특정거주촉진계획을 작성하고, 민간 주체와 협력할 수 있는 특정거주지원법인 지정, 그리고 지역 내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인 특정거주촉진협의회 설치를 통해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 그밖에 민간사업자와 관계 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주택, 업무공간, 교류시설 등 두지역 거주에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44) 国土交通省(2024a, p.5)를 참고하여 작성

45) 国土交通省(2024d, pp.16~49)를 참고하여 작성

[표 2-20]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단계별 주요 내용

단계	주요 내용	광활법 제도 활용 예시	그 밖에 두지역거주 관련 제도 및 보조금 활용
(1단계) 지역 및 생활 관련 정보제공	• 지역 환경, 생활정보에 대한 적극적 정보 발신 • 지역의 주거, 일자리 보육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적 제공	• (특정거주촉진계획 작성) 시책 주진을 위한 방침 정리 • (특정거주지원법인 지정) 법인을 통한 정보 제공, 상담 활동 전개	↳
(2단계) 상담창구 설치	• 창구(상담, 안내 등)의 설치		↳
(3단계) 계기를 만드는 사업 추진	• 체험거주, 원격근무, 위성오피스 등의 정비 • 지역주민과 교류 기회 및 프로그램 운영 • 지역 팬클럽 설치 및 회원제 활동 운영	• (특정거주촉진계획 작성·실행) 두지역거주자 대상 시설 정비 촉진 등 • (특정거주촉진협의회 논의) 사업 시행을 위한 지역 관계자 논의	↳
(4단계) 구체적 사업 지원	• (주거) 빙집은행을 활용한 빙집 소개, 임대료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 • (교통) 교통수단 확보 및 비용 지원 • (취업환경) 원격근무 환경정비, 취창업 환경 조성 • (보육·교육) 유아 보육·교육, 초등·중학생 교육 기회 마련 • (지역 커뮤니티와의 융합) 지역규칙 공유, 커뮤니티 유지 활동 제공	• (특정거주지원법인 지정) 법인을 통한 사업 전개	↳

출처: 国土交通省(2024d, p.16)을 참고하여 작성

■ 두지역거주 활성화 지원정책

일본 정부는 두지역거주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지역 활성화, 관계인구 확대, 도쿄 일극 집중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원격근무 및 유연한 생활방식 지원, 빙집 개·보수 및 활용,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주거 및 생활환경 정비, 공유오피스 및 지역 교류거점 조성, 대중교통 및 MaaS 연계를 통한 이동성 개선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 외에도 총무성, 내각부, 농림수산성 등 관련 부처들이 지방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주·정착 지원, 공공 인프라 확충, 농촌지역 체험 및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주 상담창구 운영, 이주 지원금 지원, 농산어촌 빙집 및 폐교를 활용한 거점 조성, 체험형 정착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2-7]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대응체계 이미지

출처: 国土交通省(2025a, p.3)

특히 국토교통성은 두지역거주 정책의 핵심 부처로서 선도사업과 실증조사 등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4년에는 지자체와 연계한 민간단체(기업, NPO 등)의 두지역거주 관련 사업 6건⁴⁶⁾을 선정해 선도사업의 실증조사 및 분석을 지원하였다⁴⁷⁾. 선정된 사례들은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 온보딩 프로그램, 커뮤니티 형성, 일자리 연계, 교통수단 제공,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설계 등을 포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선도적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대응 주체 지원사업에서는 「광활법」 시행 이후 특정거주지원법인 등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선도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기준으로 9개 단체 및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⁴⁸⁾.

2025년에는 ‘두지역거주 선도적 프로젝트 실증사업’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두지역거주 촉진을 통해 지방으로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조사·검토’ 사업과 ‘실행계획에 따른 선도적 실증사업’을 포함하여⁴⁹⁾, 본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중심이 되어, 단기적 실험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착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21] 두지역거주 선도적 프로젝트 실증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 중장기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검토, 실행계획에 따른 선도적 실증사업 • (컨소시엄) 지자체, 민간기업·비영리법인 등 • (중장기적 과제 예시) 교통비, 숙박비, 통신환경 등 두지역거주에 필요한 비용 부담 완화 방안 / 교통, 의료, 교육, 복지 등 생활 인프라 구축 / 주민등록·세금 문제 등 제도적 정비
지원내용	<p>[중장기적 과제 해결을 위한 조사·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 사업 실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행계획 수립, 컨소시엄 운영, 홍보·광고, 관계자와의 의견 교환 및 합의 형성, 실행체계 및 구조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교통비, 숙박비 등 두지역거주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 제외) • 정액 지원, 최대 2,000만 원(2년 이내) <p>[선도적 시도 실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에 필요한 시스템 정비·개보수 • 구역 외 취학·광역적 보육소 이용 운용 • 2차 교통수단 확보 • 체험거주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정비(빈집 또는 기존 시설 활용한 정비로 한정) • 인터넷 환경 구축 • 기타 중장기 과제 해결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1/2 보조
국비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연계 선도모델로 평가 • 「광활법」에 근거한 특정거주촉진계획과 연계 • 사업 후 지속성과 효과가 기대

출처: 国土交通省(2025b) 참고하여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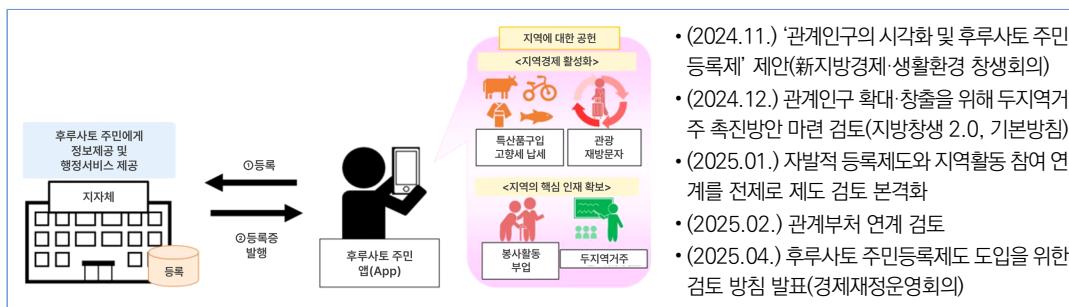
46) 홋카이도 기타미시(北海道 北見市),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시(岩手県 陸前高田市), 니가타현 사도시(新潟県 佐渡市), 나가노현 시오자리시(長野県 塩尻市), 시즈오카현 미시마시·나가이즈미쵸(静岡県 三島市·長泉町), 가고시마현 아마미시(鹿児島県 奄美市)가 선정됨

47) 国土交通省(2024b, 8월 6일 보도자료)

48) 国土交通省(2025a, p.5)를 참고하여 작성

49) 令和7年度 二地域居住先導의 프로젝트実装事業, 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kokudoseisaku/kokudoseisaku_u_tk9_000058.html (검색일: 2025.05.13.)

최근 일본 정부는 '관계인구'를 제도적으로 가시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후루사토 주민 등록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스스로를 관계인구로 등록하고, 해당 지자체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록 시스템으로, 현재 시범 도입이 추진 중이다. 관계인구로 등록 가능한 지역의 범위는 3~5개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각 지역에서의 어느 정도 체류했을 때 두지역 거주로 인정할 것인지(예: 전체 체류의 10~20%)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본격적인 복수 주소제 도입 전 단계의 시범 장치로서, 두지역거주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복수 주소제의 필요성과 도입 방향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주민표(주민등록)는 원칙적으로 한 지역에만 둘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및 선거권과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다. 이에 따라 주민표와 무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향세(ふるさと納税)' 제도의 연계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⁵⁰⁾.



[그림 2-8] 후루사토 주민등록제도 도입 검토과정

출처: 국토교통성 내부자료(2025.05.)

■ 두지역거주 활성화를 위한 민간주체 활동 및 정보제공 사례

일본에서는 두지역거주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체가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과 정보제공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총무성의 지원을 받아 2002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일본 내 최대 규모의 이주 상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전국 지자체와 연계하여 이주·정착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광역 단위 이주 지원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도쿄 유라쿠초 교통회관 내에 마련된 오프라인 거점과 온라인 플랫폼을 결합해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주 상담, 이주·정착 세미나 및 박람회 개최, 미디어 및 콘텐츠 운영, 지자체·민간 연계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50) 일본 국토교통성 지방정책과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2025.05.28. 인터뷰)



[그림 2-9]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및 운영 홈페이지(FURUSATO)
출처: 第20回ふるさと回帰フェア運営事務局2024, <https://event.furusatokaikai.net/fair2024/> (좌): FURUSATO, <https://www.furusato-web.jp/>(우)(검색일:2025.04.07.)

또 다른 사례로는 이주·정주 포털사이트 운영을 들 수 있다. 2024년 10월 기준의 ‘전국 두지역거주 촉진 협의회’를 개편하여 공공과 민간센터를 연계한 ‘전국 두지역거주 촉진 민관협력 플랫폼(全国二地域居住等促進官民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이 설립되었다. 이 플랫폼은 나가노현, 와카야마현 타나베시, 도치기현 나스쵸, ANA홀딩스, 공유경제협회 등 5개 기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내각관방·내각부, 총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등 중앙정부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 플랫폼의 회원은 두지역거주 촉진 의지가 있는 지자체(도도부현, 시정촌), 관계단체, 민간사업자로 구성되며, 2025년 2월 현재 지자체 731곳과 279개 관계단체·민간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다. 이 플랫폼은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정책·사례 정보 교환 및 발신, △과제 해결을 위한 협의·검토, △두지역거주 노하우 보급, △정책 검토 및 제안, △민관 매칭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별 이주·정보 포털사이트에서는 지역의 거주(빈집뱅크, 이주체험 레포트, 체험주택, 이주지원금), 일자리, 지역 주민 및 생활환경에 대한 정보,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등 구체적인 이주 과정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⁵¹⁾.



[그림 2-10] 이바라기 이주·정주 포털사이트(Re:BARAKI)
출처: Re:BARAKI(<https://iiu-ibaraki.jp/>), 검색일: 2025.02.08.)

51) 全国二地域居住等促進官民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https://www.mlit.go.jp/2chiiki_pf/index.html), 검색일: 2025.02.08.), 일본 NPO법인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2025.05.29.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3.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1)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계획 및 사업, 선행연구 검토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먼저, 89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시도·시군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향올래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지역활력타운 등 관련 사업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생활거점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상의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국가(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89개 시군구와 관할 11개 시도가 지역 여건·특성에 맞게 특화된 계획, 핵심·중점사업 위주로 수립되는 전략적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11개 시도, 89개 시군구가 각각 수립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대상, 주요 사업내용,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 등 세부 내용을 살펴보고 지자체에서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생활인구의 특징과 생활거점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 11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사업내용 검토

11개 시도(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과 관련된 사업 내용을 검토하였다. 관련 사업은 286개로, 사업명과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지역관광·체류 경제 활성화’, ‘다문화·청년 인구 유입’, ‘일자리·정착 지원’, ‘평생학습, 귀농·귀어 정착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각 시도에서는 이러한 분야와 관련된 사업들을 대다수 다루고 있으며, 특히 관광, 워케이션 등을 통한 지역관광·체류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업을 가장 많이 계획하고 있었다.

[표 2-22]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생활인구·생활거점 관련 주요 사업 내용

사업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지자체	비고(사업수)
지역관광·체류 경제 활성화	워케이션과 관광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인프라 중심 사업	•(부산) 백년송도 해양문화 복합플랫폼 건립 •(충북) 단양 다리안 D-CAMP 워케이션 조성 •(충남)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경남) 워케이션 1번지 조성사업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강원 등 11곳	107건
다문화·청년 인구 유입	청년 및 외국인 유입을 통해 인구유입 및 다양성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대구) 청년 예술인 거주공간 마련 •(충남) 외국인 유치를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 •(전북) 전북형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부산, 대구 등 10곳	58건
일자리·정착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을 중심으로 한 인구 유지형 사업	•(인천)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충북) 보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경남) 경남 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지원사업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충남 등 11곳	58건
평생학습·귀농·귀어 정착 지원	교육 및 귀농, 귀어인 정주 기반 조성 등 정착 유도형 지원사업	•(부산) 맞춤형 평생학습 「마을학교」 운영 •(전북) 귀농인 대학 운영지원 •(충남) 스마트팜 첨단농업확대, •(인천) 인천 섬 도도(島島)하게 살아보기	부산, 인천, 경기, 강원, 경남 등 10곳	63건

*11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3)을 검토하여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사업의 대상은 관광객, 청년, 외국인·다문화가정, 문화예술인, 신중년·중장년, 귀농·귀어·귀촌 희망자 등이며 크게 '관계인구 정착형', '관광객·특정계층 대상형', '청년창업·예술인 중심형', '생활인구·주민생활 밀착형', '귀농·귀촌·이주민 정착형'으로 구분지어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양한 사업대상을 아우르며 계획하고 있다.

[표 2-23]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생활거점 관련 사업의 주요 대상 및 내용

사업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지자체	사업수
관계인구 정착형	워케이션, 외국인, 관계인구 등 다양한 유입 인구를 유치하고 정착 지원을 지향	•(충북) 단양 다리안 D-CAMP 워케이션 조성 •(경남) 워케이션 1번지 조성사업	11곳	148건
관광객·특정계층 대상형	관광객, 북한이탈주민, 수산업인 등 특화 계층 대상의 체험형/지역기반 공간 제공	•(인천) 바다역 여행자센터 조성 •(전남) 남도에서 한달 여행하기 •(충남)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 •(경남)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지원사업 •(경북) 다문화가족 지역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9곳	45건
청년창업·예술인 중심형	청년창업자, 예술인, 미취업자 등 도시형 청년층 대상 공간 조성과 창업 지원 중심	•(대구) 청년 예술인 거주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강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전북)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경남) 경남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 •(경북) 청년예술가 아지트 조성	9곳	39건
생활인구·주민생활 밀착형	지역주민과 정주인구, 생활인구 등 일상과 밀접한 서비스 및 커뮤니티 공간 중심	•(인천) 청년 농업인 정착지원 •(충북) 보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경북)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사업 •(경남) 경남 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지원사업	7곳	28건
귀농·귀촌·이주민 정착형	귀농·귀촌인, 출향인 등 농어촌 이주 인구의 주거·정주 지원 중심	•(충남) 지역 맞춤형 리브투게더 사업(귀농인의 집) •(전북) 어촌 유휴시설 활용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	9곳	26건

*11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3)을 검토하여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공간(HW) 관련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체류 지원시설', '업무·창업공간', '교육·생산시설',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주거·체류 지원시설'에 대한 사업내용이 가장 많으며, '업무·창업공간'은 모든 시도에서 해당 사업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고 있다.

[표 2-24]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공간(HW) 조성사업 관련 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지자체	사업수
주거·체류 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공유주거 등을 조성, 주거와 관련된 공유부엌 등 체류지원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청년 공유주거 조성사업,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경남) 거창한 청년집(ZIP) 건립사업 (인천) 세대응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 	10곳	66건
업무·창업 공간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등 업무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 (부산) 부산형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 (충북) 속리산 솔빛 워케이션 센터 건립 (전남) 전남 블루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경남) 스마트 섬마을 워케이션 조성사업 	11곳	51건
교육·생산 시설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에 필요한 주택 조성 및 지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는 교육, 예술활동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귀농·귀촌 주거+기술학교 플랫폼 조성 (인천) 로컬 팜 빌리지 조성, 귀어학교 개설 및 도시민 기술교육 (경남)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예술인창작마을 조성 (경기) 평생교육 인큐베이터센터 건립 및 50+ 프로젝트 강화 	경기, 인천, 충남, 부산 등 7곳	12건
커뮤니티 공간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 관광객 유치 공간, 휴게공간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인천) 반려동물 팻파크 조성,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경기, 경남, 전북, 충남 등 9곳	59건

*11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3)을 검토하여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프로그램(SW) 및 서비스 사업을 살펴본 결과,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복지지원', '정보제공·상담, 커뮤니티 지원'으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각 시도에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관련 사업을 공간구성 등과 통합하여 계획하고 있었다.

[표 2-25]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프로그램(SW) 및 서비스 관련 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주거지원	주거공간 조성 또는 임대, 주거비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바다마을 이어가는 명사십리 곰솔벨트, 이웃사촌마을 확산 (경남) 경남형 워킹홀리데이, 경남 청년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육성지원사업 (전북)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
일자리 지원	일자리 상담 및 교육, 귀농·귀어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농산업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지원, 귀어학교 운영 (경남) 외국인 유학생 교육-고용-정주 원스톱지원, 스마트 섬마을 워케이션 조성사업 (인천) 흥어 가공시설 구축 및 인력양성 (충남) 도농 청년 삼락캠프 운영
의료·복지 지원	지역주민 의료복지, 에너지복지, 교통편의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자녀양육·생활 등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경북) 온(溫)세대 플랫폼 구축 (경남) 경남 행복더하기 지원사업
정보제공·상담, 커뮤니티 지원	이주·이민 관련 정보제공 및 상시 상담, 교육, 고류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경북 오이소' 인구유입 촉진 활동 (인천) 월간 강화 훈커밍 데이 (전북) 함께 인구 확보를 위한 사랑도민제도 활성화

*11개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3)을 검토하여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사업내용 검토

89개 시군구의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서 생활거점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 1,591건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검토하였다. 주요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정주환경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청년 및 귀농귀촌지원’, ‘평생학습 및 교육’, ‘지역경제 및 상권’, ‘기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청년 및 귀농귀촌 사업 내용이 387건으로 가장 많고, 해당 기초지자체 86곳으로 가장 많았다.

[표 2-26]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내용

사업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지자체	사업수
정주환경 개선	주거, 워케이션, 정주환경, 공동체 공간 등 지역 거주 기반 조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활력타운 조성 생활·관계인구 확충 인프라 구축 메디투어리즘 인프라 확충사업 필수인력 주거지원사업 귀농·귀촌 문화복지 인프라 확충 	하동군, 영양군, 김제시, 봉화군, 보은군 등 81곳	293건
문화관광 활성화	문화자원, 관광지, 지역 특색을 활용한 방문객 유치 및 지역 활력 제고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체험형 클라인가르텐 조성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오산 섬진강권역 관광벨트화 사업 (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불갑산 상사화 둘레길 조성 세방낙조 관광명소화 사업 	옹진군, 하동군, 연천군, 안동시, 곡성군 등 85곳	631건
청년 및 귀농귀촌 지원	청년 창업, 귀농귀촌 정착, 청년농업인 육성 등 유입인구 확대 중심의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농부 농지·주택 임대 지원사업 청년 창업농·후계농 양성 및 영농정착지원 청년 창업농 스마트팜 창업지원사업 	하동군, 영천시, 정읍시, 괴산군, 신안군 등 86곳	387건
평생학습 및 교육	지역 주민 및 청년 대상 평생학습, 문화 교육, 관광자원화 연계 교육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농업인 육성 및 교육 지원 확대 농촌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산청 식문화 산업 계승 교육 스마트 6차산업 교육 	화천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산청군 등 51곳	91건
지역경제 및 상권	스마트 인프라 기반 농촌경제 및 지역상권 재활성화, 로컬 브랜드 정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시장 빈점포 활용 지역특화사업 창업 지원 임실 전통시장 청년 맞잇길 특화 거리 조성사업 전통시장과 연계한 청년몰 구축사업 의령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홍의장터) 전통시장 청춘마켓 조성 	김제시, 임실군, 담양군, 의령군, 하동군 등 58곳	139건
기타	기타 분류되지 않은 일반 사업 또는 다목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생활권 인구 거점공간 조성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 	양구군, 남해군, 의령군, 강진군, 화천군 등 30곳	50건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3)을 검토하여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사업 대상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정주인구 기반’, ‘청년’, ‘관계생활인구’, ‘귀농·귀어·귀촌 희망자’, ‘관광객, 방문객’, ‘기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정주인구 기반의 사업이 687건으로 가장 많고, 강진, 김제 등 86곳의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귀농·귀촌·귀어 희망자 대상의 정착 보조, 교육 등을 포함하는 사업도 많은 지자체가 기본계획 내용에 담고 있다.

[표 2-27]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주요 사업 대상

사업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지자체	사업수
정주인구 기반	청년~노년층 등 다양한 세대를 포함하는 지역 거주자 중심의 대상군	•(안동) 은퇴자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조성 •(영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 •(봉화) 봉화 세컨하우스 '너나들이' 조성사업	강진, 김제, 봉화 등 86곳	687건
청년	청년 대상 (청년정책에 필요한 주택 조성 및 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예술활동 지원 등)	•(영월) 청정 영월프로젝트 •(괴산) 산촌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옥천) 향수누리 OK-스타트돔 •(고령) 청년 활약중심거리 조성	남원, 의령 등 57곳	179건
관계, 생활인구	지역 주민과 관계인구, 생활인구 등 외부-내부 인구를 아우르는 유연한 대상	•(서천) 어린이 체육형돌봄 클러스터 조성 •(금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확대 •(신안) 바다가 보이는 정원스테이조성 •(장흥) 군민이 함께하는 여흥마을 조성 등	공주, 단양 등 59곳	137건
귀농·귀촌·귀어 희망자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 (귀농귀촌 체험 및 교육 체류공간 조성 등 지원)	•(양양)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정선) 은빛 My Life 조성 •(강진) 귀농 정착 보조사업 •(곡성)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 •(남해) 보물섬 인생학교 조성사업	하동, 남해 등 68곳	163건
관광객, 방문객	관광객, 방문객 등 단기 체류형 외부 방문자 대상	•(강화) 월간 강화 훔커밍 데이 •(장흥) 문홍 빛의 거리 조성 •(함평) 불갑산 상사화 둘레길 조성	옹진, 철원 등 76곳	293건
기타 일반대상	외국인 유학생·근로자 등 기타 지역사회 통합 대상	•(대구 서구) 1인가구 지역상생 해피파트너스 사업 •(고성) K-하우징 일자리 거점조성 •(신안) 로빈슨 크루소 대학설립 등	고흥, 부여 등 63곳	132건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3)을 검토하여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공간(HW) 조성사업 1,128건을 살펴본 결과, '복합거점 정비형', '주거 숙박시설 및 공동체 공간형', '학습, 교육형', '워케이션, 업무시설 조성형', '스마트팜, 농업시설형', '생활인프라 개선형', '문화복지시설형', '창업지원 공간형', '기타 일반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중 '주거, 숙박시설 및 공동체 공간형'이 267건으로, 해당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은 기초지자체도 102곳으로 가장 많았다.

[표 2-28]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공간(HW) 조성사업 분류

사업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지자체	사업수
복합거점 정비형	다양한 기능이 결합되어 지역의 활력 거점을 조성하는 공간 개선형	•(괴산) 지역활력타운 조성 •(단양) 도담지구 생활환경 정비	괴산, 무주, 단양, 곡성 등 75곳	202건
주거, 숙박시설 및 공동체 공간형	특정 대상을 위한 주거시설 또는 방문객을 위한 숙박 등 주거시설, 마을 단위의 교류, 소통 및 공동체활동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공유공간 조성형	•(청양) 청년 세어하우스 함께살아U 건립 •(부안)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순창) 전원마을 500호 조성 등	고창, 정선, 구례 등 102곳	267건
학습, 교육형	학습 및 교육 관련 기능을 위한 공간 조성형	•(공주) 공주미식학교 조성 •(무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 •(산청) 로컬 대안학교 조성	연천 등 25곳	32건
워케이션, 업무시설 조성형	일과 휴식이 가능한 워케이션 센터 및 공간이나 특정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형	•(청도) 워케이션 건립 •(울진) 울진 워케이션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고성군 등 52곳	74건

사업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지자체	사업수
스마트팜, 농업시설형	농업 생산, 가공, 유통, 스마트팜 등 농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기반 공간 조성형	• (고성) 스마트팜 온실 • (태안)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첨단시설 조성 • (무주) 고령지 스마트팜 임대농장 구축	웅진군 등 51곳	68건
생활인프라 개선형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편의시설, 복지, 보건 등 기초적인 인프라 조성형	• (홍천)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조성 • (좌천) 치매전담 종합요양시설 • (예산) 생태숲 놀이터 조성	대구시, 영암군 등 45곳	71건
문화복지시설	주민 및 방문객에게 문화·예술, 교육, 관광 등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공시설 조성형	• (고성) 라벤더 정원 조성 • (양구) 음악캠프 공간 조성 • (삼척) 한지 체험관 • (강화) 폐교 천문과학관	81곳	350건
창업지원공간형	창업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조성형	• (담양) 청년몰 및 편의시설 조성 • (안동) 청년 창농타운 • (옹진) 흥어가공시설	연천군 등 37곳	49건
기타 일반공간	기타	• (강화) 와글와글 새시장 • (태백) 태백 교정시설 신축	안동, 청송 등 14곳	15건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3)을 검토하여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프로그램(SW) 및 서비스 관련 사업 1,070건을 살펴본 결과, '복합 커뮤니티 및 평생학습', '관계인구 유입 프로그램',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귀농귀촌 정착지원', '청년창업 및 역량 강화', '돌봄·복지 서비스', '주거 및 정주지원', '디지털 및 스마트 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기타 일반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을 가장 많이 계획되고 있었다.

[표 2-29]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의 프로그램(SW) 및 서비스 관련 사업 분류

사업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지자체	사업수
복합 커뮤니티 및 평생학습	마을 단위 평생학습, 커뮤니티 중심의 역량 강화 및 문화 소통 프로그램	• (제천) 농촌 유학용 주거시설 조성 • (보령) 보령형 초중고등학교 특성화 등	제천, 보령, 양구 등	92건
관계인구 유입 프로그램	외부 방문자 유치 및 체류형 인구 확산을 위한 지역 특화 활동 중심	• (양구) 양구시랑아가데미 운영 • (평창) 평창군 지역특화 '힐링워케이션' 운영 • (서천) 살아봐요 워케이션 in 장항	양구, 평창, 서천, 강진 등	122건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지역 문화자원, 관광지를 활용한 체험, 해설, 상품화 연계형 프로그램	• (옹진) 해양레저 휴양마을 조성 • (고성) 대전1리 해맞이 캠핑장 조성 • (양구) 음악도시 '양구' 조성 • (공주) 백제마을 조성	옹진, 고성, 양구, 공주 등	271건
귀농귀촌 정착지원	귀농귀촌인 정착 유도 및 기술 교육, 공동체 연계 정주 기반 프로그램	• (옥천) 리턴팜·러스틱하우스 조성 • (고흥) 귀어학교 조성 • (봉화) 뉴얼라이프 인프라 구축	옥천, 고흥, 봉화, 장성 등	94건
청년 창업 및 역량 강화	청년 대상 창업, 직무역량, 인턴십 등 취 창업 연계 프로그램	• (철원) 두루딱이 라기비움 조성 사업 • (고흥)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추진	철원, 고흥 등	150건

사업구분	주요내용	대표 사업	지자체	사업수
돌봄·복지 서비스	돌봄, 상담, 건강, 세대통합 등 복지 성격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 (영천) 맞벌이가정 가사돌봄지원사업 • (단양) 공동 육아나눔터 조성사업	영천, 단양, 남해 등	30건
주거 및 정주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빈집 활용, 정착 유도형 공간지원 프로그램	• (청양) 전입주민 축하금 지원 • (강진) 강진품에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	청양, 강진, 제천 등	76건
디지털 및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팜, 디지털교육, ICT 연계형 신기술 프로그램	• (무주)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 (함양) 무장애 관광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앱 개발 운영	무주, 함양, 단양 등	30건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역 상권, 로컬푸드, 장터 운영 등 경제 기반 프로그램	• (함안) 한우국밥촌 근대테마거리 조성 • (함양) 마천 산나물 마을 • (옹진) 옹진 이어가게 육성	함안, 함양, 옹진, 성주 등	63건
기타 일반 프로그램	기타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는 단발성 또는 일반 서비스 프로그램	• (옥천) 건강한 식생활 위한 어린이텃밭 운영 • (철원) 친정방문 왕복항공료 지원 • (청양) 청양시네마 영화상품권 2매 제공	옥천, 철원, 청양, 함양 등	21건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3)을 검토하여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상의 주요 사업내용 도출

11개 시도,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상의 사업의 주요내용, 대상, 공간, 프로그램 정책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사업의 주된 내용으로는 ‘정주환경 개선’, ‘관광활성화’, ‘일자리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학습 및 교육’ 등이 있었다. 사업 대상은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귀농·귀어민’, ‘청년’, ‘관광객’, ‘외국인·다문화’로 다양하며, 공간시설로는 주택,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주거시설’, 워케이션, 농업시설, 생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업무시설’,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을 하는 ‘창업공간’, 평생교육 등을 포함하는 ‘교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복합거점공간’ 등으로 살펴볼 수 있다.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으로는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주거 및 정주지원’, 지역민의 돌봄, 건강 등을 포함하는 ‘복지서비스’, 관광 해설 및 체험을 포함하는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역정보 제공, 창업 및 취업을 위한 ‘일자리 지원’ 등이 있다.

[표 2-30]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내 주요 내용

사업구분	내용
사업 내용	정주환경 개선, 관광활성화(지역, 문화관광), 일자리, 정착지원(귀농귀촌 지원, 청년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학습 및 교육(평생학습, 농업 교육)
대상	지역주민, 관광객, 청년, 귀농귀어민, 외국인, 다문화
공간	숙박·주거시설, 업무(워케이션, 생산시설, 농업시설), 창업공간(창업지원), 교육시설, 커뮤니티, 복합거점
프로그램·정책지원	주거, 정주 지원, 교육, 역량강화, 일자리 지원, 의료·복지, 정보제공, 커뮤니티 지원, 관계인구 유입프로그램 등

출처: 연구진 작성

■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사업 지침·가이드라인 검토

- 행정안전부, 고향올래사업⁵²⁾

고향올래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체류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탐색, 단기·반복적 체류, 교류·학습, 협업·창업 등 체류목적과 체류방식에 따라 ① 워케이션, ② 런케이션, ③ 두지연살이, ④ 로컬유학, ⑤ 로컬벤처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업유형별로 업무시설, 주거시설, 생활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 내용과 지역특화, 지역교류, 창업 또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표 2-31] 2025년 고향올래 사업유형별 주요 내용

구분	개요	공간·시설(HW)	프로그램(SW)	기타
워케이션	워크센터 또는 기업 체류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약을 통한 위성오피스 조성 및 숙박·관광 등 지역체험 프로그램 지원	기업연계형 워케이션 운영을 위한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 조성 • 회의실, 온라인 영상회의시설 등 • 100평 이상의 공간에 30석 이상 좌석 필요(코워킹스페이스) • 세미나실, 물품보관함 등	근무 종료 후 참가할 지역특화 체험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교류프로그램 마련 • (양양)요트체험, (남원) 판소리 체험 등	(숙박지원) 워케이션 인근 숙박시설 연계
런케이션	지역 교육 문화·기술을 체험하는 현장형 교육공간 조성 및 교육관광 프로그램 종합 지원	국내외 국적, 연령대 등 다양한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조성	수업연계, 문화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두지연살이	참여자 대상 거주공간, 지역탐방·주민교류 프로그램 등 지역살이 안착 유도를 위한 지역생활 경험 제공	빈집 등 유휴시설 개축·리모델링을 통한 거주공간 마련 • 지역체험공간 및 생활편의시설 포함	대상층을 분명히 하고, 지역 특색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살아보기 프로그램 마련 • 지역로컬자원 활용, 지역 특화자원 팀방, 지역주민 교류프로그램 등	-
로컬유학	유학기간 동안 유학생 및 가족이 거주할 생활 인프라 지원, 유학생 대상 로컬교육, 학부모 대상 지역교류·일자리 프로그램 연계	빈집 등을 활용한 리모델링 및 조립식 주택 신축 등 주거시설 조성 • 15평 내외 규모의 주거시설(최소 15평, 방 2개 이상 권장) • 공동공간(공유오피스, 공유주방 등 지역 특성 고려)	유학생 학부모 대상 일자리 제공, 지역주민과의 교류, 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지역체험, 등 자체 프로그램 발굴 지원 • 지역체험, 지역교류, 지역사회 공연, 취업·창업	-
로컬벤처	로컬창업을 활성화하는 창업공간, 프로그램, 거주시설 지원	지자체 소유시설이나 장기임대 계약을 체결한 미활용 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리모델링하여 활용 • 휴식을 위한 정주공간과 창업공간 분리형 또는 일체형으로 조성	지역주민과의 교류, 수익창출,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자체 프로그램 발굴 및 타 사업 연계 • 창업프로그램, 지역특화자원, 주민교류 참가자 재능 나눔	-

출처: 행정안전부(2025a,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215호)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⁵³⁾

지자체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통해 체류인구 증가, 이주·정착을 통한 정주인구 확보 등 다양한 계층의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안내서’에서는 ① 지역 거점 중점투자, ② 연계사업 추진

52) 행정안전부(2025a,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215호)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53)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5, p.2)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독려, ③ 청년 등 정착여건 조성 집중투자, ④ 광역계정 사업 차별화를 주요 투자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 '③ 청년 등 정착여건 조성 집중 투자'는 주거·일자리·보육 등 청년층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연계 청년타운 조성 등 주거 조성 사업과 지역 내 빙집, 빙 건축물, 폐교 등 유휴공간의 적극 활용한 정착여건 조성 부분이 생활거점 조성과 연관된다.

[표 2-32]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투자방향

구분	내용	비고
지역거점 중점 투자	지역 내 거점 및 중점분야를 선정, 이를 중심으로 투자 집적화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적 효과 도출	
연계사업 추진 독려	국가-지자체, 지자체-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청년 등 정착여건 조성 집중 투자	주거 일자리·보육 등 청년층이 이주하여 소득을 창출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집중 • 정착 여건 조성 등에 지역 내 유휴공간 적극 활용 • (예) 귀농·귀촌 연계 청년타운 조성, 빙집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취약계층 주거시설 조성, 지역 이주 고려 청년·중장년 등을 위한 워케이션 센터 및 단기 체류·거주공간 조성 등	※주거 공간 조성, 유휴공간 활용 등이 생활거점 조성과 밀접
광역계정 사업 차별화	초광역권 사업, 지역간 협업사업 등에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효과 도모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5, p.2)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멸대응 빙집재생지원사업⁵⁴⁾

본 사업은 정주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목적으로, 농촌 빙집밀집구역 내 빙집을 리모델링하여 생활인구 및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도록 한다. 공간은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인프라(숙박·체험·관광시설), 창업공간 등 다양한 용도를 조성할 수 있으며, 건축행위의 법적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빙집 1, 2등급)에 대하여 지원한다.

[표 2-33] 농촌소멸대응 빙집재생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공간조성 지원	• (빙집10호) 생활인구, 귀농·귀촌(예정자) 활용 공간 조성(주거, 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등) • (빙집2호) 마을 주민과 함께 활용하는 공동이용시설 조성(마을도서관, 영화관, 공유주방 등)	• 학생, 귀농·귀촌자의 주거지 등으로 활용 • 인근 학교·산업단지 등과 연계, 수요자 확보
프로그램 운영	• 생활인구 유입 목적의 프로그램 • (예) 귀농·귀촌 프로그램, 한달살기, 월세 지원 프로그램 등	• 지자체 및 타 부처 프로그램 연계 추진 • 별도 지원 없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2025a, p.4)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관계부처 합동, 지역활력타운⁵⁵⁾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청년 등의 지방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편리한 생활시설 마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거 + 생활인프라 + 생활서비스'가 결합된 생활거점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주자 수요 맞춤형 주거 및 수도권 수준의 생활시설·생활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생활거점 조성 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54) 농림축산식품부(2025a, p.4)를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55) 관계부처 합동(2024a)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있도록 장려하고 있으며, 8개 부처 통합지원과 민관협력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를 하도록 방향을 제시 한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타부처 연계사업(예: 농식품부 농촌돌봄농장, 해수부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등)을 선택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2-34] 2025년 지역활력타운 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운하우스, 단독·공동주택 • 입주자의 다양한 수요 고려, 분양 및 임대 등 다양한 방식 조성 가능
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	<p>각 부처 연계사업 중 지역활력타운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자율 선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지역활력기반지원(교통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역주민 편의 증진사업 등), 우리동네살리기(생활편의 시설 공급, 주거지정비)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건립 지원(교육·돌봄, 체육·문화 용도) •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일상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 취약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아이돌봄지원, 농촌돌봄농장, 지역특화임대형 스마트팜 •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경제 거점시설,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조성, 창업지원),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로컬브랜드 창출,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 • (행정안전부)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생활권 단위 지역특성화, 기반구축),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사업(청년마을) • (지자체) 작은도서관, 작은영화관, 생활문화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4a)을 참조하여 연구진 작성

■ 선행연구 검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대상이 되는 생활인구와 공간 조성,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등의 측면에서 도출된 과제를 검토하였다.

문준경 외(2024)는 이주자,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예비 은퇴자, 체험인구 등 체류형 생활인구까지 지역활력타운의 수요자 범위를 확대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시설 외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등의 생활인프라 조성과 일자리 및 소득창출과 귀촌생활 정보제공 등의 생활지원 프로그램, 외지인 유입을 위한 알선 프로그램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광선 외(2023)에서는 농촌에 대한 교류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등 비주거 인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촌형 워케이션 정책 모델에 숙박, 업무, 식사 등이 잘 이루어지는 리모델링 지원과 인근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등이 중요함을 도출한다.

김필 외(2023)는 초단기 유동인구, 단기 체류자, 중·장기 체류자, 외국인 또는 관계자로 생활인구 유형을 구분하고, 이들을 위한 생활인프라 수요를 파악하였다.

장민영 외(2021)는 관계인구·이주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정착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거주공간, 업무·창업공간, 커뮤니티공간, 지원공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방이주 단계에 따라 거주공간 지원방향 차별화와 관계인구를 지원하는 복합 거점으로서 '지방이주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언급한다.

[표 2-35]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저자	대상/공간	공간(HW) 조성	프로그램(SW) 및 정책지원
문준경 외 (2024)	예비은퇴자, 체험인구, 귀농·귀촌인 등/ 지역활력타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 단독, 타운하우스, 연립, 아파트 등 (생활인프라 등) 일자리 지원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및 소득창출) 창업·농 역량강화 및 육성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마을공동체 소득사업 등 (생활지원 프로그램) 귀촌생활 정보제공, 귀촌준비자 체험 실습, 문화여가 체육활동, 단지공동체 활성화 등 (외지인 유입 지원) 귀촌주택 알선, 일자리·소득기반 알선, 귀촌지역 지자체 홍보 강화 등
김광선 외 (2023)	교류·체류·관계인구/ 농촌형 워케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의실 또는 세미나실, 개별 업무공간, 취사 및 식사공간과 사설, 휴게공간, 운동공간, 화상회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전거 등 개별 이동 수단 대여, 지역 내 교통 연계, 야간 프로그램, 인근 지역관광자원과의 연계프로그램 등
김필 외 (2023)	생활인구/ 생활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전문대학, 대학교 (보건복지)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의료시설 (문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 (기타) 공원, 주차장 	-
장민영 외 (2021)	관계인구·이주청년/ 청년활동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공간(임시주거, 정주공간) 업무·창업공간(코워킹, 개별 사무공간, 작업공간, 판매공간(실험/팝업)) 커뮤니티공간(교류공간, 문화공간) 지원공간(안내공간, 중간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부처·부서 간 통합형 지원체계 주거지원, 여가·문화지원, 일자리지원, 커뮤니티 지원, 기타(이동 편의성, 정보제공, 멘토링 등)

출처: 문준경 외(2024), 김광선 외(2023), 김필 외(2023), 장민영 외(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도출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은 공간(HW)과 프로그램(SW), 정책지원으로 구성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계획, 사업 지침 및 가이드라인, 선행연구를 검토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생활인구의 체류·생활기반이 되는 공간(HW)과 체류기간 동안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SW), 체류 지속과 재방문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지원(서비스)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표 2-36]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검토 결과

구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사업	선행연구
공간 (HW)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체류 지원시설 업무·창업공간 교육·생산시설 커뮤니티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올래) 업무시설, 주거시설, 생활편의시설 (지방소멸대응기금) 주거공간, 워케이션 센터 (빈집재생지원사업) 주거, 워케이션, 문화·체험, 창업공간, 공동이용시설(마을도서관, 영화관, 공유주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점시설) 주거공간, 업무공간, 커뮤니티공간 등 (생활인프라) 휴게공간, 운동공간,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프로그램 (SW), 정책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복지지원 정보제공·상담·커뮤니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향올래) 지역특화 관광·활용, 지역교류 프로그램, 창업·교육 프로그램 (지역활력타운) 노인·어린이 등을 위한 생활서비스, 창업·일자리 지원 등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창업지원, 소득사업 지원 등 (생활지원) 지역정보 제공, 지역사회 교류 프로그램 등 (기타) 지역 관광자원 연계, 공동체 활성화 등

출처: 연구진 작성

-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별 세부항목 도출

생활인구 및 생활거점 관련 계획·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거점 구성요소인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서비스)별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상에 제시된 지자체 관련사업을 추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공간(HW)은 생활인구가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공간으로, 숙박·주거시설, 업무·창업시설,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학습·체험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프로그램(SW)은 관광·휴양, 창업·일자리 활동, 학습활동, 지역살이, 커뮤니티 활동으로, 정책지원(서비스)은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돌봄 지원, 문화예술지원, 정보제공, 커뮤니티 지원으로 분류한다.

[표 2-37]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구분	분류	세부항목	주요 내용	지자체 사업 예시
공간 (HW)	숙박·주거시설	숙박시설(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임시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숙박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우리 지역에 유학오기 (충남 부여) 빈집 활용 전통고택 조성사업
		임대주택(셰어하우스, 공공임대 등)	정착 단계로 이행할 수 있는 장기 주거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보은) 청년 공유주거 조성사업 (전남 순창) 순창군 공공임대주택 건립
	업무·창업시설	공유오피스	관계형 생활인구 및 원격근무자 중심 활동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유휴공간 공유 사업 (경북 영천) 워케이션 거점 신중년 놀이터 조성
		회의실·세미나실	업무 협의 및 논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임실) 임실 문예센터 건립사업 (경북 군위)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
		창업지원공간(창업보육 실, 창업카페 등)	창업 및 로컬비즈니스 육성 중심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 완도) 활력을 찾는 완생 청년상가 조성 (경북 고령) 고령 청년드림(Dream) 지원사업

구분	분류	세부항목	주요 내용	지자체 사업 예시
64	생활 편의시설	창작·제작공간(공동작업장, 스튜디오 등)	로컬 비즈니스 실질 작업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고령) 아티스트 in 레지던스 (강원 양구) 백토마을 강원거점 공예 지역특산화
		코인세탁실	생활 기반 인프라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문경) 청년 정착활성화를 위한 공유하우스 운영 (전남 완도) 외국인 문화쉼터 조성
		공유주방		
		판매시설(편의점, 지역상점 등)		
		운동시설(헬스장, 체력단련실)		
	커뮤니티 시설	지역안내·정보공간 (관계안내소, 안내센터)	방문자 환영, 커뮤니티 연결 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양구) 양구 종합관광 안내센터 조성 (경남 산청) 관계안내소
		소통공간(커뮤니티 리운지, 소모임공간)	거주자,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사업 (충북 괴산) 도란도란 어울림센터 조성 (강원 횡성) 귀농귀촌인 "e-웃 삶촌 소통플랫폼" 구축
		휴게공간(공용 휴게실, 쉼터)	휴게, 쉼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김제) 쌀도시 김제, 로컬 맛잇길 특화거리 타운 조성 (강원 화천) DMZ 평화쉼터 운영
	학습·체험시설	직업·기술훈련 공간	탐색·기술 습득 중심의 체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남원) 드론/UAM 클러스터 조성 (강원 영월) 한국 119청소년단 교육훈련장 구축
		문화교육 공간	마을학교, 지역 아카데미 등 지역 문화 관련 교육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 장흥) 청소년 4th 미래교육관 건립 (경남 합천) 합천 산지(山地)이음 프로젝트
		귀농귀촌 교육시설 (농업기술센터, 귀농교육장)	농업기술, 귀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청송) 복합농업체험관 건립, 청송사과사관학교 운영
	문화시설	공연장·전시공간	문화행유 및 교류 활동 중심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울릉) 울릉어울림문화센터 건립 (부산 영도) 영도 어울림문화공원 자유문화 거점화
		복합문화공간(서점, 북카페, 팝업공간 등이 모여있는 장소)		
	복지시설	건강·보건시설(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등)	고령층·신중년 중심의 정서 및 건강복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제천) 산림복지 웰니스[한방+산림] 서비스 활성화 (전남 향평) 평생돌봄학습관 조성
		돌봄·상담공간		
프로그램 (SW)	관광·휴양	지역축제	지역특화 및 지역활력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연천) 스마일 관광도시 연천!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강원 정선) 두 지역 살아보기
		문화/관광지 탐방	관광객 및 체류인구 유입 유도,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지역활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서구) 통합 관광코스 개발사업 (경기 연천) 연천군 축제활성화 방안 (충북 괴산) 한지문화산업경제특구 프로젝트
		레저/웰니스 관광	휴양림, 치유 프로그램 등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휴식 관광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휴 웰니스랜드 조성 (전남 정읍) 정읍드림랜드 조성 (충북 단양) 리버 앤 스카이(River&sky) 안전체험관 및 레저파크 조성
		워케이션	원하는 곳에서 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휴양지에서 일하는 워케이션 충남 구축 (전남) 전남 블루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창업·일자리 활동	로컬 창업	지역특성·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 신안) 신안군 "와! 보라" 청년창업 지원사업 (전남 장성) 5대 맛거리 음식관광 청년창업 지원 (전북 고창) 청년기업승계 및 창업지원

구분	분류	세부항목	주요 내용	지자체 사업 예시
		일경험·인턴	체험형 일자리, 단기 채용 등을 통한 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의성) 청년농부 인큐베이팅센터 구축 (강원 양구) 양구살이 통합지원센터(양구 빛의 학교)
		일자리 연계	로컬기업, 지역 일자리와 연결하여 일자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 곡성)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사업 (경북 청도) 신주거문화타운 조성
	학습활동	현장견학·체험학습	지역자원 연계 현장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고창) 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 (전남 곡성) 차세대 소득창출형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유학·로컬유학	장기 전입형 교육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영월) 가족체류형 작은학교 농촌유학 추진 (전남 장흥) 군민이 함께하는 여름마을 조성 (경남 거창) 승강기 로컬유학사업
	지역살이	한달살기/살아보기	단기 임시 체류를 통한 지역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남 강진) 강진군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강원 정선) 빙집수리 지원
		귀농·귀촌 체험	귀농·귀촌 사전체험 및 시범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 고창) 귀농귀촌 올서포팅 센터 조성 (경북 영천) 귀농·귀촌인 체류형 농업창업 프로그램 지원
		두지역살이	5도 2촌, 계절형/순환형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정선) 두 지역 살아보기 (경북 영주) 두 지역살기 거점 '여우 마을' 조성
	커뮤니티 활동	주민 교류·네트워킹	주민모임, 초청행사 등 주민 간 유대 강화 및 관계인구 유입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강화) 월간 강화 훔커밍 데이 (충남 청양) 청양 미리 살아보기 고도화 (경남 함양) 비건 스테이
		지역사회 참여활동	동호회,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거창) 폐교를 활용한 청년창업공간 조성 (전북 부안) 무른하늘 은하수 길 조성,
정책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주거공간 제공	임대주택, 체험주택 등 주거 기반 제공을 통한 정착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괴산) 청년임대주택 (강원 정선) 생활SOC플랫폼
		주거비 지원	월세 보조, 체험비 지원 등 주거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북 의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전북 부안) 주거취약 청년 주거비용 지원 확대
		주택 수리 지원	주택 리모델링, 보수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철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남 영암) 귀향인 주택수리 지원사업
		정책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 정착의 초기 정보 제공 및 심리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청양) 귀촌상담소 (인천) 귀어귀촌 플랫폼 구축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	창업기획, 멘토링을 통한 청년 및 이주자의 창업 정착 기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창업디자인 지원 (경북) 로컬크리에이터 코칭
	직업 역량 강화	직업훈련, 실무워크숍 등 신중년·청년층의 재도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 (충남)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공급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학교, 기술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북 옥천) 청산별곡 힐링마을 (경북 울릉) 귀농, 귀어, 귀촌자 정착 지원
의료·돌봄 지원	응급·돌봄 인프라 구축	정착 인구의 응급시설, 돌봄인력 등 긴급 대응체계 확보		(경남 의령) 의령군 보건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방범, 재난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확보		(대구 담수) 앞산 산림레포츠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역복지, 의료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정선)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 (충남 태안) 100세 건강지킴이 의료복합 치유마을 조성
문화예술 지원	예술인 정착지원	예술인 창작공간 제공, 생활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남 태안) 문화예술인 정착촌 조성 (경북 청도) 예술인 창작 빌리지 조성

구분	분류	세부항목	주요 내용	지자체 사업 예시
66		지역문화·창작활동 지원	예술인을 통한 지 축제 연계, 지역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경북 성주) 청년 문화친화도시 프로젝트 • (전북 무주) 예술로 쉼, 놀이터
		정보제공	생활·정착정보 안내 리플렛, 홍보물 등 생활정보 안내	• (전북 고창) 청년기업승계 및 창업지원
	커뮤니티 지원	정보 플랫폼 운영	지자체별 체류·이주 등 관련 정보 통합제공	• (부산) 커뮤니티 플랫폼 • (충남 예천) 관계인구 캠페인
		주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간담회, 공동 활동 등 관계형성 및 정착 유도 기반 마련	• (경북 예천) 활력 있는 농촌 만들기 프로젝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커뮤니티 공간 운영 및 소규모 지원사업 추진	• (경북 상주) 지역활력타운 조성 • (충북 괴산) 산촌청년창업특구 프로젝트

출처: 연구진 작성

4. 소결: 체류형 생활인구 관련 주요 쟁점 및 생활거점의 필요성

■ 생활유형 변화에 따른 인구 패러다임 전환과 생활거점의 중요성 부각

인구감소와 사회·기술 환경의 변화는 주민등록 기반의 정주인구 중심에서 벗어나, 거주지 외 체류 및 활동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생활인구’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통신 기술의 발전과 교통의 편의성 향상은 시·공간 제약을 줄이며, 지역 간 이동과 체류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워케이션, 두지역거주, 단기 지역살이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되면서 기존의 고정된 ‘주거지’ 개념을 넘어, 제2의 생활기반으로서 ‘생활거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역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두지역거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할 거점시설 정비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두지역거주를 위한 실태조사, 거점시설 조성·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양한 활동 전개 중이다.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대응 강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법」 및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대한 규정」 제정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 아래, 워케이션, 두지역살이, 로컬유학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이나 이주·정착인구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고향올래 사업, 지역활력타운, 빈집재생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부쳐 협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에 주거공간 제공을 넘어 창업, 문화, 돌봄 등 복합적 기능을 통합한 기반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역시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조례 제정, 전담조직 신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TF 구성,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생활거점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따라 워케이션 인프라 조성, 빈집 리모델링, 공동체 기반 청년 유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식의 생활인구 유입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패러다임인 단순 시설 조성(HW) 중심에서 사람과 활동 중심(SW)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정책이 물리적 인프라 구축을 넘

어, 지역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 및 정착을 유도하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민간부문에서도 워케이션 센터, 단기임대 플랫폼, 공동소유 세컨하우스, 빙집 큐레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체류 인프라와 생활거점 관련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도 생활거점에 대한 실질적 수요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공-민간의 상호 보완적 협력이 생활인구 유입의 실질적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접근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정부 주요 사업 지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이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도출하였다.

공간(HW)은 생활인구가 실제로 체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으로서, 숙박·주거시설뿐 아니라 공유오피스, 커뮤니티시설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거점시설 등을 의미한다. 프로그램(SW)은 지역 체험, 관광·휴양, 일자리, 학습, 문화 교류 등 지역과 생활인구 간 관계를 형성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활동 중심의 콘텐츠로 구성되어야 한다. 정책지원은 일자리 연계, 정착 지원금, 커뮤니티 활성화, 생활정보 제공 등 생활인구의 지역 접근성과 참여 기회를 높이는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체류형 생활인구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생활거점의 기능과 구조가 상이하므로, 표준화된 시설을 지향하고 지역의 맥락에 맞는 맞춤형 조성과 유연한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관광 중심 지역에서는 단기 체류형 생활거점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귀촌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장기 거주를 지원하는 정주 인프라와 생활권 단위 서비스 구축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생활거점은 표준화된 공간이 아닌, 지역의 맥락에 맞는 기능과 규모, 운영방식으로 유연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는 정책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제3장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및 생활거점 수요 분석

1.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분석
2. 생활인구의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식 및 생활거점
수요분석
3. 소결

1.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 분석

1) 생활인구의 개념과 특성 검토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와 교통 발달, 생활방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생활인구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많은 논의와 활용이 있어 왔으나 2022년 「인구감소 지역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법률상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을 포괄한다. 이러한 정의의 구체적 요건은 동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생활인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이외의 시군구에서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이러한 체류가 월 1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상의 생활인구 요건(제2조)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1일 최대 체류횟수는 실제 체류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한다.

- ②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출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37호

※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생활인구의 요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시·군·구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한 시·군·구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시·군·구

출처: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3호

생활인구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유동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에서 출발하여 점차 구체화되어 왔다. 한주성(2019)은 도농교류 차원에서 관계인구 개념을 제시하였고, 문성남 외(2023)는 체류형 관계인구 개

념을 거쳐 현재의 생활인구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생활인구의 유형 분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기준과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다. 윤소연 외(2023)는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생활인구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1-2일 체류하는 단기형(관광, 출장, 쇼핑 목적의 유동인구), 3-10일 체류하는 중기형(업무, 생활 목적의 정기방문자 및 휴양자), 11-20일 체류하는 정기형(통근, 통학자), 21일 이상 체류하는 장기형(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역의 실제 취업 및 거주인구), 그리고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으로 구성되는 등록인구로 구분하였다.

[표 3-1] 선행연구 상의 체류인구 유형 구분

구분	단계	유형	체류일수	설명
체류인구	1	단기형	1-2일	관광·출장·쇼핑 등 목적의 유동인구
	2	중기형	3일~10일	업무·생활 등 목적의 정기방문자, 휴양·요양자
	3	정기형	11일~20일	통근·통학
	4	장기형	21일 이상	주민등록지가 다른 지역 내 실 취업·거주인구
등록인구	5	등록	상시	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인구

출처: 윤소연 외(2023), p.79

안소현 외(2022)는 체류인구, 방문인구, 정주인구 등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군집분석을 통해 지역을 거점형, 계절형, 과소형, 목적형, 과밀형의 5개 유형으로 분류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이삼수 외(2024)는 생활인구 데이터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거인구, 통근인구, 방문인구를 구분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또한 7개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심층 분석을 통해 계절별, 시간대별, 연령대별, 체류형태별 생활인구 유형을 제시하였다.

[표 3-2] 선행연구 상의 생활인구의 유형별 특성 및 대상지역 검토

구분	특성	대상지역
계절별 생활인구	지방도시의 경우 특정 계절에 생활인구가 집중되는 경향	해안지역에 접한 시군, 스키장 이용객 등 계절적 유입인구 증가 시군
시간대별 생활인구	오전, 오후 출퇴근 첨두시간대 집중, 특정 시간대에 유입인구 집중이 발생하는 지역 분석	전국 모든 시군
연령대별 생활인구	일상통행(통근/통학)을 하지 않는 계층의 활동 분석	전국 모든 시군
체류형태별 생활인구	1회성 체류, 재방문 또는 반복적 체류 등 분석	전국 모든 시군
주요 인구현황 지표로 활용	장기적인 지역인구 변동의 추적관찰, 실수요 파악을 위한 사전 검토지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효과성 등 사업의 사후 영향평가 지표, 시설의 적정규모 평가 지표 등 활용 분석	인구감소지역 및 기타 시군

출처: 이삼수 외(2024, p.104)

최근 윤소연(2025)의 연구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역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장 많은 33개 지역이 속한 '일상적 소비체류형'은 일상적인 소비와 체류가 중심이 되는 특성을 보이며, 19개 지역이 포함된 '신중년 문화여가체류형'은 신중년층의 문화, 여가, 체험 활동이 주요 목적이 되는 지역이다. '생산인력 중심형'에는 14개 지역이 속하며 산업 근로를 목적으로 하는 중소 규모 거점지역의 특성을 나타낸다. '단기체류 집중형'은 12개 지역으로 관광 및 레저 목적의 단기 방문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거점도시형'은 6개 지역으로 행정, 의료, 상업

등의 서비스 이용이 주목적인 거점지역으로 기능한다. 가장 적은 5개 지역이 속한 '청년 장기체류형'은 주로 군사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층의 장기체류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표 3-3] 선행연구 상의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유형	지역 수	특징
유형1 단기체류 집중형	12개	관광·레저 목적의 단기 방문 집중지역
유형2 청년 장기체류형	5개	군사 관련 활동 목적의 청년 장기체류 지역
유형3 거점도시형	6개	행정·의료·상업 등의 이용 목적 거점지역
유형4 생산인력 중심형	14개	산업 근로 목적의 중소 거점지역
유형5 신중년 문화여가체류형	19개	문화·여가·체험 목적 소비 지역
유형6 일상적 소비체류형	33개	일상적 소비·체류 중심지역

출처: 윤소연(2025, p.1)

생활인구 개념은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수립의 핵심 지표로 자리잡고 있다. 김필 외 (2023)는 생활인구를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수요 도출의 새로운 지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삼수 외(2024)는 장기적인 지역인구 변동 추적, 실수요 파악,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효과성 평가, 시설의 적정규모 평가 등 다양한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4년 3분기 데이터를 포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생활인구 유입지역 분석을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별 생활인구의 이동 패턴과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

① 분석개요

■ 분석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속성을 분석하여 지역별 생활인구 유형 및 특성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감소지역별로 유입되는 생활인구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각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 방향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분석방법 및 활용 데이터

- (방법) K-means 클러스터링을 통한 군집분석

본 연구는 K-means 클러스터링 기법을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 체류인구 군집분석과 생활인구 속성별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구감소지역별 인구규모의 차이가 있으므로, 연령대별 생활인구나 체류 일수별 생활인구 데이터에 대하여 CLR(Centered Log-Ratio)⁵⁶⁾ 변환을 적용하여 표준화 과정을 거친 후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양한 생활인구 중 지역을 주로 방문하는 생활인구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연령, 유입지역, 체류패턴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 (자료) 생활인구 데이터

본 분석은 통계청이 2024년부터 분기별로 발표하는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를 기반으로 통신 3개사(SKT, KT, LGU+)의 통신 데이터, 카드 4개사(신한, BC, 삼성, 하나)의 결제 데이터, 그리고 신용정보사(KCB)의 신용정보 등을 가명결합하여 산정한 종합적인 데이터셋이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통계로, 아직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2024년 1~3분기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분기부터 카드사용 및 직장정보가 추가되어 경제활동 분석이 가능해졌으며, 3분기부터는 동일시도 또는 타시도 등 유입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생활인구의 이동 패턴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최신 데이터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56) CLR은 조성 데이터(compositional data)를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변환하는 방법으로, 이는 합이 100%가 되는 제약에서 생기는 클러스터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임

[표 3-4] 군집분석을 위한 활용 데이터

구분	원데이터	활용 데이터	비고
생활인구 계층	지역별 체류인구 현황(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 비율(20대 미만, 20대, 30대) 중년층 비율(40대, 50대) 노년층 비율(60대, 70대 이상) 	생활인구 연령별 특성 파악
생활인구 유입지역	지역별 유입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시도 인접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비율 동일시도 비인접 지자체에서 유입되는 비율 타시도에서 유입되는 비율 	생활인구 유입지역별 특성 파악
체류기간 및 재방문율	시군구별 주요 특성 (체류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체류 비율(1~2일) 중기체류 비율(4~15일) 장기체류 비율(16일 이상) 	생활인구 체류특성별 유형 파악
	시군구별 주요 특성 (재방문율, 평균 체류시간, 평균 숙박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방문율(%) 평균 체류시간(시간) 평균 숙박일수(일) 	
지역 내 소비	시군구별 주요 특성(카드사용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당 평균 카드사용액(천원)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5.15.)를 활용하여 작성

② 생활인구 속성별 군집분석

■ 연령별 분석

- 분석결과 개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생활인구의 연령구조에 따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상이한 생활인구 유입의 연령대별 패턴을 반영하는 ‘청년층 중심형(36개 지역)’, ‘중장년층 중심형(7개 지역)’, 고령층 중심형(46개 지역)’의 3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 청년층 중심형 (36개 지역)

30대 이하 청년층(37.3%), 40~50대 중장년층(36.7%), 60대 이상 고령층(26.0%)으로, 타 유형 대비 전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며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스플롯을 보면, 30대 이하 청년층 비율의 중앙값이 전국 평균(1.0)을 상회하며 세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단에 이상치가 관측되어 일부 지역은 청년층 생활인구 유입이 매우 활발함을 보여주었다. 공간적으로는 부산 서구·동구·영도구, 대구 서구·남구, 경기 연천군, 강원 삼척시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 중장년층 중심형 (7개 지역)

40~50대 중장년층 비중이 49.3%로 절반에 육박하여 생활인구의 핵심축을 이루며, 청년층(24.4%) 비중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박스플롯 분석 결과, 중장년층 비율의 중앙값이 약 1.3으로 매우 높고, 사분위 범위가 매우 좁아 유형 내 지역들이 일관되게 높은 중장년층 유입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청년층 비율은 중앙값이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 유형은 대구 군위군, 전북 진안군, 전남 곡성군·구례군, 경북 영양군 등 내륙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 고령층 중심형 (46개 지역)

60대 이상 고령층(31.5%) 비중이 중장년층(38.8%) 다음으로 높으나, 청년층(29.7%)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가장 많은 지역이 해당하는 유형이다. 박스플롯 분석 결과, 고령층 비율의 중앙값이 타 유형

과 달리 유일하게 전국 평균(1.0)을 상회하며, 일부 지역은 1.3을 초과하는 이상치로 관측되어 고령층 생활인구 유입이 두드러지는 특성을 나타낸다. 강원 태백시·정선군, 충북 보은군·옥천군, 전남 고흥군·보성군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 종합 및 시사점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 분포는 청년층 32.4%, 중장년층 38.8%, 고령층 28.9%로 나타났다. 지역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청년층 중심형은 부산 등 대도시 내 구 단위 지역과 강원도의 관광·레저 및 군부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중장년층 중심형은 농촌 및 산간지역 중심의 전북·전남·경북 내륙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고령층 중심형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농어촌 군 단위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지역의 산업구조 및 생활 인프라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

[표 3-5] 생활인구 연령별 군집 특징

구분	청년층 (30대 이하)	중장년층 (40~50대)	고령층 (60대 이상)	특징	지자체
청년층 중심형 (36)	37.3%	36.7%	26.0%	모든 연령대 인구 유입이 많으며, 그중 청년층의 상대 비율이 타유형 대비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연천군, 가평군 •(강원) 삼척시, 흥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제천시, 괴산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예산군, 태안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영암군, 장성군, 진도군 •(경북) 영덕군, 청도군 •(경남) 밀양시, 남해군
중장년층 중심형 (7)	24.4%	49.3%	26.3%	중장년층 비중이 절반에 육박, 청년층 유입 비중은 가장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군위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전남) 곡성군, 구례군 •(경북) 영양군, 울릉군
고령층 중심형 (46)	29.7%	38.8%	31.5%	중장년층이 가장 많지만, 타유형 대비 고령층의 상대 비율이 독보적으로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 태백시, 정선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전남)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합계	32.4%	38.8%	28.9%		
생활인구 연령별 클러스터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5.15.)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 유입지역별 분석

• 분석결과 개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유입의 경로 특성 따라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타시도 유입형(38개 지역)', '근거리 생활권 유입형(44개 지역)', '동일시도 비인접 유입형(7개 지역)'의 3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 타시도 유입형 (38개 지역)

유입인구 구성은 타시도(73.8%), 동일시도 비인접(20.7%), 동일시도 인접(6.0%)으로 나타나 생활인구 유입의 절대다수가 타시도에서 발생하는 유형이다. 박스플롯 분석 결과, '타시도' 유입 비율의 중앙값이 세 유형 중 가장 높으며, 일부 지역은 이 비율이 매우 극단적인 수준(이상치)에 달해 외부 지역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경기 가평군, 전북 정읍시, 경북 울진군 등이 있다.

• 근거리 생활권 유입형 (44개 지역)

가장 많은 지역이 속한 군집으로, 유입인구 구성이 타시도(66.3%), 동일시도 인접(21.6%), 동일시도 비인접(12.1%)으로 나타났으며, 이 유형 역시 타시도 유입(66.3%)이 과반을 차지하나, 타 유형과 구별되는 핵심 특징은 동일시도 인접 시군에서의 유입 비율(21.6%)이 세 유형 중 현저히 높다는 점이다. 즉, 광역적 유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인접 지역과의 생활권 연계가 가장 활발한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부산 서구·동구, 대구 남구·서구 등 대도시 내 원도심 또는 대도시 근교 지역이 이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 동일시도 비인접 유입형 (7개 지역)

유입인구 구성이 타시도(71.6%), 동일시도 비인접(28.4%), 동일시도 인접(2.1%)으로, 동일시도 인접 지역에서의 유입(2.1%)이 극히 미미한 반면, 동일시도 비인접(28.4%) 유입 비율이 타 유형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패턴을 보인다. 이는 물리적 거리나 교통망의 제약으로 인접 생활권이 단절된 대신, 도내 중심지 또는 타시도 대도시와의 장거리 연계가 주를 이루는 것을 시사한다. 주요 지역으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전남 완도군·진도군 등 도서 지역이 대부분이며, 대도시 내에서는 유일하게 부산 영도구가 포함된다.

• 종합 및 시사점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생활인구 유입은 타시도(69.9%), 동일시도 비인접(16.8%), 동일시도 인접(13.2%) 순으로, 모든 유형에서 타시도 유입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외부 의존적 특성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각 유형별 지역의 공간적·지리적 특성에 따라 외부 유입의 성격이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타시도 유입형은 농산어촌 및 관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며, 외부인구 유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립적인 생활권 형성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거리 생활권 유입형은 대도시 구 단위 또는 근교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통근·통학 등 생활권 단위 이동이 주를 이루는 인구 흐름을 시사한다. 동일시도 비인접 유입형은 주로 도서지역으로 나타나 물리적·지리적 접근성의 한계가 생활인구 유입 패턴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서 살펴볼 수 있다.

[표 3-6] 생활인구 유입지역별 군집 특징

구분	동일시도		타시도	특징	지자체
	인접	비인접			
타시도 유입형 (38)	6.0%	20.2%	73.8%	타시도 유입 비중이 매우 높으며, 광역적 외부 의존도가 가장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구) 군위군 (경기) 가평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철원군, 고성군 (충북)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충남) 보령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고흥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장성군, 신안군 (경북) 문경시,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경남)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근거리 생활권 유입형 (44)	21.6%	12.1%	66.3%	타유형 대비 동일시도 인접 시군에서 유입 비율이 월등히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서구, 동구 (대구) 서구, 남구 (경기) 연천군 (강원)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 회천군, 양구군, 양양군 (충북) 제천시, 보은군, 괴산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전북) 김제시 (전남)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경북)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경남)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산청군
동일시도 비인접 유입형 (7)	2.1%	28.4%	71.6%	동일시도 비인접 지역 유입이 두렷, 인접지역은 극히 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영도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전남) 완도군, 진도군 (경북) 울릉군 (경남) 남해군
합계	13.2%	16.8%	69.9%		
생활인구 유입지역 클러스터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5.15.)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 체류특성별 분석

• 분석결과 개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의 주요 체류 행태 지표(재방문율, 평균 체류시간, 평균 숙박 일수,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역별 체류특성에 따라 '중장기 체류형(23개 지역)', '단기 체류형(23개 지역)', '단기 방문형(43개 지역)'의 3개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단기 방문형이 43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대다수 인구감소지역이 장기 체류보다는 단기적 인 방문 패턴을 중심으로 생활인구가 유입되는 특성을 보였다.

• 중장기 체류형 (23개 지역)

재방문율(43.70%), 평균 숙박일수(4.86일), 1인당 평균 카드사용액(약 12.4만 원) 등 모든 핵심 지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유형으로, 생활인구가 반복적으로 방문하며 실제 숙박과 높은 소비를 병행하는 안정적인 체류 행태를 보이는 지역군이다. 도시권에서는 부산 서구·동구·영도구, 대구 서구·남구가 대표적이며, 농어촌지역으로는 전남 화순군, 장성군, 경북 고령군 등 체류 지속성과 소비력이 확보된 지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 단기 체류형 (23개 지역)

평균 체류시간이 13.49시간으로 세 유형 중 가장 길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 반면, 재방문율(33.43%)과 평균 숙박일수(3.94일)는 중장기 체류형 대비 낮은 중간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방문 시 체류시간은 확보되었으나, 이것이 숙박이나 높은 재방문율로 전환되지는 못하는 유형임을 시사한다. 일회성의 당일 활동 중심의 유동인구 특성이 강하며, 체류 기반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연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강원 태백시·평창군, 전남 고흥군·완도군, 경북 울진군·울릉군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

• 단기 방문형 (43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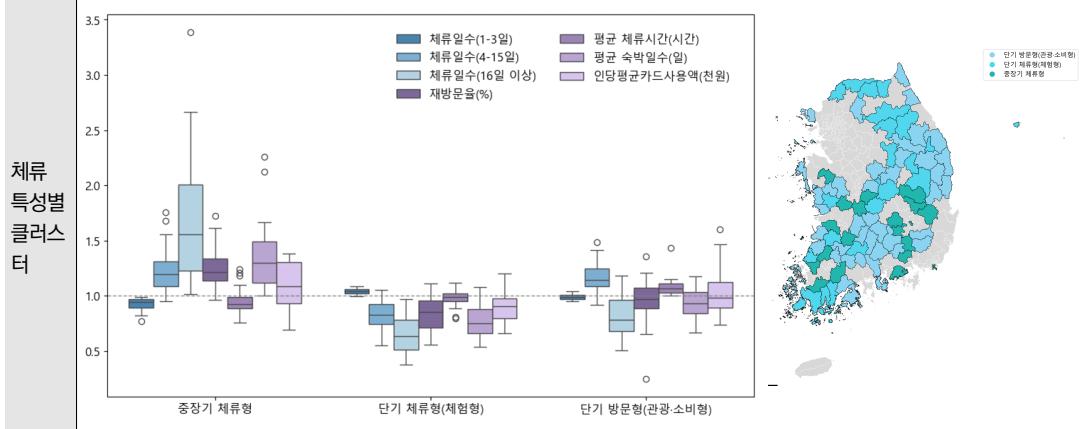
가장 많은 43개 지역이 해당하며, 재방문율(30.10%), 평균 숙박일수(2.95일), 1인당 카드사용액(약 9.5만 원) 등 모든 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박스플롯 분석상 모든 변수 값이 하위권에 밀집되어 있으며, 이는 생활인구 유입이 단순 방문이나 통과 형태에 그치고, 실제 숙박이나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체류 특성을 의미한다. 수도권 인접지역인 경기 가평군, 인천 강화군과 농어촌지역인 강원 삼척시, 충남 태안군, 전남 담양군, 경북 청송군 등이 이 유형에 포함된다.

• 종합 및 시사점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체류특성에 따라 명확히 3개의 다른 유형으로 구분되어,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중장기 체류형은 반복 방문과 소비력이 확인된 지역으로 관광, 비즈니스, 워케이션 등 다양한 목적의 체류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 체류형은 방문시간은 많지만 체류 전환이 미흡한 지역들로, 1박 이상 체류를 유도하는 숙박·체험 연계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단기 방문형은 유입인구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며, 특히 수도권 인접 지역은 양호한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소비 전환율이 낮아 인근 지역과 연계한 체류확대 및 적극적인 소비 증진 전략이 요구된다.

[표 3-7] 생활인구 체류특성별 군집 특징

구분	재방문율 (%)	평균 체류시간 (시간)	평균 숙박일수 (일)	인당 평균 카드사용액 (천원)	특징	지자체
중장기 체류형 (23)	43.70	11.01	4.86	124.40	숙박, 소비, 재방문율이 모두 높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 서구, 동구, 영도구 (대구) 서구, 남구, 군위군 (충북) 옥천군 (충남) 논산시, 예산군 (전북) 김제시, 임실군 (전남) 화순군, 영암군, 함평군, 장성군 (경북) 영천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경남)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단기 체류형 (23)	33.43	13.49	3.94	123.13	체류시간은 가장 길지만 숙박일수와 재방문율은 상대적으로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연천군 (강원) 태백시, 흥천군, 횡성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남원시, 고창군 (충북) 제천시, 영동군 (충남) 부여군, 청양군 (전남) 고흥군, 징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경북) 영주시, 영양군, 울진군, 울릉군, 거창군
단기 방문형 (43)	30.10	12.23	2.95	95.12	전반적으로 체류 및 소비가 가장 적은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강원)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충남) 공주시,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신안군 (경북) 문경시, 청송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진군 (경남) 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5.15.)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③ 종합

- 세 가지 속성(연령 구성, 유입지역 특성, 체류행태) 모두에서 지역 간 특성 차이 발생

연령 구성 측면에서는 고령층 중심 지역이 과반을 차지하며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라·경상권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해당 특성이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청년층 중심 지역은 부산과 대구의 원도심, 강원 일부 관광 및 군사 지역에 분포하며, 전 연령대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여 유동인구의 총량 자체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중장년층 중심 지역은 수는 적지만 군위군, 진안군 등 특정 농·산간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고 청년 유입은 가장 저조한 특성을 보였다.

유입지역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타시도 유입 의존도가 뚜렷한 가운데, 근거리 생활권 유입형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타시도 유입형은 전북의 다수 지역과 같이 외부 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보였고, 동일시도 비인접 유입형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 유입이 단절된 독특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었다.

체류행태 측면에서는 체류의 지속성 및 경제적 기여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중장기 체류형은 높은 재방문율(43.70%), 숙박일수(4.86일), 카드사용액(124.40천원)을 보이며, 부산·대구 도심과 일부 농촌지역에서 나타나 안정적 체류가 도시와 농촌에서 모두 가능함을 시사했다. 단기 체류형 지역은 강원 평창군, 충북 제천시 등에서 나타났으며, 체류시간은 길지만 숙박과 재방문은 부족해 일시 체류형 방문지로 분류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단기 방문형은 경기 가평군, 강원 삼척시 등에서 나타났으며, 모든 체류 관련 지표가 가장 낮아 생활인구 체류 유도와 지역경제로의 연결이 미약한 특성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속성 모두에서 지역 간 생활인구의 구조와 흐름은 매우 다르며, 연령·유입경로·체류 형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각 지역의 실질적인 생활인구 특성이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분류한 선행연구와 비교 시 유사한 양상을 나타냄

본 연구의 군집분석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을 분류한 윤소연(2025)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유형적 정합성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접경지역 군부대 밀집 지역인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의 사례로, 이들 4개 지역은 윤소연(2025)에서는 '청년 장기체류형'으로 분류되었고, 본 분석에서도 '청년 층 중심형'으로 일관되게 분류되어, 군부대 등 특수 요인에 기반한 청년층 체류특성이 포착되었다. 또한 윤소연(2025)의 '거점도시형'에 속한 대구 서구·남구, 부산 동구·영도구·서구 등 대도시 구 지역들이 본 연구에서 '근거리 생활권 유입형'과 '중장기 체류형'의 특성을 동시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점도시 기능이 근거리 유입을 활성화하고, 안정적 체류를 유도하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하는 구조적 연관성을 보여준다.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의 교차 검토 시 정책적 과제와 한계를 확인

군집분석 결과를 89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교차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정책 방향의 정합성과 향후 정책과제로 고려해야 할 한계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청년층 중심형 지역은 도심형 체류 콘텐츠와 청년 정착 패키지가 결합된 계획을 수립하여 유동인구의

도심 체류 특성과 높은 정합성을 보였다. 중장년층 중심형은 귀농, 취업, 치유 등 정주 인프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안정적 유입 특성과 부합했으며, 고령층 중심형은 의료·돌봄 접근성과 생활거점 확충으로 고령 인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었다.

유입권역 측면에서는 타시도 유입형은 워케이션, 살아보기 등 체류 기반 보강의 내용이 두드러졌으며, 근거리 생활권 유입형은 생활SOC 및 도심관광(야간경관) 등 당일 체류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동일시도 비인접 유입형 도서 자원 활용 및 광역교통 보완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으로 군집별 유입 패턴과 정책 구성이 상호 정합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체류행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서는 한계가 나타났다. 단기 체류형은 체류시간은 길지만 숙박·재방문이 저조한 지역군이다. 계획서상 레저·관광 콘텐츠가 다수 나타나지만, 체류시간의 양적 우위에 비해 숙박과 관련된 전략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 방문형은 전반적 체류·소비가 낮은 지역군이다. 계획서에서도 축제·이벤트 등 당일형 콘텐츠는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분석에서 확인된 낮은 재방문과 저조한 숙박·소비의 근본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과 지역경제 연계방안은 제한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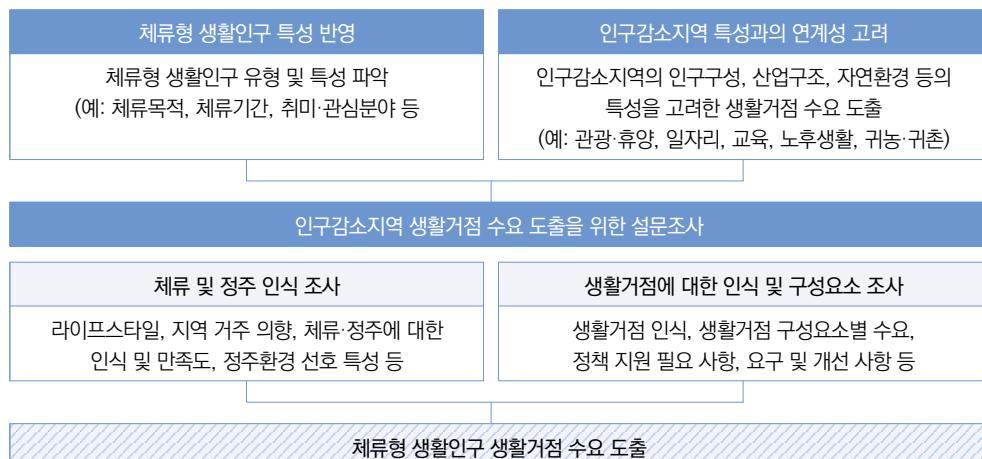
전국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은 워케이션, 청년정책, 생활SOC, 의료 돌봄이라는 공통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군집 특성과 대체로 부합한다. 특히 도시·항만지역의 청년 도심콘텐츠, 농산어촌의 장기 체류 인프라가 대표적 사례이다. 다만 단기 체류·방문형 지역의 경우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설계 보완이 요구된다. 지역별 생활인구 유입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정책 방향 설정이 생활인구 확대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 생활인구의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식 및 생활거점 수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체류형 생활인구의 특성과 생활거점 구성요소 수요 파악을 위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조사대상 : 최근 1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1일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자(500명)
- 조사기간/방법 : 2025.05.08.(화) ~ 2025.05.12.(토) / 온라인 설문(구조화된 웹 설문을 통한 조사)
- 조사내용
 - 응답자 특성 : 거주지,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거주형태, 라이프스타일
 - 체류 경험 및 특성 : 체류지역 선택 이유, 체류 형태, 체류 목적, 체류 만족도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필요요소 : 공간(시설), 프로그램(활동), 정책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 지역과의 관계 및 정착의향 : 지역과의 관계, 향후 정착·이주 의향, 지역유형·주택유형 등 선호 요인, 이주·정착의 어려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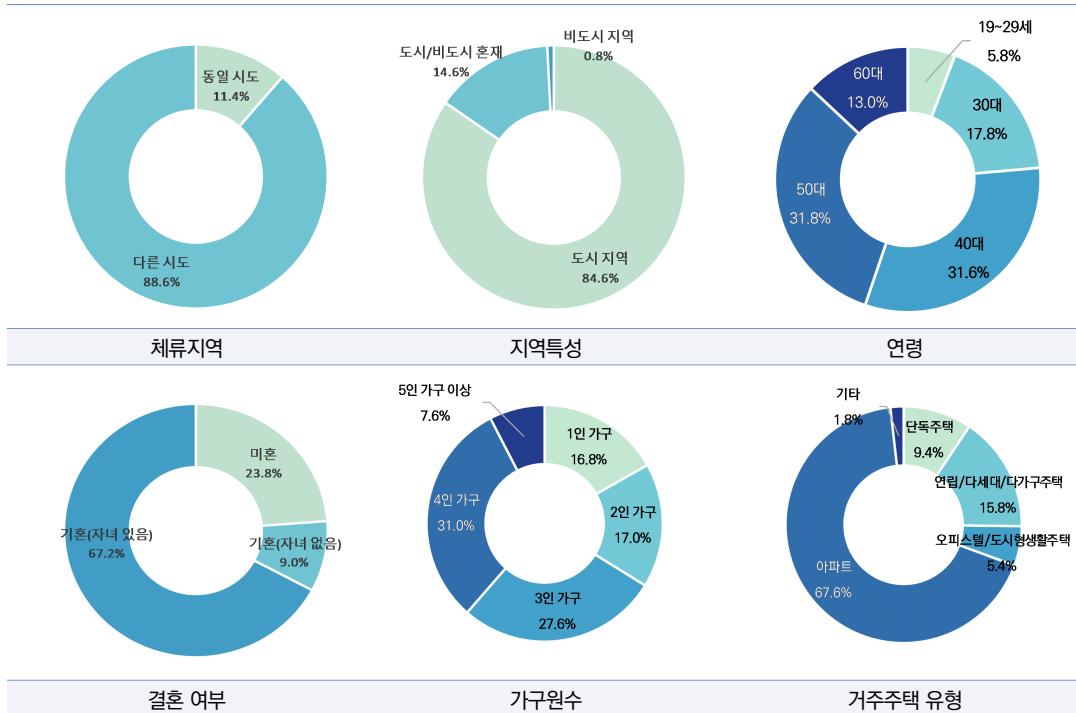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2) 설문결과⁵⁷⁾

■ 응답자 기본 특성⁵⁸⁾

응답자 대다수가 도시지역(84.6%)에 거주하고, 다른 시도에서 체류(88.6%)한 경험이 있다. 연령별로는 40대(31.6%), 50대(31.8%)가 많고, 자녀가 있는 기혼(67.2%)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가구원 수는 4인 가구(31.0%), 3인 가구(27.6%) 비율이 높고, 대부분 아파트(67.6%)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응답자 특성

출처: 연구진 작성

■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

- 인구감소지역의 체류기간, 목적, 방문빈도를 바탕으로 체류형 생활인구를 4개 유형으로 구분
- 최근 1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1일 이상 체류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체류기간, 체류목적, 방문빈도를 바탕으로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방문형은 주로 1~2일 체류하고, 단기성의 방문이 특성인 유형이다. 단기 관광, 가족 방문 등 목적이 뚜렷하지만 지역 정착과는 거리 있고 관광지 외에도 부모님 댁, 본가 등 연고지 방문 경험이 많다. 체험형(단기형)은 4~15일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워케이션·살아보기 등 비정기적 체험을 통해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는 생활인구에 해당한다. 관계형(정기형)은 통근·통학, 정기적 교류 등으로 지역과 반복적인 접촉이 있는 응답자가 중심이며, '가족 방문'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 장기형은 지역

57) 설문조사 세부결과는 부록1 참조

58) 본 설문조사는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로 적정한 응답비율을 맞추는 것을 우선하여 표본을 설계함에 따라, 연령, 결혼여부, 가구원 수, 거주주택 유형 등 기타 응답자 특성은 모집단 구성비율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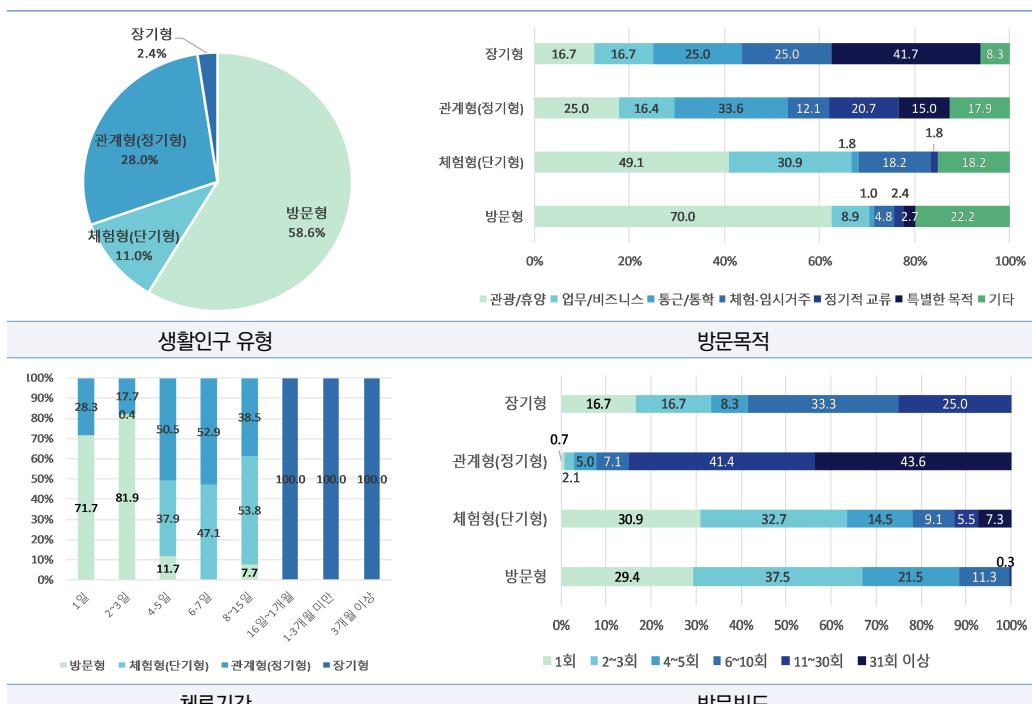
에 16일 이상 머문 응답자로 그 수가 적지만, 정주 전환 가능성 매우 높은 유형으로, 장기근로, 요양, 귀촌 등의 체류목적이 명확하다.

[표 3-8]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분석표

구분	특징 요약	지역과의 관계 수준	체류기간	시사점
방문형	• 관광, 축제, 가족 방문 등 목적이 단기 방문 • 반복성 낮음	• 관심 수준 • 관계 형성은 거의 없음	주로 1~2일	• 응답자의 다수가 이 유형에 속함 • 체류 목적이 명확하나 관계성 약함 • 관광·가족 연고 중심 유입
체험형(단기형)	• 살아보기, 로컬 체험 등으로 일정 기간 머무는 형태	• 경험 기반의 초기 관계 형성 • 주민과의 접촉 가능성 존재	4~15일	• 목적이 명확한 체험형 응답자 다수 • 관계보다는 체험 중심 • 지역 체험 프로그램 활용 가능성 높음
관계형(정기형)	• 통근·통학, 정기교류, 가족 관련 반복 방문 • 업무·교육 등 정기적 체류 목적	• 정기적 관계 유지 • 경제활동 또는 가족 유대 유지 형태	2~15일(반복 체류)	• 월 1회 이상 반복 방문 응답자 상당수 • 가족 방문도 반복되면 관계형 해석 가능 • 장기적 이주 가능성 있음
장기형	• 16일 이상 체류 또는 상주 • 취업·귀촌·장기 프로젝트 참여자 등	• 지역사회 내 관계 밀착 • 지역 경제/커뮤니티 참여	16일 이상	• 귀농/귀촌, 장기근로 목적 응답 적지만 명확 • 정주 전환 가능성 높음 • 정책적 지원 우선순위 대상

출처: 연구진 작성

전체 응답자 중 대부분이 방문형(58.6%)이며, 이어서 관계형(28.0%), 체험형(11.0%), 장기형(2.4%)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기간은 방문형은 2~3일, 체험형은 4~15일, 관계형은 8~15일, 장기형은 16일 이상이 가장 많으며, 방문빈도는 방문형, 체험형은 연 2~3회, 관계형은 11회 이상, 장기형은 6~10회 방문 비율이 높다. 방문목적의 경우, 방문형, 체험형(단기형)은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관계형(정기형)은 통근·통학, 장기형은 장기근로 등의 특수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한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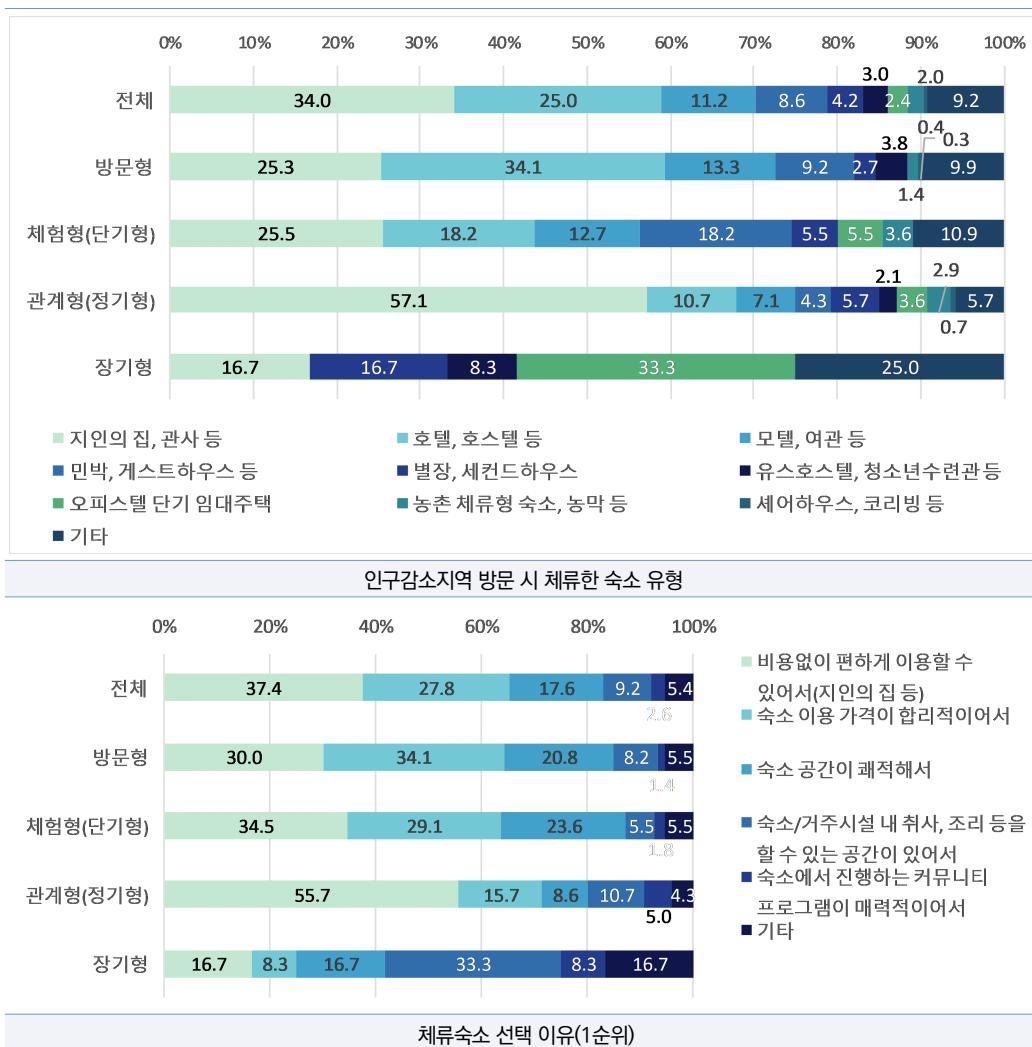


[그림 3-3] 체류형 생활인구별 특성

출처: 연구진 작성

■ 체류형 생활인구별 인구감소지역 체류경험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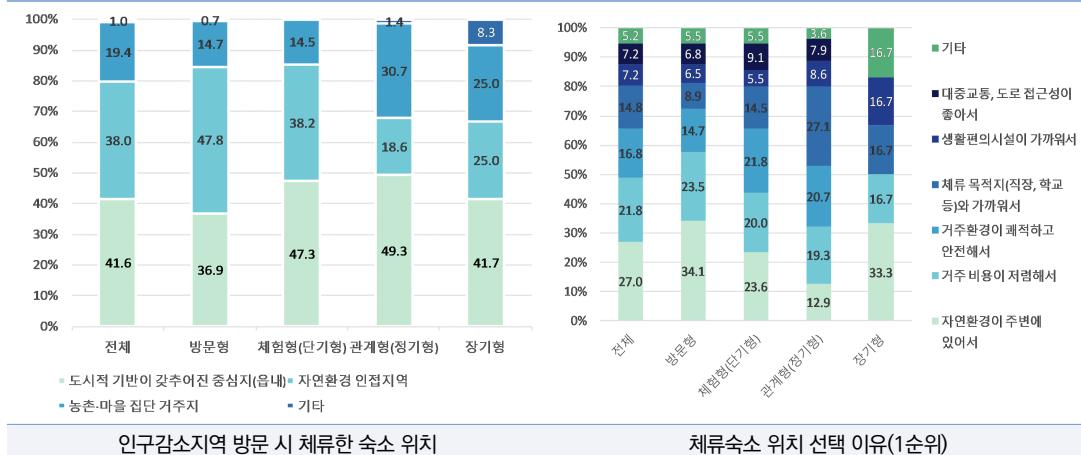
- 대부분 지인 집, 관사 등에서 체류하였고,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숙소의 위치 및 활동방식 상이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해서 체류한 숙소 유형은 전체 34.0%가 지인 집, 관사, 사택 등에 체류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서 호텔, 호스텔 숙박시설(25.0%)이 많았으며, 선택 이유는 대부분 비용과 연관되었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은 호텔 등 숙박시설(34.1%), 지인의 집, 관사 등(25.3%)에서의 체류가 많은 반면, 체험형(단기형)은 지인의 집(25.5%), 호텔 등 숙박시설(25.5%), 민박, 체험주택 등(18.2%) 다양한 숙소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형(정기형)은 지인의 집, 관사 등(57.1%)의 체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장기형은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단기 임대주택(33.3%)과 본가 등 기타(25.0%)의 응답이 높았다. 해당 숙소 유형 선택 이유는 대부분 숙소 가격, 비용 없이 이용 가능 등 비용과 관련 응답이 대부분이었으나, 장기형은 숙소·거주시설 내 취사, 조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33.3%)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그림 3-4]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숙소 유형 및 선택 이유

출처: 연구진 작성

체류 숙소의 위치는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41.6%)가 가장 많았고, 자연환경이 주변에 있어서(27.0%)와 거주비용이 저렴해서(21.8%)가 주요 선택 이유였다. 방문형의 경우 자연환경 인접지역(47.8%)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유형은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의 숙소를 이용하였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관계형, 장기형은 농촌마을을 집단 거주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숙소 위치를 선택한 이유로는 관계형(정기형)에서만 체류 목적지가 가까워서(27.1%)를 최다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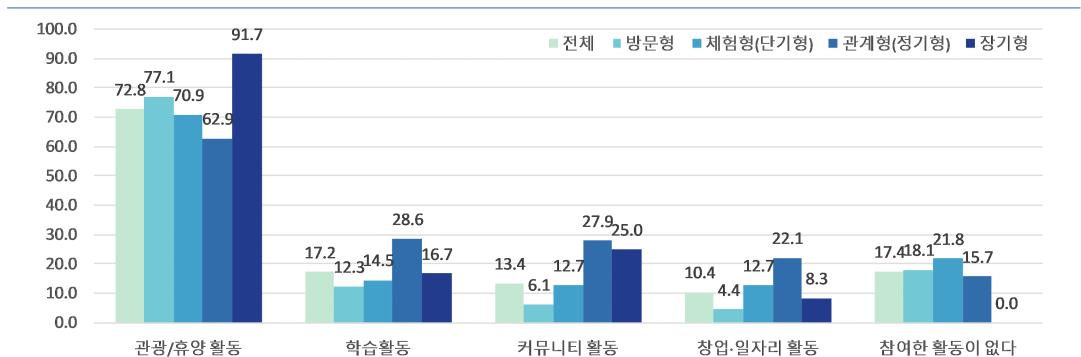


[그림 3-5]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숙소 위치 및 선택 이유

출처: 연구진 작성

- 대부분 관광·휴양 활동에 참여하고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을 다수 이용하고 있으며, 관계형(정기형)은 타 유형에 비해 다양한 활동과 시설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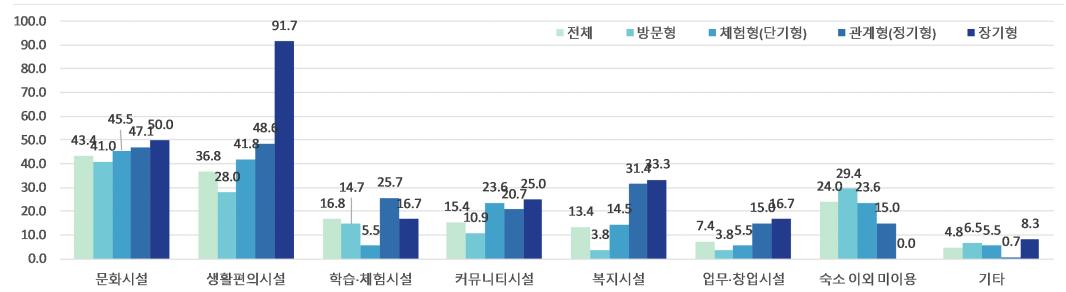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에서 참여한 활동의 경우, 방문형, 체험형(단기형)은 관광·휴양 활동이 가장 많았고 아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도 높았다. 관계형(정기형)은 관광·휴양 활동 외에 학습활동, 커뮤니티 활동, 창업·일자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참여한 활동 참여율(중복선택)

출처: 연구진 작성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시설은 대부분 주거·숙박시설 외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방문형은 숙소 이외 시설을 미이용(29.4%)한 경우도 많았고, 상대적으로 관계형(정기형)은 복지시설을 이용(31.4%)하였다는 비율이, 장기형은 모든 시설의 이용 비율이 높았다.



[그림 3-7]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시설 이용률(중복선택)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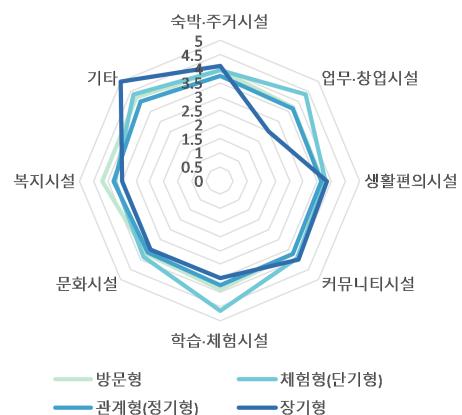
- 생활인구 유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시설별 만족도 차이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2이며, 이용시설 중 숙박·주거시설(3.90)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형은 복지시설(4.18), 체험형(단기형)은 학습·체험시설(4.67), 업무·창업시설(4.33), 장기형은 숙박·주거시설(4.08), 커뮤니티시설(4.00)의 만족도가 높아, 생활인구 유형별로 시설에 만족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9]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시설별 만족도(5점 만점)

구분	전체	생활인구 유형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전반적인 만족도	3.72	3.77	3.71	3.64	3.58
숙박·주거시설	3.90	3.95	3.93	3.76	4.08
업무·창업시설	3.68	3.73	4.33	3.67	2.50
생활편의시설	3.70	3.68	3.78	3.66	3.82
커뮤니티시설	3.75	3.72	3.92	3.69	4.00
학습·체험시설	3.86	3.91	4.67	3.75	3.50
문화시설	3.73	3.74	3.88	3.67	3.50
복지시설	3.84	4.18	3.75	3.80	3.50
기타	4.25	4.21	4.33	4.00	5.00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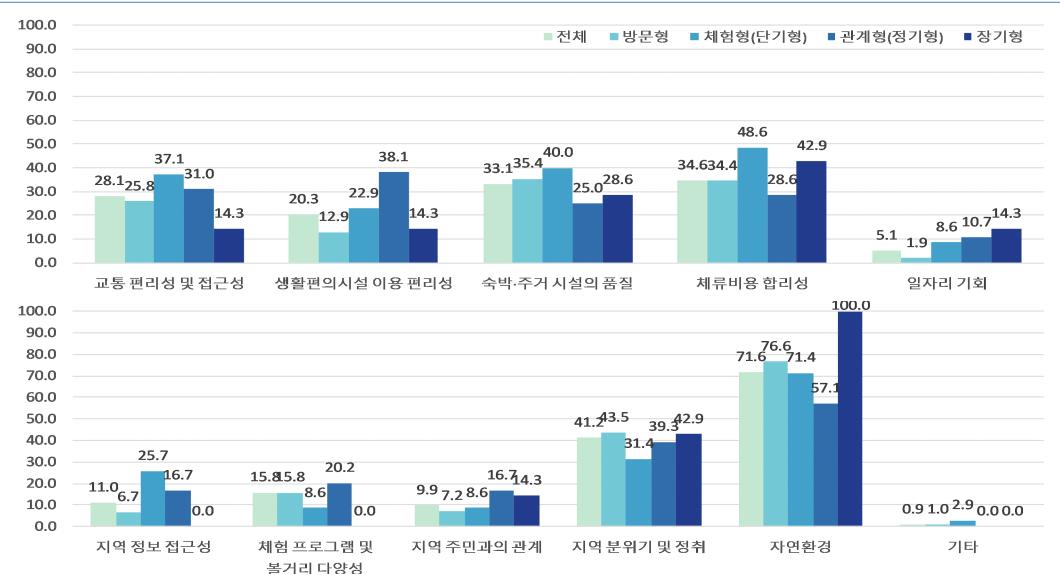


[그림 3-8] 생활인구 유형별 이용한 시설 만족도

출처: 연구진 작성

-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 중 만족한 점은 자연환경, 불편한 점은 교통, 편의시설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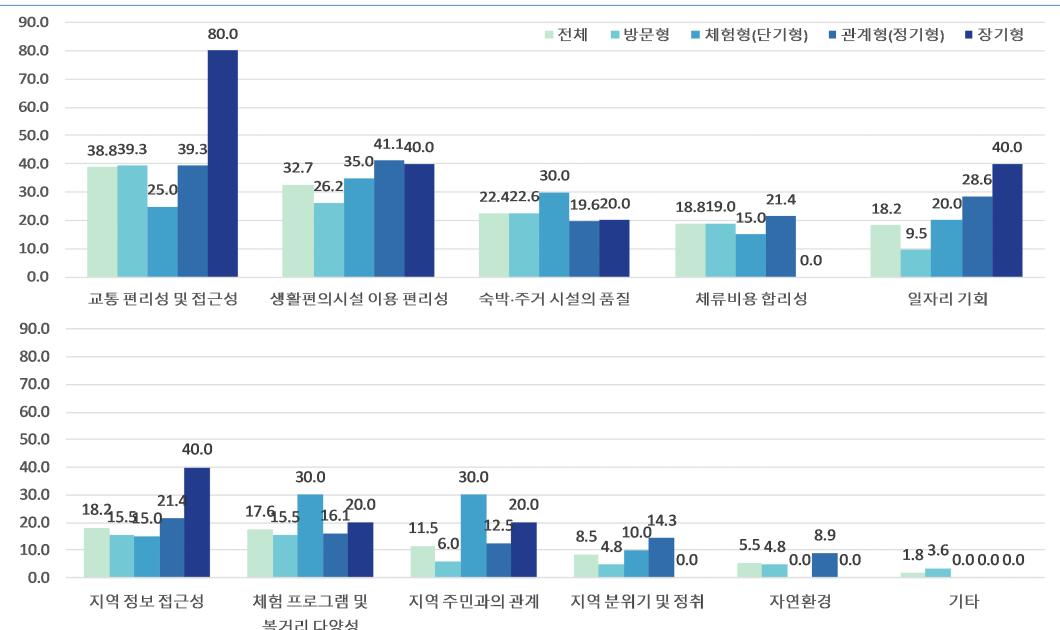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 중 만족했던 점은 자연환경(71.6%)이 모든 생활인구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지역분위기 및 정취(41.2%)가 뒤를 이었다. 체험형(단기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체류비용 합리성(48.6%), 숙박·주거시설 품질(40.0%), 교통편리성(37.1%), 지역 정보 접근성(25.7%)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관계형(정기형)은 생활편의시설 이용 편리성(38.1%), 체험프로그램 및 볼거리 다양성(20.2%)에 대한 만족 비율이 높았다.



[그림 3-9]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대해 만족한 점(중복응답, %)

출처: 연구진 작성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서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38.8%), 생활편의시설 이용 편리성(32.7%)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높았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장기형은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80.0%)에 대해 대부분이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일자리 기회(40.0%), 생활편의시설 이용 편리성(40.0%), 지역 정보 접근성(40.0%)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체험형(단기형)은 체험 프로그램 및 볼거리 다양성(30.0%), 숙박·주거 시설의 품질(30.0%), 지역 주민과의 관계(30.0%) 등에서 불편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3-10]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대해 불편했던 점(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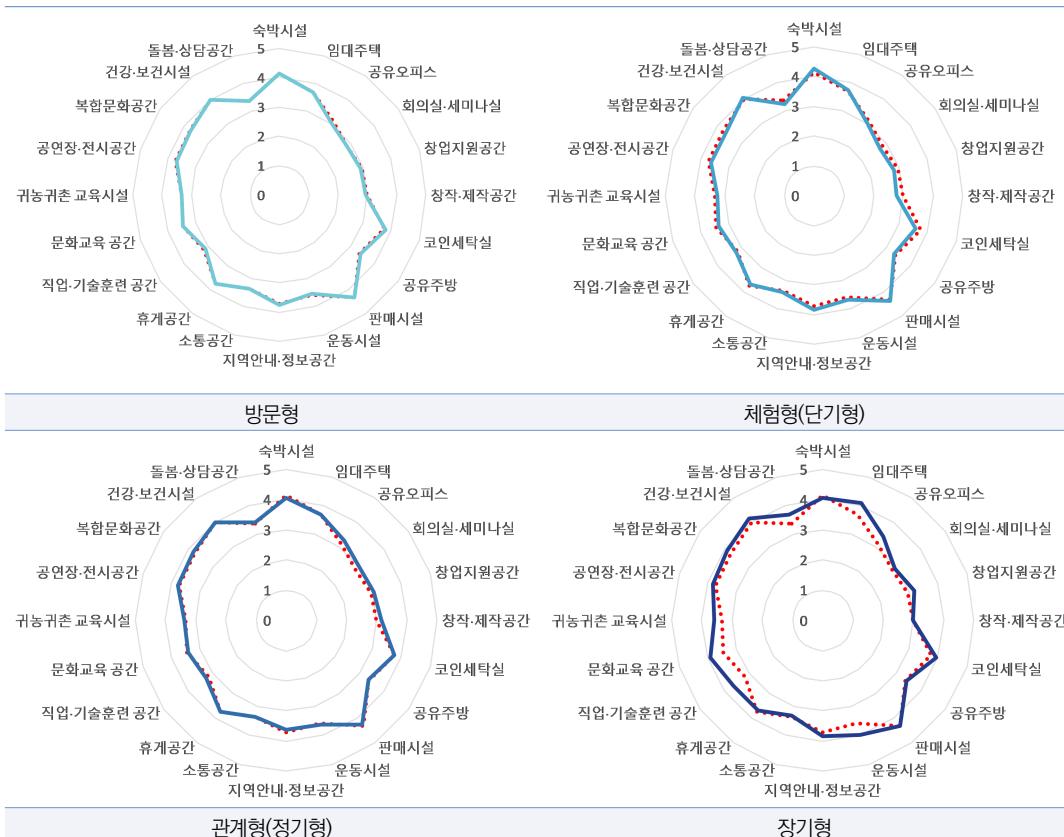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필요요소

2장 3절에서 도출한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인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서비스)'에 대한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시 필요한 공간(HW)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건강·보건시설

전체 응답자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건강·보건시설의 필요성을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인식하였다. 생활인구 유형별로는 체험형(단기형)은 임대주택, 지역안내·정보공간, 관계형(정기형)은 복합문화공간, 휴게공간, 공연장·전시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1]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시 필요한 공간(HW) 수요(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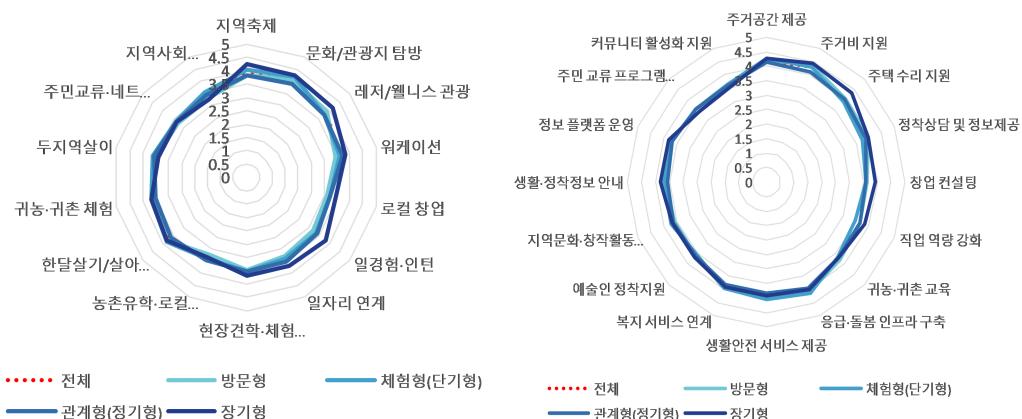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문화·관광지 탐방, 지역축제 프로그램(SW)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인구 유형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 수요에서 차이

전체 응답자는 프로그램 영향에 대해 문화·관광지 탐방, 지역축제, 레저·웰니스 관광 순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 체험형(단기형)은 한달살기·살아보기, 귀농·귀촌체험의 영향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은 워케이션, 두지역살이 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기형은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레저·웰니스 관광 외에 일경험·인턴, 일자리연계, 체험학습 등에 대한 인식 점수도 높았다.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는 주거비 지원(4.28), 주거공간 제공(4.20), 의료·돌봄지원(4.06) 등이 높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주거비 지원, 주거공간 제공 등 주거지원에 대한 도움 인식이 높았고, 주거비 지원, 주거공간 제공, 응급·돌봄 인프라 구축,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순으로 도움 인식도 높았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은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돌봄 지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고, 체험형(단기형)과 관계형(정기형)은 타 유형에 비해 지역문화·창작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대한 도움 인식이 높았다. 장기형은 정보제공, 주민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 정도 인식 점수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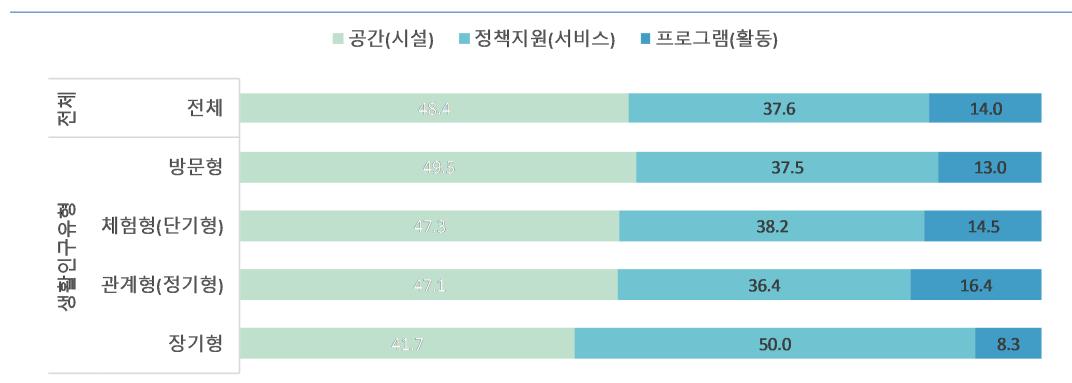


[그림 3-12]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프로그램(SW)이 미치는 영향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3-13]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정책 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인식 그래프
출처: 연구진 작성

- 지역 체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공간(HW)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절반 수준

지역 체류를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전반적으로 공간(HW), 정책지원(서비스)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장기형의 경우에만 정책지원(서비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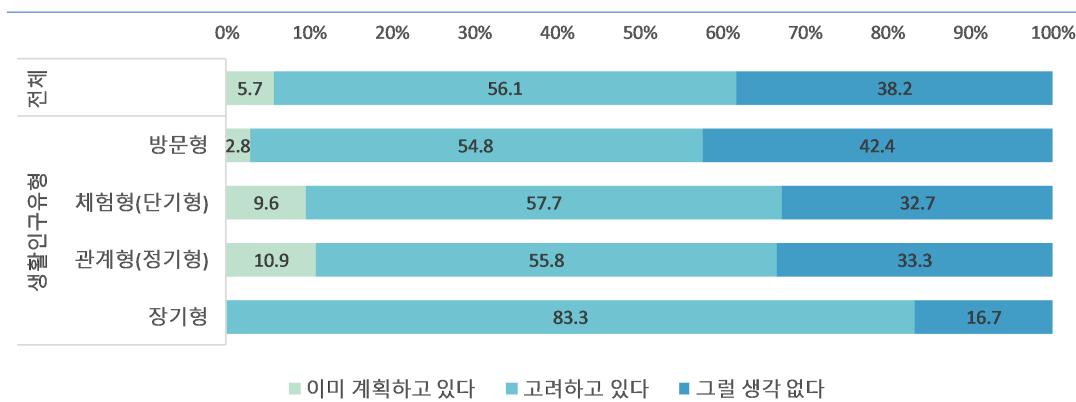


[그림 3-14]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우선순위(단위: %)
출처: 연구진 작성

■ 생활인구 유형별 지역 정착 의향

- 생활인구 유형별로 지역 정착 의향과 그에 따른 선호 숙박시설, 주요 고려 사항 등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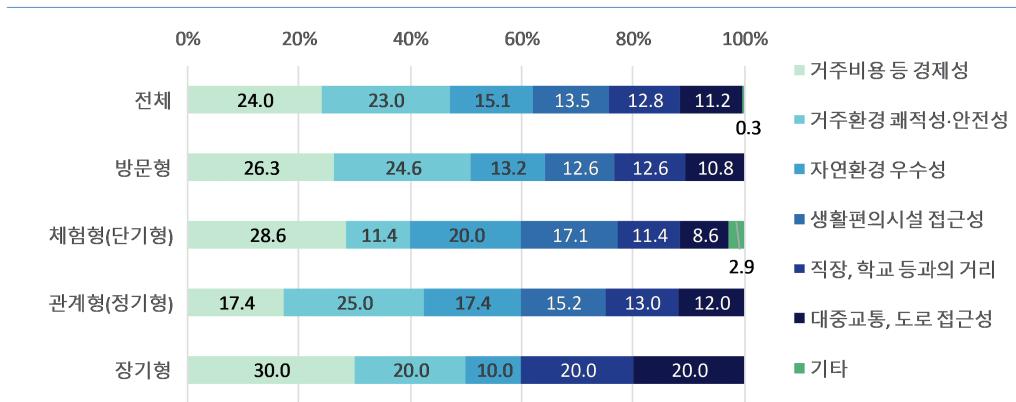
생활인구 유형별로 향후 거주지 외 이주·정착 의향의 경우, 장기형은 고려하고 있는 비율이 83.3%로 대부분이며, 체험형과 관계형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약 10%로 나타났다.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체류하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좋아서(44.1%), 고향, 가족 지인 등 연고가 있어서서(20.4%)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관계형(정기형)과 장기형은 직장, 학교 등 체류 목적지가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3-15] 향후 거주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정착 의향(단위: %)

출처: 연구진 작성

전체적으로 향후 타지역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 시 주요 요인을 거주비용 등 경제성(24.0%), 거주환경 쾌적성·안전성(23.0%), 자연환경 우수성(15.1%)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기형은 경제성 외 다양한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그림 3-16]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1순위, 단위: %)

출처: 연구진 작성

향후 타지역 방문, 체류시 선호하는 숙박시설은 전체적으로 호텔·호스텔·콘도 등 숙박시설(26.4%), 민박·에어비앤비·체험주택 등(16.3%), 별장·세컨드하우스(14.8%), 농촌 체류형숙소·귀농귀촌형 쉼터 등(12.0%) 순으로 응답하였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체험형(단기형)은 민박·에어비앤비·체험주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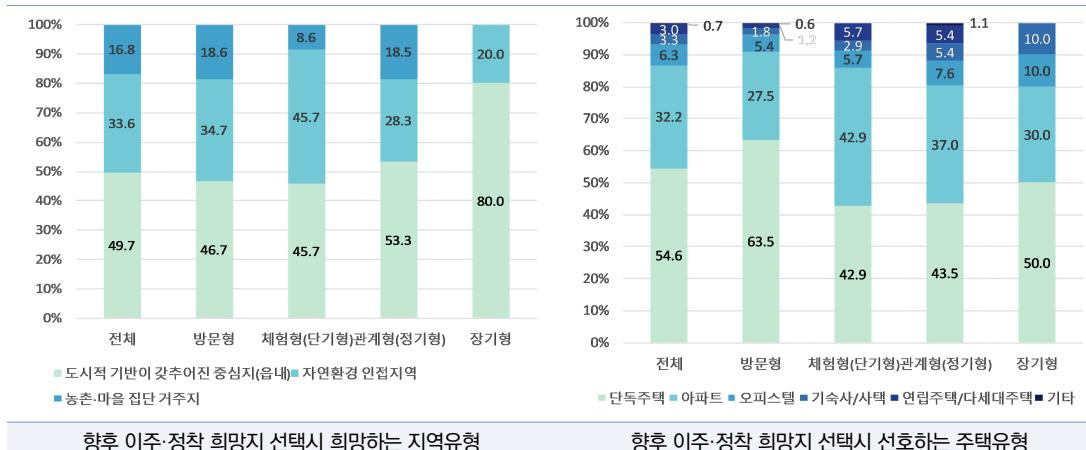
(25.0%)의 선호가 가장 많았고, 관계형(정기형)은 호텔 등 숙박시설(26.1%), 장기형은 모텔·여관(25.0%), 별장·세컨드하우스(25.0%)를 가장 선호하였다.



[그림 3-17]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 및 체류 시 선호하는 숙박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향후 이주·정착하고 싶은 지역 유형은 읍내, 전통시장, 면사무소 등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49.7%)가 대부분이며, 생활인구 유형별로도 향후 이주·정착 시 대부분 중심지 유형을 선호하였고, 특히 장기형은 80.0%가 중심지를 희망하였다. 한편, 체험형(단기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연환경 인접 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주·정착 시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54.6%), 아파트(32.2%) 순이며, 생활인구 유형별로도 유사하였다.



향후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시 희망하는 지역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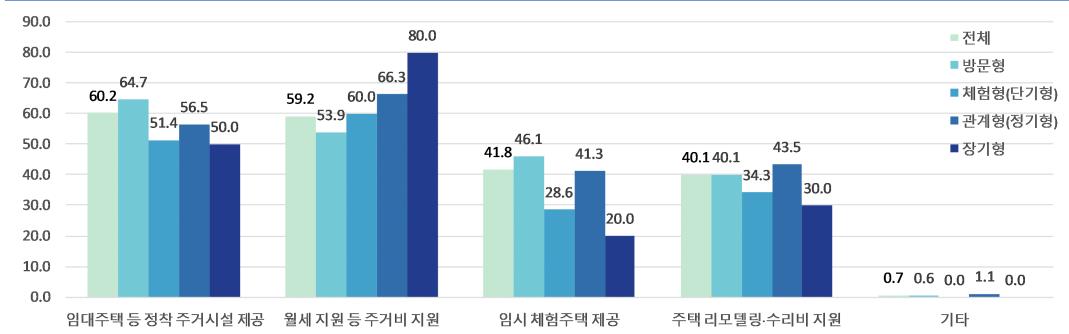
향후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시 선호하는 주택유형

[그림 3-18]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 정착 희망 체류 특성(%)

출처: 연구진 작성

- 이주·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 제공, 방해가 되는 요인은 일자리·창업 기회와 생활인프라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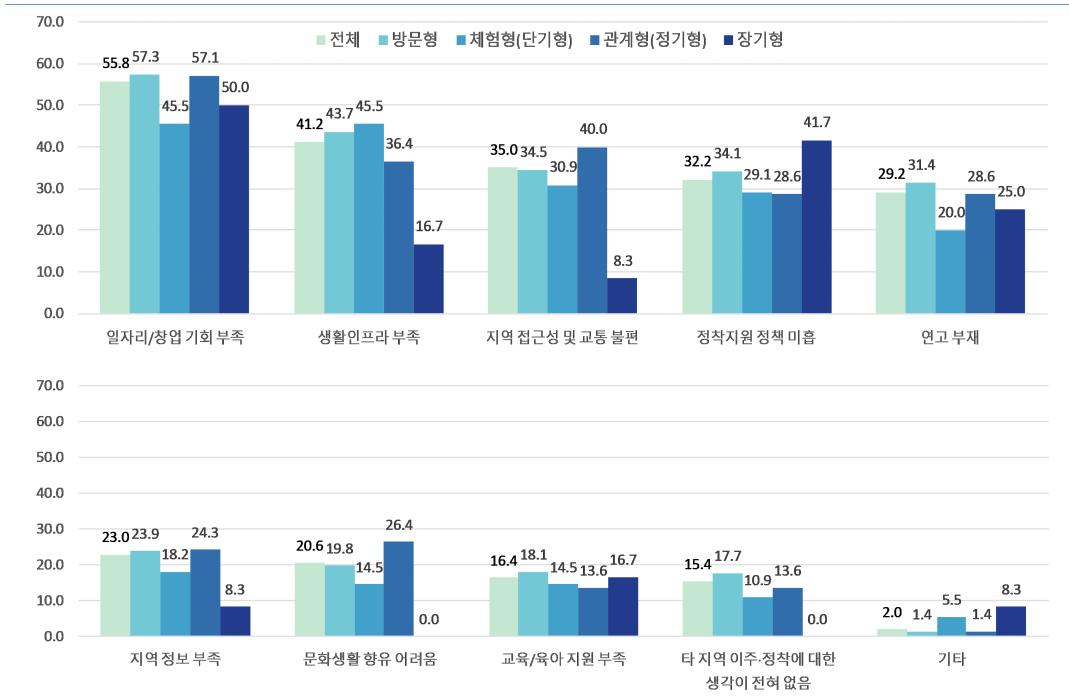
향후 이주 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 관계형(정기형)이 정착 주거시설 제공(64.7%, 56.5%)을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53.9%, 66.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체험형(단기형), 장기형은 월세 등 주거비 지원(60.0%, 80.0%)을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림 3-19]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출처: 연구진 작성

전체적으로 향후 이주·정착에 있어서 일자리·창업기회 부족(55.8%), 생활인프라 부족(41.2%)가 방해 요인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고, 지역 접근성 및 교통 불편(35.0%), 정착지원 정책 미흡(32.2%)가 그 뒤를 이었다. 생활인구 유형별로는 전체적인 방해요인 인식 사항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3-20]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방해요소(%)

출처: 연구진 작성

3)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거점 수요

① 설문조사 소결

■ 전체 응답자 특성

인구감소지역 체류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관광·휴양 목적으로 도시 중심지의 지인 집이나 호텔 등 숙박시설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 만족 요인으로는 문화시설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 지역정취, 자연환경 등이 꼽혔으며,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은 불편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생활거점 구성요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공간(HW) 측면에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건강·보건시설 순으로 필요하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SW)은 문화·관광지 탐방, 지역축제, 레저·웰니스 관광 순으로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지원(서비스)은 주거비 지원, 주거공간 제공, 응급·돌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필요 인식이 높았다.

지역정착 의향의 경우, 양호한 자연환경과 지인 등 연고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희망 거주지로는 경제성과 거주환경 쾌적성이 우수하고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의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 제공이나 주거비 지원 응답이 많았으며, 일자리·창업 기회 부족과 생활인프라 부족이 이주정착의 주요 방해요소로는 나타났다.

■ 체류형 생활인구별 특성

-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목적과 체류시설,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체류경험 상이

방문형은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자연환경 인접 숙박시설에 머물며, 관광·휴양 활동을 하였고, 숙소 외 시설 이용 비율이 타 유형 대비 낮았다. 체험형(단기형)은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중심지이면서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인 집, 호텔, 민박, 에어비앤비 등에서 체류한 비율이 높았다. 관계형(정기형)은 통근·통학 목적으로 체류 목적지와 인접한 사택, 관사, 지인 집에 머물렀으며, 학습, 커뮤니티, 창업 일자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복지시설 이용 경험도 있었다. 장기형은 직장, 학교 등을 목적으로 출사 등 생활편의를 위해 단기임대 주택에 체류한 경험이 많았다.

- 생활거점 구성요소에 대해서 장기형을 제외하고 공간(HW)을 가장 필요한 요소로 인식

방문형은 코인세탁실, 공유주방 등의 공간이 필요하며, 프로그램으로는 문화·관광지 탐방, 정책지원으로는 응급·생활안전 등 의료·돌봄 지원과 지역문화·창작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체험형(단기형)은 지역안내·정보공간, 소통공간, 지역훈련공간의 필요성이 높았고,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한달살기·살아보기, 귀농·귀촌 체험, 지역사회 참여활동 등의 프로그램 영향력을 크게 느꼈으며, 정책지원 서비스는 보통 이상의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였다. 관계형(정기형)은 창업지원공간, 창작·제작공간, 문화시설이 필요하며, 일자리 및 학습 관련 프로그램의 영향을 높게 평가하였다. 장기형은 공간, 프로그램, 정책지원 전반에 대한 필요성과 도움 인식이 높았으며, 특히 응답자 절반이 정책지원(서비스)을 1순위로 꼽아 타 유형과 차별화 되었다.

- 지역정착 의향과 관련해서는 희망하는 정착지와 방해요소 인식에서 유형별로 다소 차이

체험형(단기형)은 향후 이주·정착 희망지로 자연환경 인접지역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 관계형(정기형)은 타 유형 대비 지역 접근성과 교통 불편을 이주·정착의 주요 방해요소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직장, 학교 등 체류 목적지와 생활인프라가 타 지역에 위치한 것을 방문·체류의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② 분석결과 종합

설문조사 결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공간(HW)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숙박시설과 판매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고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았다. 생활인구 유형별로는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모두 공간(HW), 정책지원, 프로그램(SW) 순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장기형은 정책지원에 대한 필요 인식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유형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에 맞는 정책 제안과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대다수를 차지하는 방문형은 지역 연고자를 대상으로 관계 유지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고, 지역 탐색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체험형(단기형)에게는 체험형 숙소 제공, 로컬콘텐츠 개발, 임시 체류 지원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 관계형(정기형)의 경우 생활인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커뮤니티 지원, 공유공간 조성, 정보 플랫폼 운영 등이 필요하며, 장기형은 주거·일자리·사회적 연결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거점 구성요소 수요와 중요도를 바탕으로, 생활거점 구성요소 고려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0]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고려 방향

구분	분류	세부항목	수요종*			
			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
공간 (HW)	숙박·주거시설	숙박시설(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	●	●	●
		임대주택(쉐어하우스, 공공임대 등)	○	○	○	●
	업무·창업시설	공유오피스	○	○	○	○
		회의실·세미나실	△	△	△	△
		창업지원공간(창업보육실, 창업카페 등)	△	△	○	○
		창작·제작공간(공동작업장, 스튜디오 등)	△	△	○	○
	생활편의시설	코인세탁실	○	○	○	○
		공유주방	○	○	○	○
		판매시설(편의점, 지역상점 등)	●	●	●	●
		운동시설(헬스장, 체력단련실)	○	○	○	●
	커뮤니티시설	지역안내·정보공간(관계안내소, 안내센터)	○	○	○	○
		소통공간(커뮤니티 라운지, 소모임공간)	○	○	○	○
		휴게공간(공용 휴게실, 쉼터)	○	○	○	○
	학습·체험시설	직업·기술훈련 공간	○	○	○	○
		문화교육 공간	○	○	○	○
		귀농귀촌 교육시설(농업기술센터, 귀농교육장)	○	○	○	○
	문화시설	공연장·전시공간	○	○	○	○

구분	분류	세부항목	수요층*			
			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
복지시설		복합문화공간	○	○	○	○
		건강·보건시설(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등)	●	●	●	●
		돌봄·상담공간	○	○	○	○
프로그램(SW)	관광/휴양 활동	지역축제	○	●	○	●
		문화/관광지 탐방	●	●	○	●
		레저/웰니스 관광	○	○	○	●
		워케이션	○	○	○	○
	창업·일자리 활동	로컬 창업	○	○	○	○
		일경험·인턴	○	○	○	○
		일자리 연계	○	○	○	○
	학습활동	현장견학·체험학습	○	○	○	○
		농촌유학·로컬유학	○	○	○	○
	지역살이 활동	핸들살기/살아보기	○	○	○	○
		귀농·귀촌 체험	○	○	○	○
		두지역살이	○	○	○	○
	커뮤니티 활동	주민 교류·네트워킹	○	○	○	○
		지역사회 참여활동	○	○	○	○
정책지원(서비스)	주거지원	주거공간 제공	●	●	●	●
		주거비 지원	●	●	●	●
		주택 수리 지원	●	△	●	●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	△	△	●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	△	△	△	△
		직업 역량 강화	△	△	△	△
		귀농·귀촌 교육	△	△	△	△
	의료·돌봄 지원	응급·돌봄 인프라 구축	●	●	△	●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	●	△	△
		복지 서비스 연계	△	△	△	△
	문화예술지원	예술인 정착지원	△	△	△	△
		지역문화·창작활동 지원	△	△	△	△
	정보제공	생활·정착정보 안내	△	△	△	△
		정보 플랫폼 운영	△	△	△	△
	커뮤니티 지원	주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	△	△	△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	△	△	△

*설문조사에서 각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점수를 바탕으로 표기(●: 4.0 이상, ○: 3.0 이상 ~ 4.0 미만, △: 3.0 미만)

출처: 연구진 작성

3. 소결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

- 단기 방문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전략 필요

인구감소지역 89개 중 약 44%는 관광·소비 목적으로 단기 방문하는 생활인구가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일시적 인구유입은 발생하나 이를 지속적 체류나 지역 내 경제활동으로 연결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회성 방문객·관광객 유치를 넘어 지역에서의 체류 지속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생활인구 및 지역 특성에 따른 정책 타깃 설정과 맞춤 전략 필요

연령, 유입경로, 체류패턴 등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획일적인 정책 접근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의 주요 연령대, 체류기간, 체류패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타깃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생활인구 유입·확대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고령층 중심형이면서 타시도 유입이 많은 지역은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노년층 맞춤형 프로그램 구상을 검토할 수 있다. 청년층 중심형이자 근거리 생활권에서 유입이 많은 지역의 경우, 청년 일자리와 정주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생활권 확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생활인구 유형별 특성 고려 필요

- 생활인구 유형별 고유한 특성과 수요를 지니며, 이에 기반한 생활거점 조성 필요

체류형 생활인구는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생활인구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 관광객을 위한 숙박·체험 공간, 체험형 인구를 위한 코워킹·코리빙 시설, 관계형 인구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주거, 장기형 인구를 위한 안정적 주거 및 정착 지원 등 유형별 차별화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방문형 생활인구는 관광·휴양 목적의 단기 체류자로, 호텔·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과 지역 축제·문화체험 등 관광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크다. 이들은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과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중시하며, 재방문 유도를 위한 차별화된 경험 제공이 핵심이다. 체험형 생활인구(단기형)는 워케이션, 한 달 살기 등 지역 탐색 목적의 단기 체류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원격근무가

가능한 코워킹·코리빙 공간, 공유주방 등 복합적 생활인프라를 필요로 하며, 지역의 일상적 삶을 경험 할 수 있는 환경을 선호한다. 관계형 생활인구(정기형)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반복적으로 찾는 집단으로, 세어하우스나 장기 임대 숙소, 창작·창업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 활용도가 높은 안정적 공간을 요구한다.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중시하며, 점진적 정착 가능성을 탐색하는 특성을 보인다. 장기형 생활인구는 귀농·귀촌 희망자나 정착을 준비하는 집단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안정적 거주공간은 물론 보육·교육·의료·창업지원 등 정착지원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이들은 단순한 거주를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통합되기를 희망한다.

[표 3-11] 체류형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거점 수요 및 정책과제

구분	생활거점 구성요소별 수요			정책과제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서비스)	
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인접 숙박시설 (호텔, 게스트하우스) • 응급 생활안전 등 의료·보건 시설 접근성 • 관광 편의시설(주차, 안내, 휴게, 상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레저·웰니스 체험 • 지역 특색 기반의 단기 체험형 관광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안전, 응급·돌봄 지원 서비스 • 여행·숙박 정보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형 생활거점 조성(숙박·편의·안전 기능 강화) • 재방문 유도형 이벤트·축제 콘텐츠 기획 • 지역 생활안전 및 의료돌봄 서비스 고도화
체험형 (단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스트하우스, 체험주택 등 임시체류형 주거 • 코워킹, 공유주방 등 체험형 인프라 • 지역 안내·정보공간, 커뮤니티 라운지 등 소통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달살기, 살아보기,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 지역탐색, 로컬유학, 문화참여 등 지역 체험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안내·정착 정보 제공 • 체험 참가자 대상 생활편의·의료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체험형 복합공간(숙박·소통·정보) 구축 • 지역 탐색·로컬유학형 체험프로그램 상시 운영 • 참여자 중심의 체험지원·생활 서비스 체계 마련
관계형 (정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택·관사, 임시숙소 등 근거리 주거시설 • 복합문화공간, 커뮤니티센터, 창업·학습공간 • 돌봄·상담공간 등 생활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교류형 커뮤니티, 네트워킹 활동 • 현장건학, 학습·창업연계 프로그램 • 위케이션, 두지역살이 등 정주전환형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일자리 및 창업 컨설팅 • 커뮤니티 활성화 및 정보 플랫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방문자를 위한 복합거점 (창업·문화·커뮤니티) 조성 • 지역 일자리·학습연계 프로그램 체계화 • 반복 방문자 커뮤니티 지원 및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장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거주를 위한 임대주택 • 창업지원공간, 회의실 등 업무공간 • 의료·보육·복지 등 생활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일경험, 인턴,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 • 지역사회 참여, 주민교류형 커뮤니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리모델링 등 주거비 지원 • 정착상담, 의료·복지·보육 등 통합 정착서비스 • 장기 근로자·이주희망자 대상 사회적 연결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 정주형 주거·업무 복합 공간 확충 • 창업 일자리·복지 연계형 정착지원 체계화 • 장기체류자 대상 커뮤니티·사회통합 지원 강화

출처: 연구진 작성

■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의 의의와 한계

본 분석은 생활인구 정책이 확대되는 시점에 지역별 정책 설계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생활인구 특성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생활인구 데이터가 아직 충분한 기간 축적되지 않았고, 분기별로 공개되는 데이터 간 차이가 있으며, 생활인구라는 특성상 계절별 특징이 다를 수 있어 데이터의 한계를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생활인구 통계 데이터를 참고하되, 지역 내 실제 생활인구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생활인구 만족도 등 질적 조사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양적·질적 데이터를 균형 있게 활용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 사례분석

1. 분석개요
2.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
3.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4. 경남 남해군
5. 종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분석개요

■ 분석목적

본 분석은 인구감소지역 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운영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거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공간, 프로그램, 정책지원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들 요소가 생활인구 유입과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공간 요소는 건축물 현황, 조성방식, 운영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행정적 이슈와 애로사항을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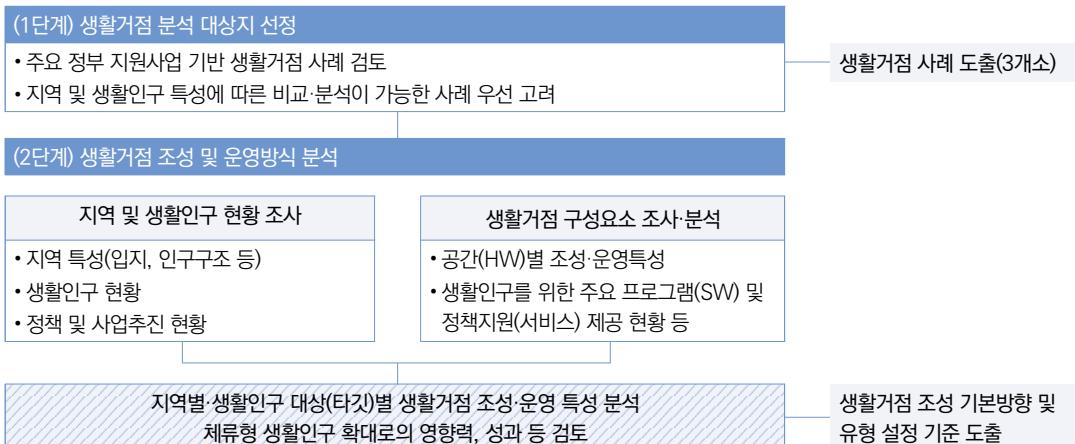
또한 생활거점 조성·운영의 성공요인 및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생활거점이 생활인구 대상(타깃)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검토하고, 체류에서 정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생활거점이 수행하는 역할을 분석하여 정책적 효과를 진단한다. 이를 통해 생활거점 조성의 기본방향 설정, 생활인구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생활거점 유형 도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 분석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된다.

첫째,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조사를 통해 생활거점이 조성된 지역의 입지 특성, 인구구조 및 생활인구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와 생활인구 특성을 진단한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정책 및 사업 추진현황을 검토하여 생활거점 조성과의 연계성을 파악한다.

둘째, 생활거점의 구성요소를 조사·분석한다. 공간 요소 측면에서는 생활거점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의 조성·운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요소 측면에서는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한 운영 프로그램과 정책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생활거점이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에 작용하는 구조를 분석하여 효과적인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림 4-1] 분석의 틀

출처: 연구진 작성

- 생활거점 사례 분석항목

분석의 틀은 생활거점 구성요소의 체계적 검토를 위해 지역 현황 분석과 생활거점 구성요소 분석으로 구분한다.

지역 현황 분석에서는 지역특성(입지, 생활인프라), 인구구조, 생활인구, 사회경제적 특성,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인구주택총조사와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하고,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정부 및 지자체 사업계획의 문헌조사를 병행하여 지역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다. 생활거점 구성요소는 공간요소와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공간요소는 조성특성과 운영특성으로 세분화한다. 조성특성에서는 시설현황, 조성방식, 기능, 추진 주체, 지역자원 연계를 파악하고, 운영특성에서는 운영방식, 지속가능성, 생활인구 유입 성과를 분석 한다.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요소에서는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성을 조사하고, 재정지원, 정보제공, 일자리 연계 등의 생활인구 지원정책을 검토하며, 이용률과 만족도 등의 운영 성과를 검토한다.

조사방법으로는 관련 자료와 선행연구 등의 문헌조사, 지자체 담당자와 운영자 및 이용자 대상 면담 조사, 생활거점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활용하였다.

[표 4-1] 생활거점 사례 분석항목

구분	분석항목	분석방법 및 활용 데이터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입지특성, 생활인프라) • 인구구조, 생활인구 현황, 사회경제적 특성 •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분석(인구주택총조사, 생활인구 통계데이터 등) • 문헌조사(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정부 및 지자체 사업계획 등)
생활거점 구성요소	공간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특성: 시설현황(위치, 규모, 공간구성), 조성방식(신축, 리모델링 등), 시설 기능(거주, 업무, 커뮤니티), 사업추진주체, 지역자원 연계(빈집 활용 등) • 운영특성: 운영방식(공공운영, 민간위탁 등), 지속가능성(재원조달, 유지보수), 생활인구 유입 성과 등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거점 내 운영 프로그램 • 생활인구 지원정책(재정지원, 정보제공, 일자리 연계) • 프로그램 운영 성과(이용률, 만족도 등)

출처: 연구진 작성

■ 분석 대상지 선정

• 선정 기준

분석 대상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고향을래, 지역활력타운,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 주요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생활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생활인구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춘 지자체를 우선 검토하였다. 둘째, 일정기간 이상의 사업운영 실적을 보유하고 자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가능한 지역을 선정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대부분의 생활거점 관련 사업이 2023년 이후 시작되어 준공사례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자체 지방비 사업인 빈집 리모델링 사업, 생활인구 유치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앞서 분석한 생활인구 유형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 선정 과정

대상지는 4단계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정부 지원사업 선정 지역과 지자체 생활인구 정책 현황을 기초로 예비 후보지를 도출하였고, 2단계에서는 운영 실적, 자료 확보 가능성, 접근성 등 실증적 조건을 검토하여 실제 조사가 가능한 지역을 선별하였다. 3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적합한 사례를 선별하였다. 4단계에서는 앞선 분석에서 검토한 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 등 생활인구 유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였다.

• 선정 결과

최종적으로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경남 남해군을 분석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은 각기 다른 지역 특성과 생활인구 유형을 보여주며,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과 자체 사업을 연계하여 생활거점을 조성·운영하고 있어 다각적 시사점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 대상지 개요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은 강진군 동북단의 농촌지역으로, 전라병영성과 하멜기념관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과 강진 푸소(Feeling-Up Stress-Off, FUSO)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체류형 생활인구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수료생의 높은 정착률과 넥스트로컬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 정착 사례는 체류에서 정주로 이어지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은 부산역 인근 구릉지에 위치한 도시재생사업지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으로 청년창업과 관광을 연계한 생활거점을 조성하였다. 2021년 청년마을 사업 선정 이후 이바구캠프와 이바구플랫폼을 통해 청년 창업공간과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쿠공공플랜이 중간지원 조직 역할을 수행하여 약 10개 청년창업팀의 정착을 견인하였다.

경남 남해군은 경상남도 남단의 도서지역으로, 민간 및 주민공동체 주도의 자생적 생활거점 조성이 특징이다. 돌창고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네트워크, 두모마을의 농촌체험, 소도읍의 워케이션 공간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운영하는 생활거점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청년 60-70명의 연쇄적 이주와 정

작은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의 가능성은 보여주는 사례이다.

103

[표 4-2] 분석 대상지 개요

사례	위치	지역	생활거점 특징	주요 시설	추진사업	생활인구 기본 조례	생활인구 특성*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	강진군 병영면 한골목길 21 일원	농촌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마을호텔, 체험공간, 커뮤니티 공간 조성 • 청년 창작자 체류 및 지역정착을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푸소(FUSO) 농촌 민박을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푸소(농가 숙박) • 4도3촌 병영스테이 2개소 • 돌멩이스테이 (청년 체류공간) • 성하객잔(청년마 을 공유주거) • 병영양조장 (창업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국토부)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행안부) •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행안부) • 빈집재생사업(농식품 부) •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전남도) • 강진푸소, 강진품애 만원주택(강진군) • 넥스트로컬(서울시) 	미제정	고령층 중심형, 타시도 유입형, 단기 체류형
부산 동구 이바구마 을	동구 초량동 994-53 8 일원	도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복도로 빈집을 활용한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 • 관광과 창업을 연계한 재생공간 운영 • 중간지원조직 (㈔공공플랜) 중심의 체계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스트하우스 8개소 • 이바구플랫폼 (창업공간 8개소) • 168더데크 (전망대) • 이바구벤처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복도로 로네상스(부산시) • 도시재생사업(국토부)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행안부) •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부산시) 	제정	청년층 중심형, 근거리 생활권 유입형, 중장기 체류형
경남 남해군	남해군 삼동면, 상주면 일원	농어촌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주도의 문화예술 생활거점 조성 • 돌창고를 중심으로 한 청년 네트워크 형성 • 워케이션과 농촌 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체류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창고(갤러리, 카페, 스튜디오) • 두모마을(팜프라 촌, 서울농장) • 소도읍 남해 (워케이션 공간) • 남해청년센터 바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재생사업(농식품 부) • 태어났으면 남해살이(남해군) • 지역별 상생교류 거점 플랫폼 사업(서울시) 	제정	청년층 중심, 동일시도 비인접 유입형, 단기 방문형

*3장 1절의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특성 분석(군집분석)' 결과

출처: 연구진 작성

2.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 지역특성

- 강진군 병영마을은 도심지역에서 떨어진 외곽지역 입지

강진군은 전라남도 서남부에 위치하며, 병영면은 강진군의 동북단에 자리하고 있다. 병영면은 면적 26.99㎢로 강진읍에서 상대적으로 떨어진 외곽지역에 입지하며, 인구 1,487명, 총 924가구가 거주하는 전형적인 저밀도 농촌지역이다.

병영면은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성동리 은행나무 등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하여 문화관광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자원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림 4-2]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권 현황

출처: 강진군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인구현황

- 최근 5년간 강진군 인구는 지속 감소하며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

최근 5년간 강진군의 인구는 2020년 34,597명에서 2024년 32,189명으로 2,408명(7.0%) 감소하여 연평균 1.8%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0-9세 인구가 5년간 23.2% 감소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평균 6.4%의 감소율은 지역 교육 인프라 유지와 장기적 인구 재생산에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10-49세 모든 연령대에서 16% 이상의 감소율을 보이며,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핵심인 20-40대가 연평균 4.5% 내외로 감소하고 있어 지역 경제활동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반면 60-69세는 7.7%, 80-89세는 3.7%, 90세 이상은 23.4% 증가하여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4.9%에 달해 초고령사회를 넘어서고 있으며,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지속 감소하여 인구구조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표 4-3] 강진군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연령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변화율 ('20-'24)	연평균 변화율
0-9세	1,908	1,706	1,630	1,540	1,466	-23.20%	-6.40%
10-19세	2,737	2,575	2,465	2,375	2,276	-16.80%	-4.50%
20-29세	2,697	2,531	2,410	2,344	2,256	-16.30%	-4.40%
30-39세	2,644	2,431	2,338	2,264	2,196	-16.90%	-4.50%
40-49세	4,180	3,852	3,705	3,554	3,434	-17.80%	-4.80%
50-59세	6,026	5,856	5,708	5,577	5,452	-9.50%	-2.50%
60-69세	5,603	5,760	5,785	5,885	6,037	7.70%	1.90%
70-79세	5,586	5,343	5,147	4,947	4,827	-13.60%	-3.60%
80-89세	2,570	2,587	2,604	2,656	2,665	3.70%	0.90%
90세 이상	337	391	417	434	416	23.40%	5.40%
100세 이상	29	10	12	12	11	-62.10%	-21.50%
합계	34,597	33,753	33,177	32,722	32,189	-7.00%	-1.80%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 병영면은 강진군 내에서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으로 10년간 498명(25.1%) 감소

병영면의 인구 감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 감소율이 강진군 전체 감소율(16.9%)보다 8.2%p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병영면의 인구 유출이 군 평균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병영면의 연평균 인구 감소율은 3.14%로 강진군 전체 평균(2.04%)보다 1.1%p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병영면이 강진군 내에서도 인구 유출이 심각한 취약 지역임을 의미한다.

특히 2017-2018년 기간에 병영면은 6.5%, 5.1%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했으며, 2021년에도 4.4%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는 등 특정 시기에 집중적인 인구 유출이 발생하였다. 병영면이 강진군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5년 5.12%에서 2024년 4.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병영면의 인구 감소 속도가 군 평균보다 빠른 상황으로 지역 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병영면 인구는 2030년 약 1,250명, 2035년 약 1,050명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4-4] 강진군 및 병영면 인구 현황 비교

구분	강진군			병영면		
	인구(명)	증감(명)	증감률	인구(명)	증감(명)	증감률
2024년	32,189	-533	-1.6%	1,487	-35	-2.3%
2023년	32,722	-455	-1.4%	1,522	-39	-2.5%
2022년	33,177	-576	-1.7%	1,561	-34	-2.1%
2021년	33,753	-844	-2.4%	1,595	-74	-4.4%
2020년	34,597	-689	-2.0%	1,669	-28	-1.6%
2019년	35,286	-724	-2.4%	1,697	-11	-0.6%
2018년	36,144	-885	-2.0%	1,708	-92	-5.1%
2017년	36,868	-1,005	-2.3%	1,800	-126	-6.5%
2016년	37,753	-	-2.6%	1,926	-59	-3.0%
2015년	38,758	-		1,985	-	-
평균	-	-	2.04%	-	-	3.14%

출처: 강진군(2023), 강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p.21

■ 생활인구 현황

- 체류인구 규모 및 추이

2024년 기준 강진군의 체류인구는 연초 94,987명에서 연말 103,333명으로 8.8% 증가하여 연평균 13.0만 명을 기록했다. 체류인구배수는 2.9배에서 3.2배 수준으로 등록인구(3.3만명) 대비 유동인구가 전남 평균보다 낮은 지역이며, 타시도 거주자 비중이 연평균 62.0%로 전남 타지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인근 지역 중심의 유입 특성을 보인다.

[표 4-5] 강진군 생활인구 규모 및 구성

구분	1월	4월	7월	10월	12월	연평균
체류인구(명)	94,987	226,655	116,325	143,332	103,333	137,000
등록인구(명)	33,273	33,127	33,024	32,859	32,777	33,012
체류인구배수	2.9배	6.8배	3.5배	4.4배	3.2배	4.2배
타시도 거주자 비중	58.6%	67.3%	57.7%	62.3%	61.7%	62.0%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 체류기간별 인구 분포

1일 체류 인구가 전체의 5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월 5.2만명에서 4월 15.9만명으로 최대 3배 이상 증가하는 계절적 변동성을 보이며, 2~7일 체류는 36.0%, 8일 이상 장기 체류는 8.7%로 단기 체류가 전체의 91% 이상을 차지하여 일일 관광 및 방문 목적의 유동인구 특성이 확인된다.

[표 4-6] 강진군 생활인구의 체류기간별 규모

체류기간	1월	4월	7월	10월	12월	구성비(평균)
1일	51,567명	159,233명	61,355명	81,673명	52,995명	55.3%
2~7일	33,340명	57,480명	45,128명	51,059명	40,049명	36.0%
8일 이상	10,080명	9,946명	9,841명	10,602명	10,288명	8.7%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 숙박기간별 인구 분포

1일 숙박 인구가 2.6만명 수준으로 계절별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2~3일 숙박 인구는 봄철(4월) 7천명으로 평시 대비 2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 21일 이상 장기 숙박은 연중 2.6천명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전체적으로 봄철 단기 숙박 수요가 집중되는 관광지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7] 강진군 생활인구의 숙박기간별 분포

숙박기간	1월	4월	7월	10월	12월	변화추이
1일	15,590명	29,472명	21,209명	26,512명	19,421명	변동성 높음
2~3일	2,905명	4,660명	8,650명	8,820명	7,664명	여름 증가
4~20일	4,144명	3,632명	5,645명	5,309명	5,449명	안정적
21일 이상	2,827명	2,655명	2,671명	2,729명	2,656명	안정적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 체류 특성 지표

평균 체류일수는 연초 3.6일에서 연말 3.6일로 변화는 적으며, 평균 체류시간은 13.1시간에서 12.7시간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평균 숙박일수는 3.2~5.2일 범위에서 변동성을 보이며, 봄철에 상대적으로 짧고 여름철에 길어지는 계절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8] 강진군 생활인구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지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추이
평균 체류일수	3.6일 → 2.8일	2.2일 → 2.9일	3.3일 → 3.1일	3.0일 → 3.6일	안정적
평균 체류시간	13.1시간 → 12.0시간	10.8시간 → 12.0시간	12.5시간 → 12.5시간	11.9시간 → 12.7시간	안정적
평균 숙박일수	5.2일 → 4.2일	3.6일 → 4.0일	4.3일 → 3.8일	3.9일 → 4.5일	변동성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 정책추진 배경⁵⁹⁾

강진군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개념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지자체로, 2025년을 생활인구 확대 원년(元年)으로 선포하며 관광·축제 등으로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강진군 인구는 약 3만 3천 명 수준으로 고령화와 청년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 지역에 속하며, 「인구감소지역법」 시행 이후 행정안전부 주도의 생활인구 개념 도입과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인구정책과를 신설하고 조직개편(5국 체제)을 통해 인구유입 전담 기능을 강화했으며, 주요 정책 방향은 관광 및 단기체류 인구 증대, 청년·귀촌 등 정주 인구 유입 촉진, 출산장려 및 정착 지원 강화의 세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59) 강진군 인구정책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3.17., 2025.04.16.)

• 생활인구 대상별 주요 정책

강진군 생활인구 정책의 대상은 도시민 귀농·귀촌 희망자, 청년층(창업·취업 희망자), 문화예술인, 장기체류 관광객, 예비 이주자 등이며, 각 집단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는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를 운영하여 수료생 68명 중 48명이 정착(약 70% 정착률)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공과 영농 정착 지원금 및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에게는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월 최대 25만원을 3년간 지원하며, 서울시와 협력하는 넥스트로컬 청년창업 사업을 통해 2024년 6팀 11명을 지원하였다.

문화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인 레지던시 '강진, 살자'를 운영하고 총사업비 10억원 규모의 음악도시 강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은퇴 음악인 등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체류형 방문객을 위해서는 89개 농가가 참여하여 누적 6만여 명이 방문한 푸소(FUSO) 체험과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운영하며, 예비 이주자에게는 2~6개월간 임시 주거를 제공하고 1인당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강진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4-9] 강진군 생활인구 대상별 정책 및 성과

대상	주요 정책 및 성과
귀농·귀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운영 : 수료생 68명 중 48명 정착(약 70% 정착률)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공 영농 정착 지원금 및 교육 제공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 월 최대 25만원, 3년간 지원 넥스트로컬 : 청년창업 유치사업(서울시 협력)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2024년 6팀 11명 참여)
문화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레지던시 '강진, 살자' 운영 '음악도시 강진' 프로젝트(총사업비 10억원) 지역 문화인력 양성(강진문화 히어로) 은퇴 음악인 등의 정착 지원
체류형 방문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푸소(FUSO) 체험 : 89개 농가 참여, 누적 6만여 명 방문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 숙박·교통비 지원, 완주 시 최대 8만원/일 숙박비 제공
예비 이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진에서 살아보기: 2~6개월간 임시 주거 제공, 연수지원비 지급(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귀농귀촌 박람회 참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출처: 강진군(2023),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2025), 강진군 인구정책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2025.03.17., 2025.04.16.)을 참고하여 작성

• 분야별 지원 정책

주거지원 분야에서는 2023년부터 시작된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정책이 대표적으로 월 1만원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며 경쟁률 22:1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2025년 4월 현재까지 60세대(150명)가 전입하였다. 전입 청년(19~45세)을 대상으로 월 최대 25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2025년부터 시행하였다.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는 최대 6개월간 교육과 기숙형 임시주거를 제공하여 2019~2023년 51세대 중 31세대가 정착(정착률 70%)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자리지원 분야에서는 2개월 동안 청년창업 캠프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넥스트로컬 사업이 추진되었고 2024년 6팀 11명이 참여하였다. 의료·돌봄지원 측면에서는 0~7세 아동에게 매월 6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강진형 육아수당을 도입(2022년)하여 출생아가 93명에서 170명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지역살이 활동으로는 여행비의 50%를 지원하는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을 통해 2023년 관광객 265만 명(전년 대비 25% 증가)을 유치했으며,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6만명이 참여하고 농가소득 53 억원을 창출한 푸소(FUSO) 농촌체험, 임시주택 제공과 1인당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강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4-10] 강진군 인구 유입을 위한 주요 정책 내용

구분	정책/사업명	주요 대상	내용 및 지원사항	주요성과 및 특징
주거지원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예비 귀촌인, 도시민 가족	• 폐가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 (5~7년 거주) • 월 임대료 1만원	• 22가구 모집에 경쟁률 10~17:1 • 2023년까지 60세대(150명) 전입
	만원주택 건립	청년·신혼부부	• 군 건설 소형주택 임대 • 보증금 0원, 월 1만원	• 2024년 착수, 청년 정착 주거모델로 기대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전입 청년 (19~45세)	• 무주택 청년 가구 임대료 지원 • 월 최대 25만원, 최대 3년	• 2025년 본격 시행, 청년 정착 비용 경감 효과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귀농희망 도시민	• 교육 + 기숙형 임시주거 (최대 6개월) • 영농실습 및 멘토링 제공	• 2019~2023년 51세대 중 31세대 정착 (정착률 70%)
일자리 지원	네스트로컬 청년창업 캠프	수도권 청년 창업팀	• 2개월 현지캠프 → 사업화 지원 • 조사비 100만원 지급	• 6팀 11명 참여 (2024년) • 청년 1팀 레스토랑 개업(월세 1만원)
의료· 돌봄지원	강진형 육아수당	영유아를 둔 가정	• 0~7세 아동 매월 60만원 지급 (84개월간, 지역화폐)	• 2022년 도입 후 출생아 93→154→170명 증가 • 아동 1인당 총 5,040만원 지원
지역살이 활동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관광객 (전 연령)	• 여행비의 50% 지원 • 개인 최대 10만원, 팀 20만원 상품권 환급	• 2023년 관광객 265만명(+25% 증가) • 관내 1,812개 업체 소득 증대
	푸소(FUSO) 농촌체험	도시민 여행객 (장기체류)	• 농가 민박 체험 (FUSO, Feeling-Up, Stress-Off) • 농촌생활 힐링 체험	• 2015~2023 누적 6만명 참여 • 농가소득 53억 원 창출
	강진에서 한 달 살아보기	귀촌 준비자, 예비 이주민	• 임시주택 제공 + 연수비 지원 • 최대 2~6개월 체류, 1인당 최대 960만원 지원	• 2024년 시범 운영 • 지자체-민간(플랫폼) 협업 모델

출처: 강진군(2025)을 참고하여 작성

• 정책실행 주체

강진군은 2022년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인구정책, 주거지원, 일자리청년 등 생활인구 확대 및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인구 5만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군수 직속 인구정책 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전라남도의 전남형 만원주택, 수당보조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행안부, 농식품부, 국토부, 문체부 등 정부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책실행주체 중 공공기관 및 단체로서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반값여행, FUSO 사업에 대한 실무를 맡아 민관 협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사관학교 운영과 귀농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귀농귀촌 지원센터(귀농인협의회)와 연계해 멘토-멘티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외부 협력체계로는 서울시와의 협력사업(네스트로컬)이 수도권-지방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SK텔레콤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생활인구 분석 지원을 받고 있다.

2) 생활거점 조성·운영 특성

■ 공간요소

강진군 병영면의 생활거점 공간요소 중 숙박·주거시설은 총 8개소로, 강진푸소, 4도3촌 병영스테이,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조성되었다.

- 강진푸소(FUSO)

강진푸소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강진산들농원, 토가펜션, 행복을 찾아서, 토담마실 등 4개소로, 모두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다. 이들 시설은 강진푸소협동조합 가입 농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방문형·체험형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강진산들농원은 방 2개로 4-10인 수용이 가능하며, 토가펜션은 방 3개로 최대 16인까지 수용 가능하다. 행복을 찾아서는 방 2개로 3-6인, 토담마실은 독채 형태로 4-6인이 이용할 수 있다.

- 4도3촌 병영스테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4도3촌 병영스테이는 게스트하우스 로당로당과 병영스테이 등 2개소이다. 이들은 빙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되었으며, 강진군에서 체류할 청년을 공모·모집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로당로당은 1987년에 사용승인된 단독주택을 활용하였으며, 병영스테이는 1947년 건축물을 재활용한 사례로 체험형·관계형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 돌멩이 스테이

돌멩이 스테이는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 1990년에 지어진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만들어졌다.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이 운영하며, 강진에서 체류할 청년 프리랜서를 모집하여 체류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방 2개로 2-5인이 이용 가능하며, 체험형·관계형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 성하객잔

성하객잔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 2024년에 균유지를 활용하여 신축된 건물이다. 주식회사 후일담이 운영하며, 청년마을 사업 추진 이후 지역에서 체류할 공간이 없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업무·체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8인이 이용 가능하며, 장기형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체류·업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4-11]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의 공간요소 중 숙박·주거시설

시설	건축물 현황	조성방식	운영방식	대상 생활인구
강진푸소(FUSO)	기존 주택 활용	리모델링	주민 운영 -강진푸소협동조합에 가입한 농가 대상으로	방문형 체험형
강진산들농원 / 방2 / 4인~10인 (전남 강진군 병영면 병영성로 82-22)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토지 151.55평, 주택 29.83평		강진군에서 운영 자격 인정	
토가펜션 / 방3 / 2인~16인 (전남 강진군 병영면 금강로 1028)	생산관리지역, 단독주택 토지 454.36평, 주택 47.91평			
행복을 찾아서 / 방2 / 3인~6인 (전남 강진군 병영면 동삼인길 52)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토지 519.09평, 주택 67.16평			
토담마실 / 독채(방1) / 4인~6인 (전남 강진군 병영면 중가길 14-7)	계획관리지역, 단독주택 토지 261.06평, 주택 40.54평			

시설	건축물 현황	조성방식	운영방식	대상 생활인구
4도3촌 병영스테이	빈집 활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토지 81.07평, 주택 21.18평	빈집 리모델링	강진군 운영 -강진군에서 체류할 청년 등을 모집하여 운영	체험형 관계형
게스트하우스 로당로당 (전남 강진군 병영면 한골목길 34-7)	일반상업지역, 단독주택 토지 113.14평, 주택 31.76평			
병영스테이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236)				
돌멩이 스테이 / 방2 / 2인~5인 (전남 강진군 병영면 지로리 453)	빈집 활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 단독주택 토지 665.5평, 주택 36.65평	빈집 리모델링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운영 -지역에서 활동할 청년(프리랜서)을 모집하여 체류공간 제공	체험형 관계형
성하객잔 / 8인 (전남 강진군 병영면 성남리 7-1)	군유지 활용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거기타 토지 150.95평, 주택1 112.98평, 주택: 50.64평	신축	주식회사 후일담 운영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체류·업무공간으로 활용	장기형

출처: 강진군 인구정책팀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2025.03.17., 2025.04.16.),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s://www.eais.go.kr/>, 검색일: 2025.08.20.)를 참고하여 작성

이러한 숙박·주거시설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식과 대상을 설정하여 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인구 유치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진푸소(FUSO)

4도3촌 스테이



돌멩이스테이

성하객잔

[그림 4-4]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 중 숙박·주거시설 전경

출처: 연구진 촬영

■ 공간요소(숙박·주거시설 외)

강진군 병영마을의 생활거점은 숙박·주거시설 외에 업무·창업, 생활편의, 커뮤니티, 학습·체험, 복지 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다. 지역 공공시설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민간상점 등이 생활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업무·창업 시설

업무·창업시설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병영면사무소가 회의실·세미나실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병영양조장 내 창업지원공간과 창작·제작공간, 병영오일장 내 청년창업 공간이 조성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 생활편의 시설

생활편의시설로는 CU강진병영점과 하나로마트가 주요 판매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희정슈퍼, 삼성슈퍼, 병영슈퍼 등의 민간 소매점과 병영5일장이 함께 지역주민들의 생필품 구매와 전통적인 장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커뮤니티 시설

커뮤니티 시설로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와 병영면사무소가 지역안내, 정보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마을회관과 함께 주민들 간의 소통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학습·체험 시설

학습·체험시설로는 병영초등학교, 병영중학교, 병영상업고등학교가 지역의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병영북카페(병영 농촌중심지 활성화지원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 복지시설

복지시설로는 병영보건지소가 운영되어 주민들의 기초적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생활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4-12]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의 공간요소(숙박·주거시설 외)

분류	세부항목	시설명	비고
업무·창업시설	회의실·세미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병영면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조성 • 공공시설
	창업지원공간(창업보육실, 창업카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영양조장 • 병영오일장 청년 창업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조성 • 도시재생사업 조성
	창작·제작공간(공동작업장, 스튜디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영양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조성
생활편의시설	판매시설(편의점, 지역상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강진병영점, 하나로마트 • 희정슈퍼, 삼성슈퍼, 병영슈퍼 • 병영5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시설
커뮤니티시설	지역안내·정보공간 (관계안내소, 안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 병영면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사업 조성 • 공공시설
	소통공간(커뮤니티 라운지, 소모임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회관 	

분류	세부항목	시설명	비고
학습·체험시설	문화교육 공간	• 병영초등학교 • 병영중학교 • 병영상업고등학교	• 공공시설
문화시설	복합문화공간(서점, 북카페, 팝업공간 등이 모여있는 장소)	• 병영북카페(병영 농촌중심지 활성화지원센터)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시설	건강·보건시설(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등)	• 병영보건지소	• 공공시설

출처: 강진군(2023),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2025), 강진군(2025)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프로그램 요소

강진군 병영마을에서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휴양 프로그램부터 청년창업 지원, 교육활동, 지역 정착 체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관광·휴양 분야에서는 불금불파와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같은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불금불파는 지역 먹거리인 돼지불고기를 주제로 한 축제이며, 전라병영성축제는 병영성에서 개최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성돌리은행나무, 한골목 옛 담장 등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탐방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돌맹이스테이에서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인 스테이 돌담빌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창업·일자리 활동으로는 넥스트로컬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울 청년들의 지역자원 발굴과 창업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청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강진에서 로컬 창업, 일경험, 인턴, 일자리 연계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유입을 위한 주요한 프로그램으로 기능하고 있다.

학습활동 부문에서는 병영초등학교에서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인 '하멜탐험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가족체류형 유학 프로그램으로 지역 탐방 체험, 생태체험, 장터활동 등을 제공하여 도시 가족들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역살이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기간과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푸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3박4일씩 두 번의 일정을 강진군이 지원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3개월간 농촌 생활, 일자리 체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을 수행하는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이다. '4도3촌 병영스테이'는 강진살이를 희망하는 청년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두지역살이를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달살기부터 3개월간의 농촌생활 체험까지 단계적인 지역정착 경험을 제공한다.

커뮤니티 활동으로는 울산시 등 타지역 주민들과의 교류회를 개최하는 영호남 교류회가 운영되어 주민 교류와 네트워킹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체험형, 체류형, 정착형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자원과 생활인프라를 활용하여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표 4-13] 강진군 병영마을 생활거점의 프로그램 요소

분류	세부항목	프로그램명	비고
관광·휴양	지역축제	• 불금불파 • 강진 전라병영성축제	• 지역 먹거리(돼지불고기) 축제 • 병영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성돌리은행나무, 한골목 옛 담장	• 지역 문화관광 자원
	워케이션	스테이 돌담빌리지	• 돌맹이스테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창업·일자리 활동	로컬 창업, 일경험·인턴, 일자리 연계	넥스트로컬 청년창업 캠프 (서울시)	•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서울 청년의 지역자원 발굴과 창업 모델화 과정 지원 프로그램
학습활동	농촌유학·로컬유학	전남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하멜탐험대)	• 병영초에서 개최하는 가족체류형 유학 프로그램으로 지역 탐방 체험, 생태체험, 장터활동 등 수행
지역살이	한달살기/살아보기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 푸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3박4일+3박4일) 일정에 대해 강진군에서 지원
	귀농·귀촌 체험	농촌에서 살아보기	• 3개월간 농촌 생활, 일자리 체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탐방 수행
	두지역살이	4도3촌 병영스테이	• 강진살이를 희망하는 청년, 은퇴자 대상 강진살이를 경험하게 하는 프로그램
커뮤니티활동	주민 교류·네트워킹	영호남 교류회	• 울산시 타지역 주민들과의 교류회 개최

출처: 강진군(2023),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2025), 강진군(2025)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정책지원 요소

강진군 병영마을에서는 주거, 일자리, 의료·돌봄 등 3개 영역에서 청년층과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지원 분야에서는 세 가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만원주택 정책을 통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으로 임대할 수 있는 군 건설 소형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월 최대 25만원까지 3년간 임대료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폐가를 개조한 후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5~7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도 넥스트로컬 청년창업 캠프를 언급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개월간의 현지캠프를 진행하고, 이후 사업화 지원 과정에서 조사비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과 청년 유입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또한 창업 컨설팅을 통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며, 실질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돌봄 지원 부문에서는 강진형 육아수당이 핵심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0~7세 아동에게 84개 월간 매월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 육아 지원책은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복합적 효과를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지원 요소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육아 지원으로 가족 단위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과 육아 가구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 다양한 연령층과 가족 구성의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통합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4] 강진군 병영면 생활거점의 정책지원 요소

분류	세부항목	정책명	비고
주거지원	주거공간 제공	만월주택	군 건설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0원, 월 1만원)
	주거비 지원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	무주택 청년 가구 임대료 지원(월 최대 25만원, 최대 3년)
	주택 수리 지원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폐가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5~7년 거주), 월 임대료 1만원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	넥스트로컬 청년창업 캠프 (서울시)	서울 청년 창업팀 대상으로 2개월 현지캠프 진행 후 사업화 과정의 조사비 지원
의료·돌봄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강진형 육아수당	0~7세 아동 매월 60만원 지급(84개월간, 지역화폐)

출처: 강진군(2023),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2025), 강진군(2025)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3)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정책 사례⁶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4도3촌 병영스테이와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돌멩이 스테이는 넥스트로컬로 병영을 찾은 청년 예비창업가나 프리랜서들의 체류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생활인구로서 병영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동안 지역 내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청년들은 체류하면서 지역 주거를 알아보거나 창업을 위한 사업기획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 주체들의 도움으로 창업·정착 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넥스트로컬 참여한 청년 1팀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조성된 병영오일장 내 청년창업공간에 입주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레스토랑을 개업하며 지역에 정착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이후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으로 성하객잔이 조성되면서 지역체류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장기 체류가 가능한 숙박시설이 제공되면서 지역에 정착하여 활동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특히 공유주거 방식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도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여 정착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체류형 귀농사관학교를 통한 정착 사례도 두드러진다. 2019-2023년 운영기간 동안 수료생 68명 중 48명이 정착하여 약 70%의 높은 정착률을 보였다. 51세대 중 31세대가 실제 정착으로 이어졌으며, 이들은 최대 6개월간의 교육과 기숙형 임시주거를 거쳐 지역에 안착했다.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2025년까지 60세대(150명)가 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23년 정착 추진 이후 꾸준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역 체류 및 정착에 영향을 미친 요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월 1만원 만월주택과 빈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청년 주거비 월 25만원 지원(3년간)이 초기 정착 비용을 낮출 수 있었다. 강진형 육아수당(0~7세 월 60만원)은 자녀가 있는 가구 정착의 인센티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0) 강진군 병영마을 정착 청년, 돌멩이스테이(편들) 및 성하객잔(어나더랜드) 운영주체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4.16.)

역사문화자원도 중요한 유입 요인이었다.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등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스토리텔링이 관광객 유입에 기여하였으며, 과거 상권 중심지로서의 넓은 도로와 주택 구조가 생활거점 조성에 유리한 물리적 기반이 되었다.

이 밖에도 주민의 포용성도 정착 성공의 핵심이었다. 역사적으로 상인마을이었던 병영마을의 개방적 분위기와 기존 정착자들의 멘토링, 귀농귀촌인협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새로운 이주민들의 적응을 도왔다. 면사무소, 보건지소, 편의점, 5일장 등 생활편의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위치한 점도 가족 단위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강진군의 자체 사업인 강진품애(강진품애 청년수당, 강진품애 주거지원 등)와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맞물려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농식품부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 등 중앙부처사업 지속 발굴하여 후속사업 추진하여 인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체계적 추진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을 선제적으로 발굴·활용하여 생활인구를 위한 체류공간과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은 병영면에 산재되어 있던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외부 인지도를 향상시켰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체류-관계형성-정착'의 단계적 주거지원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 이주민들은 먼저 짧은 기간의 지역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강진의 생활을 경험하고, 4도3촌 병영스테이나 돌멩이 스테이 같은 체류공간에서 1~3개월간 머물며 지역 적응도를 높인 뒤, 빈집재생 임대주택인 만원주택 등의 지원정책을 활용하며 안정적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양한 체류방식에 대응하는 주거지원체계는 생활인구에게 체류경험과 지역사회를 알아가는 기회를 제공하여 정착 실패의 위험을 줄이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정착 의지를 가진 주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반면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제약요인이었다. 농업 외 산업 기반 부족으로 청년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고, 창업 후에도 협소한 지역 소비시장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웠다. 또한 미흡한 대중교통 인프라로 자가용 의존도가 높아 초기 정착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외에도 정책사업의 불확실성도 문제였다. 지자체장 교체 시 정책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청년 창업공간의 짧은 임대기간(1~2년)으로 장기 계획수립이 어려웠다. 빈집 확보도 복잡한 명의관계와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로 주민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생활인프라 부족 문제는 더욱 큰 과제로 고려되었다. 의료시설의 경우 병영보건지소만 운영되고 있어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근 도시까지 이동해야 했다. 이는 특히 영유아를 둔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강진형 육아수당(월 60만원)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교육 인프라 역시 병영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규모가 작아 또래 집단 형성이 어려웠고, 이로 인해 많은 가족들이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재이주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⁶¹⁾.

■ 향후 개선과제

강진군 병영마을이 체류형 생활인구의 성공적인 정착 모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과제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기초생활인프라 및 편의시설 개선

의료·교육·육아·문화 인프라의 확충 또는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소아과와 산부인과 등 핵심 의료시설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하며, 공동육아나눔터,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이 요구된다. 빨래방, 공유주방 등 생활편의시설과 북카페, 소규모 공연장 등 문화공간을 확충하여 정착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 중간 거주 형태의 주거모델 개발

단기 체험(1주일 이내)과 지역 이주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단기 임대, 중기 거주 프로그램의 체계적 확대가 필요하다. 월 단위로 유연하게 연장 가능한 거주 옵션을 마련하여 지역 체류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공유주거로 주거비 부담은 낮추면서 커뮤니티 형성은 촉진하고, 독립주거형 옵션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호를 수용한다. 체류 기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일자리 연계, 주민 네트워크 구축, 정착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등 생활인구 및 이주·정착 확대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 체류형 숙박시설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현재 병영면의 대부분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숙박업 운영에 제약이 크다. 상업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직접 운영주체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조건도 까다롭다.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핵심시설이 숙박·주거시설인 만큼, 인구감소지역에서 효과적인 생활거점 조성·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유연한 적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세대별·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청년층에는 창업과 커리어 개발을, 중장년층에는 귀농·귀촌 교육을, 은퇴자에는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 단위에 자녀 교육과 가족 문화활동을, 1인 가구는 네트워킹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구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1) 강진군 병영마을 정착 청년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4.16.)

(사례1) 전남 강진군 병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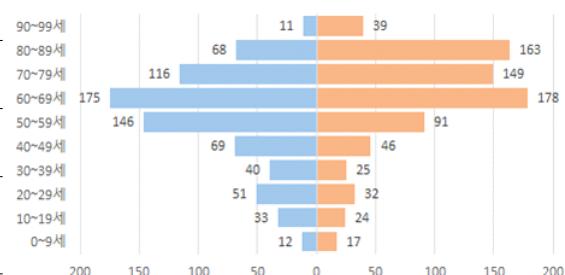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 개요

구분	내용
입지 특성	· 농촌지역, 중심지에서 차량 30분 거리, 관광지 인접 · 병영면은 반경 1km내 남성마을, 성남마을이 위치
정주 인구	· 강진군 32,189명, 병영면 1,487명(2024)
생활 인구	· 149,452명(2024.09.), 전남 내 15위/16개 · 고령층 중심, 동일시도 비인접 유입, 단기체류형
지역 이슈	· 빈집 증가, 일자리·주거 부족으로 청년정착 감소 · 광주-목포-여수, 순천 중간에서 상대적 기반시설 소외

■ 인구구조 특성(인구피라미드)

- 대상지(병영면) 인구구조: 총 1,485명, 남성 721명, 여성 764명 / 60세 이상 899명



■ 인구감소지역 진단 및 추진사업 현황

구분	내용
MBTI 진단	· 현재 (As-is): INTP, 외부 관광객이 많고 지역 경제 영향이 큼. 장기 거주 주민이 많고, 우수한 자연 환경 보유, 일정 시기 방문객이 집중되나 도시·교통 편의성은 약함 · 희망 (To-be): ESTJ, 외부인구 유입과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는 정착지역 희망, 생활편의 강화 필요
주요 사업	· 도시재생, 농촌빈집재생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2. 생활거점 현황

■ 공간요소

구분	내용
숙박 주거 시설	· (강진푸조) 기존 주택 활용, 1박2일~6박7일 방문형 · (마을호텔) 빈집 재생, 4도3촌 병영스테이, 돌멩이 스테이 등 빈집 재생, 체험형·관계형 대상 · (성하객잔) 신축, 2주 체류형, 공유주거
업무·창업 시설	· (창업공간) 창고를 리모델링 한 브루어리, 소품샵, 병영 5일장 내 인테리어 지원으로 청년창업 공간 지원

■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요소

구분	내용
프로그램	· (관광/휴양)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 · (지역살이) 푸소(FUSO) 농촌체험, 강진에서 한달 살아보기
정책 지원	· (주거지원) 강진풀애(빈집 리모델링), 만원주택(임대료), 청년 주거비지원(임대료), 체류형 귀농사관학교(기숙형 임시주거) · (일자리지원) 네스트로컬 청년창업캠프 · (의료 돌봄지원) 강진형 육아수당

3. 생활권 현황



출처: 박성남 외(2024, pp.228-230),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농림축산식품부 (2025b),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검색일: 2025.08.31.)를 참고 및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사진은 연구진 촬영

3.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 지역특성

- 이바구마을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구릉형 경사지에 위치한 주거지

이바구마을은 부산 동구 초량동의 구릉지형 주거지로, 부산역과 항만이 위치해 부산의 관문이자 대중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초량동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지하철 역세권에 해당하여 상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다. 인근 좌천동과 범일동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혼재된 복합적 토지이용을 보이는 것과 달리, 초량동은 상업지역과 함께 구릉지형에 형성된 노후 단독주택 밀집 주거지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바구마을을 포함한 이 지역 주거지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수정산과 구봉산의 급경사지에 정착하면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현재까지도 지역의 물리적 특성과 도시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4-5] 부산시 동구 행정구역 현황

출처: 부산광역시 동구(2023, p.4)

■ 인구현황

- 부산 동구는 인구 수는 부산 16개 구·군 중 15위로 청년층 급감과 초고령화가 동시에 진행

부산 동구의 2024년 기준 총 인구는 85,911명으로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15위를 기록하며, 전체 부산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중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부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자치구로, 1 위인 해운대구 인구의 22.8% 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5] 부산시 인구 현황

순위	구/군	총인구(명)	부산시 인구 비율
1위	해운대구	376,404	11.50%
2위	부산진구	359,281	11.00%
3위	사하구	292,491	9.00%
⋮	⋮	⋮	⋮
14위	서구	103,188	3.20%
15위	동구	85,911	2.60%
16위	중구	37,537	1.10%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동구의 인구 감소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15.5만명이었던 인구가 현재는 9만명 이하로 급감했으며,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이를 보면 88,901명에서 85,911명으로 2,990명이 감소하여 총 3.36%, 연평균 0.85%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2022년 86,462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023년 잠시 반등했으나 2024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어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층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9세 청년층은 5년간 16.40% 감소, 연평균 4.37%의 급격한 감소율을 보였고, 10-19세 청소년층도 12.69% 감소하였다. 핵심 생산연령층인 40-49세와 50-59세도 각각 8.58%, 6.59% 감소했다. 30-39세 연령대에서만 4.47% 소폭 증가하여 부분적 인구 유입이 있었으나, 전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4-16] 부산시 동구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연령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변화율('20-'24)	연평균 변화율
0-9세	4,085	3,964	3,791	3,978	3,696	-9.52%	-2.47%
10-19세	5,145	4,824	4,675	4,658	4,492	-12.69%	-3.34%
20-29세	10,472	10,278	9,713	9,323	8,755	-16.40%	-4.37%
30-39세	10,395	10,400	10,395	10,998	10,860	4.47%	1.10%
40-49세	11,953	12,575	11,303	11,404	10,928	-8.58%	-2.21%
50-59세	14,803	14,296	13,927	14,183	13,828	-6.59%	-1.69%
60-69세	16,094	16,111	15,963	16,077	15,764	-2.05%	-0.52%
70-79세	10,730	10,677	10,738	10,899	11,089	3.35%	0.83%
80-89세	4,632	4,935	5,346	5,580	5,736	23.84%	5.49%
90세 이상	489	500	493	556	615	25.77%	5.90%
100세 이상	103	119	118	136	148	43.69%	9.51%
합계	88,901	87,679	86,462	87,792	85,911	-3.36%	-0.85%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반면 고령층 인구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80세 이상 초고령층은 24.41% 증가했고, 100세 이상 인구는 43.69%나 급증하여 초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부산 평균(약 26%)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특성이 확인된다.

■ 생활인구 현황

• 체류인구 규모 및 추이

2024년 기준 부산 동구의 체류인구 현황 분석 결과, 체류인구는 연초 51.7만명에서 연말 62.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56.9만명을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체류인구배수도 5.8배에서 7.0배로 상승했다. 이는 등록인구 8.9만명 대비 매우 높은 수치로, 거주 인구는 적지만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임을 보여준다. 타시도 거주자 비중이 연평균 42.5%로 유지되고 있어, 부산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 유입 인구가 전체 체류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특성을 보인다.

[표 4-17]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 규모 및 구성

구분	1월	4월	7월	10월	12월	연평균
체류인구(명)	517,336	531,275	562,327	613,154	620,059	568,830
등록인구(명)	89,777	89,331	88,924	88,393	88,184	88,922
체류인구배수	5.8배	5.9배	6.3배	6.9배	7.0배	6.4배
타시도 거주자 비중	43.2%	39.6%	43.0%	43.2%	43.3%	42.5%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 체류기간별 인구 분포

체류 기간별 생활인구 분석 결과, 동구는 단기 방문객 중심의 뚜렷한 유동인구 특성을 보인다. 1일 체류 인구가 전체의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1월 29.6만명에서 12월 37.7만명으로 27.6% 증가하여 일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7일 체류가 25.0%, 8일 이상 장기 체류가 13.9%로 나타나 단기 체류가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8]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의 체류기간별 규모

체류기간	1월	4월	7월	10월	12월	구성비(평균)
1일	295,558명	301,635명	319,953명	374,893명	377,170명	61.1%
2~7일	139,006명	141,840명	153,117명	152,962명	158,237명	25.0%
8일 이상	82,769명	87,798명	89,258명	85,301명	84,651명	13.9%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 숙박기간별 인구 분포

숙박 인구 분석에서는 동구의 관광지적 특성이 드러난다. 1일 숙박 인구가 44.8만명 수준으로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2~3일 및 4~20일 숙박 인구가 여름철인 7월에 각각 1.9 만명으로 평시 대비 2~3배 급증하는 계절적 특성을 보인다. 반면 21일 이상 장기 숙박 인구는 연중 9 천명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동구가 교통 허브로서의 기능과 함께 여름 휴가철 중기 숙박 수요가 집중되는 관광지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9]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의 숙박기간별 분포

숙박기간	1월	4월	7월	10월	12월	변화추이
1일	43,996명	40,504명	47,366명	42,581명	48,038명	변동성 높음
2~3일	7,644명	6,066명	19,412명	16,579명	16,784명	여름 증가
4~20일	8,676명	10,154명	19,112명	16,212명	17,239명	여름 급증
21일 이상	9,680명	9,390명	9,167명	9,373명	9,029명	안정적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 체류 특성 지표

체류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동구의 단기 방문 중심 특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균 체류일수는 연초 4.5일에서 연말 4.0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평균 체류시간도 9.4시간에서 9.0시간으로 소폭 감소하여 체류 패턴이 일부 단기화되고 있다. 평균 숙박일수는 4.7~5.9일 범위에서 변동성을 보이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숙박보다는 일일 방문 위주의 지역 특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0] 부산시 동구 생활인구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지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추이
평균 체류일수	4.5일 → 4.1일	4.6일 → 4.5일	4.5일 → 4.1일	4.0일 → 4.0일	감소 추세
평균 체류시간	9.4시간	9.3시간	9.2~9.4시간	9.0~9.1시간	소폭 감소
평균 숙박일수	5.7일 → 4.7일	5.9일 → 5.7일	5.5일 → 4.8일	5.8일 → 5.4일	변동성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

• 생활인구 대상별 주요 정책

부산시 동구는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중심의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주민등록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동구는 단순한 정주인구 증가보다는 생활인구 유치에 중점을 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구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등록인구 100명당 약 85명에 달하는 체류인구가 있을 정도로 유동인구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부산역과 북항 등 도심 관문이 위치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관광객, 직장인 등 많은 외부 인구가 동구를 오가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동구는 이러한 높은 유동인구를 단순한 통과 인구가 아닌 지역 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주인구와 함께 청년층, 고령층, 관광객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인구 유치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표 4-21] 부산시 동구의 생활인구 대상별 주요 정책

대상	주요 정책 및 성과
청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미을 만들기: 2021년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이바구마을' 조성 (사업비 5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거주공간·창업공간 지원 창업주거 복합공간: 초량 이바구길 일원 노후 건물 9곳 리모델링하여 부산 창업가꿈 5호점 (청년 창업·주거 특화시설)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공간·주거 24실 및 공유숙박 14실 공급 2023년 사업비 12억 원 확보 (시비 9억, 구비 3억)하여 추진 2025년 3월 개소, 청년창업기업 8곳 입점 청년 일자리·정주: 청년창업가 단체와 협업하여 지역맞춤 창업 지원, 빈집 매입 후 청년활용 공간 제공
고령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 개선: 동구 좌천동 쪽방촌 정비 및 공공주택 425호 공급 추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약 1,30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열악한 쪽방 철거 후 공공분양 340호·공공임대 85호 건설, 순환형 임대주택 100호 마련해 선이주 후 재정착 지원 생활환경 개선: 폐교된 좌천초교 부지에 복합 커뮤니티시설 '좌천 어울림파크' 조성 (문화·복지·교육·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후 골목 정비로 경사로 보행환경 개선 및 빈터를 소공원·쉼터로 조성 고령 주민의 이동 편의 증진 노년층 사회활동: 주민 주도의 '집수리 사관학교·마을관리단' 운영으로 노후주택 보수, 마을관리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구문화원 등 노년층 문화·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활기 제고

대상	주요 정책 및 성과
유동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 활성화: 주민 일상 체험형 관광콘텐츠 '명란한 동구' 개발 등 생활관광 프로그램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 활성화 지역 선정으로 원도심 자원 연계 관광콘텐츠 마련(산복도로, 이바구길, 초량시장 등 현지인 일상 체험) - 매년 이바구길 달빛야행 걷기축제 등 개최로 체류형 관광 유도 관광 인프라 확충: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하버시티 동구 관광 마스터플랜 수립 중 (2024년 용역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과 내륙을 잇는 관광자원 개발, 국제적 관광도시 브랜딩 추진 - 2023년 동구 문화체육관광국 신설로 관광정책 역량 강화 - 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규제완화·기금지원 추진 비즈니스·근무환경: 옛 부산역사를 리모델링한 부산유라시아플랫폼 개소(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과 원격근무 거점으로 활용. 초량 이바구길 창업공간은 관광객이 워케이션(workation) 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북항에는 국제여객터미널(크루즈)과 복합비즈니스 시설이 조성되어 국내외 직장인 유동인구 증가 기대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 유치: 외국인 개별 관광객 대상 부산 e이바구페이 인센티브 지원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매도시 단체 관광 시 1인당 3만원 지역화폐 지급(2025년) 등 - 부산시 관광공사와 협력해 해외여행사 대상 상품 개발 지원. 중국인 등 많이 찾는 초량 차이나타운 일대 경관 개선 및 다국어 안내 확충 다문화 지원: 동구 가족센터(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 내 입주)에서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인턴십 등 부산시 사업 연계. 국제 크루즈 관광객 대상 원도심 투어코스 개발로 재방문 유도

출처: 부산광역시 동구(2024)를 참고하여 작성

• 산복도로 르네상스와 이바구길 조성 사업

부산시 동구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생활인구 유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0년대 초 부산시가 노후 산복도로 주거지를 재생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구 초량동이 그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2012년 옛 주택을 리모델링한 이바구공작소(산복도로 생활자료관)가 문을 열었고, 168계단 모노레일 설치, 장기려 박사 기념 더나눔센터, 유치환 시인의 '청마 유치환 우체통 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장소들을 연결한 1.5km의 이바구길은 골목갤러리, 게스트하우스 등과 함께 원도심 관광코스로 정비되고 있다.

• 도시재생 관련 사업과 이바구마을

동구는 청년층 유입을 위한 다양한 부처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2021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바구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산복도로 빈집을 활용한 청년 주거·활동공간이 조성되었다. 운영주체인 (주)공공플랜은 청년들을 모집하여 부산 동구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현지에 뿌리내려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기반 위에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부산시 공모사업을 연계하여 '부산 창업가꿈 5호점' 청년 창업주거공간을 초량168계단 일원에 구축했다. 노후 모노레일을 철거하여 확보한 부지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주변 폐가 9채를 매입·리모델링하여 '이바구 캠프'와 '하늘길 플랫폼' 등 청년창업 거점시설을 조성했다.

현재 이바구 플랫폼에는 지역 청년기업들의 카페, 공방, 식당 등이 입주해 있으며, 방문객을 위한 공유 숙박 시설도 갖추어 관광과 창업이 선순환하는 자생적 재생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4-22]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의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 현황

시기	사업명(소관)	주요 내용	예산
2011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부산시)	• 초량 이바구길 프로젝트 시작 • 스토리텔링 로드 조성 • 168계단 모노레일 설치(2016)	-
2014~2019년	도시재생사업 (국토부)	• 이바구캠프 건립(4개동) • 게스트하우스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 마을기업 육성	25억원 (국비 12.5억, 시비 12.5억)
2021~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행안부)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 • 청년 거주·창업공간 지원 • (주)공공플랜 주도 운영	국비 5억원
2023~2028년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사업(부산시)	• 모노레일 철거 후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 이바구플랫폼 개소(2025.3) • 청년 임대주택 24실, 공유숙박 14실	12억원 (시비 9억, 구비 3억)

출처: 부산 동구청 미래사업단, (주)공공플랜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7.22.~2025.07.23.)

2) 생활거점 조성·운영 특성

■ 공간요소

- 이바구캠프(2016년 조성), 이바구플랫폼(2025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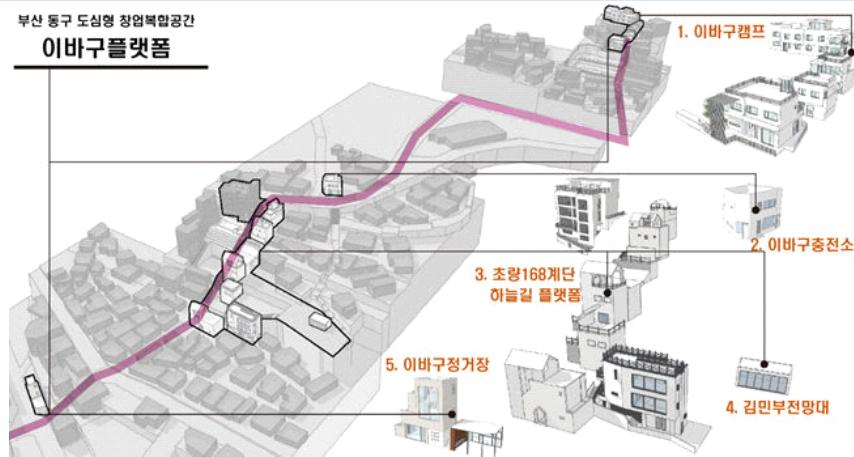
이바구마을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확장·발전해왔다. 2011년 이바구길 조성을 시작으로, 2016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바구캠프가 건립되었고, 2025년에는 이바구플랫폼이 개소하여 점진적인 공간 확대가 이루어졌다. 최근 조성된 이바구플랫폼은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으로 8개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공간과 공유숙박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이바구캠프의 시설 구성을 보면 멀티센터(연면적 136.9m²), 체크인센터(연면적 59.6m²), 공방(연면적 54.26m²), 게스트하우스(연면적 177.18m², 8실)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4-23]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일대의 주요시설 현황

구분	시설 현황		소유 주체	관리·운영 주체
	세부시설명	입점 브랜드		
이바구캠프	이바구캠프(게스트하우스)		부산동구청	마을주민 협동조합 (주)공공플랜 운영 예정)
	체크인센터(인포메이션)			
	멀티센터(커뮤니티시설)			부산동구청
이바구플랫폼	명란브랜드연구소(레스토랑, 카페)	명란브랜드연구소	부산동구청	부산동구청
	168더데크(계단식 전망대, 야외 영화관))		부산동구청	부산동구청
	이바구 팝업 스페이스		부산동구청	(주)공공플랜
	창업공간	해피해조(부각전문점)	부산동구청	(주)공공플랜 (개별팀 입주)
		키노양(팝디저트)		
		릭키피쉬(디저트카페)		
		메종랑오르(실버주얼리)		
	이바구벤처캠프		부산동구청	(주)공공플랜
	아래승강장		부산동구청	부산동구청
	이바구정거장	pp.b(플랜테리어, 카페)	부산동구청	(주)공공플랜 및 개별 브랜드
	이바구센터		(주)공공플랜	(주)공공플랜

출처: 연구진 작성

이바구마을의 주요시설은 크게 이바구캠프와 이바구플랫폼 등 2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공공플랜과 부산 동구청이 주요 관리·운영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체크인센터와 게스트하우스 등의 숙박시설을 비롯해 명란브랜드연구소와 같은 식음료 공간, 168데크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해피해조, 키노앙, 럭키피쉬, 메종랑오르 등의 창업공간과 pp.b 카페 등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광과 창업,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그림 4-6] 이바구마을 주요시설 현황

출처: 김성우(2025, 3월 4일 기사)

이바구마을의 핵심 시설인 이바구캠프와 이바구플랫폼은 각각 다른 시기에 조성되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바구캠프는 19.85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8월에 개관한 시설로, 4개동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었다. 체크인센터(관리센터, 아티스트숙소), 멀티센터(연회장, 흘, 북카페), 그리고 11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단체, 2인, 펜션형)로 구성되어 숙박과 커뮤니티 기능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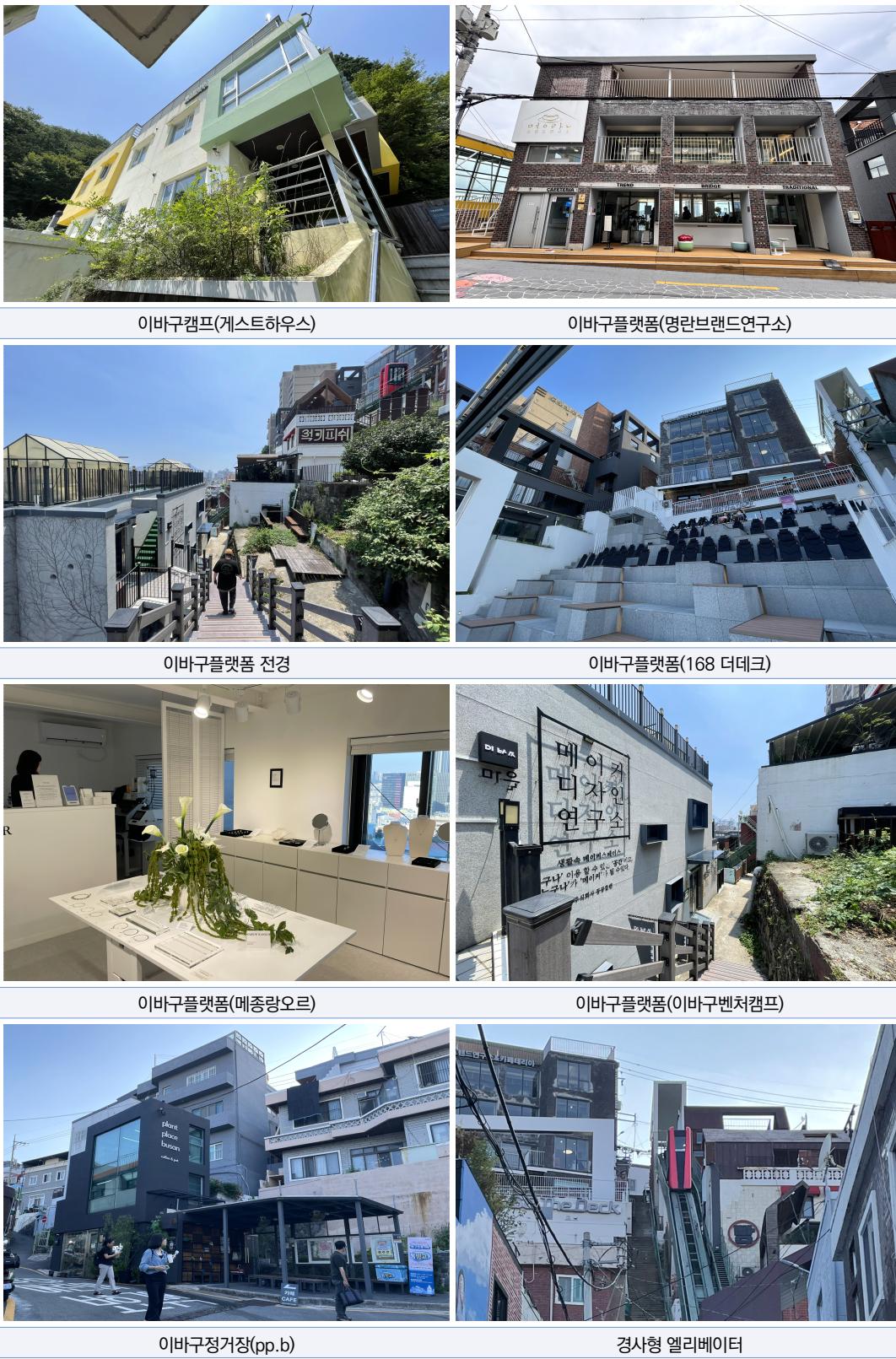
이바구플랫폼은 12억원을 투입하여 2025년 3월에 시설, 7개동에 연면적 1,175.62㎡, 대지면적 1,397.19㎡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8개 기업이 입주할 창업공간, 24실의 주거공간, 14실의 공유숙박 시설을 갖추어 창업 지원과 주거, 숙박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4-24]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핵심 공간요소

시설명	규모	주요 구성	개관/사업비
이바구캠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동, 지상 2층 연면적 427.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게스트하우스(단체/2인/펜션형, 11실) 체크인센터(관리센터/아티스트숙소) 멀티센터(연회장/흘/북카페) 	2016년 8월 (19.85억원)
이바구플랫폼	<ul style="list-style-type: none"> 7개동 연면적 1,175.62㎡ 대지면적 1,39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공간: 8개 기업 	2025년 3월 (12억원)

출처: 부산광역시(2025, 3월 4일 보도자료) 참고

두 시설 모두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어 지역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이바구플랫폼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운영 면에서는 이바구캠프가 주민중심의 협동조합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운영을 중단하게 되어, 현재는 (주)공공플랜이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그림 4-7]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의 주요시설 전경

출처: 연구진 촬영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의 생활거점은 관광 중심 공간으로 조성되어 숙박·주거시설, 업무·창업시설,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박·주거시설로는 부산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아바구캠프(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다. 업무·창업시설은 이바구벤처캠프와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이바구플랫폼이 있다. 커뮤니티시설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체크인센터가 지역안내 및 정보 제공 기능을 담당하며, 이바구벤처캠프 내 커뮤니티 라운지와 소모임 공간이 주민과 방문객 간 소통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4-25]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공간요소

분류	세부항목	시설명	비고
숙박·주거시설	숙박시설	아바구캠프(게스트하우스)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업무·창업시설	회의실·세미나실	이바구벤처캠프	메이커공간
	창업공간	이바구플랫폼(창업시설)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사업
커뮤니티시설	지역안내·정보공간(관계안내소, 안내센터)	체크인센터	도시재생사업
	소통공간(커뮤니티 라운지, 소모임공간)	이바구벤처캠프	지역 창업공간 조성 사업

출처: 부산광역시 동구(2023), 부산광역시 동구(2024)를 참고하여 작성

■ 프로그램 요소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에서는 관광·휴양, 창업·일자리, 지역살이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광·휴양 분야에서는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동구 초량 이바구길 등 7개 코스 37개소를 대상으로 관람객 참여형 활동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창업·일자리 분야는 이바구플랫폼을 중심으로 청년 창업지원 활동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특히 ‘어쩌다 사장’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초기 단계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돋고 있다. 지역살이 분야에서는 ‘동구에서 열흘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숙박과 지역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이 관광을 넘어 지역의 일상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표 4-26]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프로그램 요소

분류	세부항목	세부 내용
관광·휴양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동구 초량 이바구길 등 7개 코스·37개소를 대상으로 관람객 참여형 활동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
창업·일자리활동	이바구플랫폼	청년 창업지원 활동과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어쩌다 사장’ 프로그램	창업 초기 단계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
지역살이	동구에서 열흘 살아보기 프로그램	숙박과 지역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기획

출처: 부산광역시 동구(2023), 부산광역시 동구(2024)를 참고하여 작성

■ 정책요소

부산 동구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거지원과 일자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거지원 분야에서는 자립청년 주거 다(ALL)多 지원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중개보수, 주거생활비(월 10만원×12개월), 자립물품 구입비(50만원)를 지원한다. 또한 만 19~34세 청년 대상 월세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 3만원 외 전액을 지원한다.

일자리 지원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공간 이바구플랫폼을 통해 창업팀 모집, 교육, 컨설팅을 제공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창업 관련 멘토링·컨설팅을 상시 지원하여 청년 창업가 성장을 돋고 있다.

[표 4-27]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생활거점의 정책지원 요소

분류	세부항목	정책명	비고
주거지원	주거비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	자립청년 주거 다(ALL)多 지원 사업을 통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중개보수, 주거생활비(월 10만원, 12개월), 자립물품 구입비(50만원, 1회) 지원
		청년 월세 지원	만 19~34세 이하 청년 대상, 월세 부담 경감 및 주거 독립 지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1인 미혼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료 중 본인 부담 3만원 외 전액 지원(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	청년 창업공간 이바구플랫폼 운영	동구 내 창업공간에서 창업팀 모집,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레벨업 지원사업	부산경제진흥원 주관, 사업화 및 창업자 대상 지원사업 운영 창업 관련 멘토링, 컨설팅 상시 지원

출처: 부산광역시 동구(2023), 부산광역시 동구(2024)를 참고하여 작성

3)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정착 사례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은 2010년대 초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 유휴공간을 재생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1년 행안부 청년마을사업을 계기로 체류형 청년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지역정착 모델을 구축했다.

도시재생사업과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바구캠프와 같은 체류 공간을 마련하고 창업 인력을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청년마을의 ‘꿈깨’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간 이바구캠프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며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 중 현재 약 10개 팀이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하였다.

주요 정착 사례로는 ‘하랑플랜’이 2022년 창업 후 마이스(MICE) 분야 전문기업으로 성장하여 부산시, 부산관광공사 등과 협업하고 있다. ‘럭키피쉬’는 2021년 12월 창업 후 지역 콘텐츠 기반 캐릭터 IP 개발과 굿즈 판매로 사업운영구조를 안정화하고 있다. ‘메종랑오르’는 2025년 초 창업하여 실버 주얼리 제작·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공공플랜의 직원 중에도 울산에서 재직 중이던 회사를 퇴사하고 영상 제작 분야로 창업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받는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창업과 동시에 지역 정착에 성공하였다.

2025년 9월 25일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시설 활성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이바구마을에 축적된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⁶²⁾. 이는 산복도로 르네상스부터 이어진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재생 노력이 이어지는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62) 국토교통부(2025, 9월 24일 보도자료) 참고

■ 지역 체류 및 정착에 영향을 미친 요인

- 이바구플랫폼(창업공간) 구축 및 운영구조 마련

부산시 자체사업인 '청년 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사업' 및 '부산창업기꿈 사업(2023-2028)'을 통해 총 12억원을 투입하여 동구청 소유 12개 공간을 청년창업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인테리어 지원과 기자재 구매비 일부를 지원하고, (주)공공플랜이 5년간 공간 전체를 위탁운영하며 창업자들에게 재위탁하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임대료를 받고 2차년도부터는 순수익의 60~70%를 창업자가 가져가는 수익공유제를 도입하여 책임감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 창업공간 입주 청년 간 협업 생태계 구축

이바구캠프에서 6개월간 공동 거주하며 형성된 청년창업자 간 유대관계가 지역정착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한 청년 창업자가 "내가 잘되는 건 내 뜻이지만, 여기선 적어도 굶어 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상호부조 문화가 형성되었다. F&B, 디자인, 문화기획 등 다양한 업종의 청년들이 상호보완적 구조를 형성하여 행사 시 케이터링, 디자인, 홍보 등을 서로 연계하고, 미디어아트 전시 등 외부 프로젝트도 공동으로 수행하는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였다⁶³⁾.

- 민간기업의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주)공공플랜이 단순 사업운영주체가 아닌 마을 운영자, 매개자, 연결자로서 행정과 창업자 사이의 완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구청과의 MOU를 통해 공간 위탁운영(연 5천만원)을 맡아 지자체의 복잡한 행정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창업자들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지역 내 자산 취득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는 정착 청년과 주민, 공공에게 중요한 신뢰요소로 작용하였다.

■ 향후 개선과제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빈집 활용 제약, 공유숙박 실증특례의 한계 등이 지역 활성화의 걸림돌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에 있어 빈집의 매입 및 철거는 불가하고 활용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 활용에 한계가 있다. 빈집 정비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당 2천만원 수준으로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대비 부족한 실정이다⁶⁴⁾.

체류형 생활인구의 이용률이 높은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공유숙박 실증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서울과 부산으로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180일 운영제한으로 민간기업의 수익성이 낮으며, 현장점검 미비로 불법 운영 사례가 양산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⁶⁵⁾.

-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과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 운영체계 구축 필요

현재 이바구마을은 168계단, 모노레일 등의 관광자원으로 중국, 대만, 일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63) 이바구플랫폼 청년 정착 창업자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7.23.)

64) 부산 동구청 미래사업단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7.22.)

65) 미스터멘션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7.24.)

있으나, 대부분 당일치기 ‘스톱오버 투어리즘’에 머물고 있어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숙박시설 운영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바구캠프의 민박시설은 부산역 주변 게스트하우스와의 가격 경쟁력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인근 게스트하우스는 재정비 중이나 운영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부산관광공사의 모디하우스 사업이 2026년부터 1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전문 운영기관 도입과 장기임대-위탁운영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시급

쇠퇴지역 특성상 주거환경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여성 청년창업자들의 경우 치안과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바구마을을 떠나 LH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는 청년 정착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야간 조명 확충, CCTV 설치 확대 등 치안 인프라 강화, 여성 전용 또는 여성 우선 거주 공간의 보안 시설 강화가 필요하다. 주거환경 안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재생과 청년정착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야 한다.

- 청년 정착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강화

‘꿈깨’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간 이바구캠프 게스트하우스에 거주하며 창업을 준비한 청년들 중 약 10개 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운영 중이다. 이는 체류형 창업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이나,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 체류 기간 이후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 강화, 창업 준비 단계부터 실제 사업 운영 까지의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확대, 정착에 성공한 10개 팀의 성공 요인 분석 및 우수 사례 확산 등이 요구된다.

- 청년 창업자들은 계약 불안정성 해소

청년 창업자들은 창업공간에 대한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호소하고 있다⁶⁶⁾.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계약으로는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창업 초기 지원금이나 준비자금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바구마을의 경우 도보로만 접근 가능한 언덕 지형으로 교통 접근성이 낮아 직원 채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66) 이바구플랫폼 청년 정착·창업자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7.23.)

(사례2) 부산 동구 아바구마을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 개요

구분	내용
입지 특성	구릉형 경사지, 부산역·북항 인접 교통 허브, 상업지역과 노후 주거지 공존
정주 인구	부산시 3,272,169명, 동구 85,911명(2024)
생활 인구	568,830명(2024 연평균), 부산시 내 15위/16개
지역 이슈	· 청년층 급감(-16.40%), 초고령화 가속(80세 이상 24.41% 증가) · 인구소멸위험지역, 스톰오버 관광 한계, 경사지 접근성 문제

■ 인구감소지역 진단 및 추진사업 현황

구분	내용
MBTI 진단	· 현재 (As-is): ISTP, 안정적 거주환경을 바탕으로 이웃간 친밀성이 높음, 발달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과 교통이 편리, 우수한 전통 및 역사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전통가치를 중시, 특정 시기에 지역행사와 방문객이 집중 · 희망 (To-be): ESTJ, 외부인구 유입과 지역 주민이 떠나지 않는 정착지역 희망, 생활편의 강화 필요
주요 사업	·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사업, 청년마을 만들기 · 지원사업,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복합공간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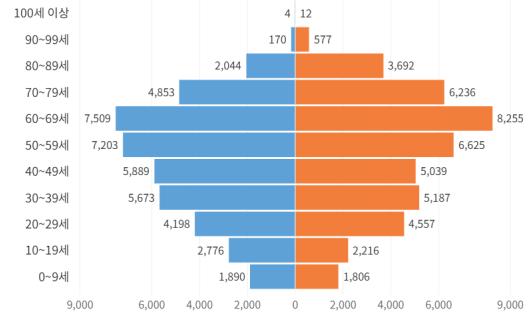
2. 생활거점 현황

■ 공간요소

구분	내용
숙박 주거	· (이바구캠프) 기존 건물 리모델링, 게스트하우스 11실, 단기 숙박형
시설	· (이바구플랫폼) 노후건물 9채 리모델링, 주거 24실 공유숙박 14실
업무 창업 시설	· (이바구플랫폼) 8개 청년기업 입주 창업공간 · (이바구벤처캠프) 메이커공간, 회의실·세미나실 · (창업브랜드) 명란브랜드연구소, 해피해조, 키노 양, 럭키피쉬, 메종랑오르 등

■ 인구구조 특성(인구파라미드)

- 대상지(동구) 인구구조: 부산 동구 총 85,911명(2024), 남성 41,826명, 여성 44,085명 / 60세 이상 32,617명(38.0%)



- 생활인구(부산 동구): 체류인구 규모가 매우 크고 체류인구 배수 6.4배로 부산시 평균을 크게 상회, 타시도 거주자 비중 42.5%로 부산역 중심 교통 허브 특성 반영, 생활인구 중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객이 61.1%로 압도적이거나 평균 체류일수는 4.5일→4.0일로 감소 추세, 여름철 증기 숙박 수요가 평시 대비 2~3배 급증하는 계절적 특성 보유, 체류인구 규모와 배수는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으나 체류의 질적 지표(체류시간, 숙박일수)는 지속적으로 단기화되는 한계 존재

■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요소

구분	내용
프로그램	· (관광/휴양)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이바구길 7개 코스 37개소 운영
정책 지원	· (창업/일자리) '어쩌다 사장' 창업지원, 청년 네트워킹 · (지역살이) '동구에서 열흘 살아보기' 체류형 프로그램
수·주거 생활비 지원	· (주거지원)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임차보증금·증가보수·주거생활비), 청년 월세 지원(19~34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일자리지원) 이바구플랫폼 창업공간 운영, 부산경제진흥원 창업 멘토링·컨설팅

3. 생활권 현황



출처: 박성남 외(2024, pp.69~71),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검색일: 2025.08.31.) 참고 및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사진은 연구진 촬영

4. 경남 남해군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 지역특성

- 남해군은 경상남도 남단의 도서군으로 유인도 3개, 무인도 73개로 이루어진 지역

남해군은 행정구역 전체가 도서지역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사천시와 하동군을 통해 육지와 연결되고, 동쪽으로는 통영시, 서쪽으로는 한려수도와 광양시, 여수시, 남쪽으로는 남해안과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개 읍과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행정구역으로 221개 리로 구성되어 있다. 군청 소재지인 남해읍은 인구는 약 12,00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남해읍은 남해군의 행정, 상업, 교육, 의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며, 군청,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남해시외버스터미널과 남해전통시장이 위치하여 교통과 상업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4-8] 남해군 행정구역 현황

출처: 남해군(2023, p.4)

■ 인구현황

- 남해군의 청년은 지속 감소하고 고령층은 증가

남해군의 인구 감소율(-7.28%)은 경상남도 평균(-3.35%)의 2.2배에 달하며, 연평균 감소율도 경남(-0.85%)보다 남해군(-1.88%)이 2배 이상 높아 인구감소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표 4-28] 경상남도-남해군 인구 변화 비교

구분	2020년	2024년	변화량	변화율	연평균 변화율
경상남도	3,340,216명	3,228,380명	-111,836명	-3.35%	-0.85%
남해군	42,958명	39,832명	-3,126명	-7.28%	-1.88%
남해군 비중	1.29%	1.23%	-	-	-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남해군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41.8%)은 경남 평균(19.5%)의 2.1배에 달하며, 노령화 지수는 454.3으로 경남 평균의 2.5배 수준이다.

[표 4-29] 경상남도-남해군 고령화 수준 비교

구분	65세 이상 비율	14세 이하 비율	노령화 지수
경상남도	약 19.5%	약 10.7%	182.2
남해군	약 41.8%	약 9.2%	454.3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남해군의 총인구는 2020년 42,958명에서 2024년 39,832명으로 3,126명이 감소하여 7.28%의 감소율을 기록했으며, 이는 연평균 1.88%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를 의미한다.

남해군의 인구 문제는 젊은 연령층의 급격한 감소에서 나타난다. 0-9세 유소년층은 25.89% 감소했으며, 10-19세 청소년층은 14.30% 감소했다. 특히 20-29세 청년층은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하여 2020년 3,314명에서 2024년 2,302명으로 30.54%가 감소했다. 이러한 청년층의 급격한 유출은 지역의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직결되며, 장기적으로 지역 활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39세와 40-49세 연령층은 각각 16.82%, 20.71% 감소하여 핵심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50-59세 연령층은 10.82% 감소에 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 변화를 보인다.

남해군 인구구조의 또 다른 특징은 고령층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60-69세는 8.32% 증가했으며, 80-89세는 7.59% 증가했다. 초고령층의 변화가 두드러져 90세 이상 인구는 830명에서 1,130명으로 36.14% 증가했고, 100세 이상 인구는 50.00% 증가했다.

남해군의 인구구조는 전형적인 역피라미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층의 증가가 동시 진행되면서, 지역사회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20-29세 청년층의 30% 이상 감소는 향후 출생률 저하로 이어져 인구감소 가속화가 예상된다.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연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40대 핵심 생산연령층의 급격한 감소는 지역 내 노동력 부족, 소비 위축, 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남해군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인구가 7.28% 감소하는 등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20대 청년층의 30% 이상 감소와 90세 이상 초고령층의 36% 증가라는 극단적인 변화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표 4-30] 남해군 연령대별 인구수 추이

연령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변화율('20-'24)	연평균 변화율
0~9세	1,591	1,512	1,434	1,326	1,179	-25.89%	-7.23%
10~19세	2,937	2,831	2,698	2,587	2,517	-14.30%	-3.79%
20~29세	3,314	3,033	2,792	2,592	2,302	-30.54%	-8.70%
30~39세	2,467	2,302	2,264	2,156	2,052	-16.82%	-4.49%
40~49세	4,596	4,341	4,106	3,901	3,644	-20.71%	-5.63%
50~59세	7,345	7,121	6,828	6,689	6,550	-10.82%	-2.82%
60~69세	8,314	8,602	8,847	8,944	9,006	8.32%	2.02%
70~79세	6,673	6,604	6,558	6,588	6,663	-0.15%	-0.04%
80~89세	2,570	2,703	2,769	2,923	2,765	7.59%	1.84%
90세 이상	830	936	984	1,052	1,130	36.14%	8.00%
100세 이상	16	13	14	22	24	50.00%	10.67%
합계	42,958	42,266	41,579	40,780	39,832	-7.28%	-1.88%

출처: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 생활인구 현황

남해군의 2024년 체류인구는 월평균 235,188명으로 나타났으며, 등록인구 40,954명 대비 5.8배에 달하는 높은 체류인구배수를 기록했다. 특히 4월과 10월에 각각 257,012명, 260,159명으로 체류인구가 정점을 기록했으며, 이 시기 체류인구배수는 6.3배와 6.4배로 연중 최고 수준을 보였다. 반면 12월에는 197,993명으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타시도 거주자 비중은 연평균 66.8%로 매우 높게 나타나, 남해군이 외부 방문객이 많은 대표적인 관광지역임을 보여준다.

[표 4-31] 남해군 생활인구 규모 및 구성

구분	1월	4월	7월	10월	12월	연평균
체류인구(명)	212,777	257,012	247,998	260,159	197,993	235,188
등록인구(명)	41,398	41,087	40,931	40,666	40,690	40,954
체류인구배수	5.1배	6.3배	6.1배	6.4배	4.9배	5.8배
타시도 거주자 비중	66.80%	68.00%	67.00%	68.80%	63.50%	66.80%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체류기간 분석 결과, 1일 체류가 전체의 5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27일 중기 체류가 39.5%, 8일 이상 장기 체류는 7.6%에 불과했다. 1일 체류 인구는 4월 134,9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2월 95,320명으로 감소하는 계절적 변동을 보였다. 2~7일 체류는 7월에 129,156명으로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이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2] 남해군 생활인구의 체류기간별 규모

체류기간	1월	4월	7월	10월	12월	구성비(평균)
1일	114,185명	134,972명	107,734명	122,223명	95,320명	52.90%
2~7일	87,124명	111,086명	129,156명	126,167명	91,344명	39.50%
8일 이상	11,472명	10,952명	11,105명	11,771명	11,326명	7.60%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숙박기간의 특징은 여름철 숙박 수요의 급증이다. 1일 숙박은 4월 71,430명, 7월 75,934명, 10월 75,266명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3일 숙박이 7월에 32,871명으로 급증했다는 것인데, 이는 1월 11,251명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는 여름 휴가철 단기 관광객의 대폭 증가를 의미한다. 4~20일 숙박은 월평균 6,400명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며, 21일 이상 장기 숙박은 3,000명 내외로 연중 가장 안정적인 패턴을 보인다.

[표 4-33] 남해군 생활인구의 숙박기간별 분포

숙박기간	1월	4월	7월	10월	12월	변화추이
1일	51,686명	71,430명	75,934명	75,266명	55,082명	변동성 높음
2~3일	11,251명	13,357명	32,871명	27,251명	16,952명	여름 급증
4~20일	6,179명	4,680명	7,116명	7,765명	6,311명	안정적
21일 이상	3,028명	3,151명	3,033명	3,090명	3,202명	매우 안정적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평균 체류일수는 연중 2.4~2.8일 범위에서 유지되었으며, 큰 계절적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 체류시간은 11.9~12.7시간 범위에서 소폭 변동했으며, 전반적으로 반일 정도의 체류 패턴을 보였다. 평균 숙박일수는 2.3~2.9일 범위에서 변동했다.

[표 4-34] 남해군 생활인구의 주요 지표 변화 추이

지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추이
평균 체류일수	2.6일 → 2.6일	2.4일 → 2.5일	2.6일 → 2.6일	2.6일 → 2.8일	안정적
평균 체류시간	12.6시간 → 12.7시간	11.9시간 → 12.1시간	12.5시간 → 12.6시간	12.0시간 → 12.6시간	소폭 변동
평균 숙박일수	2.9일 → 2.5일	2.5일 → 2.4일	2.4일 → 2.3일	2.5일 → 2.9일	계절 변동

출처: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8.20.)

남해군의 생활인구는 타시도 거주자 비중이 66.8%에 달하고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5.8배에 이르는 관광도시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단기 체류 중심의 관광 패턴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 2~3일 숙박 관광객이 급증하는 계절적 특성이 나타난다.

2) 생활거점 조성·운영 특성

■ 공간요소

남해군의 생활거점 공간요소 중 숙박·주거시설은 총 3개소로, 돌창고, 두모마을, 소도읍 남해이며, 모두 민간이 주도하여 공간이 조성되었다.

• 돌창고

남해군 돌창고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과거 농협 창고로 사용되던 공간을 현대적 문화 인프라로 재생한 사례이다. 1920년대 건축된 돌창고를 2016년 문화기획자가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돌창고는 젊은 작가들을 위한 갤러리로 사용하고 함께 위치한 2층 집에서는 1층에 카페를 운영하고 2층은 작가를 위한 체류공간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돌창고 대표는 남해 지역에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관계안내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두모마을⁶⁷⁾

두모마을은 남해군에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체험마을로, 18년째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해군 유일의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다. 마을 이장은 29세에 남해군 죄연소 이장으로 취임하여 현재 까지 약 18년간 마을을 이끌어왔으며, 사무장 역시 17년째 근무하며 마을 운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외부인에 대한 높은 수용력으로 2019년 팜프라촌이 조성되고, 2022년 남해 서울농장(서울시와 남해군이 함께 조성한 서울시민 대상 농촌체험 공간)이 이어 조성되어 체류형 생활인구의 거점이 지속 조성되고 있다. 서울농장 공간은 서울시민 이용 시간 이외에는 마을의 체험마을 숙소로 이용되고 있어, 수익활동의 거점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팜프라촌은 총 7개 동이 조성되어 있으며, 스테이 4개동, 스토어와 라운지 2개동, 작업장 1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방문하는 체류인구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소도읍 남해

소도읍은 2024년 1월에 오픈한 워케이션 특화 공간으로 남해군 상주면에 위치하고 있다. 6개의 객실과 공용 오피스 공간, 회의실로 조성되어 있다. 1개 동은 오피스 공간과 회의실, 1개 동은 객실로 조성되어 있다. 현재는 운영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고객군을 재설정하고 있으며, 단순 휴가객보다는 실제 워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표 4-35] 남해군 생활거점의 공간요소 중 숙박·주거시설

시설	건축물 현황(주건축물 기준)	조성방식	운영방식	대상 생활인구
돌창고	기준 주택 활용	리모델링	민간 운영	방문형
돌창고 갤러리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97-8)	계획관리지역, 창고 토지 68.37평, 창고 32.99평		- 2015년 지역에 정착한 청년주체 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의 관계안내소 역할 수행	체험형 체류형
돌창고 카페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97-10)	계획관리지역, 제2종근린생활시설 토지 46.89평, 연면적 43.9평(2층) 1층(일반음식점), 2층(주택)			
돌창고 스튜디오 (경남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1197-9)	계획관리지역, 주거 토지 59.9평, 연면적 21.58평			
두모마을		리모델링	민간 운영	체험형 관계형
서울농장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301-1)	계획관리지역, 주거기타 토지 2045.2평, 연면적 90.75평, 수련시설		- 마을주민 중심의 운영주체가 운영하고 팜프라촌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팜프라와 연계	
팜프라촌 (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327)	생산관리지역, 상업용 토지 275.28평, 연면적 21.78평			
소도읍 남해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958)	계획관리지역, 상업용 토지 391.13평, 연면적 120.68평,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민간 운영 - 민간 기업체 운영	방문형 체험형

출처: 돌창고 대표, 두모마을 사무장, 소도읍 남해 매니저 인터뷰 내용(인터뷰 일자: 2025.08.19.~2025.08.20.), 건축행정시스템 세 움터(<https://www.eais.go.kr/>, 검색일: 2025.08.20.)를 참고하여 작성

67) 두모마을 사무장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8.20.)



[그림 4-9] 남해군 생활거점의 숙박·주거시설

출처: 연구진 촬영

■ 프로그램 요소

남해군은 관광·휴양, 창업·일자리, 학습활동, 지역살이,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광·휴양 분야에서는 남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서면 워케이션센터를 거점으로 숙박비를 1박당 5만원씩 최대 3박까지, 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며, 스트리밍하우스와 협력하여 체류형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축제로는 매년 6월 남해마늘과 보물섬 한우를 테마로 한 마늘한우 축제가 개최되며,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에 선정된 독일마을 맥주축제가 매년 10월 삼동면에서 열린다.

창업·일자리 분야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농촌용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사업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남해청년센터 '바라'에서 창업 공간 대관과 교육, 멘토링,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들의 로컬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맞춤형돌봄센터 '아이빛터'가 초등학생 대상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체류형 지역살이 프로그램인 '태어났으면 남해살이'는 15~50일간 체류를 지원하며 숙박비 1일 5만 원, 체험비 1인 10만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남해 워케이션 명소화 사업을 통해 장기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해 두모마을의 유채꽃·메밀꽃축제와 개매기, 바지락, 선상낚시 체험, 설천면 바지락 채취 체험장의 어업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커뮤니티 활동 중 청년층 중심 활동으로는 남해청년센터 '바라'가 만 19~39세 청년 대상 문화행사와 생활지원,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남해청년학교 '다랑'이 복합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남해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층 및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표 4-36] 남해군 생활거점의 프로그램 요소

분류	세부항목	프로그램명	비고
관광·휴양	워케이션	남해 워케이션 프로그램	서면 워케이션센터, 숙박비 1박 5만원(최대 3박), 교통비 5만원 지원
	지역축제	남해 마늘한우 축제 독일마을 맥주축제	매년 6월, 남해마늘과 보물섬 한우 테마 축제 문화체육관광부 '로컬100' 선정, 매년 10월 삼동면
창업·일자리활동	로컬창업	농촌용복합산업 선도경영체 지원	농업기술센터, 최대 500만원 지원
		남해청년센터 '바라' 창업지원	창업 공간 대관, 교육, 멘토링, 컨설팅
학습활동	교육지원	지역맞춤형돌봄센터 '아이빛터'	초등 1~6학년,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
지역살이	한달살기/살아보기	태어났으면 남해살이	15~50일 체류, 숙박비 1일 5만원, 체험비 1인 10만원 지원
		남해 워케이션 명소화	스트리밍하우스 협력,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귀농·귀촌 체험	두모마을 체험프로그램 설천면 바지락 채취 체험장	유채꽃·메밀꽃축제, 개매기·바지락·선상낚시 체험 귀어귀촌 희망자 어업 체험
커뮤니티활동	주민 교류·네트워킹	남해청년센터 '바라'	만 19~39세 청년 문화행사, 생활지원, 창작활동 지원
		남해청년학교 '다랑'	도시재생사업, 복합문화공간 운영

출처: 남해군(2023), 남해군(2025a), 남해군 전략사업단 및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조사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8.19.~2025.08.20.)

■ 정책지원 요소

남해군의 주거지원 정책은 주거공간 제공, 주거비 지원, 주택 수리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사업인 빈집 재생사업(해랑사업 프로젝트)은 4억 8,700만원을 투입하여 방치된 빈집을 학령기 자녀 가족용 임대주택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4개 주택에 21명이 입주했다. 귀농인의 집은 예비 귀농인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로 6개월1년간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한다. 주거비 지원으로는 19~45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주택 수리 분야에서는 연간 40개 주택 정비를 목표로 하는 빈집정비사업과 2억 5,000만원 규모의 어촌빈집재생사업이 추진 중이다.

일자리 지원 정책은 창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남해몰 입점 지원은 지역 농어업 종사자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쇼핑몰 입점과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18~39세 청년이 월 20만원씩 24개월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매칭하여 만기 시 960만원과 이자를 받는 자산형 성 프로그램으로, 연간 5명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의료·돌봄 지원은 초고령사회 특성을 반영하여 노인복지와 출산장려를 병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000만원을 분할 지급하며, 특히 셋째는 40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노인 인구 비율 42.79%인 남해군은 1,812명 대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비롯해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ICT 통합돌봄, 도시락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之外가게 70개소는 고령자 휴게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남해군의 생활거점 정책은 빈집 재생을 통한 주거 문제 해결,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정착 유도, 노인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다.

[표 4-37] 남해군 생활거점의 정책지원 요소

분류	세부항목	정책명	비고
주거지원	주거공간 제공	빈집 재생사업(해랑프로젝트)	학령기 가족용 임대주택 제공 (4억 8700만원 지원)
		귀농인의 집	임시거주공간 제공 (월 1만원, 6개월~1년)
	주택 수리 지원	청년 월세 지원사업	무주택 청년(19~45세) 월 15만원 지원
		빈집정비사업	방치주택 철거·정비 (연 40개 목표)
	어촌빈집재생사업	귀어인 주택 리모델링 (2억 5000만원)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	남해몰 입점 지원	온라인 쇼핑몰 입점 및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창업 지원금	모다드림 청년통장	24개월 저축시 960만원+이자 (청년 480만원+정부 매칭 480만원)
의료·돌봄 지원	복지 서비스 연계	출산장려금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1,000만원 (분할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812명 대상 맞춤형 돌봄 제공
	편의시설	여기之外가게	70개소 운영 (고령자 휴게공간)

출처: 남해군(2023), 남해군(2025a), 남해군 전략사업단 및 남해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인터뷰 조사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8.19.~2025.08.20.)

3)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사회 영향력

■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정착 사례

남해군의 생활인구 정착 현황을 살펴보면, 30~40대 청년층의 이주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돌창고, 소도읍, 팜프라촌 등 청년 문화기획자와 청년기업들이 남해 곳곳에서 로컬창업을 하며 지역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 기반의 이주 사례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모마을에서는 2018년 팜프라 소속 청년 7명이 폐교 예정인 수련원 공간에 입주하게 되면서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시설은 현재 서울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주민조직이 운영주체로 참여하며, 477 프로젝트⁶⁸⁾, 귀농인의 집 등을 통해 매년 2~3가구씩 지역 정착 사례를 낳고 있다. 팜프라는 서울농장 인근에 팜프라촌을 조성하고 체험 프로그램과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은 카페, 책방, 사진관, 건축사무소, 베이커리 등 다양한 업종의 창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삼동면 지족구거리는 청년창업으로 인해 최근 5년 간 빈 점포가 대부분 채워졌고, 그밖에도 앵강마켓, 브레드멜, 준조양조장, 마파람사진관 등이 젊은 층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다.



앵강마켓



마파람사진관

[그림 4-10] 남해군 내 정착인구가 창업하여 운영 중인 공간

출처: 연구진 촬영

■ 지역 체류 및 정착에 영향을 미친 요인

- 남해군이 청년층의 체류와 정착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복합적이며 다층적임

남해군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정착 성과는 남해의 자연환경과 인프라, 문화적 토양, 행정의 지원, 그리고 민간 주도의 생태계 구축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남해는 자연환경 및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아난티, 사우스케이프, 대명리조트 등 대형 숙박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면서도 휴먼스케일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은 남해만의 차별화된 강점이다. 특히 거제나 통영에 비해 난개발이 적고 마을·해안경관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68) '젊은농부 477 프로젝트'로 불리며, 남해군의 귀농·귀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청년 농촌 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사업으로 30~49세 청년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7명씩 7팀을 구성해, 7일간 농업 교육과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

이주민들이 남해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⁶⁹⁾. 또한 사계절 농사가 가능하고 연간 영상 기온을 유지하는 온화한 기후는 생활의 편의성과 경제활동의 다양성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

지역의 문화인프라는 남해가 문화적 매력을 지닌 공간으로 인식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돌창고, 스페이스 미조 등의 문화공간과 흑기와, 아마도책방 등 4개의 서점, 이 밖에도 4개의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필라테스 학원, 요가원, 실내수영장 등 도시형 운동시설이 갖춰져 있다. 남해 정착 청년에 따르면 이는 이주민들이 기존 도시적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원데이클래스, 요리클래스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와 놀이교실 프로그램에 70명이 참여할 정도로 문화에 대한 갈증이 크다는 점은 향후 발전 가능성은 시사한다.

- 주민 주도의 관계인구 확대 노력

남해군 주민들은 농촌체험마을과 서울농장사업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도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이장과 사무장이 관계안내소 역할을 수행하며 외부 방문객과 지역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잠재적 이주자를 발굴하는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 행정의 개방적 태도와 적극적 지원

남해군은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정책을 통해 2~3억원의 지원금을 활용하여 청년 활동을 지원해왔다. 또한 지역이주·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 기획과 농식품부 농촌소멸대응 빈집 재생사업 선정 등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행정이 이주민과 원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수행하면서 행정이 단순한 관리자가 아닌 적극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공공에서 초기에 추진했던 워케이션 센터 운영은 성과가 미흡했다. 남해각, 미국마을 등에서 워케이션 시설을 운영했으나 노후시설의 재이용에 따른 한계와 명확한 타깃 설정 부재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남해군의 한 관계자는 생활인구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바꾸어야 지역에 올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라며, 단순히 생활인구를 유입하는 것만이 아닌, 남해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⁷⁰⁾.

- 지역관광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온라인 시스템 운영

남해군은 온라인 관광 플랫폼인 남해로온(NamhaeON)을 운영하며, 로컬관광·구독 플랫폼 및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지역 정보, 로컬 스팟, 핫플레이스, 맛집, 추천 체험, 주민 이야기, 여행자 할인 혜택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남해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활용한 다양한 할인 혜택으로 지역에 유입하는 외부 방문객의 소비와 체류를 유도하고 있다.

- 주거 문제는 가장 시급한 과제

남해읍의 아파트는 진주시 수준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빈집은 많으나 실제 거주 가능한 집

69) 돌창고 대표, 두모마을 사무장, 소도읍 남해 매니저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8.19.~2025.08.20.)

70) 남해관광문화재단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8.20.)

은 부족한 역설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월세는 10~50만원 수준이지만 최근 유동인구 증가로 임대료가 상승 추세에 있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향후 개선과제

- 단순 유입 촉진에서 장기 정착 지원으로의 정책 확장 필요

현재 남해군의 청년 지원 정책은 2~3년 이내 전입자 위주로 설계되어 이주 이후 정착과정의 청년들이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청년친화도시 사업 종료 후 행정의 예산 부족으로 유턴 청년 사업은 축소되었고 신규 인구유입도 감소하였으며, 청년 전담부서가 과에서 팀으로 축소되는 등 조직 약화도 나타나고 있다.

- 빈집 활용의 한계 개선과 주거 선택권 확대 필요

남해군은 빈집이 많으나 실거주 가능한 집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공에서 33가구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으나 1억원 이상의 높은 리모델링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고, 도시 생활에 익숙한 이주 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다. 빈집 소유자(도시 거주 상속인)들은 가격 상승 기대와 정서적 애착으로 처분 동기가 없어 시장에 매물도 적은 상황이다.

한편, 읍 지역에 집중된 생활서비스로 인해 읍내는 월세가 50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에서는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한 모듈러 주택 도입을 통한 이주·정착기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과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연속성 확보 필요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정착은 여러 부문에 걸친 종합적 지원이 핵심이다. 남해군의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 지원정책은 현재 각각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면서 밀도 있는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도시 재생지원센터, 청년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도 개별 부서와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귀농·귀촌 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분산되어 있어 집약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청년센터는 기간제 근로(1년 단위 재계약) 구조로 장기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고,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중간지원조직 간 업무의 연계·협력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부서 간 업무 조정의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실행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 의료·교육·교통 접근성 개선을 통한 가족단위 정착 여건 마련 필요

남해군은 소아과가 없어 진주까지 1시간을 이동해야 하며, 심리상담 등 아동복지 서비스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고등학교 진학 시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나가는 등 교육 인프라의 한계가 명확하다. 차량 없이는 기본 생활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두모에서 사천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3~4시간이 소요되는 등 교통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다. 지역 식당들의 영업시간이 짧아 숙박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카카오맵 등 네비게이션 안내도 부정확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 생활 인프라의 미비는 특히 육아·동반 가족의 정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사례3) 남해군

1. 지역 및 생활인구 현황

■ 개요

구분	내용
입지 특성	경상남도 남단 도서군, 유인도 3개·무인도 73개, 사천시·하동군과 연결, 관광지 밀집
정주 인구	남해군 39,832명(2024), 연평균 -1.88% 감소 (경남 평균 -0.85%의 2.2배)
생활 인구	235,188명(2024 월평균), 체류인구 배수 5.8배 · 단기체류형, 관광목적 중심
지역 이슈	20~29세 청년층 30.54% 급감 · 주거비 상승 빈집은 많으나 실거주 가능 주택 부족 · 소아과 등 기초 의료·교육 인프라 미비로 가족단위 정착 어려움

■ 인구감소지역 진단 및 추진사업 현황

구분	내용
MBTI 진단	현재 (As-is): ENTP, 외부인 포용력이 높으며, 자연자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전통 및 역사문화유산 보유, 특정 시기에 지역행사와 방문객 집중 · 희망 (To-be): ENTP, 외부인구 유입, 자연 보존과 관광자원화, 전통과 역사문화유산을 발굴·보존하여 지역의 활력을 희망, 지역 행사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이바지 희망
주요 사업	빈집재생사업, 청년친화도시, 도시재생사업 · 서울시 서울농장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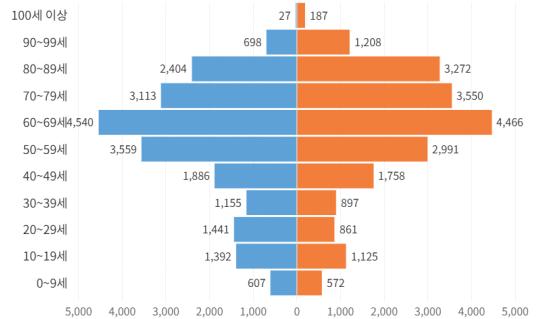
2. 생활거점 현황

■ 공간요소

구분	내용
숙박 주거	(돌창고) 기존 창고·주택 리모델링, 갤러리·카페·스튜디오, 청년 관계인내소 역할
시설	(두모마을) 체험마을 18년 운영, 팜프라촌 7개동, 서을농장 연계, 체험형·관계형 · (소도읍 남해) 신축 워케이션 특화공간, 6개 객실·공용오피스·회의실
업무·창업 시설	(남해청년센터 바라) 창업공간 대관, 교육·멘토링·컨설팅 제공

■ 인구구조 특성(인구파라미드)

- 대상지(남해군) 인구구조: 총 39,832명(2024), 65세 이상 41.8%, 14세 이하 9.2% / 노령화지수 454.3



- 생활인구(남해군): 체류인구 월평균 235,188명으로 등록인구 대비 5.8배, 타시도 거주자 비중 66.8%로 외부 방문객 중심의 관광지역, 1일 체류 52.9%, 평균 체류일수 2.4~2.8일의 단기체류 패턴

■ 프로그램 및 정책지원 요소

구분	내용
프로그램	(관광/휴양) 남해 워케이션(숙박비 5만원/박), 마늘한우축제, 독일마을맥주축제
정책 지원	(지역살이) 태어났으면 남해살이(15~50일, 숙박 5만원/일), 두모마을 체험(개매기·바지락·선상낚시) · (창업/일자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최대 500만원), 남해청년센터 바라 창업지원

3. 생활권 현황



출처: 박성남 외(2024, p.315~317),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네이버지도(<http://map.naver.com> 검색일: 2025.08.31.) 참고 및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사진은 연구진 촬영

5. 종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4장에서는 전남 강진군, 부산 동구, 경남 남해군을 대상으로 생활거점 조성·운영 특성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세 지역은 각기 다른 지역 여건과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생활거점이 체류, 관계 형성, 정착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핵심 매개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다.

■ 생활거점 조성의 주요 특징과 성과

세 지역 모두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중심의 공간 조성 방식이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강진군 병영마을은 빙집 20채를 활용한 마을호텔·체험공간 조성하고, 4도3촌 스테이, 푸소(FUSO) 농가 숙박 등 지역자원 기반의 다양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귀농사관학교의 약 70% 정착률과 빙집 임대주택을 통한 60세대 정착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은 산복도로 도시재생 기반 위에 이바구캠프, 이바구플랫폼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청년창업·숙박·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복합거점을 구축하였다. 10개의 청년창업팀이 정착해 공간을 운영 중이며, 공공-민간-지역 청년을 연결하는 창업 생태계가 자리 잡았다.

남해군은 돌창고, 두모마을, 소도읍 등 민간주도 생활거점이 확장되며 청년 약 70명이 이주하는 성과를 보였다. 문화예술 기반 창업, 체험프로그램, 워케이션 공간 등이 자생적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물리적 공간 조성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생활인구를 정착 인구로 전환하는 핵심 매개체임을 보여주었다.

■ 생활인구 정착의 성공요인

세 지역에서 확인되는 정착 성공요인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인센티브와 주거비 부담 완화이다. 강진군은 만원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 육아수당 등 직접적 비용 지원이 정착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고, 부산 동구는 청년창업공간에 대한 인테리어·기자재 지원, 청년공간 운영의 수익공유제 등이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였다. 남해군은 빙집재생사업, 청년 월세 지원 등으로 체류 및 정착 초기 주거·창업 비용을 경감하고 있었다.

둘째, 중간지원조직 및 운영 플랫폼 역할이다.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은 (주)공공플랜이 행정-청년-사업

자 간 조율자로서 거버넌스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내 다양한 사업을 연계·기획하여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다. 남해군은 공식적인 조직보다 마을이장, 사무장, 지역문화기획자 등의 중간 매개자가 관계 형성과 체류·정착 경로의 실질적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관계망 기반의 주민 수용성과 네트워크이다. 강진군과 남해군에서는 지역 주민의 포용성, 마을 기반 멘토링 구조가 정착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부산 동구는 청년 창업자 간 상호부조 문화가 형성되어 정착 생태계의 지속성을 높이고 있었다.

■ 한계와 개선과제

세 지역 모두 생활거점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확인되었다.

첫째, 기초생활인프라 부족 문제이다. 소아과, 산부인과 부재, 대중교통 취약은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정착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과 생활안전 문제 역시 생활기반 마련에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둘째, 운영 지속가능성의 불안정 문제이다. 공공주도 사업의 의존도 높은 곳에서는 지자체장 교체 시 정책 변동 위험이 존재하며, 행정재산의 민간위탁 사업은 위탁기간 종료 이후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다. 민간주도 모델은 자생적·안정적 사업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가 흔들릴 경우 취약성에 노출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한계이다. 인구감소지역 대다수가 농촌지역 또는 쇠퇴지역이며, 생활인구를 위한 숙박·주거시설이 사실상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특례나 공유숙박 실증특례 등을 통한 일부 규제 완화가 적용되고는 있으나, 생활인구 확대 전략이 확산됨에 따라 관련 제도적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적 시사점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된 바와 같이, 생활거점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첫째, 생활거점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공공과 민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공공은 초기 앵커 시설 구축, 법적 기반 마련, 빙집 확보 등 기반 조성에 집중하고, 민간은 창업, 운영, 관계망 형성 등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확산 주체가 되는 구조가 효과적이다.

둘째, 지역 특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사업모델 설계가 필요하다. 사업모델은 지역 여건과 생활인구 유형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계층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상별 세분화된 전략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정착 효과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정착이 요구된다. 민간 참여 여건 마련, 전문 운영기관 도입 등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제도화하여 초기 공공지원 이후에도 생활거점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규제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공유숙박 운영방식, 도시민박업 및 농어촌민박업의 운영 개선, 빈집 매입·철거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규정 개선 등 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의료·교육·교통 등 기초 인프라를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구축함으로써 생활인구의 체류와 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생활거점은 단순한 시설 공급을 넘어 주거, 일자리, 관계망 형성 지원 등이 결합된 통합 플랫폼이자, 생활인구에서 정주인구로 전환을 매개하는 장치이며, 지역 특성 기반의 자생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기반이다. 향후 생활거점 정책은 제도적 기반 정비, 운영모델의 지속가능성 확보, 생활인프라 확충, 대상별 맞춤형 설계가 추진될 때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38] 생활거점 사례 종합분석

구분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경남 남해군
개요	지역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지역 • 인구 1,487명 • 강진읍 외곽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지역(구릉지) • 인구 85,911명 • 부산역 인접 교통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지역(도서) • 인구 39,832명 • 관광지 밀집 	
	생활인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인구배수 4.2배 • 고령층 중심, 타시도 유입, 단기 체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인구배수 6.4배 • 청년층 중심, 근거리 생활권 유입, 중장기 체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류인구배수 5.8배 • 고령층 중심, 동일시도 비인접 유입, 단기 방문형 	
생활 거점	공간 (HW)	주요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진푸소 4개소, 병영스테이 2개소 • 병영양조장, 병영오일장 청년 창업공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바구캠프(게스트하우스) • 이바구플랫폼(청년창업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창고 • 두모마을(서울농장), 팜프라촌 • 소도읍 남해 등
		조성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도 • 빈집 20채 리모델링 • 도시재생사업, 빈집 리모델링, 청년마을 공유주거 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력 • 노후건물 9채 리모델링 • 산복도로 르네상스, 도시재생, 청년 창업주거공간 조성사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 • 자생적 공간 조성 • 민간 자본·운영
		운영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생지원센터 • 강진푸소협동조합 •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 • (주)후일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공공플랜 • 청년창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창고 • 마을운영위원회 • (주)팜프라
	주요 프로그램 (S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푸소(FUSO) 농촌체험 • 넥스트로컬 청년창업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체류형 귀농시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 청년활동공간 활성화 • 어쩌다 사장 창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해 워케이션 • 태어났으면 남해살이 • 두모마을 체험프로그램 	
성과 및 한계	정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원주택(월 1만원) • 청년주거비(월 25만원) • 강진형 육아수당(월 6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청년 주거지원 • 청년월세지원(19~34세) • 창업공간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재생사업 • 청년월세지원(월 15만원) • 모다드림 청년통장 	
	정착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시관학교(70% 정착) • 빈집임대: 60세대 150명 전입 • 넥스트로컬: 청년 1팀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팀 약 10개팀 정착 • 하랑플랜, 렉카피쉬 등 성장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60~70명 연쇄이주 • 카페, 책방, 베이커리 창업 • 지속구거리 상가 활성화 	
	성공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정착 지원(월 1만원 주거 + 육아수당 월 60만원) • 마을 내 다수의 국비지원사업 투입 및 시너지효과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과 청년 생활인구의 중간지원 역할(주)공공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배 이주자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규 생활인구 창출 • 지역자원 활용 및 브랜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한계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외 산업기반 부족 • 소아과·산부인과 등 기초생활인프라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 접근성 부족 • 창업공간의 1년 단위 재계약으로 청년창업자 불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주거비용과 중장기 거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 부족 	

출처: 연구진 작성

제5장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운영방안

1. 생활거점 조성 기본방향
2.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사업 추진 방향
3.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1. 생활거점 조성 기본방향

1) 생활거점 조성의 목표 및 기본원칙

■ 생활거점 조성의 목표 및 필요성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생활거점 조성의 목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과 확대를 촉진하고, 나아가 중장기 정착으로 이어지는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는 관광객 대상 숙박시설이나 이주민을 위한 단순 주거공급과는 달리, 지역에서의 생활기반,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가 융합된 통합거점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3장의 생활인구 특성 분석(군집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관광객에 한정되지 않으며, 연령대, 체류기간, 유입범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체류특성의 차이는 지역 내 경제·사회활동 참여 방식, 주거·돌봄 등 생활인프라 수요, 지역 내 소비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수준 등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생활인구 확대 정책은 단순한 인구 유입을 넘어,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머무르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이행경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거점은 생활인구가 지역에 머물며 활동할 수 있는 매개공간으로 기능해야 한다. 실제로 강진의 '푸조'와 '성하객잔', 일본 시오지리시의 'en.to' 세어하우스 등은 다양한 체류 수요를 수용하는 주거시설로서 지역 내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결합하여, 외부 인구가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경로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생활거점 조성의 기본원칙

생활거점은 지역 여건과 생활인구의 유형별 특성, 향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운영방안과 연계된 조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세 가지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① [공간 조성 원칙] 지역 여건과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간 설계
- ② [운영 원칙]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 ③ [사업 추진 원칙] 사업규모의 적정화 및 정책 연계성 강화

- 공간 조성 원칙: 지역 여건과 생활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공간 설계

생활거점은 인구감소지역의 물리적 환경, 인구구조, 생활인구의 체류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 즉,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전략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생활거점의 공간적 적합성과 기능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생활인구의 다양한 체류 수요를 수용하며 지역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다.

첫째, 입지 특성별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 중소도시 구도심이나 읍·면 소재지 등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은 생활인프라와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집약·복합된 공간 조성으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반면, 농촌지역은 마을 내 산재한 빙집, 빙창고, 폐교 등을 활용해 세어하우스, 공동작업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분산 배치하고 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조성할 수 있다. 도시 외곽이나 해안 지역은 생활권·마을 간 연계를 강화하여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등 입지 특성에 부합하는 조성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생활인구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다. 생활거점은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등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 관광객을 위한 숙박·체험공간, 체험형 인구를 위한 코워킹·코리빙 시설, 관계형 인구를 위한 커뮤니티 기반 주거, 정기형 인구를 위한 안정적 주거 및 정착지원 등 유형별 차별화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을 강화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거점은 신축보다 빙집, 빙점포, 폐교·창고 등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함으로써 조성 비용을 절감하고 공간 활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농업·어촌자원, 역사문화자원, 관광자원 등 지역 고유 자원과 연계하여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단순 체류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핵심시설 조성 및 생활권 연계가 필요하다. 생활거점이 생활기반,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가 융합된 통합거점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숙박·주거시설뿐 아니라 코워킹, 공유주방, 세탁실, 커뮤니티 라운지 등 일상생활 기능과 공동체 기능을 지원하는 핵심시설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모든 기능을 단일 공간에 담기 어려운 만큼, 생활권 단위의 소매·편의시설, 문화·공공시설과 연계하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 의료·돌봄·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생활인구와 지역주민 모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필수 기반이 된다.

- 운영 원칙: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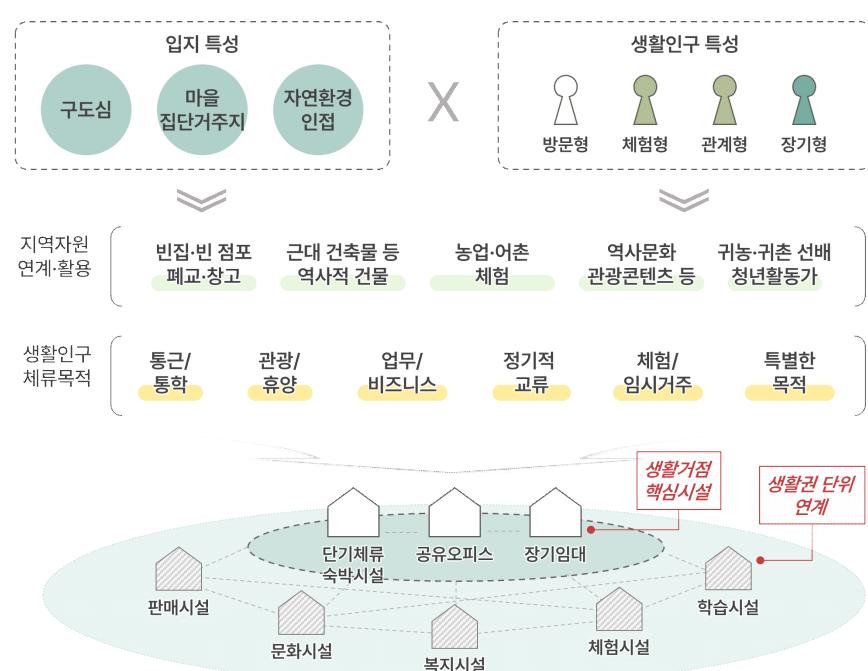
생활거점 조성은 운영을 전제로 한 설계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용도지역, 건축물 유형, 시설 기능, 업종 구성 등은 향후 운영주체와 운영방식, 수익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조성단계부터 운영주체, 운영재원, 프로그램,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생활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 민간사업자, 사회적경제조직,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 간 역할 분담과 협력구조를 명확히 설정한다. 공공은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은 창의적 운영을 담당하며, 주민은 프로그램 기획·참여를 통해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등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익모델과 공공지원을 결합한 재정 확보방안과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해 운영의 지속성과 지역 공동체의 자생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사업 추진 원칙: 사업규모 적정화 및 정책 연계성 강화

생활거점은 단순한 시설 조성사업이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인구규모, 생활인구 유입 잠재력, 재정 여건, 지역자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단계별 조성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생활거점이 실질적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류인구 증가율, 재방문율, 지역소비 확대,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율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도시재생,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을 래, 농촌소멸대응 빙집재생 등 기존 중앙·지방정부 사업의 연계를 통해 예산 중복 투입을 방지하고 사업 간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생활거점 사업을 정책 간 협력 플랫폼이자 지역 재생의 핵심사업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



[그림 5-1] 생활인구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생활거점 조성 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2) 생활거점의 핵심기능

생활거점은 체류형 생활인구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하고, 지역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①체류지원, ②활동지원, ③관계·정착지원, ④다양한 거주방식 지원의 네 가지 핵심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체류지원

체류지원 기능은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양한 체류 기간에 대응하는 유연한 거주 옵션과 안정적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활인구의 체류 목적과 기간에 따라 게스트하우스·민박, 셰어하우스, 단기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 대안을 제시하고, 공유주방, 세탁실, 휴게공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입주자 간 교류를 촉진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 체류 기반과 지역사회 접점을 동시에 형성한다. 최근에는 워케이션, 두지역살이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체류형 복합공간 조성 사례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생활인구의 장기 체류 및 재방문 유인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 활동지원

활동지원 기능은 생활인구가 지역 내에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업무·창업·학습 인프라와 지역자원 연계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유오피스, 공동작업장, 로컬 비즈니스 지원공간 등은 업무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지역 교류와 문화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일본 시오자리시의 스나바(Sunaba), 제주 세화의 질그랭이거점센터는 공유오피스 기능과 함께 지역 커뮤니티 허브로서 체류인구와 주민 간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부산 동구 이바구플랫폼, 남해군 돌창고 등은 로컬 창업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와 생활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즉,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은 지역자원과 연계된 생산적 활동 생태계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 관계·정착지원

관계·정착지원 기능은 생활인구가 단순 방문을 넘어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장기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 참여하는 교류 프로그램, 지역축제,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망을 형성하고 지역 내 사회적 자본을 확장한다. 또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생활인구를 위해 주거·일자리·교육·의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착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육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한다. 이러한 관계 및 정착 지원은 생활인구의 재방문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정착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다양한 체류유형에 대응하는 거주방식 지원

생활인구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여, 두지역거주, 계절성 체류, 다거점 거주 등 새로운 형태의 거주방식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기능이다. 이는 한 지역에 정주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역과 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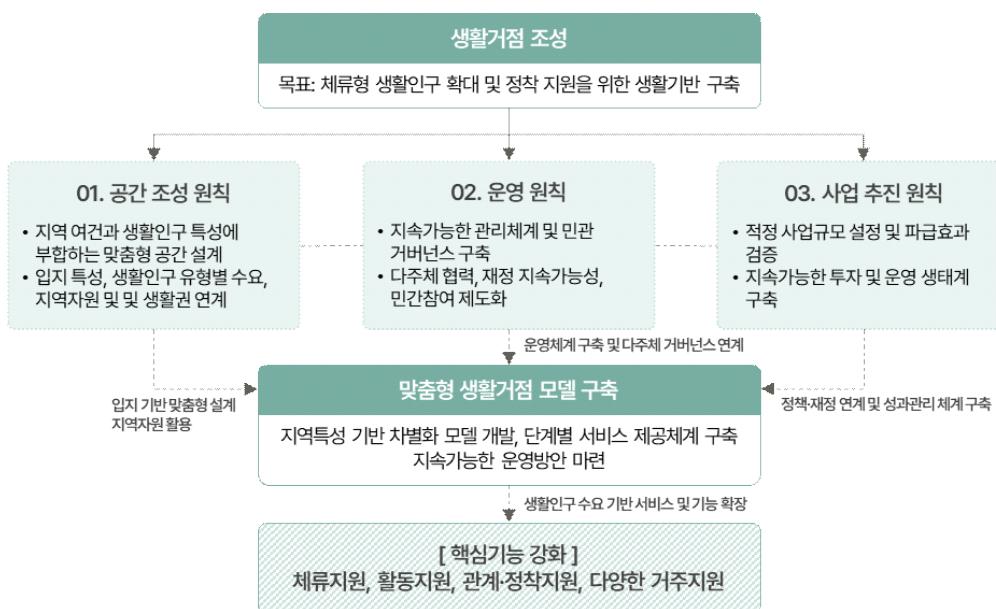
일본은 「광활법」 개정을 통해 두 지역거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로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두 지역살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거주방식과 체류기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계절성·순환형 체류에 대한 수요는 공공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거주방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네 가지 기능은 생활인구 유형(방문형·체험형·관계형·장기형)에 따라 선택·조합될 수 있으며, 지역 특성과 정책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장·특화될 수 있다. 결국 생활거점은 다양한 체류 형태와 수요를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할 필요가 있다.

[표 5-1]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의 핵심 기능

기능	주요 내용	세부 요소
체류지원	단기~중장기 거주 옵션과 생활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한 주거 옵션(게스트하우스·민박, 세어하우스, 단기임대주택) 생활편의 지원(편의시설·커뮤니티 프로그램)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수용(워케이션, 두 지역살이 등)
활동지원	경제·사회적 활동 기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인프라(코워킹·회의실·인터넷) 창업 지원(공간·멘토링·네트워킹) 지역연계 활동(로컬 인턴십 일자리 연계)
관계·정착지원	지역사회 관계 형성 및 지역 정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커뮤니티 형성(주민-생활인구 교류, 공동활동) 정착지원(정주 컨설팅, 보육·교육·의료 등 서비스 연계) 민관 협력 기반(거버넌스 플랫폼)
다양한 거주방식 지원	두 지역거주, 계절성·다거점 거주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연한 이용(계절별 재방문, 주말·휴가형 체류) 정책 연계성(제도 기반 마련)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5-2] 생활거점 조성 기본방향

출처: 연구진 작성

2.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사업 추진 방향

1) 생활인구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생활거점 사업유형 설정

■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를 통한 생활거점 유형화

생활거점 조성 시 해당 지역을 선호하는 생활인구 유형과 체류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중소도시, 농촌마을, 해안·산간 지역 등 입지 여건이 다양하며, 각 지역이 유인 할 수 있는 생활인구의 특성 또한 상이하다. 따라서 일률적인 생활거점 모델을 적용하기보다는, 지역 특성과 생활인구 유형을 교차 분석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3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활인구 수요와 입지 조건을 교차 분석하여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를 작성하고, 이를 생활거점 유형 구분을 위한 분석 도구이자 사업모델 제안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표 5-2 참조).

- 입지별 생활인구 특성 및 생활거점 구성방안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소도시 구도심 지역 등은 교통과 생활인프라가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 체험형과 관계형 생활인구의 선호도가 높으며, 장기형의 정주 수요도 집중되는 곳이다. 체험형은 체험시설과 프로그램 간 연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관계형은 안정적 주거시설을 기반으로 정기적인 지역 내 활동과 주민 교류를 중요시한다. 반면, 장기형은 임대주택과 코인세탁실, 공유주방 등 생활편의시설을 필요로 하나, 시설 확충보다 주거비 지원과 같은 정책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입지에서는 유휴건물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거점 조성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는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감을 중시하고 이주·정착을 검토하는 관계형과 장기형 생활인구가 고려할 수 있는 입지이나, 교통 편리성이나 생활인프라 부족이 주요 불편사항으로 나타난다. 임대주택과 함께 귀농·귀촌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관계형에게 필요한 주민 교류·네트워킹 프로그램, 장기형에게 필요한 응급·돌봄 인프라와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지에서는 대규모 단일 시설 조성보다 마을 내 여러 공간을 분산·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자연환경 인접지역(도시 외곽·해안마을 등)은 관광·휴양 목적의 방문형 생활인구 선호도가 높으며, 계절성 체류나 두지역살이 등을 원하는 장기형 생활인구도 일정 수요를 보인다. 자연환경은 만족도가 높으나 교통 접근성과 편의시설 부족이 공통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방문형을 위한 숙박시설과 학

습·체험시설, 계절형 이벤트를 운영하고, 장기형을 위해 임대주택과 의료·돌봄 서비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지원과 더불어 생활 안전망 구축, 복지 및 교육 서비스 연계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표 5-2]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인구(수요) × 입지 매트릭스

생활인구 입지	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 (중소도시 구도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호텔, 게스트 하우스), 판매시설, 생활편의시설 관광/휴양,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레저/웰니스 관광 응급·돌봄 인프라, 생활안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민박, 체험주택), 주거(셰어하우스, 공공임대), 지역안내·정보공간, 소통공간 한달살기/살아보기, 귀농·귀촌체험,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주거비지원, 주거공간 제공, 응급·돌봄 인프라, 생활안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임대주택), 창업 지원공간, 창작·제작공간, 문화시설, 복합문화공간 일자리연계, 로컬창업, 일경험·인턴, 학습활동, 주민 교류 네트워킹 주거공간 제공, 주거비 지원, 응급·돌봄 인프라, 커뮤니티 활성화 <p>(유형1) 도심 복합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임대주택), 생활 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일자리 연계, 일경험·인턴, 학습활동, 지역사회 참여활동, 두지역살이 주거비 지원, 주거공간 제공, 주택 수리 지원, 응급·돌봄인프라, 생활안전 서비스,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민박, 체험주택), 생활편의시설, 휴게공간 관광/휴양활동,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응급·돌봄 인프라, 생활안전 서비스,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민박, 체험주택), 학습·체험시설, 소통공간 한달살기/살아보기, 귀농·귀촌체험, 현장견학·체험학습, 지역사회 참여활동 주거비지원, 주거공간 제공, 정착상담·정보제공, 생활안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제작공간, 소통공간, 생활편의시설 학습활동, 지역사회 참여 활동, 주민교류·네트워킹, 일자리 연계 주거공간 제공, 주거비 지원, 응급·돌봄인프라, 생활안전 서비스 <p>(유형2) 마을 연계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커뮤니티시설, 복지시설 귀농·귀촌체험, 두지역 살이, 지역사회 참여활동 주거비 지원, 주거공간 제공, 주택 수리 지원,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자연환경 인접지역 (도시외곽·해안마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민박, 체험주택), 생활편의시설, 지역안내·정보공간 관광/휴양활동,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레저/웰니스 관광 응급·돌봄 인프라, 생활안전 서비스,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박(민박, 체험주택), 생활편의시설, 학습·체험시설 한달살기/살아보기, 귀농·귀촌체험, 레저/웰니스관광, 현장견학·체험학습 주거비 지원, 주거공간 제공, 정착상담·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일자리 연계, 학습활동, 현장견학·체험학습, 문화·관광지 탐방 주거공간 제공, 주거비 지원, 응급·돌봄인프라, 생활안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임대주택), 생활편의시설, 건강·보건시설 레저/웰니스 관광, 귀농·귀촌체험, 학습활동 주거비 지원, 주거공간 제공, 주택 수리 지원, 응급·돌봄 인프라 <p>(유형3) 생활권 연계형</p>

*매트릭스 내 내용은 제3장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순위를 중심으로 작성

출처: 연구진 작성

• 매트릭스의 정책적 의의 및 활용 방향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는 생활거점 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역 맞춤형 사업 설계가 가능하다. 지역의 입지 특성과 유입 잠재력이 있는 생활인구 유형을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실효성 높은 생활거점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획일적 모델 적용이 아닌,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둘째, 예산 배분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사업 규모와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본 매트릭스는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먼저, 입지 여건과 생활인구 유형을 파악하고, 매트릭스 교차점을 확인하여, 공간 및 프로그램, 정책지원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대표 사업유형 도출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사업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거점 조성 시 고려되는 대표적 입지 유형(구도심, 농촌, 해안마을 등)과 정책 수요가 높은 생활인구 유형(청년 유입, 귀농·귀촌, 두지역거주), 공간 조성 방식의 차별성(집약, 분산, 연계·네트워크), 정책사업으로서의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심 복합형’, ‘마을 연계형’, ‘생활권 연계형(권역형)’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유형 외에도 지역별 상황에 따라 입지와 생활인구 타깃을 유연하게 선택·조합할 수 있다.

■ (유형1) 도심 복합형 생활거점

도심 복합형 생활거점은 소도시 구도심이나 읍·면 소재지 등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체험형·관계형 생활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통합형 생활거점이다. 구도심은 과거 상업·업무 중심지였던 곳이 신시가지 개발과 상권 이동으로 공실률이 높아진 지역이지만, 생활인프라와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여 도시적 편의성을 선호하면서도 합리적 비용을 추구하는 청년층과 창업가들에게 매력적인 입지로 작용할 수 있다.

• 조성·운영 목표

도심 복합형 생활거점은 워케이션, 로컬 창업, 디지털 노마드 등 새로운 체류 수요와 연계하여, 지역에서의 단기 체류 및 경험을 지원하고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휴건물을 재생·활용하여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업무·문화·커뮤니티 기능을 집약하여 체류·생활편의를 제공한다.

• 주요 대상 생활인구

도심 복합형 생활거점은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생활인구를 주요 타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체험형(단기형) 생활인구는 워케이션 목적의 단기 체류자로 원격근무가 가능한 IT, 디자인, 콘텐츠 직종 종사자이거나 지역 템파 및 로컬 체험을 통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청년층 등이 있으며, 지역에 머물러 보는 경험을 증시하기 때문에 다양한 체험공간과 정보 접근성에 대한 요구가 있다. 관계형(정기형) 생활인구는 업무, 가족방문 등 반복적 체류를 기반으로 지역과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으로 이를 뒷받침 할 안정적인 주거와 생활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이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과 활동 참여도가 높아 지역에서의 정주 전환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수요층이다.

• 공간구성 및 조성방식

도심 복합형 생활거점은 구도심 내 유휴건물 또는 인접 건물군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업무, 문화, 커뮤니티 기능이 집약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이는 구도심의 양호한 기반시설과 교통 접근성을 활용하면서, 체험형·관계형 생활인구의 다양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다.

핵심시설로는 단기 방문자를 위한 게스트하우스, 체험형 체류자를 위한 민박·체험주택, 1개월 이상

체류자를 위한 세어하우스, 정기 방문자나 중장기 체류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 체류 기간별 선택이 가능한 다층적 숙박·주거시설을 구성하여 체류-정착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공유오피스, 회의실, 창업지원공간 등 업무·창업시설을 갖추어 워케이션, 로컬 창업, 프로젝트 기반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스튜디오나 공동작업장 등 창작·제작공간과 이를 전시·공유할 수 있는 소규모 문화공간 및 휴게공간을 연계하여 복합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입주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는 공용공간에는 생활 편의시설(코인세탁실, 공유주방)과 커뮤니티시설(라운지, 지역안내소)의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

도심 복합형 생활거점은 모든 기능을 단일 공간에 집중하기보다 입지적 장점을 고려하여 주변의 도시 인프라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도보권 내 편의점, 식당, 카페, 로컬상점 등과 연계하여 생활인구의 일상적 소비가 구도심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광역교통 거점과의 접근성을 활용하고, 시내버스, 자전거 및 차량공유 서비스 등 지역 내 이동수단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연계 가능한 국비지원사업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생활인구 확대 기반을 조성하는 ‘고향을래사업(행정안전부)’,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인구 유입·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사업’ 등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재원으로, 지역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생활인구 체류공간 사례: 전북 완주군 고산 ‘다음스테이’

- 사업 :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 위치/면적 :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157-3 / 797㎡(241평)
- 공간구성 : (1층) 카페, 공유주방, (2층) 스테이(4개실)
- 운영방식 : (주)작당 운영, 고산다움 협동조합 소유
- 주요사업 : 청소년 진로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지역기반 진로탐색 프로젝트(로잉 프로젝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청년 ‘같이가게’), 지역살이를 지원하는 퍼머컬처 교육,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2021)



출처: 장민영 외(2021, p.183 재인용), 고산다움 추진현황, 협동조합 이장, <https://e-jang.net/37?category=922673> (검색일 : 2021.5.31.),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2021, p.7), 다음스테이(<https://nexstay.bizplace.kr/gallery.php>, 검색일: 2021.10.15.), 고산다움협동조합 사진 제공

■ (유형2) 마을 연계형 생활거점

마을 연계형은 농촌이나 소규모 마을의 고유한 공동체 기반과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관계형·장기형 생활인구의 접근적 정착을 지원하는 생활거점 모델이다. 단일 시설 중심이 아닌 마을 내 여러 공간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분산형 조성 방식을 통해 마을 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조성·운영 목표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도시민들이 농촌에 바로 정착하기에는 정보 부족, 관계 형성의 어려움, 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한다. 마을 연계형 거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 적응 과정과 주민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 기회를 제공하며, 빙집, 폐교 등 유휴공간을 재생·활용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주요 대상 생활인구

마을 연계형 생활거점은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생활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다. 관계형(정기형) 생활인구는 농촌체험이나 로컬유학, 가족 연고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다. 주말농장 운영, 계절성 체류, 은퇴 후 이주 준비 등 다양한 동기를 갖는다. 이들에게는 중장기 체류를 위한 임시 거처, 농업기술 교육, 지역 정보 제공, 주민과의 교류 기회가 필요하다. 장기형 생활인구는 귀농·귀촌 예정자, 가족 단위 예비 이주자 등으로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서 지역사회 참여 의지가 높다. 이들은 안정적 주거, 생업 기반 마련, 자녀교육,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며, 시설 확충보다 주거비 지원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징이 있다.

• 공간구성 및 조성방식

마을 연계형 생활거점은 마을 내 산재한 빙집, 폐교,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소규모 거점을 분산 배치하고 이들을 상호 연계하는 방식으로 조성한다. 이러한 방식은 마을의 생활환경과 공동체 특성을 존중하면서 주민과 생활인구 간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유도한다.

핵심시설로서 숙박·주거시설은 빙집을 리모델링하여 세어하우스나 공유주거 등을 조성하여 관계형 생활인구의 체류를 지원하고, 가족 단위 장기형 생활인구를 위한 단독주택 등을 조성한다. 마을 곳곳의 빙집을 활용하여 주거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생활인구가 특정지역에 몰리지 않고 마을 전반에 분포하며, 주민과의 일상적 접촉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업무·창업시설은 폐교나 빙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공동작업장이나 공방, 스튜디오 등으로 조성하여 생업활동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커뮤니티시설은 폐교를 리모델링하거나 마을회관 내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 이용하는 공용공간이자 소통공간으로 활용한다. 생활편의시설도 마을회관 등 마을 중심부 인근에 배치하여 주민과 생활인구 간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분산형 배치는 마을의 유휴자원을 단계적으로 재생하며, 생활인구가 마을 공동체의 이방인이 아닌 일원으로 자리 잡도록 돋는다.

마을 연계형 생활거점의 핵심은 마을 공동체 자원과의 긴밀한 연계이다. 주민 총회, 공동 식사, 명절 행사 등 마을행사 참여와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공동 농작업 등 마을 공동활동에 함께 참여하면서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공동 텃밭, 체험농장, 주말농장을 운영하여 생활인구가 농업 활동에 참여하고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귀농 경험을 쌓도록 지원한다. 읍·면 소재지와의 연계 및 마을 순환버스·공유차량 운영 등을 통해 생활서비스 부족 문제를 보완한다.

• 연계 가능한 국비지원사업

대표적으로 빙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빙집을 재생하여 체류·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농촌소멸대응 빙집재생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이 있으며, 4도3촌 라이프 확산과 농촌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사업(농림축산식품부)’이 있다. 어촌마을에서는 빙집 리모델링, 공공주택 등 청년 유입을 위한 주거와 주민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해양수산부)’을 활용할 수 있다.

※ 마을 연계형 생활거점 사례: 강진군 병영마을

[빙집 활용 마을 호텔 병영찬家]

- 목 적 : 빙집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인구 유치 등 다양한 인구유입 시범프로그램 운영공간으로 활용
- 내 용 : 마을에 산재한 빙집을 숙박과 서비스가 가능한 마을호텔로 조성(총 20개소)
- 위 치 : 병영면 한골목길 1외
- 사업비 : 도시재생사업비(거점호텔 조성) + 지방소멸대응기금(빙집 리모델링)
- 공간 확보방안 : (매입) 방치된 빙집을 군에서 매입, 리모델링 공사 후 마을호텔로 활용, (임대) 강진군 ↔ 소유자 사용대차계약(무상사용), 군이 리모델링 공사 후 마을호텔로 활용



출처: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2025, pp.20-21)

■ (유형3) 생활권 연계형(권역형) 생활거점

생활권 연계형은 도시 외곽지역이나 해안마을 등 자연환경과 인접한 지역에서 두지역거주자, 계절 근로형 생활인구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는 권역 단위 네트워크형 생활거점 모델이다. 개별 마을 단위의 한계를 넘어 읍·면 전체 또는 여러 마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서비스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조성·운영 목표

최근 두지역거주, 디지털 노마드, 계절 근로 등 유연한 거주 패턴이 확산되면서, 자연환경의 매력과 도시적 편의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체류방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생활권 연계형 생활거점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여 권역 단위의 균형 발전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사업유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지역 내 부족한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권역 단위로 보완·연계하고,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정주·생활인프라를 특화하여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장기 체류·정착 거점으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 주요 대상 생활인구

생활권 연계형 생활거점은 장기형, 관계형(정기형) 생활인구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한다.

장기형 생활인구는 은퇴 이후 자연 속에서 여가 중심의 생활을 희망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자연친화

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젊은 가족 등 다양한 수요층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안정적인 장기 주거, 기초 의료·돌봄 서비스, 교육 접근성, 문화·여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다.

관계형(정기형) 생활인구 중 두 지역 거주자는 도시와 농촌 등 두 지역을 오가며, 계절이나 근로 여건에 따라 거주지를 유연하게 이동한다. 이들은 단기 또는 중장기 유연한 숙박·주거시설, 유동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교통·통신 인프라, 생활SOC 접근성이 중요하며, 지역 간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한편, 계절 근로형 생활인구는 농번기·어업 시즌, 축제·레저 성수기 등 특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일과 생활을 병행하는 인구로, 유연한 단기 거처와 함께 의료·돌봄 서비스, 생활 안전망 등에 대한 수요가 있다.

- 공간구성 및 조성방식

생활권 연계형은 읍·면 전체 또는 여러 마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중심 생활거점과 기초 생활거점의 위계 체계를 기반으로 조성한다. 중심 생활거점은 주거, 업무, 복지, 문화 등 종합 기능을 갖춘 허브로서 생활인구의 관리·지원을 담당하며, 기초 생활거점은 마을의 자원과 여건에 따른 보완·특화 기능을 설정하여 마을 단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생활서비스를 권역 단위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중심 생활거점은 읍 소재지 또는 권역의 중심마을에 두며, 행정서비스와 생활인구 지원 기능을 집적한다. 장기형 생활인구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보건소 등 기초의료시설, 생활SOC를 집적하여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기초 생활거점은 개별 마을 단위에 해당하며, 각 마을이 보유한 지역자원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기능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농업 기반이 우수한 마을은 농업 체험을 특화하여 체험농장, 농산물 가공 공동작업장, 직거래 판매장을 갖춤으로써 관계형 정기 방문자와 귀농 준비 단계의 장기형 생활인구를 지원한다. 역사문화자원이나 자연경관이 뛰어난 마을은 문화예술 창작 기능을 특화하여 예술가 레지던시, 공방, 전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창작활동 중심의 관계형 및 장기형 생활인구를 유치할 수 있다. 계절 근로자를 위한 공동기숙사는 농번기나 어업 시즌에는 계절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운영하고, 비수기에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단기 임시주거 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함으로써 시설의 연중 가동률을 높이고 지역 내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권역 내 거점 간 연결은 생활권 연계형 모델의 핵심 요소이다. 먼저, 물리적 연결을 위해 중심 생활거점과 각 기초 생활거점을 잇는 권역 순환 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순환버스 운행으로 거점 간 이동성을 확보하고, 자전거 도로와 공유자전거 설치, 수요가 적은 시간대나 노선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여 교통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생활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중심 생활거점에 의료·복지, 교육, 문화 서비스를 집적하고, 마을 단위에 서는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시설 정보 제공 및 통학 지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고령자 복지시설은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공공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등 문화·여가시설의 권역 단위 설치 및 안내를 통해 생활인구가 생활권 단위에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돋는다.

이러한 공간구성과 조성방식을 통해, 개별 마을의 자원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권역 전체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장기형 및 관계형 생활인구의 체류와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연계 가능한 국비지원사업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지역활력타운사업 등을 활용하여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마을 단위의 주거 및 생활인프라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으며, 고향을래사업을 통해 기초 생활거점별 특화기능 도입이나 중심 생활거점 내 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광역지원 계정은 시·군을 넘어 광역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여러 읍·면을 포괄하는 권역형 생활거점 조성 시 적한 재원이다. 이러한 국비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조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권역 단위의 통합 생활거점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안): 주거·일자리·커뮤니티 통합 모델

- (배경 및 목표) 농촌 고령화와 빈집 증가로 인한 마을 공동화, 소멸위기 심화에 대응하여 이주 희망자를 먼저 선발하여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 프로그램 설계 전 과정에 참여시켜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 해소
 - 수요자 맞춤형 주거 공급, 마을 자원 기반 수익사업 연계, 체계적 관계 형성 지원, 행정-중간지원조직-마을 협력 기반 운영체계
- (추진단계) 기반구축 및 대상지 선정 ⇒ 맞춤형 주거·일자리 설계 ⇒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로 전환
- (공간 조성 및 사업 추진 방향)
 - 주민참여 의지가 있는 마을 대상, 이주민 및 원주민 수요 파악
 - 1인 가구 수요 고려한 신축(모듈러 주택), 빈집 리모델링(소유자 지원) 등을 통한 주거 설계
 - 주민과 귀촌인 갈등 방지 및 교류·유대감 형성을 위한 주거 공간 조성 배치 전략 검토(밀집형-분산형 배치 검토)
 - 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공간 조성(마을회관 리모델링, 유류공간 활용)

출처: 남해군(2025b),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표 5-3] 사업유형별 생활거점 조성방향

유형1 도심 복합형	입지특성	• 중소도시 구도심 • 읍·면 소재지, 교통·인프라 양호	주요 대상 생활인구	• 체험형(워케이션, 로컬 체험 등) • 관계형(반복 체류 통근·통학, 가족연계 방문자 등)
	특화방향	• 기능의 집약과 복합화 • 도시 인프라·상권 활용 극대화	정책과제	• 구도심 빈집 활용 제도 개선 • 창업·문화·커뮤니티 활동 지원
	조성방식	• 빈집 등 유휴공간·노후 건물 리모델링	추진주체	• 지자체 + 민간투자
	핵심시설	• (속박·주거) 게스트하우스(단기), 세어하우스·코리빙(중기), 단기 임대주택(정기, 중장기) • (업무·창업) 공유오피스, 회의실, 세미나실, 창업지원공간, 창작·제작공간 • (생활편의) 공유주방, 코인세탁실 • (커뮤니티·문화) 커뮤니티 라운지, 문화시설		
	외부연계 시설/ 서비스	• 주변 도시 인프라 적극 활용 • 주변 상권(편의점, 카페, 식당) • 대중교통(버스, 기차역), 공유자전거 • 생활SOC, 공공시설, 문화시설 연계		
	유형2 마을 연계형	• 농·어촌마을, 집단 거주지 • 공동체 기반 보유	주요 대상 생활인구	• 관계형(반복 체류, 두지역거주자, 농촌체험) • 장기형(귀농·귀촌 준비, 가족 단위 이주 준비)
유형3 생활권 연계형 (권역형)	특화방향	• 시설 분산 배치 및 네트워크 연계 • 공동체 기반 단계별 정착 지원	정책과제	• 빈집 활용 제도 개선 • 주민 참여형 운영 및 지역 조직 육성 제도적 기반 마련
	조성방식	• 유휴공간(빈집, 폐교, 회관) 리모델링	추진주체	• 지자체 + 주민조직(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핵심시설	• (속박·주거) 게스트하우스, 세어하우스, 임대주택 • (업무·창업) 공동작업장(농산물 가공, 목공 등), 창작·제작공간(공방, 스튜디오) • (생활편의) 공유주방, 공용 세탁실 등 • (커뮤니티·학습) 마을학교, 커뮤니티센터, 체험농장		
	외부연계 시설/ 서비스	• 마을공동체 자원 활용(마을회관, 경로당, 공동텃밭 등) • 읍·면 단위 생활SOC 및 공공서비스(보건지소, 학교, 농업기술센터 등) 연계 • 마을 순환버스, 공유 차량, 수요응답형 버스 등 이동 지원		
	입지특성	• 도시 외곽지역, 해안·산간마을 • 자연·관광자원 풍부	주요 대상 생활인구	• 장기형(두지역거주자, 은퇴자, 계절근로자)
	특화방향	• 중심-기초 생활거점 네트워크 • 지역자원 기반 마을별 특화 기능 • 권역 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정책과제	• 공공·민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 두지역거주 제도화 • 권역 단위 생활SOC·모빌리티 연계체계 구축
유형3 생활권 연계형 (권역형)	조성방식	• (중심거점) 신축 및 리모델링 병행 • (기초거점) 마을 유휴공간 리모델링	추진주체	• 지자체 + 마을 지역 공동체
	핵심시설	• (속박·주거) 임대주택, 계절 근로자 공동기숙사 • (업무·창업) 공유오피스, 회의실, 창업지원센터 등 • (행정·복지) 보건소, 건강센터, 돌봄·상담공간 • (문화·여가) 복합문화공간, 도서관, 전시·공연장		
	외부연계 시설/ 서비스	• 중심-기초 생활거점 순환교통, 마을 특화 프로그램 연계 • 생활SOC(교육·복지·문화·체육) 연계 • 권역 셔틀버스, 환승센터, 기차역·터미널 연계 • 공유차량·수요응답형 교통(DRT) 등 이동 편의성 강화		

출처: 연구진 작성

2) 생활거점 사업 추진체계

■ 추진주체별 역할 및 협력체계

생활거점 조성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다만, 생활인구의 유인 동기와 활동 방식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거점 사업은 지자체, 민간, 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기반으로 추진하며,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의사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추진주체별 역할

지자체는 사업의 총괄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중심축으로, 생활거점의 조성에서부터 운영의 전 과정에 걸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업 전략 및 계획수립, 예산 확보 및 국비사업 연계, 규제 완화나 공공부지 제공, 기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다. 또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초기 운영체계 마련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특히 생활거점의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양적 확충보다 실질적 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질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별 최소 품질 기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운영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민간사업자는 생활거점의 창의적 운영주체로서, 시설의 운영관리, 프로그램 기획·운영, 홍보·마케팅 등 전문적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주체들 간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기업,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 창업가 및 스타트업, 비영리단체 등이 주요 운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시설 운영관리, 생활인구 유치 및 입주 관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홍보 및 마케팅, 주민 및 방문자 소통창구 운영, 지역 상권 및 로컬 비즈니스와 연계 추진 등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운영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생활거점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마을 연계형 생활거점처럼 주민 주도형 운영이 핵심이 되는 사업일수록 더욱 중요하다. 주민의 참여방식으로는 운영 위원회나 주민협의체를 통해 의사결정 참여, 직접 운영주체로서의 활동, 프로그램 제공 및 공간관리 협력, 교류활동 참여, 로컬 비즈니스 협력 등 다양하다. 주민의 주요 역할은 생활인구와의 관계 형성, 갈등 조정 및 통합, 지역자원 제공, 공동체 문화 유지 등이다. 강진군 병영마을의 '강진푸조 협동조합'은 주민이 직접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대표 사례로, 주민 주도형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은 지역의 주인으로서 생활거점이 마을 공동체와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생활거점은 지역 현장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찰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 지역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한 지역을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자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도시재생, 커뮤니티 비즈니스, 공간 운영, 관광,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성과 함께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주민 특성, 기존 사업 경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를 우선 선정한다. 지역 여건과 사업 단계에 따라 실질적

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별·지속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생활거점 사업은 공공의 제도적 기반과 민간의 전문적 역량, 지역 주민의 생활 밀착성을 결합한 협력 구조로 운영되어야 한다. 업무협약, 위탁 계약,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주체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집행, 수의 구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생활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생활인구 유입 효과 창출,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 사업 추진단계 및 절차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은 지역 특성과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 유형·특성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법」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또는 각 지자체의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기반한 「생활인구 기본계획」에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항목을 포함하도록 권장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절차를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 1단계: 기초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 방향을 정하는 기초 단계로서,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를 살펴보기 위해 기초조사 및 분석을 실시한다. 빈집 및 빈 점포, 폐교·창고 등 유휴공간과 교통·기반시설, 문화·관광자원 등 지역 인프라와 자원을 조사하여 입지 특성을 파악하고, 통계·설문조사, 기존 생활인구 사업 분석 등을 통해 생활인구 특성과 수요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 중 지역 여건에 적합한 타깃을 설정하고, 유치 규모, 공간 조성 건수 등 정량적 목표와 공동체 활성화 등 정성적 목표를 설정한다.

- 2단계: 사업 설계 및 실행 기반 마련

구체적인 사업 구상을 설계하는 단계로서,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 교차점을 확인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유형을 설정한다. 입지 선정 시 접근성, 주변 인프라 수준,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 이후 지역과 생활인구 특성에 맞춰 도심 복합형, 마을 연계형, 생활권 연계형 등 지역에 적합한 생활거점 유형을 결정한다.

시설·프로그램 구상 및 설계 단계에서는 선정된 교차점에 제시된 핵심시설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시설은 숙박·업무·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해 적정 규모와 배치로 계획하고, 정착지원·교류·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한다. 필요시 2개 이상의 유형을 조합하여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생활거점을 설계한다. 이때, 생활인구의 일시 거주 및 단기 반복 방문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타당성 검증 절차를 마련한다. 예상 이용 수요에 기반한 적정 규모를 산출하여 과잉 건설이나 리모델링을 규제함으로써 공공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실질적 활용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고향을래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국비지원사업의 활용 또는 지방비 투입이나 시민자산화, 민간투자 등을 통한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생활인구 조례, 도시계

획·건축 규제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생활거점의 효과적 조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 3단계: 실행 및 운영체계 구축

마지막은 시설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 단계이다. 연차별 추진일정과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단 구성과 위험요소 대응전략을 마련한다. 시설 운영주체는 지자체 행정직영, 민간 위탁 등 지역의 인적자원 상황에 맞게 선택하며, 지자체-민간-주민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역할을 분담하고, 준공 후에는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를 보완한다. 이후 정기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서비스 품질과 사업 지속성을 제고한다.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위 절차를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일부 단계를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3] 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절차

출처: 연구진 작성

■ 재원조달 구조

생활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단기 보조금 중심의 재정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원을 연계하고 단계적으로 자립구조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기 마중물 성격의 국비 지원사업만

으로는 체류형 생활인구의 안정적 유입과 정주 전환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 민간 및 사회적 자본의 참여 확대, 자립형 수익모델 구축을 결합한 재원조달 다각화 방안을 제안한다.

-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 지역투자협약 기반 ‘패키지형’ 지원 확대

생활거점 조성 초기에는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과 지역투자협약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처별 보조사업이 자율계정으로 통합·이관될 예정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기획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율계정 체계에서는 도시재생, 문화재생, 상권활성화, 생활기반 확충, 지역개발 등의 분야를 연계한 생활거점 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인프라 조성과 지역활력 회복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지역투자협약제도를 통해 다부처 예산을 패키지화하여 주거, 복지, 문화, 교통, 창업지원 등 다양한 부문을 통합 추진할 수 있다. 단년도 보조 방식의 한계를 넘어 중장기 재정 안정성과 성과 기반 관리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여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 자율적 사업모델 설계를 통한 획일적 지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생활거점의 하드웨어(공간 조성)와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자율적인 사업 발굴부터 조성 및 운영까지 연결되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생활거점의 조성·운영비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하고, 생활인구 확충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여 생활거점이 단일 시설이 아닌 지역 활력 회복의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 민간투자 및 사회적 자본의 결합: 다각화된 외부재원 유치

공공 보조 중심의 초기 단계 이후에는 민간재원과 사회적 금융의 결합을 통한 자립적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 신협, 사회가치연대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사회적 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주민출자금, 기부금, 지역기금 등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투자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참여와 책임감을 높이고, 공동체가 운영 성과의 혜택을 공유하는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광활법」 개정 사례처럼,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민관 협력형 재원조달 모델도 유용하다. 공간 조성 단계의 규제 완화, 기업의 사회공헌 실적 인정제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로컬기업과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 자립형 수익모델 구축 및 지역순환경제 확립: 지속가능성 확보

생활거점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자립형 운영모델 확립이 필요하다. 생활거점 공간운영, 지역창업 및 창직활동 지원, 체험형 숙박·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 연계 수익사업 등을 통해 운영수익 창출, 지역 재투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순환경제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활거점은 단순한 공간 제공을 넘어,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촉진 거점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

■ 패키지형 지원방안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형 정책이 필요하다. 단편적 시설 조성이나 단기 사업을 넘어, 주거 안정, 경제활동, 사회적 관계 형성이 동시에 뒷받침될 때 생활인구가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구축된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방향을 시설(HW) 위주에서 프로그램(SW)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시설·인프라 조성 구축을 주요 성과로 검토하였다면, 생활인구·정주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역에 일회성 방문객을 넘어, 단기 체류형 인구부터 정주인구까지 폭넓게 유입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통해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보여준다⁷¹⁾.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생활거점 패키지형 지원정책은 지역 체류 경험과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 및 지역자원과의 사회적·경제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추진 할 필요가 있다: ①주거 안정 지원(빈집 리모델링·생활SOC 공급·확충을 통한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 임대주택, 세어하우스 등 다양한 주거 옵션 제공), ②일자리 연계(지역 특화산업, 로컬벤처와 연계된 경제활동 지원), ③커뮤니티 프로그램(교육·문화·돌봄 등 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하는 교류 활동 운영,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④정부 지원사업과의 체계적 연계(고향올래,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 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연계한 시너지 극대화).

남해군의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 구상안은 이러한 방향을 구체화한 ‘주거·일자리·커뮤니티 통합 모델’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 이 사업은 청년층과 귀촌·귀어 인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 제공, 맞춤형 일자리,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한다⁷²⁾. 이처럼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를 핵심 축으로 하는 패키지형 지원정책을 통해 생활거점은 인프라 제공을 넘어, 지역 공동체 재생과 인구 유입의 전략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71) 행정안전부(2025b, 8월 30일 보도자료)

72) 남해군의 ‘매력마을’ 만들기 정책의 추진원칙과 특징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① (수요자 참여형 정책 설계) 사업의 모든 과정에 이주 희망자가 참여,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실제 수요자 의견 반영
- ② (수익 사업 및 일자리 연계) 사업 종료 후에도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수익사업 모델 발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③ (마을과 커뮤니티 지원) 이주민의 정착구조 체계화, 마을 내 고립되지 않는 ‘삶’의 환경 종합 지원
- ④ (거버넌스 조직) 사업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 민간단체,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 조직’ 구성

3) 시범사업 운영 및 기존 사업 연계방안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시범사업 운영방향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확산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의 고향올래 사업 등 기존 생활인구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반영하되, 공간·프로그램·정책지원을 통합한 생활권 단위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생활인구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설계하고, 민관협력형 추진체계를 통한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시범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과 생활인구 확대라는 중장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선도모델로서 정책실험 및 검증, 확산 가능한 모델 개발, 제도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생활거점 조성·운영 모델의 실효성을 현장에서 검증하고, 성공 요인과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생활거점 유형(도심 복합형, 마을 연계형, 생활권 연계형 등)을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생활거점 조성·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구체화한다.

시범사업은 ①지역별 생활인구 특성 및 유입경로 분석을 통해 생활거점의 역할과 기능을 설정하고, ②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대상지 유형화하여, ③생활거점 내 핵심시설 조성(HW) 및 운영지원을 핵심 축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생활인구 확대라는 중장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업, 비영리법인, 주민이 협력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특히 지역 주민과 생활인구가 함께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생활권 단위를 사업 범위로 설정하여, 사업 추진을 통해 대상 지역의 고유 자원을 브랜드화하고, 특성에 맞는 생활인구 타깃 설정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

사업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공공, 민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전문적 기획·운영·홍보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확산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인프라 공급을 넘어, 체류형 생활인구의 정주 전환과 지역 공동체 재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4] 생활거점 시범사업 단계별 추진전략(공간-프로그램-정책 연계)

① 생활거점 내 핵심시설 조성 (HW)	② 지역 기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SW)	③ 부처 연계 및 정책 지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 기능 공간) 주거, 업무 커뮤니티 라운지,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 포함 • (유휴지원 활용) 신규 시설 건축 대신 빙집이나 폐교 등 미사용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것을 권장 (사업비용 절감, 유휴지원 효율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포함 • (수익모델) 프로그램 참가 비용, 시설 이용료 등 자체 수익을 창출방안 마련, 국비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착유도 서비스) 장기 체류자를 정주 인구로 전환시키기 위해 주거 보조금, 창업 지원, 이주 컨설팅 등 정책 지원 연계 • (타 부처 사업 연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력타운(국토부), 청년일자리 사업(고용부) 등 관련 사업의 통합적 운영·연계를 통해 시너지 극대화

출처: 연구진 작성

■ 고향을래 사업 연계 및 개선방향

행정안전부의 고향을래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워케이션, 런케이션,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등 5대 체류유형에 따라 생활인구 창출을 위한 활성화거점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복수주소제’ 시범 실시 등 인구감소지역의 실제 체류자 기반 정책 추진이 확대될 예정으로, 단기 체류 지원 인프라 조성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연계를 추진하는 사업모델로 확장하여 ‘생활거점 시범사업’의 실험장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동향과 연계하여 생활인구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검증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2단계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생활거점 조성에 앞서 지역의 준비도를 점검하고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지자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생활거점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선도실증사업을 진행한다. 2단계에서는 검증된 계획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생활거점 조성과 운영에 들어간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을 통해 단년도 시설비 중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장기 생활인구 확대 정책 효과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생활권 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 개별 시설 조성으로 접근하지 않고, 주민과 생활인구가 일상생활을 함께 경험하는 구역으로 사업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생활 편의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인구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생활인구 확대 정책의 목표 달성을 기여한다. 이때, 구체적인 공간적 범위는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에 따라 도심 복합형, 마을 연계형, 생활권 연계형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유형으로 차별화한다.

셋째, 생활인구 등록제, 고향사랑기부제, 복수주소제 등 생활인구 관련 제도를 생활거점에서 시범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생활인구 정책의 제도화를 위한 근거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 운영방향은 지역 내 생활인프라나 생활서비스가 집중된 지역인 생활권 단위로 생활인구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집약 배치함으로써 추가 기반시설 조성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체류자 기반 정책 추진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의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와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연계하여 사업모델의 한 유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기반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과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시범사업 운영방향(고향을래사업 개선방향)

1. 사업개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 – 체류 – 정착 경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생활거점을 조성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생활인구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생활인구 정책의 실천적 수단이자 마중물 역할 수행 기존 체류방식 5가지(워케이션, 러케이션,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를 사업유형 구분을 생활권 단위 통합 플랫폼으로 재구조화하여 사업 효과성 제고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계별·통합적 추진: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서비스) 2단계 지원체계: ①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실증(1년) → ②생활거점 조성·운영(2년) 생활권 단위 집약 배치: 행정구역이 아닌 주민·생활인구가 일상생활을 경험하는 권역 단위로 설정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 참조) 제도 연계 실험: 생활인구 등록제, 고향사랑기부제, 복수주소제 등과 결합한 정책 실험장 운영
사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실증): 1년 2단계(생활거점 조성·운영): 2년 사후관리: 사업 종료 후 2년간 성과 점검

2. 지원대상 및 연계기준

대상지	[1단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지역 (우선 고려사항)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지자체, 빈집·유류시설 등 활용 가능 자원 보유 지역(빈집밀집구역 등), 민관연계 컨소시엄 구성 계획 제출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대상) 1단계 완료 지역 또는 자체 기본계획 수립 지역 (우선 고려사항) 생활거점 기본계획서(마스터플랜) 제출, 중간지원조직 지정 계획, 민·관·주민 거버넌스 구축, 1단계 실증사업 성과 검증
컨소시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주체) 지자체(사업 총괄, 예산 집행, 정책적 기반 마련), 민간기업(시설 운영, 수익모델 구축, 전문 서비스 제공), 비영리법인(프로그램 기획·실행, 지역사회 연계), 주민조직(현장 운영 참여, 생활인구 멘토링) 등 (컨소시엄 역할) 중장기 과제 발굴 및 해결방안 수립, 실행계획 수립 및 선도실증 추진, 관계자 간 의견 교환 및 합의 형성,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및 지자체 연계사업 필수(1개 이상) 생활인구 관련 제도 시범 운영계획(생활인구 등록제 시범 운영,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복수주소제 적용 계획)

3. 사업계획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과제 발굴 및 전략 수립) 비용 부담 완화, 생활인프라 구축, 제도정비, 관계형성 등 중장기 과제 발굴 (타깃 생활인구 명확화) 우선 타깃 설정, 수요분석, 지역교우지원 활용 차별화 생활거점 전략 마련 (단계별 체류 심화 경로 설계) 체류기간에 따른 핵심시설 및 프로그램 등 계획(※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 참조)
지원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검토) 실행계획 수립, 컨소시엄 운영, 홍보·고아고, 관계자 의견교환 및 합의형성, 실행체계 및 구조 구축 (선도실증 지원 내용) 체험 거주시설 정비, 코워킹 스페이스 정비, 교통수단 확보, 생활인구 등록 시스템 정비, 생활인프라 및 서비스 연계 등
지원내용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조성, HW) 생활거점 내 핵심시설 집약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빈집, 유류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복합형 생활거점 조성 도입기능: 주거, 업무, 커뮤니티, 체험, 편의공간 등 (프로그램, SW) 지역 기반 맞춤형 체류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층 맞춤형 프로그램(워케이션, 러케이션,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등 타깃 생활인구 고려) 지역연계 프로그램(지역 고유 자원 기반 체류형 활동 콘텐츠 개발, 지역주민 교류 프로그램, 지역주민-생활인구 공동 프로젝트) (정책연계) 생활인구 및 정착 유도 정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인구 정책 연계: 생활인구 등록제, 복수주소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정착 유도 정책 연계: 임대 보조, 정주지원, 이주 컨설팅 등 관련 부처 연계사업(국토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 통합 지원

3.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성

- 추진체계
- 지자체-민간-주민-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민·관·주민 협력형 체계 구축
 - 사업의 전주기(기획-운영-홍보-평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 중심 운영체계 마련
 - 자생적 수익모델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수립
- 거버넌스
- 민·관·주민 협력형 운영체계 (컨소시엄)
 - 운영협의회 구성

4. 성과·사후관리

- 성과지표
- (정량지표) 생활인구 확대, 지역소비 증가율, 정착 전환, 종장기 과제 해결 등
 - (정성지표) 생활인구 및 주민 만족도, 주민참여율, 교류 프로그램 참여율, 컨소시엄 협력 수준 등
- 사후관리/ 확산전략
- 사업 종료 후 2년간 성과관리(운영실적 점검, 체류자수 및 재방문율 모니터링, 지역 정착률 조사 등)
 - 성과 우수 지자체에 후속사업 또는 컨설팅 연계
 - 유사지역 공유·모델화 / 우수사례 매뉴얼화

출처: 연구진 작성

3.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1) 생활거점 조성·운영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건축물 용도 및 토지이용(용도지역) 관련 제도 검토

생활거점의 핵심시설인 숙박·주거시설은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조성하고 있다. 이때 어떤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누가·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으로 신고·등록할 것인지를 시설 조성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숙박업 관련 제도는 건물 유형과 입지에 따라 민박업, 생활숙박업, 게스트하우스, 관광호텔 등으로 세분화되며, 취사 가능 여부, 실거주 요건 등 운영 조건이 분절적으로 적용되어 있어(표 5-5 참조),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이 미흡할 경우 준공 이후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표 5-5] 주거·숙박시설의 건물 유형별 업종 및 특징 비교

건물유형	지역	취사 가능	실거주 요건	숙박업 종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도시	○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단독, 다가구, 복합건축물	농어촌/준농어촌	○	○	농어촌민박업
한옥	무관	○	×	한옥체험업
여관, 여인숙, 모텔		×	×	일반숙박업
레지던스 생활형 숙박시설		○	×	생활숙박업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	×	호스텔업
관광호텔, 1~5성급 호텔			×	관광호텔업

출처: 호스트 숙소 등록 정책, airbnb(https://www.airbnb.co.kr/e/ppap_kr_3stepguide/, 검색일: 2025.02.09.)

또한 빈집·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지역 제한 등 입지 규제로 인해 조성단계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법」은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복합적 활용을 촉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 등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해결하는 데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또한 주거·숙박시설 관련 제도 전반이 관광산업이나 도시지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농촌·중소도시에서 요구되는 복합형 생활거점 모델과는 괴리가 있다.

이에 생활거점의 조성·운영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인구감소지역법」에 노후·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생활거점 조성 시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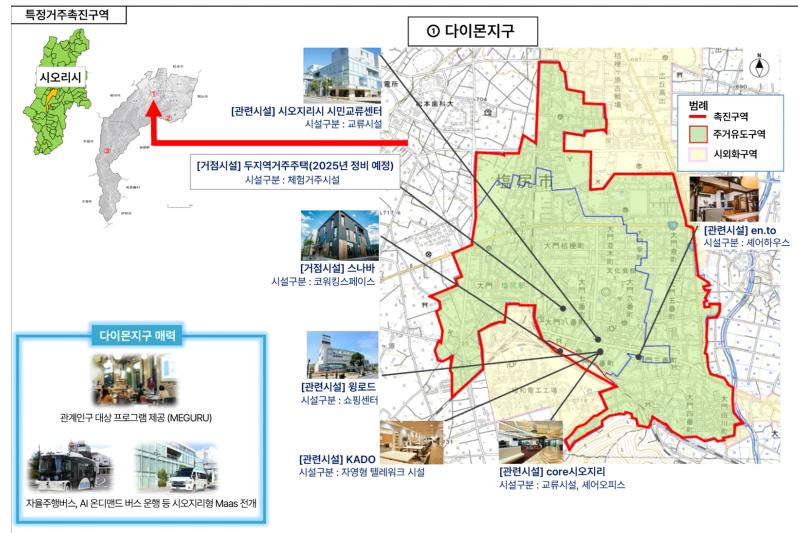
변경과 복합적 활용을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과 생활인구 확대라는 법률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 조성 및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인구감소지역의 '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차원에서 생활거점의 핵심시설과 관련된 공유재산 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토지소유자·지역주민단체·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시설을 사용·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셋째,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공유숙박 및 내국인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특례를 인구감소지역 내 일정 요건 하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광활법」은 '특정거주증점지구' 또는 '특정거주촉진구역'을 지정하여, 새로운 인구 유입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를 특정 공간 범위 내에서 집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생활거점 조성을 유도하는 구역계(가칭 '생활거점 특별구역')를 설정하고, 해당 공간적 범위 내에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때 구역계는 지역 내 생활인프라 및 생활서비스가 집중된 지역으로서, 추가 기반시설 조성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간적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공동체 활동범위와도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빈집과 유휴시설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신규 건축에 따른 부담을 줄이며, 주거·업무·생활편의·커뮤니티 기능이 복합된 생활거점을 효과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 나가노현 시오자리시 특정거주촉진구역(다이몬지구) 및 특정거주 거점시설

- (다이몬지구) 시오자리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곳으로 JR역과 인접해 있으며, 다수의 거점시설이 밀집한 곳. 지구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며, 관계인구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MEGURU), 자율주행 버스나 AI 온디マン드 버스 운행 등 시오자리형 MaaS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
- 특정거주거점시설 및 관련시설 현황

구분	용도	시설명	정비주체	비고
특정거주 거점시설	코워킹스페이스	스나바	일반재단법인 시오자리시 진흥공사	2018.03. 정비 완료
	세아하우스	en.to(엔토)	en.to	2024.03. 정비 완료
	체험거주 시설	두지역거주주택	(주)시오자리마치경기컴퍼니	2025.04.~2025.08.
관련시설	교류센터	시오자리시 시민교류센터	시오자리시	2010.08. 정비 완료
	쇼핑센터	윙로드	시오자리시, 주식회사 델리시아(デリシア)	2010.08. 정비 완료
	자영형 텔레워크 시설	KADO	일반재단법인 시오자리시 진흥공사	2019.03. 정비 완료
	교류시설, 세어오피스	core시오자리	일반재단법인 시오자리시 진흥공사	2023.03. 정비 완료



출처: 塩尻市(2025b, pp.4-6), 그림은 塩尻市(2025b, p.1)

■ 도시민박업·공유숙박업 등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검토

도시민박업 및 공유숙박업과 관련된 규제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실증특례가 허용되어 왔으며, 최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도 관련 제도개선 과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지역의 빙집을 활용한 '농어촌 빙집 활용 숙박' 과제는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시·군·구 및 50채 이내로 운영되던 범위를 농식품부 협의를 통해 전국 500채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다. 또한 단독주택으로 한정되던 대상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빙집까지 확장하고, 리모델링 범위도 농어촌민박사업 기준과 동일한 연면적 230m² 미만으로 적용하도록 완화하였으며,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실험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⁷³⁾.

현재 도시지역에서는 위홈, 미스터멘션, 싸이트지니 등 5건의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가 운영 중이며, 농어촌에서는 다자요, 액팅팜, 싸이트지니 등 3건의 빙집 활용 숙박 특례가 진행되고 있다.

※ 도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 실증특례(2024.10.17.)

- (대상) 싸이트지니
- (내용) 서울·부산 지역 내·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도시민박업을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
- (규제)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적용되어,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움
- (기대효과) 숙박 공급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 인구감소지역 및 도시재생지역의 관광 경쟁력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플랫폼 산업 및 유사 모델의 성장 가능성 제시, 여유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 효과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b, 10월 17일 보도자료); 봄집(<https://springhouse.co.kr/sh/rental/main.html>, 검색일: 2025.05.15.)

※ 농어촌 빙집 활용 숙박 실증특례(2024.04.29.)

- (대상) 액팅팜
- (내용) 농어촌 빙집 소유주로부터 빙집을 장기임대하여 리모델링한 후, 중개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서비스
- (규제)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실거주주민이 본인 소유 주택을 활용하는 경우에만 허용 중으로, 기업의 임대주택을 활용한 독채형 숙소 제공 불가
- (기대효과) 농어촌 빙집문제 완화, 농어촌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4a, 4월 29일 보도자료), 액팅팜(<https://www.actinglefarm.com/>, 검색일: 2025.05.15.)

현행 실증특례 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여러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180일 영업일수 제한의 비현실성, 실거주 요건의 과도한 부담, 지자체별 안전·연식 기준 해석의 편차, 현장 점검 부재로 인한 불법 숙소 양산, 부처·지자체 간 정보 연계 미흡 등이 있다. 특히 단기임대의 법적 지위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안전 관련 규정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체류형 숙박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⁷⁴⁾.

이러한 문제점을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73) 관계부처 합동(2024b, 1월 25일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2025, 5월 1일 보도자료) 참고

74) 미스터멘션 관계자 인터뷰 내용 참고(인터뷰 일자: 2025.07.24.)

첫째, 실증특례 과정에서 제기된 영업일수 제한과 실거주 요건 등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단기임대형 주거(또는 숙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구의 체류 형태는 단기 숙박에서 중장기 체류, 나아가 지역 이주와 정착 단계로 발전한다. 단기임대는 다양한 체류기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지역 정착의 이행과정에서 효과적인 체류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존 숙박업과 차별화된 단기임대 기준으로서, 체류기간 기준, 취사시설 등 생활형 숙박시설 요건, 안전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고 등록·신고제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범부처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실증특례 운영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간 연계가 미흡하고, 지자체별 해석 편차가 커서 현장에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허가, 안전점검, 세무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통일된 업무 지침을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법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 추진계획을 인구감소지역 생활거점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법」 및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빈집재생민박업을 제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른 생활거점 조성 구역(가칭 '생활거점 특별구역')을 '빈집재생민박업 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방치된 빈집이 철거 대상이 아니라 체류형 생활거점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빈집 문제 해결과 생활인구 확대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이상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자체의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연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표 5-6 참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빠르게 늘어나는 숙박·주거시설의 운영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인구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제도적 정비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5-6] 체류형 생활인구의 숙박·주거시설 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방향

구분	개정방향	주요 개정 내용 및 취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대상 범위 확대 및 특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인구감소지역(도시지역 한정)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간적 범위를 확대하되,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상의 생활거점 조성사업 계획 및 구체적인 구역(예: 생활거점 특별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 구역 내 마을기업 등이 체류형 생활인구에게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 신설 지자체 「생활인구 기본 조례」에 따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명시된 경우 허용
인구감소지역법, 제15조(생활인구의 확대 지원)	생활인구 확대 지원 범위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유형 및 범위 규정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숙박·주거시설을 해당 사업 범위에 포함
인구감소지역법, 제24조(주거·교통기반의 확충)	생활인구를 위한 체류 인프라 조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교통기반 확충 시, 생활인구의 중장기 체류를 위한 인프라(숙박·주거시설) 조성사업을 포함하도록 조항 보완 빈집 철거·재생·정비 등을 통한 체류 인프라 조성사업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특례 추가
생활인구 기본 조례	생활거점 특별구역 지정 및 생활인구 지원 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칭) 생활거점 특별구역 관련 규정 신설 해당 구역 내 체류형 생활인구 대상 숙박·주거시설의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마을기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 신설 생활인구 등록제, 복수주소제, 고향사랑기부제 등 생활인구 관련 제도 연계 조항 추가

출처: 관광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59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19840호)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방안

■ 생활인구 확대 및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방안

최근 행정안전부는 '제2의 거주지' 개념을 기반으로 한 생활인구 등록제를 포함한 참고조례안을 인구 감소지역 89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생활인구 등록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⁷⁵⁾. 생활인구 등록제는 정주인구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며 소비·활동하는 사람들을 '생활시·군·구민'으로 등록해 공공서비스나 지역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등록된 생활인구에게 축제·행사 정보 제공, 교통·숙박 할인, 지역 인센티브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지역과 생활인구 간 관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계를 통해 해당 지역에 기부한 개인도 생활인구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재정 확충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방안 다양화 및 사용목적 확대 등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토대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생활인구 등록제를 단순 등록 수준을 넘어서 체류 실적과 소비 활동을 객관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생활인구의 지역 기여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과의 연계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향후 복수주소제 도입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둘째, 생활인구 등록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합한 단계별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체류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지역 소비를 인증받은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고향사랑기부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기부 연계 지역화폐 지급, 숙박료 할인 등의 차등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생활거점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구 대상 멘토링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생활거점 내 장비·기술·유통망 제공 등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 생활인구 확성화 시책 지원을 위한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 (배경 및 목표) '정주인구 중심 정책'에서 실제 해당 지역에 체류하고 소비·활동하는 '생활기반 중심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정책 수립과 정밀한 행정수요 예측 등으로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
- (추진방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시·군·구민의 명칭을 지정해 생활인구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음
 - (사례) 남원누리시민, 지평선생명도시 김제시민, 신안천사군민, 거창한군민 등
 -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숙박·교통지원 등 다양한 혜택 제공, 맞춤형 정책 시행

출처: 행정안전부(2025c, 8월 26일 보도자료)

75) 행정안전부(2025c, 8월 26일 보도자료)

※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복수주소제 전 단계) 도입방안

- (개념/목표) 주민등록과 별도로 활동지역에 '생활주소'를 등록해 공공생활서비스 이용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춘 유연한 서비스 제공, 체류형 생활인구의 정주 전환 촉진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주진 과제) 생활인구 유형화 및 개념 정립, 법·제도 기반 마련, 지자체 단위 시범 도입, 생활인구 대상 지역 간 권리·의무 체계(재정 분담, 서비스 범위 등) 마련
 - (중앙정부) 생활등록 지원 법률 마련, 재정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조성
 -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춰 생활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생활인구의 체류특성과 지역 연계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 생활등록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접근방안
 - (단기) ①지역 공공생활서비스 제공 대상 생활인구 유형화 및 생활등록 개념 정립, ②생활등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③생활등록제의 지자체 단위 도입
 - (장기) 복수주소제 도입 필요성 검토

출처: 인소현 외(2025)

■ 생활인구 세부요건 개선 및 데이터 고도화를 통한 실용성 제고 방안

• 생활인구의 정책적·제도적 활용을 위한 요건 개선

현행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생활인구를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법」에서는 생활인구의 방문·체류 목적에 '관광'을 포함하고 있어, 생활인구와 관광인구 간 개념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생활인구 통계가 단기 방문객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관광통계와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4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8월 강원도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11.8배에 달했으며, 특히 양양군은 28.2배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5.9배(3,362만 명)에 이르러, 여름 휴가철 관광객 유입이 생활인구 통계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통계청, 2025, 3월 27일 보도자료). 이는 생활인구 정책이 관광 활성화와 혼동되거나 단기 방문객 중심으로 해석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서 단순 관광객 유치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인구 개념과 요건을 보다 세분화해 정책 대상을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3시간 이상 체류'라는 단순한 측정 방식을 보완하여,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등 유형별로 생활인구를 구분하는 지침 개선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인구 타깃 설정이 가능해지고, 맞춤형 정책 설계와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생활인구 산정·분석 방법 개선을 통한 데이터 실용성 제고

현재 통계청이 제공하는 생활인구 데이터는 실험적 통계에 머무르고 있어, 인구감소지역 관련 계획수립이나 생활인구 사업 기획,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생활인구 개념이 도시·군 기본계획,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생활인프라 재배치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의 신뢰성과 구체성을 높여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류 목적, 활동 유형, 방문 빈도 등 메타데이터를 확보해 생활인구를 단순 수치가 아닌 질적 특성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신·카드 소비 등 빅데이터와 결합한 방문자 행태 분

석을 통해 생활인구의 실제 활동 패턴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교한 통계로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생활인구 통계는 1개월 단위로 산정되어 있어, 15~20일 또는 21일 이상 체류하는 정기·장기 체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생활인구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체류 기간을 세분화하고, 장기 체류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준과 분석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대도시, 중소도시, 도농복합시 등 지역 규모와 특성에 따른 생활인구 통계의 차별적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산정과 분석이 가능할 때, 생활인구 데이터는 실제 정책 기획과 재정지원의 근거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구감소지역 대응 전략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종합 정보 플랫폼 구축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와 생활거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주거공간, 정책정보, 지역데이터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종합 플랫폼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단기임대나 공유숙박 플랫폼을 중심으로 ‘워케이션’, ‘한 달 살기’, ‘두지역살이’ 등 체류형 생활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리브애니웨이, 미스터멘션, 삼삼엠투 등은 지역, 기간, 테마별 숙소를 매칭하며 단기 관광 중심의 숙박을 생활기반 체험형 거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일본의 ‘후루사토회귀지원센터’나 ‘전국 두지역거주 촉진 민관협력 플랫폼’은 이주·정착 정보,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연계된 정보체계가 관계인구와 생활인구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생활인구 확대와 생활거점 조성은 사람과 정보를 연결하는 디지털 기반 중간지원체계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서부터 지역 이주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수요자와 지역을 연결하는 원스톱 정보·매칭 시스템으로서 ‘(가칭) 생활인구 종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정보의 통합, 체류공간 매칭, 정책지원 안내,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의 네 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양한 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사용자가 지역별 거주환경, 생활 기반, 지원 제도를 한눈에 비교·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정보 항목으로는 지역별 생활거점 정보(위치, 시설, 프로그램, 공실 현황, 입주 조건, 임대료), 빙집 및 주거 공간 정보(빙집 위치·상태, 리모델링 지원 여부, 임대·매매 조건), 지원정책 정보(주거 지원, 창업 지원, 귀농·귀촌 지원, 교육·보육·복지 정책), 생활 인프라 정보(의료·교육·교통·문화·상업시설 접근성), 지역 특성 정보(인구 구조, 산업 구조, 자연환경, 문화·관광자원), 체류·정착 사례(실제 이주자 인터뷰, 체험 후기, 정착 과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사용자는 원하는 지역의 거주환경, 주거공간, 지원제도 정보를 한눈에 탐색할 수 있고, 지자체는 생활인구 유입 전략을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올래), 국토부(도시재생, 빙집정보), 농식품부(귀농·귀촌 지원), 문체부(문화시설 정보), 각 지자체(생활거점, 지원정책) 등의 데이터를 API 연계 또는 데이터 제공 협약을 통해 통합한다.

둘째, 단기 숙소, 중기 세어하우스, 장기 임대주택 등 체류공간 DB를 구축하고, 체류 목적·예산·기간

별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칭 방식은 사용자 입력 정보(체류 목적, 체류 기간, 예산 범위, 선호 지역, 필수 조건 등)를 기반으로 최적의 주거와 지역을 추천한다. 공신력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와 연동된 숙박·주거시설의 검증 시스템을 포함한다. 다양한 체류공간과 신규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은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실증 특례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부의 생활인구 확대 정책과 지자체별 지원정책 등과 연계하고, 안전 기준 충족 여부 확인(소방, 건축, 위생), 임대차 계약 표준화 및 분쟁 조정 지원, 이용자 리뷰 및 평가 시스템, 지자체·운영주체 인증제도 등을 포함하는 공공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생활인구 관련 국가 및 지자체 지원정책을 통합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및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책 정보 제공은 주거 지원(빈집 리모델링 지원, 임대료 보조, 주택 구입 지원), 창업 지원(로컬 창업 자금, 멘토링, 공간 지원), 생활 지원(교육·보육 지원, 의료비 지원, 교통비 지원), 귀농·귀촌 지원(농지 구입 지원, 농업 교육, 정착 지원금), 세제 혜택(지방세 감면, 취득세 감면) 등을 포함한다. 원스톱 신청 지원은 플랫폼에서 직접 지원사업을 신청하거나 필요 서류 자동 안내 및 작성 지원, 신청 현황 및 결과 조회, 담당 부서 연결 및 상담 지원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지자체의 정책 설계를 지원한다. 지역별 생활인구 유입 현황(규모, 유형, 체류 기간), 주거 이용 현황(공실률, 인기 지역, 임대료 수준), 프로그램 참여율 및 만족도, 정책 지원 이용 현황, 정착률 등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생활거점 입지 선정, 프로그램 수요 예측 및 개선, 예산 배분 최적화, 홍보 타겟팅(어떤 유형의 생활인구를 유치 할 것인가) 등 정책지원 활용 도구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구축되는 '(가칭) 생활인구 종합정보 플랫폼'은 수요자가 지역별 체류·이주 정보를 손쉽게 탐색하고, 지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활인구 유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 인프라이다. 중간지원체계로 기능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

제6장

결론

1. 연구성과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 연구성과

우리나라는 2020년 데드크로스 현상 발생 이후 인구 자연감소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주민등록인구 중심 정책이 한계에 직면하였다. 이에 정부는 지역 내 다양한 인구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하고, 생활인구 정책 활성화를 위해 규정 제정, 통계 산출·공표, 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을 강화해 왔다.

생활인구는 실제 거주자 외에도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무르며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단기 체류를 넘어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고 정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인구집단이다.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광객 유치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색 없이 유사하게 추진되면서 생활인구 유입 효과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생활인구의 라이프스타일과 유연거주 특성을 반영한 공간 설계와 운영전략이 부족할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생활거점'의 개념을 정립하고, 생활인구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조성·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형과 수요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별 맞춤형 생활거점 사업추진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향후 인구감소지역 정책에서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 정립

2장에서는 이론고찰을 통해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의 개념을 정립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 민간 부문 생활거점 조성·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생활거점 조성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워케이션, 두지역거주, 지역살이 등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확산으로 고정된 주거지 개념에서 제2의 생활기반으로서 '생활거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두지역거주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특정거주 거점시설'이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거점을 '체류형 생활인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머물고, 나아가 체류, 관계 형성,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물리적·사회적 인프라이자 종합적인 생활지원 플랫폼'으로 정의하였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법」 및 「생활인구 세부요건 규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향을

래, 지역활력타운 등 다양한 생활인구 유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또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정, 전담조직 운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지역 차원의 생활거점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영역에서도 세컨하우스, 한 달 살기, 워케이션 등 다양한 체류형 인프라가 확산되고 있다.

생활거점은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는 매개하며,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서비스)의 세 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숙박·주거시설과 공유오피스 등 물리적 시설뿐 아니라, 지역체험, 일자리, 문화교류 등 체류형 프로그램, 그리고 정착 지원금, 의료서비스 지원, 생활정보 제공 등 행정적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생활거점이 구현될 수 있다.

- 생활인구 특성 및 생활거점 수요 진단

3장에서는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과 생활인구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생활인구 특성을 분석하고, 생활거점의 공간, 프로그램, 정책지원 요소별 수요를 도출하였다.

생활인구 데이터 분석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연령 구성, 유입 지역, 체류 행태 측면에서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절반 이상이 고령층 생활인구 중심으로 분류되었고, 근거리 생활권 또는 타시도에서 유입되는 생활인구 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약 74% 지역이 단기 방문형 또는 단기 체류형의 생활인구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일시적 방문이 지역의 경제활동이나 정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반면, 중장기 체류형 지역은 재방문율(약 44%)과 소비 수준이 높아 장기 체류 및 경제적 기여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감소지역이 외부 유입 중심의 단기 체류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체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과제임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서는 체류형 생활인구의 4가지 유형(방문형, 체험형, 관계형, 장기형)의 체류 목적, 기간, 빈도 등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유형별 생활거점 수요를 도출하였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건강·보건 시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장기형은 안정적인 정주 기반으로서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고, 관계형은 지역사회 교류 및 반복 방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휴게 공간, 창업지원공간 등 커뮤니티 및 활동 공간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관광·휴양 활동이 중심이었으나, 관계형 인구는 학습·창업·지역활동 등 다양한 지역 활동 참여 비중이 높았다. 정책지원 측면에서는 장기형일수록 주거·의료·돌봄 등 패키지형 정착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거점이 단순한 체류시설을 넘어, 지역 특성과 생활인구 유형을 반영한 공간, 프로그램, 정책지원이 연계된 전략적 거점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생활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핵심 요인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도출

4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한 핵심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은 전남 강진군 병영마을, 부산 동구 이바구마을, 경남 남해군의 세 지역으로, 각기 다른 추진체계와 지역자원 활용방식을 보여주었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과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해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부터 지역정착으로 이어지는 모델을 제시하였고, 부산 동구는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청년창업 문화 복합거점을 조성하며 민관협력형 거점사례를 만들었다. 남해군은 지역기획자와 청년, 주민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문화·상업공간, 농촌체험마을, 워케이션 시설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체험활동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

역으로의 인구 유입 사례들을 창출하였다.

이들 사례는 모두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정책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보여주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기초생활인프라 부족과 생활거점 운영의 지속성 문제, 체류 시설 운영의 제도적 한계 등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어, 향후 제도적 지원과 운영 안정성 강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지역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운영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

5장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생활인구 유형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생활거점 조성방향과 사업추진체계를 구체화하였다.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를 기반으로 세 가지 대표유형(①도심 복합형, ②마을 연계형, ③생활권 연계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지역의 입지·수요 특성에 따른 유연한 사업 설계 틀로 활용될 수 있다. 도심 복합형 생활거점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업무·문화 복합거점으로서 체험형·관계형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하며, 마을 연계형은 마을 내 빈집·폐교를 활용한 주민공동체 중심 분산형 거점으로 관계형·장기형 대상, 생활권 연계형은 권역 단위의 네트워크형 거점으로, 두지역거주자, 계절근로자 등 장기형 생활인구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민간, 주민이 참여하는 협력형 거버넌스 구축과 재원조달 구조 마련 등 사업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생활거점 조성·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규제특례, 공유숙박 규제 합리화, 「인구감소지역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연계한 ‘(가칭) 생활거점 특별구역’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생활인구 등록제 및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계를 통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방향 전환에 맞춰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를 통합지원하는 패키지형 정책모델, 생활인구 종합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정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창출을 위한 생활인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지원하는 ‘생활거점’의 조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통계청 생활인구 데이터와 설문조사 분석, 국내외 생활거점 운영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생활거점 사업 추진방향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생활거점의 개념과 실행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체류형 생활인구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은 기존의 획일적 정책 추진 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단기 방문 중심에서 벗어나 지속적 관계 형성과 정주 전환으로 이어지는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생활인구 제도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창출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는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개념을 정립하고, 생활인구의 유형별 수요 분석 및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지역 맞춤형 생활거점 조성·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와 지속 가능한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함께 제시한다.

■ 연구의 한계

생활거점은 지역의 여건, 자원, 주민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조성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활인구×입지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생활거점 유형 구분을 위한 분석도구이자 사업유형 제안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나, 인구감소지역별 다양한 여건과 생활인구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별 산업구조, 정주환경, 사회적 관계망 등의 모든 변수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생활거점 조성단계와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생활인구 관련 통계 데이터가 아직 구축 초기단계에 있어, 생활인구의 세부 속성, 체류형태, 지역별 차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재의 생활인구 통계 데이터로는 장기 체류자 구분이 어렵고, 단기 방문객 중심의 데이터 구성으로 인해 관광통계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활인구의 복합적 라이프스타일과 지역 내 미시적 활동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생활인구 확산 및 생활거점 조성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사업들이 대부분 2023년 이후 본격화되면서, 실증적 운영사례나 장기성과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생활거점의 장기 운영성과, 체류에서 정주로의 전환율,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자료 확보, 현장 기반의 구체적 개선과제 도출에 한계가 있었다.

■ 향후 추진과제

본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생활거점 조성·운영 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후속 추진과제를 제안한다.

먼저, 생활인구 산정방식 정교화와 통계 데이터 고도화가 필요하다. 현재 통계청의 생활인구 데이터

는 실험적 통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단순한 체류시간 측정 방식으로는 생활인구의 실제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에 통신·카드소비 등 빅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체류 목적, 활동 유형, 방문 빈도 등 메타데이터를 결합하여 생활인구의 질적 특성까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 통계를 국가승인통계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생활인구 정책의 근거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생활거점 유형별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도심 복합형, 마을 연계형, 생활권 연계형 등 대표 사업유형을 실제 지역에 적용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확산 가능성 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증연구를 통해 각 유형별 성공요인과 한계를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활거점의 제도화 및 정책모델 표준화를 추진함으로써, 향후 인구감소지역 대응 사업의 전략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활거점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가칭) 생활거점 특별구역'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도시재생, 고향을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과 연계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인구감소 지역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후·유휴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용도변경을 유연하게 허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재도약 지원이 점차 강화될 예정인 만큼, 생활인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분석, 현장 실증을 통한 제도 검증,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생활거점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기반이자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가평군. (2023). 가평군 인구감소지역대응 5개년 기본계획.
- 강원특별자치도. (2025a). 강원에서 머무르고 즐기는 활기찬 라이프! 강원 스태-이(GANGWON STA-E) 시범사업 공모 시작. 1월 6일 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2025b). 지역이 살아야 강원의 미래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스태-이 시범사업' 본격 시동. 3월 23일 보도자료.
- 강원특별자치도. (2023).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 강진군. (2023). 강진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강진군 도시재생지원센터. (2025). 강진정책답사: 강진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 시책 / 병영면 도시재생.
- 강진군. (2025). 2025 강진품애 인구정책 가이드북.
- 강진군 농어촌 개발과·도시재생지원센터. (2025), 강진정책답사 자료.
- 강화군. (20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거창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경기도. (2023). 경기도 제1차(2022~2026)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안).
- 경상남도.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경상북도.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경상북도. (2025). 경북도, 생활인구 활성화 분야 114억 원 투자 확정. 4월 24일 보도자료.
- 고령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고성군. (2023). 고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강원).
- 고성군. (20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경남).
- 고창군. (2023). 고창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고흥군. (2023). 고흥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곡성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구례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군위군. (2023). 군위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공주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a). 규제로 인한 도심 물품보관 서비스 중단위기 해결. 4월 29일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b). 인공지능기술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해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킨다. 10월 17일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4a). 20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지침.

관계부처 합동. (2024b). ICT규제샌드박스,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조건 완화 및 유효기간 연장. 1월 25일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5). 4개 부처 합동,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5월 1일 보도자료.

괴산군. (2023). 2022~2026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24a). 「2025년 지역활력타운 사업」 공모 공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771호.

국토교통부. (2024b). 민간과 지역이 손잡고 지역특화 발전 이끈다. 6월 20일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5). 도시재생시설, 민간기업 손잡고 활력 불어넣는다. 9월 24일 보도자료.

금산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기획재정부. (2022). 제2차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개최. 10월 11일 보도자료.

김경민. (2023). 전남도, 귀어. 귀촌인 안정적 어촌정착 지원. 헬드경제. 1월 2일 기사.

김광선, 송미령, 허주녕, 김민석, 오한솔, 김수린. (2023).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 개발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김동균, 황이경, 신수진.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김민준. (2024). [취재파일] 협력 없는 지방소멸대응기금..."우리에겐 감독이 있습니까".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73324&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검색일: 2025.09.06.)

김제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김필, 전대욱, 김해솔. (2023). 생활인구 개념에 기반한 생활인프라 수요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현아. (2024). 빈집 리모델링 '월세 1만원'...방문객 늘고 활력 찾은 강진. YTN. 5월 19일 기사.

남원시. (2023). 2023년~2027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남해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남해군. (2025a). 2025년 남해군 인구시책 지원정보 총람.

남해군. (2025b). '매력마을' 만들기 사업 기본계획.

논산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2024). 청년 주거 지원과 빈집 재생으로 살고, 일하고, 쉬고 싶은 농촌 조성. 5월 21일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a).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농림축산식품부. (2025b). 빈집의 새로운 변신으로 농촌생활인구유입 추진,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3개 선정. 4월 1일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c). 농촌에서의 색다른 삶,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로 시작한다. 1월 17일 보도자료.

단양군. (2023). 단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5개년).

단양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대구광역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남구. (2023). 대구광역시 남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대구광역시 서구. (2023). 대구광역시 서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무주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문경시. (2023). 문경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문성남, 김동민, 김호철, 신예은, 정석. (2023). 체류형 생활인구 설명요인과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4(3). 117-135.
- 문준경, 이미홍, 윤정란, 송기욱, 최원철, 박미규. (2024). 도시민의 지방 정착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방안 연구. *도지주택연구원*.
- 밀양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박성남, 김성준, 채정은. (2024). '지역 Space-MBTI'를 활용한 인구감소지역 특성 진단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박석환, 성은영, 변은주. (2022). 원격근무 시대의 주거구독 서비스 현황과 전망. *auri brief*. 259. *건축공간연구원*.
- 박석환, 윤진희. (2023). 지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수 주거거점의 현황과 이슈. *건축공간연구원*.
- 박지윤. (2025). "월세가 단돈 1만원"… 전국 청년·신혼부부 열광하는 '만원주택'. *조선비즈*. 3월 4일 기사.
- 보성군. (2023). 보성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보은군. (2023). 보은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
- 보령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봉화군. (2023). 2022-2026 봉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2023). 부산광역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2025). 동구 초량 이바구길 내 청년 창업·주거특화시설 '부산창업가꿈' 5호점 오늘(4일) 개소. 3월 4일 *보도자료*.
- 부산광역시 동구.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동구. (2024). 2024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 부산광역시 서구. (2023). 2022년~2026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부산광역시 영도구.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안).
- 부안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부여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산청군. (2023). 산청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년~2026년).
- 삼척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상주시. (2023). 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서천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성주군. (2023). 성주군(2022년-2026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송윤정. (2025). 인구감소지역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31.9%. *나라살림 브리핑*. 438호, *나라살림연구소*.
- 순창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신민재, 민영규, 이승형, 정경재, 고성식, 권정상, 김소연, 이준영, 박영서. (2023). '일터=휴가지' 워케이션 확산…“여기가 최적지” 모시기 경쟁. *연합뉴스*. 3월 3일 기사.
- 신안군. (2023). 신안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
- 씨앗문화예술협동조합. (2021). 2021년 청년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실행계획서(전북 완주 고산).
- 안동시. (2023). 안동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안소현, 이순자, 민성희, 김민아, 전봉경, 강민석. (2022).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안소현, 정우성, 강민석, 김민지. (2025).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국토정책 Brief. 1012. 국토연구원.

안소현, 차미숙, 유희연, 강민석. (2023).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안태훈. (2024).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양구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양양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연천군. (2023). 연천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영광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영덕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영동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영암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영양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영월군. (20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영주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영천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예산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옥천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옹진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완도군. (2023). 완도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울릉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울진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윤성수. (2024).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4년 연속 전국 최다. 매일일보. 11월 5일 기사.

윤소연. (2025). 생활인구 데이터 기반 인구감소지역 유형화 및 대응전략. 지방자치정책 Brief. 18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소연, 이경은, 유수동, 전대욱, 이원도. (2023).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표 발굴 및 사례분석: 생활인구 시범지 역을 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의령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의성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인천광역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이미지. (2023). 2024년 경남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도내 13곳 지원. 경남도민일보. 11월 1일 기사.

이삼수, 이미홍, 윤병훈, 권영환. (2024). 도시 및 지역계획의 실현성 제고를 위한 생활인구 개념의 적용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이원도, 이소영, 홍근석. (2023).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실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장민영, 임보영, 송윤정, 윤주선. (2021). 지방이주 청년의 정주지속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지원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 장수군. (2023). 장수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장성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장흥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전라남도.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026).
- 전라북도.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정선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정읍시. (2023). 정읍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026).
- 제천시. (2023). 제천시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진도군. (2023).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진안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안).
- 차근호. (2024). 생활인구 유치한다더니…해운대 워케이션센터 8개월간 46명 이용. 연합뉴스. 12월 25일 기사.
- 창녕군. (2023). 창녕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철원군. (2023). 철원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청도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청송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청양군. (2023). 청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충청북도. (2023).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 충청북도. (2023). 제1차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2022~2026).
- 태백시.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태안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통계청. (2025). '24년 3/4분기『생활인구』 산정 결과. 3월 27일 보도자료.
- 평창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하동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하예영, 임준배. (2024).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도입된 생활인구 제도 현황과 과제. NARS 현안분석. 316. 국회입법조사처.
- 한주성. (2019). 농업교육과 체험에 의한 관계인구의 지역활동. 대한지리학회지. 54(4): 435-448. 대한지리학회.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25).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안내서.
- 합천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 함안군. (2023). 함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함양군. (2023). 함양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2022-2026).
- 함평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해남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해양수산부. (2023). 어촌어촌 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자 비전 공유 세미나 개최. 5월 26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2). 2022 청년마을 만들기 임팩트 스토리.
- 행정안전부. (2023a). 생활인구를 통해 지역 활력 높인다. 5월 17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3b).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다진다. 6월 6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4a). '고향을래(GO鄉All來)'사업을 통해 살아 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간다. 7월 10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4b). 생활인구 산정 결과 최초 발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에 활용. 1월 1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4c). 지역에 살고 싶은 청년들 집 걱정하지 마세요. 8월 1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4d).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 지원. 11월 6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5a). 2025년도 지역체류 기반조성 사업「고향을래」공모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215호.
- 행정안전부. (2025b). 소멸에서 희망으로, 인구감소지역의 내일을 함께설계하다! 8월 30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5c). 제2의 거주지에서 지역 맞춤형 지원받으세요!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8월 26일 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2025d).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는다. 3월 19일 보도자료.
- 화순군. (2023). 화순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화천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홍천군. (2023).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 횡성군. (2023). 횡성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년).
- 国土交通省. (2021). 全国の「関係人口」は1,800万人超!, 3월 17일 보도자료.
- 国土交通省. (2021). 最終とりまとめ: 関係人口の拡大・深化と地域づくり・ライフスタイルの多様化と関係人口に関する懇親会.
- 国土交通省. (2023). 二地域居住等の最新動向について. 二地域居住等促進シンポジウム. 11월 28일 개최.
- 国土交通省. (2024a).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の施行について(二地域居住等促進のための広活法運用ガイドライン).
- 国土交通省. (2024b). 二地域居住や移住等の促進への取組を支援します! 8월 6일 보도자료.
- 国土交通省. (2024c). 令和7年度国土政策局関係予算概算要求概要.
- 国土交通省. (2024d). 地方公共団体向け二地域居住等施策推進ブック(第4版).
- 国土交通省. (2025a). 二地域居住等の促進について. 地域力創造に関する施策説明会. 1월 30일 개최.
- 国土交通省. (2025b). 二地域居住等促進事業費(二地域居住先導的プロジェクト実装事業)制度要綱.
- 内閣官房, 内閣府. (2020). 第2期「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2020改訂版). <https://www.chisou.go.jp/usei/info/pdf/r02-12-21-senryaku2020.pdf>
- 長野県. (2025). 長野県広域の地域活性化基盤整備計画(二地域居住), (別紙)長野県の二地域居住促進の方向性. <http://www.pref.nagano.lg.jp/shinko/iju/documents/2chiikiplanbesshi.pdf>
- 塩尻市. (2025a). 長野県内初 塩尻市特定居住促進計画を策定!. 3월 27일 보도자료.
- 塩尻市. (2025b). 塩尻市特定居住促進計画.
- 姫野由香. (2023). 地域内外の新しい担い手との「交流拠点」を育む. 少人数で生き抜く地域をつくる. 学芸出版社. pp. 46-58.
- 거창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936호.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59호.
- 김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김제시조례 제1759호.
- 남원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 조례 제 2040호.

남원시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079호.

부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군조례 제2927호.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147호.

생활인구의 세부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3호.

신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전라남도신안군조례 제2806호.

안성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경기도안성시조례 제2131호.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조례. 강원특별자치도양양군조례 제2980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9840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737호.

장성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2776호.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조례 제6256호.

하동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경상남도하동군조례 제2656호.

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3226호.

홍천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특별자치도홍천군조례 제3084호.

広域的地域活性化のための基盤整備に関する法律. 2024년 법률 제31호.

강원 워케이션, <https://worcation.co.kr/gw/program/gangneung> (검색일: 2025.02.08.)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https://www.eais.go.kr/> (검색일: 2025.08.20.)

경제e정표. KDI. https://epts.kdi.re.kr/polcTmsesSrvc/them?SEARCH_CTE_SEQ=72666&BIG_CD=RELT_THEM00080&MID_CD=RELT_THEME00108&SML_CD=RELT_THEME00221#this (검색일: 2025.05.16.)

고산다움 추진현황. 협동조합 이장. <https://e-jang.net/37?category=922673> (검색일: 2021.5.31.).

공동소유 세컨하우스란, 마이세컨플레이스, https://mysecondplace.co.kr/gongju_msp2/?bmode=view&idx=17450955 (검색일: 2025.02.15.)

김성욱. (2025). 부산시, 동구 이바구길 내 '부산창업가꿈' 5호점 개소. 중도일보. 3월 4일 기사. <https://m.joongdo.co.kr/view.php?key=20250304010000457> (검색일: 2025.8.30.)

나라장터. <https://www.g2b.go.kr/> (검색일: 2025.05.16.)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 (검색일: 2025.08.31.)

뉴시스. (2025). 인구감소지역 시·군·구협, 대선 후보에 소멸대응책 마련 주문. 5월 14일 기사.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14_0003175902 (검색일: 2025.05.16.)

다음스테이, <https://nexstay.bizplace.kr/gallery.php>, (검색일: 2025.10.1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https://mpccak.or.kr/boards/news_letter/view?&id=2926 (검색일: 2025.05.15.)

대한민국 구석구석, https://korean.visitkorea.or.kr/detail/rem_detail.do?cotid=15d70c24-57c6-4472-8108-b7daf487fda8 (검색일: 2025.05.16.)

리브애니웨어, <https://www.liveanywhere.me/corp/information> (검색일: 2025.02.15.)

문승규. (2023). 블랭크, 동네와 이웃을 잇는 공간, 건축신문, <http://architecture-newspaper.com/bk-tt-09-blank/> (검색일: 2025.02.15.)

미스터멘션, <https://www.mrmention.co.kr/> (검색일: 2025.02.15.)

봄집, <https://springhouse.co.kr/sh/rental/main.html> (검색일: 2025.05.15.)

빈집 리모델링 지원, 강진군청, https://www.gangjin.go.kr/www/part/onestop/residence/empty_house (검색일: 2025.05.17.)

생활인구, 국가데이터처,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main.do> (검색일: 2025.05.15., 2025.08.20.)

세화 질그레이센터, <http://www.sehwamaeulcoop.com/index.php> (검색일: 2025.02.08.)

소백산 귀농 드림타운, <http://sbdream.kr/home/> (검색일: 2025.02.08.)

신안군, 귀어가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http://www.jnsealife.or.kr/ko/16> (검색일: 2025.05.14.)

액팅팜. <https://www.actingfarm.com> (검색일: 2025.05.15.)

완도군, 귀어가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http://www.jnsealife.or.kr/ko/12> (검색일: 2025.05.14.)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https://www.raise.go.kr/raise/index.do> (검색일: 2025.02.0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committeeActivity/meeting.do> (검색일: 2025.05.16.)

주민등록인구현황,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검색일: 2025.08.31.)

청년 정착지원 공유 주거시설 준공 [STAY 374], 영덕군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ydcounty/223642374835?trackingCode=rss> (검색일: 2025.01.31.)

청도군청 행정소식 홈페이지, <https://www.cheongdo.go.kr/portal/board/post/view.do?bcIdx=518&mid=0301070000&idx=311912> (접속일자: 2025.10.14)

호스트 숙소 등록 정책, airbnb, https://www.airbnb.co.kr/e/ppap_kr_3stepguide/ (검색일: 2025.02.09.)

第20回ふるさと回帰フェア運営事務局2024. <https://event.furusatokaiki.net/fair2024/> (검색일: 2025.04.07.)

立科町とのつながりmenu マッピング-事業施策. シェアリングシティカレッジ第4回. <https://sharing-economy.jp/ja/report/20220824> (검색일: 2025.02.08.)

二地域居住の促進について, 長野県, <https://www.pref.nagano.lg.jp/shinko/iju/2chiiki.html> (검색일: 2025.05.13.)

しおじり街元気カンパニー, <https://shiojiri-genki.com/service/otameshi/> (검색일: 2025.04.13.)

日々別荘, <https://hibi-besso.jp/> (검색일: 2025.04.13.)

道の駅木曽ならかわ, <https://kiso.or.jp/> (검색일: 2025.04.13.)

令和7年度 二地域居住先導的プロジェクト実装事業, 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kokudoseisaku/ko_kudoseisaku_tk9_000058.html (검색일: 2025.05.13.)

全国二地域居住等促進官民連携プラットフォーム, https://www.mlit.go.jp/2chiiki_pf/index.html (검색일: 2025.02.08.)

ライフデザインオフィス堀内, <https://life7design.com/works/works-h/89> (검색일: 2025.04.13.)

core塩尻, <https://core.shiojiri.com/facility/> (검색일: 2025.04.13.)

en.to, <https://entocfinfo.wixsite.com/ento/> (검색일: 2025.04.13.)

FURUSATO. <https://www.furusato-web.jp/> (검색일: 2025.04.07.)

Re:BARAKI, <https://iju-ibaraki.jp/> (검색일: 2025.02.08.)

SH공사, 주거안정을 위한 골드시티 추진 및 3기 신도시 참여 요청. SH톡톡. 39. <https://webzine.i-sh.co.kr/674> (검색일: 2025.02.14.)

NPO법인 MEGURU, https://note.com/npo_meguru/n/na2cfb7617dde?sub_rt=share_pb&fbclid=IwY2xjawJeCpBleHRuA2FlbQIxMAABHYgoerDdZDPdG444fcih3upid7G28yGJbu5RlfmicfJMD_Bf7VpzGJQdww_aem_hyJXYQcVG9EK7YPg3p7dXA (검색일: 2025.05.13.)

Policy Strategies for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Living Hubs to Enhance the Living Population in Depopulation Regions

Jang, Minyoung Bang, Boram Kim, Youngha

Summary

Following the 2020 'death cross' phenomenon - when deaths exceeded births for the first time - South Korea's population began to decline naturally, highlighting the limitations of existing policies centered on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In response,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living population' system, a new demographic concept reflecting diverse population flows within regions. To activate living population policies, the government has strengthened multifaceted policy measures, including establishing regulations, calculating and publishing statistics, setting up special committees, and investing in projects through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The living population encompasses not only registered residents but also people who stay in the region for a certain period for purposes such as commuting, attending school, or tourism, thereby injecting tangible vitality. It represents a potential population group that goes beyond short-term stays, forms connections with the region, and has a high likelihood of transitioning to permanent residency. Despite the rapid increase in projects aimed at expanding the inflow of the living population, initiatives focused on attracting tourists still dominate. These projects are often implemented similarly across regions without reflecting local characteristics, revealing limitations in effectively creating an inflow of the living population. Furthermore, there is a lack of spatial design and operational strategies that reflect the lifestyle and flexible residency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popul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a 'living hub' that can effectively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living population in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and to develop customized creation and operation pla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population and local conditions. To achieve this, the study diagnoses the types and

demand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population, concretizes region-specific customized living hub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and proposes direc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sustainability of the living population system in future policies for depopulating regions. The main contents and outcome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 Establishing the Concept of Living Hubs to Expand the Living Population

Chapter 2 establishes the concept of 'living hubs' for the living population through theoretical review. It examin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trends and private sector cases of creating and operating living hubs to demonstrat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such hubs.

With the spread of new lifestyles like workation, dual-residence living, and regional living, demand is growing for 'living hubs' as a second living base, moving beyond the fixed concept of a primary residence. In Japan, 'designated residential base facilities' serve as a key instrument for establishing and revitalizing the dual-residenc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defines a living hub as 'a physical and social infrastructure, as well as a comprehensive living support platform, that enables the living population to stay stably in the region and supports various activities that can lead to extended stays, relationship building, and eventual settlement.'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 institutional foundation through enacting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and the "Regulation on Detailed Requirements for the Living Population" and is promoting various policies to attract the living population, such as the Hometown Return Program and Regional Vitality Towns. Local governments are also expanding regional living hub projects by enacting Basic Ordinances on the Living Population, operating dedicated organizations, and utilizing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In the private sector, various stay-type infrastructures such as second homes, month-long stays, and workations are spreading.

Living hubs serve as mediating spaces that synthesize these trends and should be structured around three pillars: space (HW), programs (SW), and policy support (service). Only when physical facilities like lodging/residential spaces and shared offices are organically combined with stay-type programs such as local experiences, job opportunities, and cultural exchanges, along with administrative services like settlement grants, medical support, and lifestyle information provision, can a sustainable living hub be realized.

■ Diagnosis of Living Population Characteristics and Living Hub Demand

Chapter 3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living populations in depopulating regions based on Statistics Korea's living population data and surveys of these populations. It derives demand for living hubs across spatial, programmatic, and policy support elements.

Analysis of living population data revealed regional differences in the age composition, origin regions, and residency patterns of these populations. More than half of all regions were classified as having a population centered on the elderly, and they showed a higher dependence on population influx from other cities and provinces compared to neighboring areas. Furthermore, approximately 73% of regions exhibited characteristics of a short-term visiting or short-term staying population, revealing a structural limitation where temporary visits do not lead to economic activity or settlement in the region. Conversely, regions with medium-to-long-term stays demonstrated high revisit rates (44%) and consumption levels, indicating potential for extended stays and economic contribution. These results show that a key challenge for depopulating regions is shifting away from a short-stay structure reliant on external influx and strengthening sustainable stay foundations.

The surve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 types of living populations (visitor-type, experience-type, relationship-type, long-term-type), including their purpose, duration, and frequency of stay, and derives the demand for living hubs by type. Demand for retail facilities, lodging facilities, and health/medical facilities was generally high. Long-term residents prioritized rental housing and housing cost support as the most important stable settlement bases. Relationship-based residents showed high demand for community and activity spaces, such as multi-purpose cultural spaces, rest areas, and startup support spaces, to facilitate community interaction and repeat visits. Programmatically, tourism and leisure activities were central, though relationship-oriented residents showed higher participation in diverse local activities like learning, entrepreneurship, and community engagement. Regarding policy support, longer-term residents increasingly required package settlement services encompassing housing, medical care, and caregiving.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living hubs must be approached as strategic centers—beyond mere lodging facilities—where space, programs, and policy support are integrated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living-population typologies.

■ Deriving Key Factors for Attracting and Settling Residents and Policy Tasks for Sustainability

Chapter 4 analyzes cases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living hubs in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to derive key factors that promote the influx and settlement of residents and policy implications. The analysis subjects were three regions: Byeongyeong Village in Gangjin County, Jeollanam-do (public-led model), Ibagu Village in Dong-gu, Busan (public-private partnership model), and Namhae County, Gyeongsangnam-do (private-led model), each demonstrating distinct implementation systems and approaches to utilizing local resources.

Gangjin County presented a model combining vacant house remodeling with experiential programs, thereby contributing to inflows and settlement of the resident population. Busan Dong-gu created a public-private partnership hub by establishing a youth entrepreneurship and cultural complex based on urban regeneration. Namhae County, centered on local planners, youth, and resident communities, built diverse cultural and experiential activities and human networks based on cultural/commercial spaces, rural experience villages, and workation facilities, creating cases of population influx into the region.

These cases all demonstrated that the organic linkage of space creation, program operation, and policy support significantly increases the potential for attracting and retaining stay-based segments of the living population. However, issues such as insufficient basic living infrastructure in some areas, sustainability problems in operating living hubs, and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managing stay facilities were identified, confirming the need for enhanced institutional support and operational stability going forward.

■ Proposing Region-Specific Living Hub Creation/Operation Plan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Chapter 5 specifies the direction for establishing region-specific living hubs and the project implementation system,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declining regions and the types of living populations.

Based on the 'Living Population × Location Matrix', three representative types are proposed: (① Urban-Complex Type, ② Village-Linked Type, ③ Living Zone-Linked Type). These can serve as a flexible project design framework tailored to the location and demand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 Urban Complex-type hub utilizes vacant spaces as a mixed-use residential, commercial, and cultural center targeting experiential and relational living populations. The Village-Linked-type utilizes vacant houses and closed schools within villages as decentralized community-centered hubs for relational and long-term living population groups. The Living Zone-Linked Type serves as a networked hub at the regional level, supporting long-term residents such as dual-residence dwellers and seasonal workers. Furthermore, a project implementation framework was proposed, including establishing a

collaborative governance structure involving local governments, the private sector, and residents, and setting up a funding procurement structure.

197

To enhance the implementation of living hub creation and operation, measures under consideration include regulatory exemptions for population-declining regions, rationalization of shared accommodation regulations, and the introduction of a '(proposed) Special Zone for Living Hubs' system. This system would integrate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Depopulation Region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he Basic Ordinance on the Living Population. It also emphasized the need to strengthen policy linkage leading to permanent residency by expanding the living population through linking the Living Population Registration System and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adopting a package policy model integrating housing, jobs, and community support aligned with the shift in the operation direction of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and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living population information platform.

This study aims to present core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the living population system in revitalizing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Specifically, it proposed plans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living hubs' to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living population. By analyzing Statistics Korea's living population data and survey results, and review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ving hub operation cases, it suggested direction for implementing region-specific living hub projects and proposed institutional improvements.

By comprehensively presenting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plans for living hubs as a policy tool responding to the new population concept of 'living popul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 paradigm shift in policies for population-declining regions. In particular, a tailored approach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types of living population and local conditions will improve the existing uniform policy implementation method. It will enable the establishment of a virtuous cycle system for population influx, shifting from short-term visits to the formation of lasting relationships and eventual settlement. Th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the living population system as a core policy tool that drives new regional vit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reas experiencing population decline.

Keywords

Depopulation Regions, Living Population, Living Hubs, Connected Population, Local Life, Dual-region Residency

생활인구의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식 및 생활거점 수요조사

■ 응답자 특성

[표 부록-1]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500	100.0	전체	500	100.0
체류지역	동일 시도	57	11.4	성별	남성
	다른 시도	443	88.6		여성
거주지	서울/경기/인천	267	53.4	혼인상태	미혼
	부산/울산/경남	70	14.0		기혼(자녀 없음)
	대구/경북	47	9.4		기혼(자녀 있음)
	광주/전라	43	8.6		
지역특성	대전/세종/충청	56	11.2	주택유형	단독주택
	강원/제주	17	3.4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도시 지역	423	84.6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연령	도시/비도시 혼재	73	14.6		아파트
	비도시 지역	4	0.8		기타
	19~29세	29	5.8	점유형태	자가
	30대	89	17.8		전세
	40대	158	31.6		월세
	50대	159	31.8		기타
	60대	65	13.0		

출처: 연구진 작성

[체류형 생활인구별 설문결과]

■ 체류형 생활인구별 인구감소지역 체류경험 및 특성

- 체류형 생활인구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이유 및 체류한 숙소, 위치 상이

해당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는 고향, 가족, 지인 등 연고가 있거나 (35.2%), 자연환경이 좋아서(31.2%) 순으로 많았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 체험형(단기형)은 자

연환경이 좋아서(각각 41.0%, 38.2%)가 지역 선정의 가장 많은 이유였고, 뒤이어 연고가 있어서(34.1%, 34.5%)가 많았다. 반면, 관계형(정기형)은 친지 등 연고가 있어서(38.6%)가 가장 많고, 이어서 직장, 학교 등 체류목적지가 있어서(32.9%), 장기형은 학교, 직장 등 체류목적지가 있어서(41.7%)가 지역 선정 이유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부록-2] 생활인구 유형별 방문지역 선정 이유(1순위)

(단위: %)

구분	전체	생활인구 유형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고향, 가족, 지인 등 연고가 있어서	35.2	34.1	34.5	38.6	25.0
자연환경이 좋아서	31.2	41.0	38.2	8.6	25.0
직장, 학교 등 체류목적지가 있어서	15.4	5.8	16.4	32.9	41.7
현재 거주지와 가까워서	5.8	5.8	0.0	8.6	0.0
교통접근성이 좋아서	5.4	6.5	1.8	4.3	8.3
체류지원 정책이 있어서	2.0	1.0	3.6	3.6	0.0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1.8	2.0	0.0	2.1	0.0
기타	3.2	3.8	5.5	1.4	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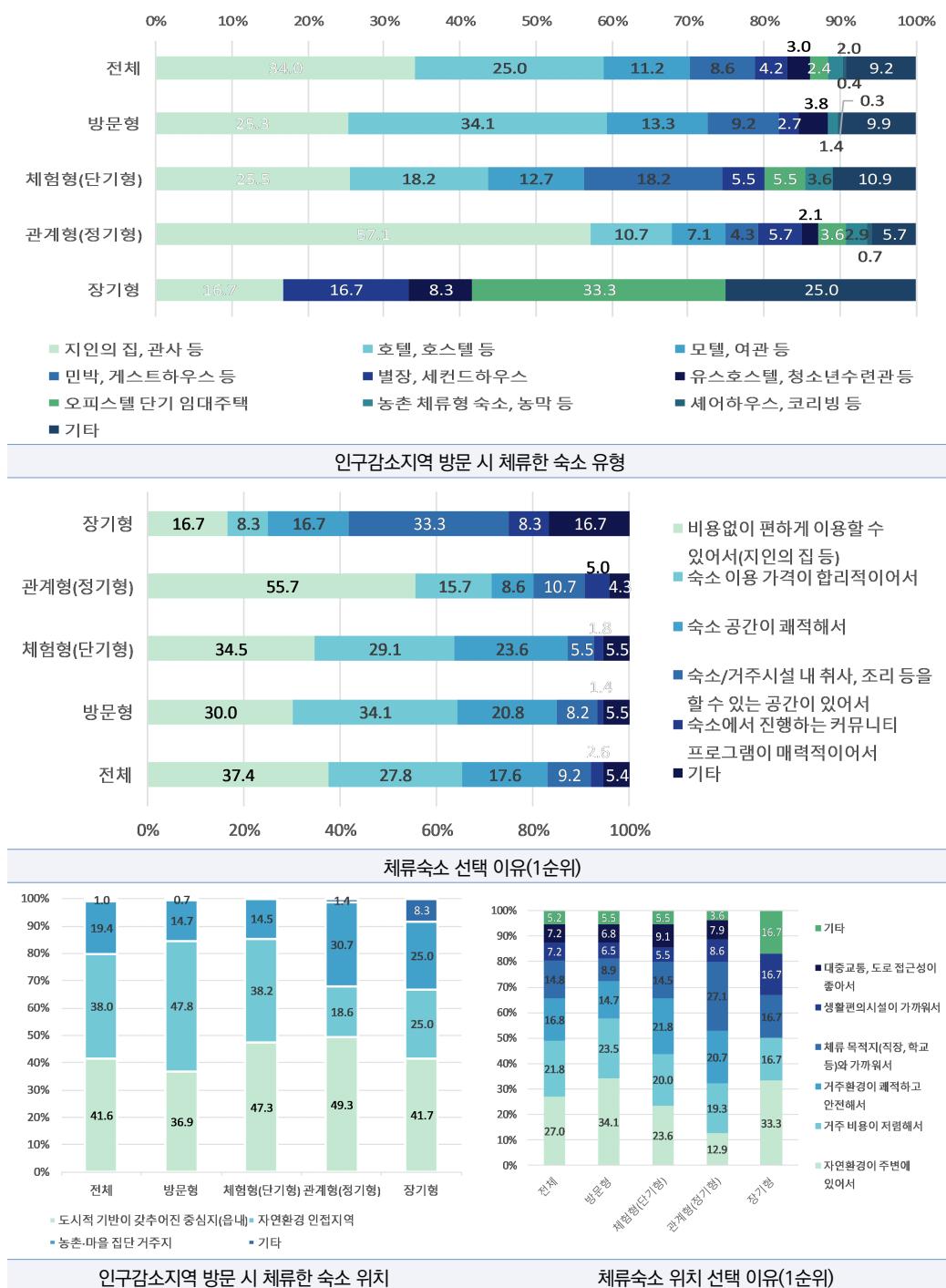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해서 체류한 숙소 유형은 전체 34.0%가 지인 집, 관사, 사택 등에서 체류하였고, 이어서 호텔, 호스텔, 콘도 등의 숙박시설(25.0%)을 이용하였고, 선택 이유는 대부분 비용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37.4%)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합리적인 숙소 이용 가격(27.8%)이 뒤를 이었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은 호텔 등 숙박시설(34.1%) 체류가 가장 많고, 이어서 지인의 집, 관사 등(25.3%)이 많은 반면, 체험형(단기형)은 지인의 집(25.5%)에 이어 호텔 등 숙박시설(25.5%)과 민박, 체험주택 등(18.2%)의 체류 비율이 높았다. 관계형(정기형)은 지인의 집, 관사 등(57.1%)의 체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장기형은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단기 임대주택(33.3%)과 본가 등 기타(25.0%)의 응답이 높았다. 해당 숙소 유형 선택 이유의 경우, 방문형은 숙소이용 가격(34.1%),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해서(30.0%), 쾌적한 숙소공간(20.8%)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체험형, 관계형(정기형)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34.5%, 55.7%)가 가장 많았다. 한편, 장기형은 숙소/거주시설 내 취사, 조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33.3%)가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체류 숙소 위치는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가 41.6%로 가장 많았고, 생활인구 유형별로도 중심지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았다. 방문형은 자연환경 인접지역(47.8%) 위치가 가장 많은 반면, 그 외 유형은 모두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에 체류숙소가 위치한 응답이 많았고, 관계형, 장기형은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에 대한 응답 비율도 높았다.

체류숙소 위치를 선택한 이유는 자연환경이 주변에 있어서(27.0%)가 가장 많고, 이어서 거주비용이 저렴해서(21.8%) 순이었으며, 생활인구 유형 중 관계형(정기형)만이 체류목적지가 가까워서(27.1%)가 가장 높고, 그 외에는 자연환경이 주변에 있어서가 응답 비율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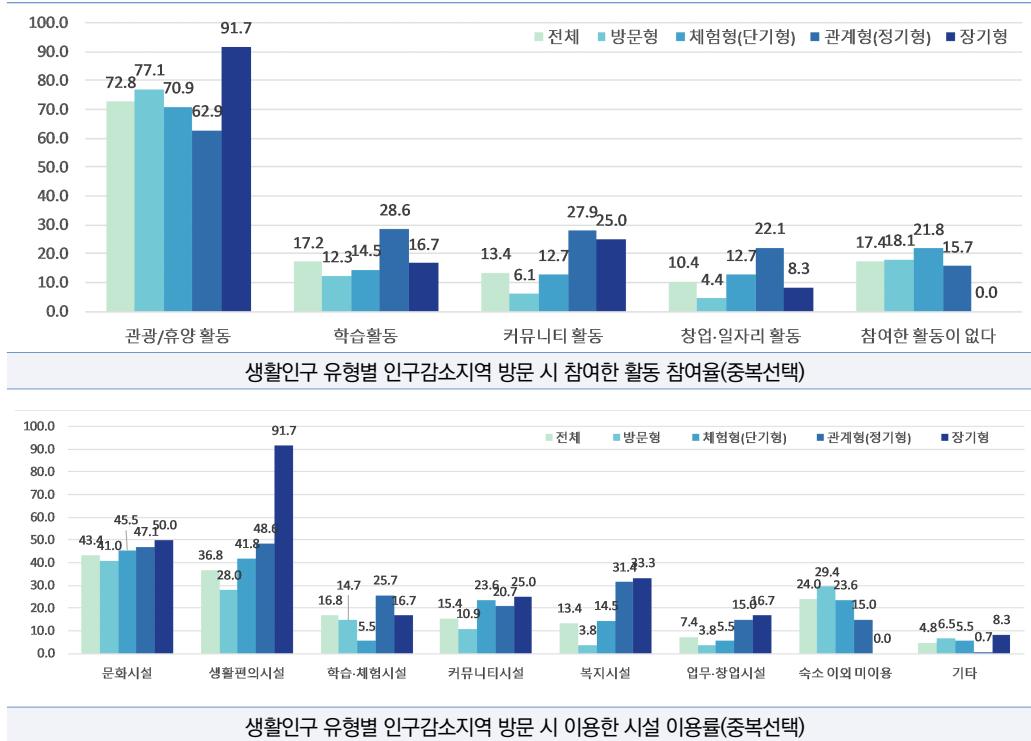


[그림 부록-1]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 숙소 유형, 위치 및 선택 이유
출처: 연구진 작성

- 모든 유형이 관광/휴양 활동을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관계형(정기형)은 다양한 활동도 참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참여한 활동의 경우, 방문형, 체험형(단기형)은 관광/휴양 활동을 가장 많이 하였으나, 이어서 아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으며, 관계형(정기형)은 관광/휴양 활동 다음

으로 학습활동, 커뮤니티활동, 창업·일자리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시설의 경우, 주거·숙박시설 외에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하였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 체험형, 관계형은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시설은 많이 이용하였고, 장기형도 생활편의시설을 많이 이용하였다. 한편, 방문형은 숙소 이외 시설을 미이용한 경우도 많았고, 관계형(정기형)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응답이 많았다.



[그림 부록-2]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참여한 활동 및 이용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인구감소지역 방문에 대해 만족도와 이용한 시설에 대한 만족도 3.5 이상

인구감소지역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2이며, 시설 등 중 숙박·주거시설 (3.90)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방문형은 복지시설(4.18), 체험형(단기형)은 학습·체험시설 (4.67), 업무·창업시설(4.33), 장기형은 숙박·주거시설(4.08), 커뮤니티시설(4.00)의 만족도가 높아, 생활인구 유형별로 만족하는 시설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부록-3]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이용한 전반적인 만족도 및 시설 만족도(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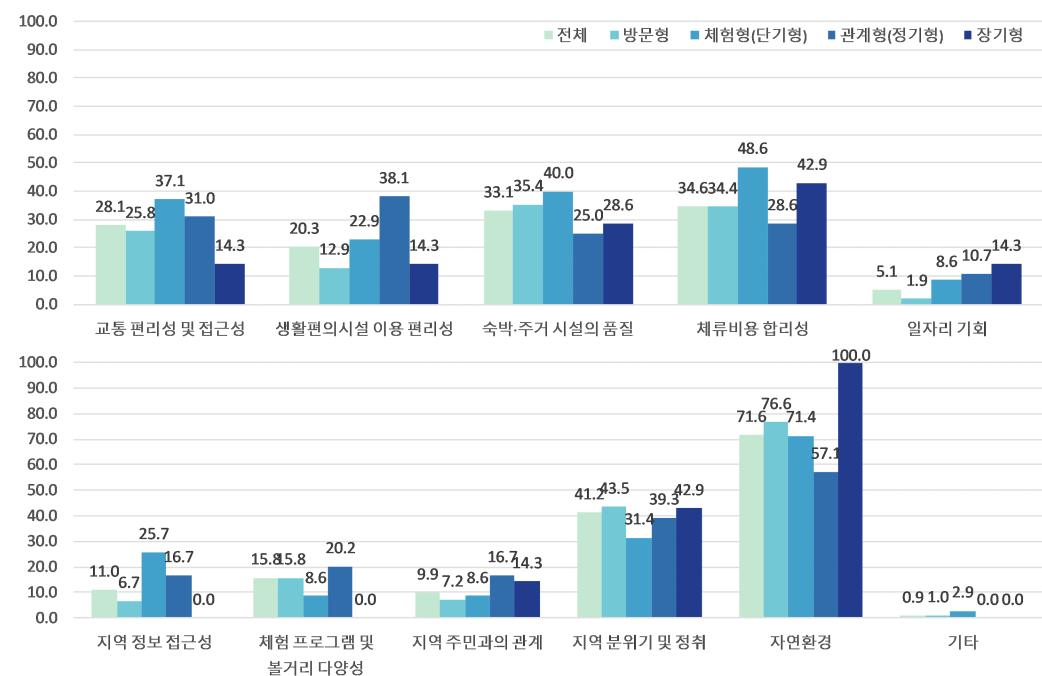
(단위:점)

구분	전체	생활인구 유형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전반적인 만족도	3.72	3.77	3.71	3.64	3.58
숙박·주거시설	3.90	3.95	3.93	3.76	4.08
업무·창업시설	3.68	3.73	4.33	3.67	2.50
생활편의시설	3.70	3.68	3.78	3.66	3.82
커뮤니티시설	3.75	3.72	3.92	3.69	4.00
학습·체험시설	3.86	3.91	4.67	3.75	3.50
문화시설	3.73	3.74	3.88	3.67	3.50
복지시설	3.84	4.18	3.75	3.80	3.50
기타	4.25	4.21	4.33	4.00	5.00

출처: 연구진 작성

- 인구감소지역 체류 환경 중 만족한 점은 자연환경, 지역분위기 및 정취, 불편한 점은 교통, 편의 시설이 가장 많고 생활인구 유형과 상관없이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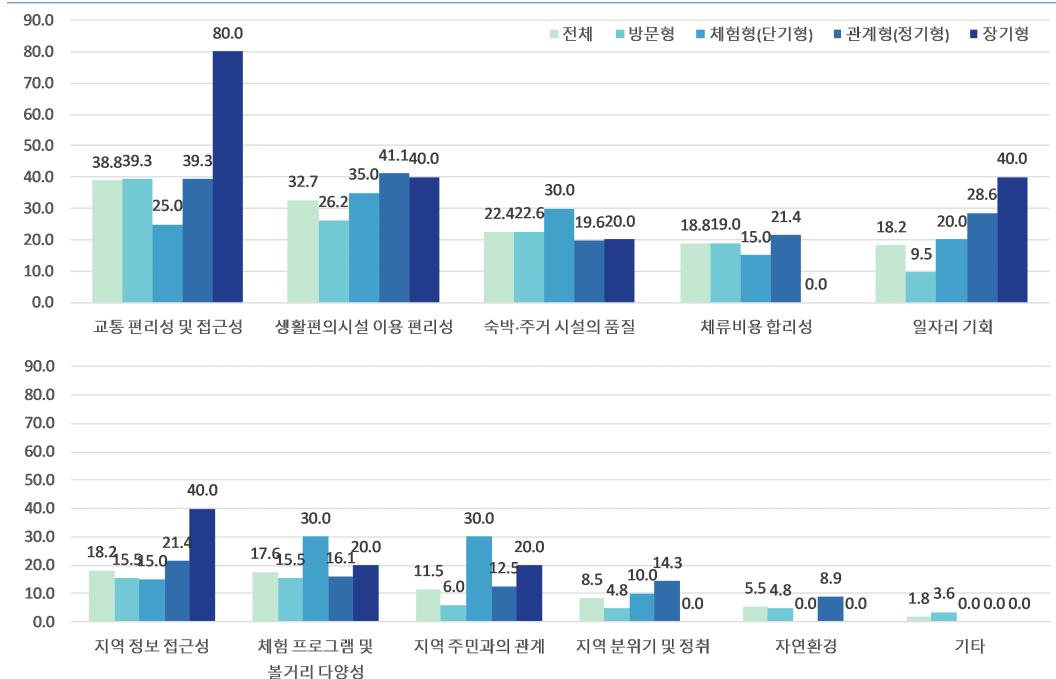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 중 만족했던 점은 자연환경이 모든 생활인구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체험형(단기형)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해 체류비용 합리성, 숙박·주거시설 품질, 교통 편리성, 지역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만족 비율이 높았고, 관계형(정기형)은 생활편의시설과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만족 비율이 높았다.



[그림 부록-3]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만족한 점(중복응답, %)

출처: 연구진 작성

체류환경에서 불편한 점은 전체 응답자 중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 생활편의시설 이용 편리성에 대해 불편함을 느낀 비율이 높았고, 생활인구 유형별로도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특히 장기형은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에 대해 모두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일자리 기회, 생활편의시설, 지역정보 접근성을 불편한 점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체험형(단기형)의 경우, 체험프로그램 및 볼거리 다양성, 숙박·주거시설의 품질,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에서 불편한 점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부록-4] 생활인구 유형별 인구감소지역 체류환경에 불편했던 점(중복응답, %)

출처: 연구진 작성

■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필요요소

2장 3절에서 도출한 '체류형 생활인구를 위한 생활거점 구성요소'인 '공간(HW)', '프로그램(SW)', '정책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시 필요한 공간(HW)은 판매시설, 숙박시설, 건강·보건시설

전체 응답자는 판매시설, 숙박시설, 건강·보건시설의 필요성을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생활인구 유형별로는 체험형(단기형)은 임대주택, 지역안내·정보공간, 관계형(정기형)은 복합문화공간, 휴게공간, 공연장·전시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다.

[표 부록-4]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시 필요한 공간(HW) 인식(5점 만점)

(단위: 건, 점)

205

구분	전체	생활인구 유형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사례수	(500)	(293)	(55)	(140)	(12)
숙박· 주거시설	숙박시설	4.14	4.16	4.29	4.06
	임대주택	3.69	3.69	3.71	3.67
업무· 창업시설	공유오피스	3.10	3.01	3.02	3.28
	회의실·세미나실	2.86	2.83	2.73	2.99
	창업지원공간	2.94	2.89	2.82	3.06
	창작·제작공간	2.96	2.92	2.76	3.13
생활편의 시설	코인세탁실	3.77	3.80	3.58	3.76
	공유주방	3.39	3.41	3.33	3.35
	판매시설	4.31	4.34	4.35	4.24
	운동시설	3.58	3.52	3.67	3.64
커뮤니티 시설	지역안내·정보공간	3.72	3.73	3.82	3.64
	소통공간	3.36	3.35	3.42	3.36
	휴게공간	3.72	3.72	3.67	3.75
학습· 체험시설	직업·기술훈련 공간	3.19	3.12	3.22	3.29
	문화교육 공간	3.46	3.47	3.36	3.41
	귀농·귀촌 교육시설	3.34	3.33	3.27	3.39
문화시설	공연장·전시공간	3.72	3.70	3.62	3.78
	복합문화공간	3.76	3.73	3.67	3.83
복지시설	건강·보건시설	4.03	4.03	4.07	4.01
	돌봄·상담공간	3.37	3.37	3.25	3.40

출처: 연구진 작성

-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문화·관광지 탐방, 지역축제 프로그램의 영향 인식 점수가 높으며, 생활인구 유형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 인식 점수 상이

전체 응답자는 프로그램 영향으로는 문화·관광지 탐방, 지역축제, 레저·웰니스 관광 순으로 인식 점수가 높았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 체험형(단기형)은 한달살기·살아보기, 귀농·귀촌체험의 영향 인식 점수가 높았고,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은 워케이션, 두지역살이 등에 대한 영향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기형은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레저·웰니스 관광 외에 일경험·인턴, 일자리 연계, 체험학습 등에 대한 영향 인식 점수도 높았다.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지원의 도움 정도는 주거지원의 주거비 지원(4.28), 주거공간 제공(4.20), 의료·돌봄지원(4.06) 등이 높게 나타남

전체적으로 주거비 지원, 주거공간 제공 등 주거지원에 대한 도움 인식이 높았고, 주거비 지원, 주거공간 제공, 응급·돌봄 인프라 구축,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복지서비스 연계,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순으로 도움 인식도 높았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은 주거지원, 일자리 지원, 의료돌봄지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았고, 체험형(단기형)과 관계형(정기형)은 타 유형에 비해 지역문화·창작활동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대한 도움 인식이 높았다. 장기형은 정보제공, 주민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 정도 인식 점수가 높았다.

[표 부록-5] 생활인구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프로그램(SW)이 미치는 영향(5점 만점)

(단위: 건, 점)

구분	전체	생활인구 유형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사례수	(500)	(293)	(55)	(140)	(12)
관광/휴양 활동	지역축제	3.88	3.85	4.02	3.85
	문화/관광지 탐방	4.06	4.09	4.20	3.91
	레저/웰니스 관광	3.86	3.90	3.78	3.78
	워케이션	3.55	3.47	3.62	3.69
창업·일자리 활동	로컬 창업	3.17	3.11	3.22	3.24
	일경험·인턴	3.30	3.23	3.33	3.40
	일자리 연계	3.37	3.29	3.36	3.50
학습활동	현장학습·체험학습	3.49	3.45	3.53	3.52
	농촌유학·로컬유학	3.31	3.22	3.36	3.47
지역살이 활동	한글살기/살아보기	3.77	3.80	3.84	3.66
	귀농·귀촌 체험	3.57	3.56	3.69	3.52
	두 지역살이	3.52	3.48	3.64	3.56
커뮤니티 활동	주민교류·네트워킹	3.31	3.27	3.38	3.37
	지역사회 참여활동	3.36	3.29	3.55	3.44

출처: 연구진 작성

[표 부록-6]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정책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인식(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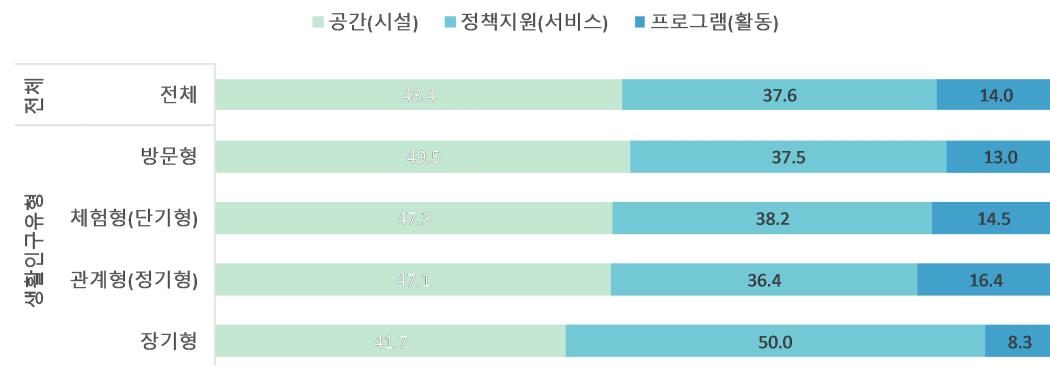
(단위: 건, 점)

구분	전체	생활인구 유형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
사례수	(500)	(293)	(55)	(140)	(12)
주거지원	주거공간 제공	4.20	4.22	4.25	4.12
	주거비 지원	4.28	4.35	4.31	4.11
	주택 수리 지원	4.04	4.06	3.91	4.02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3.93	3.98	3.76	3.89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	3.64	3.65	3.58	3.61
	직업 역량 강화	3.64	3.67	3.45	3.64
	귀농·귀촌 교육	3.73	3.78	3.65	3.68
의료·돌봄지원	응급 돌봄 인프라 구축	4.06	4.09	4.15	3.96
	생활인전 서비스 제공	3.97	4.02	4.04	3.85
	복지 서비스 연계	3.92	3.96	3.96	3.83
문화예술 지원	예술인 정착지원	3.61	3.63	3.53	3.60
	지역문화 창작활동 지원	3.62	3.58	3.73	3.65
정보제공	생활 정착정보 안내	3.62	3.64	3.69	3.55
	정보 플랫폼 운영	3.72	3.73	3.69	3.68
커뮤니티 지원	주민교류 프로그램 운영	3.58	3.58	3.58	3.42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3.60	3.59	3.65	3.61

출처: 연구진 작성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 요소 중 공간(HW)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약 50%로 대부분

전체적으로 공간(HW), 정책지원(서비스) 순으로 생활인구 확대의 필요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도 같은 순이다. 반면, 장기형은 정책지원(서비스)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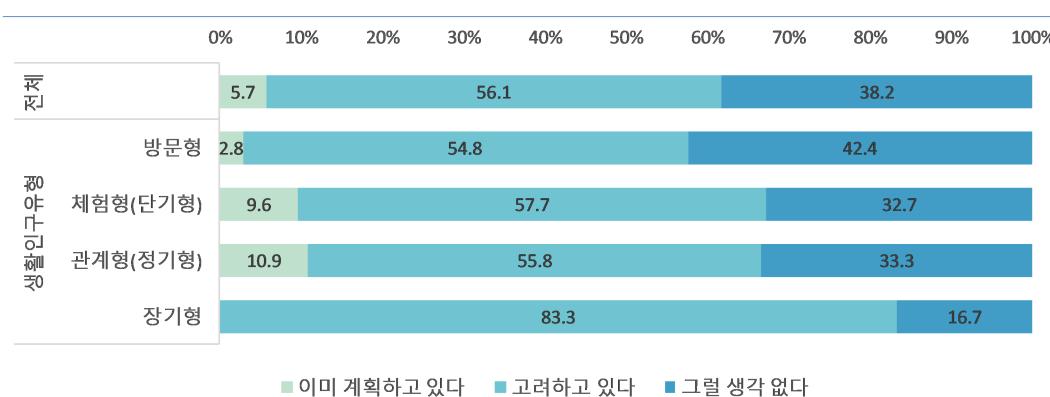


[그림 부록-5] 생활인구 유형별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우선순위 인식(단위: %)

출처: 연구진 작성

■ 생활인구 유형별 지역 정착 의향

- 생활인구 유형별로 지역 정착 의향과 그에 따른 선호 숙박시설, 주요 고려 사항 등이 상이
- 생활인구 유형별로 향후 거주지 외 이주·정착 의향의 경우, 장기형은 고려하고 있는 비율이 83.3%로 대부분이며, 체험형과 관계형은 이미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약 10% 차지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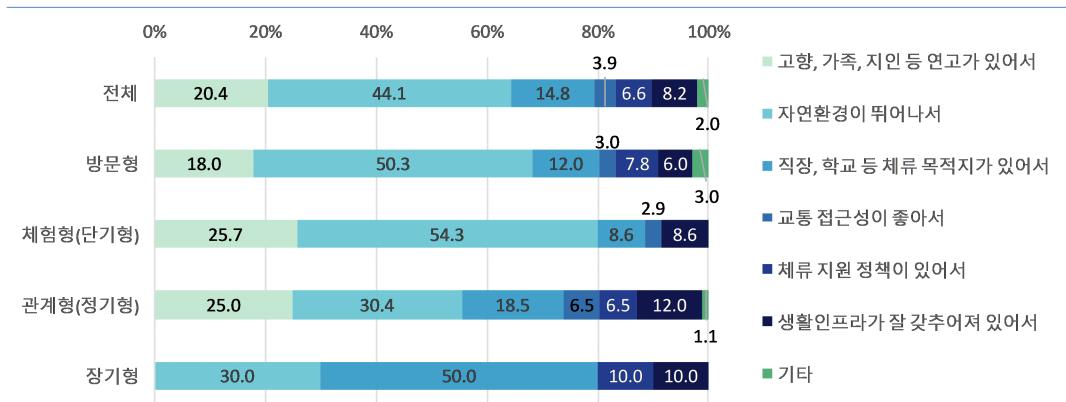


[그림 부록-6] 향후 거주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정착 의향(단위: %)

출처: 연구진 작성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체류하려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좋아서(44.1%), 고향, 가족 지인 등 연고가 있어서(20.4%)가 타 지역 방문·체류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 체험형(단기형), 관계형(정기형)은 전체적으로 해당지역들을 방문·체류하려는 비율과 유사하였다.

관계형(정기형)은 타 유형에 비해 직장, 학교 등 체류목적지가 있어서와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를 방문·체류 이유로 응답한 비율 높았다. 장기형은 직장, 학교 등 체류목적지가 있어서(50.0%)가 주된 타지역 방문·체류 이유이며, 자연환경이 좋아서(30.0%)가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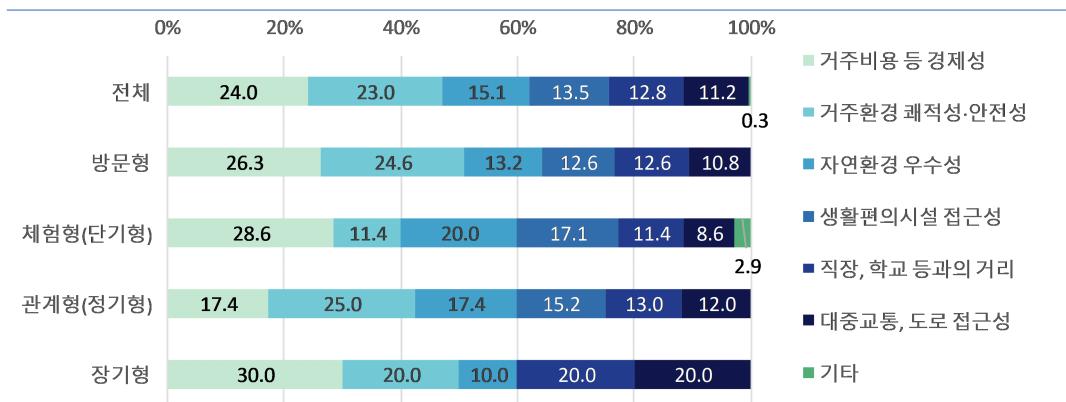


[그림 부록-7]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 및 체류하려는 이유(1순위, 단위: %))

출처: 연구진 작성

전체적으로 향후 타지역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 시 거주비용 등 경제성(24.0%), 거주환경 쾌적성·안전성(23.0%), 자연환경 우수성(15.1%) 순을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 관계형(정기형), 장기형은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시 주요 요인을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체험형(단기형)은 거주환경 쾌적성 보다 자연환경 우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율이 높았고, 생활편의시설 접근성(17.1%)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장기형은 경제성, 쾌적성 다음으로 직장, 학교 등과 거리, 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등을 중요 요인으로 생각한다.



[그림 부록-8]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1순위, 단위: %))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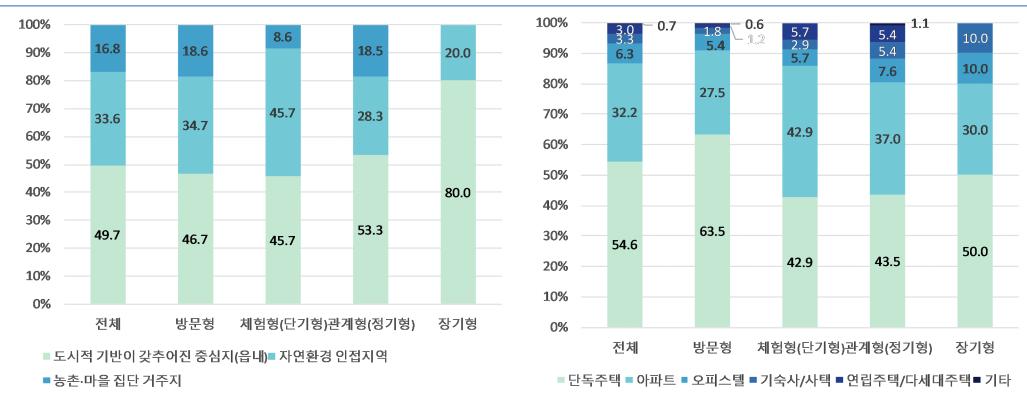
향후 타지역 방문, 체류 시 선호하는 숙박시설은 전체적으로 호텔·호스텔·콘도 등 숙박시설(26.4%), 민박·에어비앤비·체험주택 등(16.3%), 별장·세컨드하우스(14.8%), 농촌 체류형 숙소·귀농귀촌형 쉼터 등(12.0%) 순으로 응답하였다.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은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숙박시설과 유사하였고, 체험형(단기형)은 민박·에어비앤비·체험주택 등(25.0%)의 선호가 가장 많았고, 호텔 등 숙박시설(19.2%), 모텔·여관 등(15.4%)이 뒤를 이었다. 관계형(정기형)은 호텔 등 숙박시설(26.1%) 다음으로 지인의 집·관사·사택(18.1%)을 선호하였고, 장기형은 모텔·여관, 별장·세컨드하우스(각 25.0%), 체험주택, 오피스텔 등 단기임대(각 16.7%)를 선호하였다.



[그림 부록-9]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타지역 정기 방문 및 체류 시 선호하는 숙박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향후 이주·정착하고 싶은 지역 유형은 읍내, 전통시장, 면사무소 등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49.7%)가 대부분이며, 생활인구 유형별로도 향후 이주·정착 시 중심지 유형을 선호하였고, 특히 장기형은 80.0%가 중심지를 희망하였다. 한편, 체험형(단기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연환경 인접지역을 희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향후 이주·정착 시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단독주택(54.6%), 아파트(32.2%) 순이며, 생활인구 유형별로도 유사하였다.



향후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시 희망하는 지역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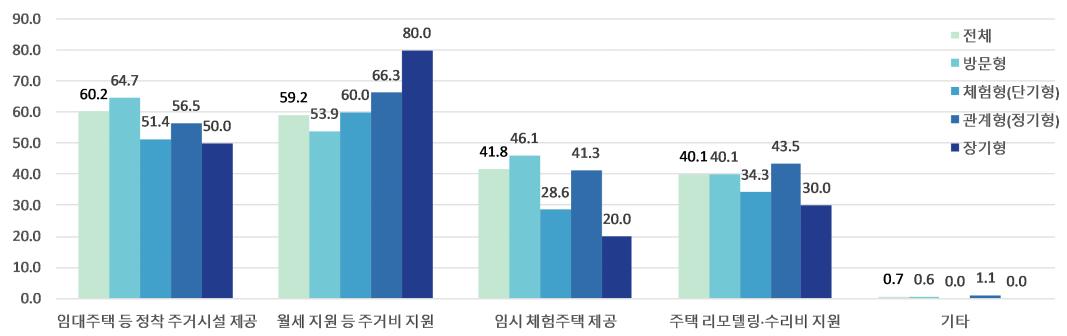
향후 이주·정착 희망지 선택시 선호하는 주택유형

[그림 부록-10]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시 선호하는 지역 및 주택유형

출처: 연구진 작성

- 향후 이주·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임대주택 등 주거시설 제공, 방해가 되는 요인은 일자리/창업 기회와 생활인프라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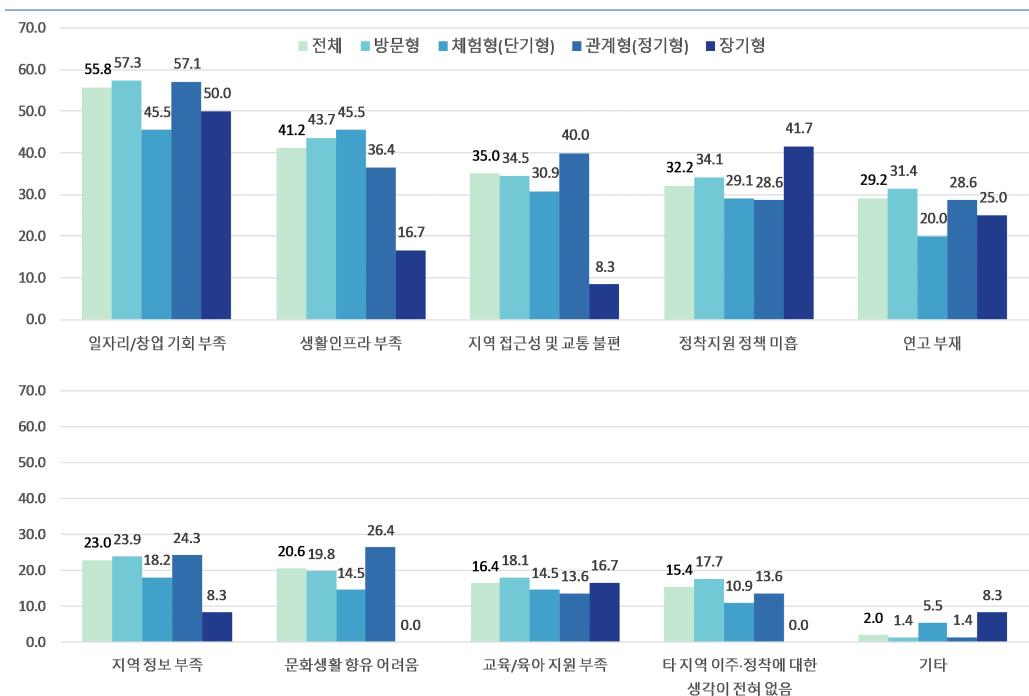
향후 이주 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유형별로 방문형, 관계형(정기형)이 정착 주거시설 제공을 필요하고 인식하며, 이어서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체험형(단기형), 장기형은 월세 등 주거비 지원(80.0%)을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관계형(정기형)은 주택 리모델링·주거수리비 지원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림 부록-11]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출처: 연구진 작성

향후 이주·정착에 있어 방해요소로는 전체적으로 일자리·창업기회 부족, 생활인프라 부족을 이주·정착의 방해요인으로 응답하였고, 불편한 지역 접근성과 교통, 정착지원 정책 미흡도 응답하였다. 생활인구 유형별로도 이주·정착의 방해요인으로 인식하는 사항은 비슷하였다.



[그림 부록-12]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방해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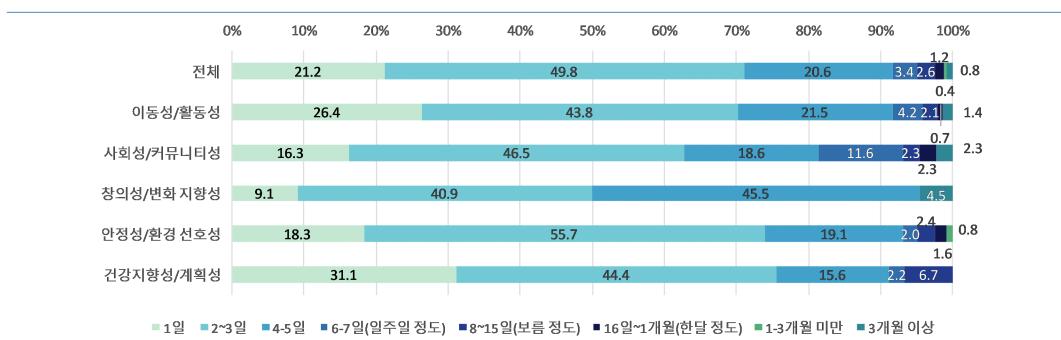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라이프스타일별 설문결과]

응답자 특성 문항으로 구성한 라이프스타일⁷⁶⁾에 따른 체류 경험, 이주·체류 수요, 필요요소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였다.

■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체류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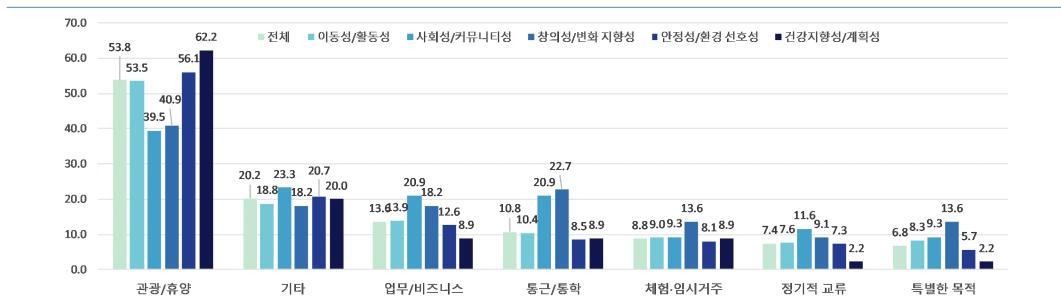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체류 기간은 전체적으로 2~3일이 많았고, 특히 안정성·환경선호성은 55.7%가 그 기간을 체류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창의성·변화지향성은 4~5일, 사회성·커뮤니티성은 6~7일, 건강지향성·계획성은 8~15일 정도 면분 비율이 높았다.



[그림 부록-13]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체류기간(%)

출처: 연구진 작성

인구감소지역 체류 목적의 경우, 관광·휴양이 많았고, 사회성·커뮤니티성은 업무/비즈니스, 정기적 교류 목적이 타 유형에 비해 많았고, 창의성·변화지향성은 통근/통학과 특별한 목적이 많았다.



[그림 부록-14]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체류목적(중복응답, %)

출처: 연구진 작성

76) 설문지 응답자 특성의 'DQ1. 다음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설명 중 본인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을 통해 도출

유형	설명
① 이동성/활동성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성향.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
② 사회성/커뮤니티성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경향
③ 창의성/변화 지향성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창의적으로 도전하려는 성향. 인정보다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
④ 안정성/환경 선호성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며, 한곳에 오래 머무르려는 성향. 심리적 안정과 환경적 편안함을 중시
⑤ 건강지향성/계획성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생활하려는 성향. 준비성과 자기관리가 높은 스타일

해당 지역을 선택한 이유는 창의성·변화지향성의 경우, 다른 유형과 다르게 자연환경과 직장 등 체류 목적, 교통접근성 등 다양한 이유로 선택한 비율이 높았고, 사회성·커뮤니티성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연환경으로 선택한 비율이 낮고, 현재 거주지와의 근접성이 이유를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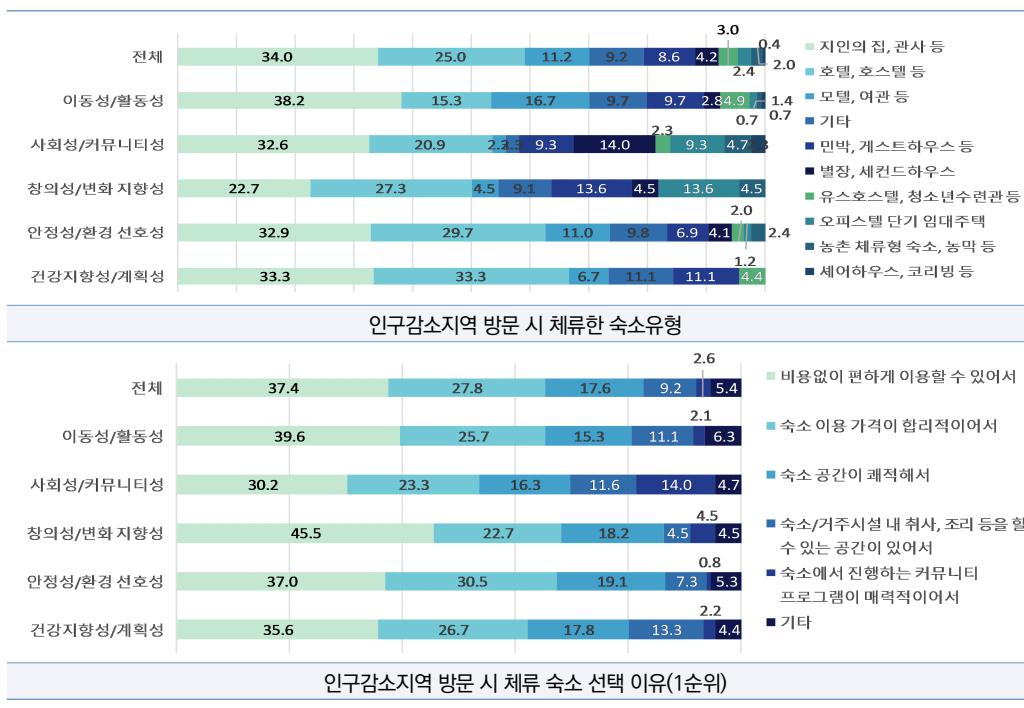


[그림 부록-15] 체류목적을 위해 해당 인구감소지역 방문 선택 이유(1순위)

출처: 연구진 작성

- 사회성·커뮤니티성과 창의성·변화지향성은 다른 유형에 비해 체류 숙소, 활동 참여 등이 다양하고, 이용시설은 창의성·변화지향성과 건강지향성·계획성의 다양한 이용이 도드라짐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체류한 숙소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인의 집,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활용하였으나, 사회성·커뮤니티성, 창의성·변화지향성이 별장, 민박, 단기임대주택 등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체류숙소를 선택한 이유도 사회성·커뮤니티성의 경우, 숙소 내 진행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매력으로 선택한 비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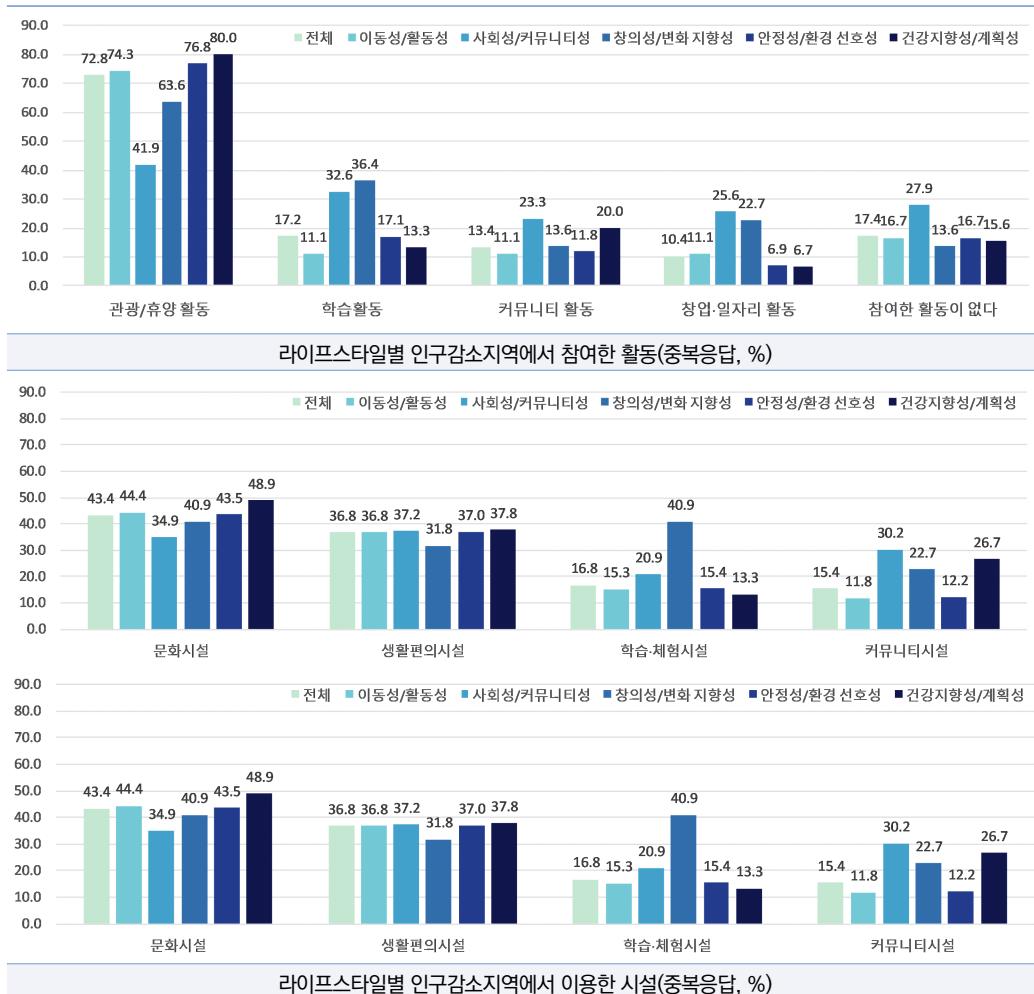


[그림 부록-16]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체류 숙소 및 선택 이유

출처: 연구진 작성

인구감소지역에서 참여한 활동의 경우, 모든 유형이 관광·휴양, 문화시설을 가장 많이 참여하였고, 사회성·커뮤니티성은 학습활동, 커뮤니티 활동, 창업·일자리 활동 등의 참여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높았고, 창의성·변화지향성도 높은 편에 속했다.

체류기간동안 이용한 시설의 경우에도 창의성·변화 지향성의 다양한 시설 이용 경험 비율이 도드라졌고, 사회성·커뮤니티성의 커뮤니티시설과 복지시설을 이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지향성·계획성도 커뮤니티시설 이용 경험 비율이 높았다.



[그림 부록-17]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참여한 활동 및 이용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로 이용시설 만족도와 체류환경에 대한 인식 상이

라이프스타일별로 이용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이동성·활동성은 커뮤니티시설, 사회성·커뮤니티성은 업무·창업시설, 창의성·변화지향성은 복지시설, 건강지향성·계획성은 숙박·주거시설과 학습·체험시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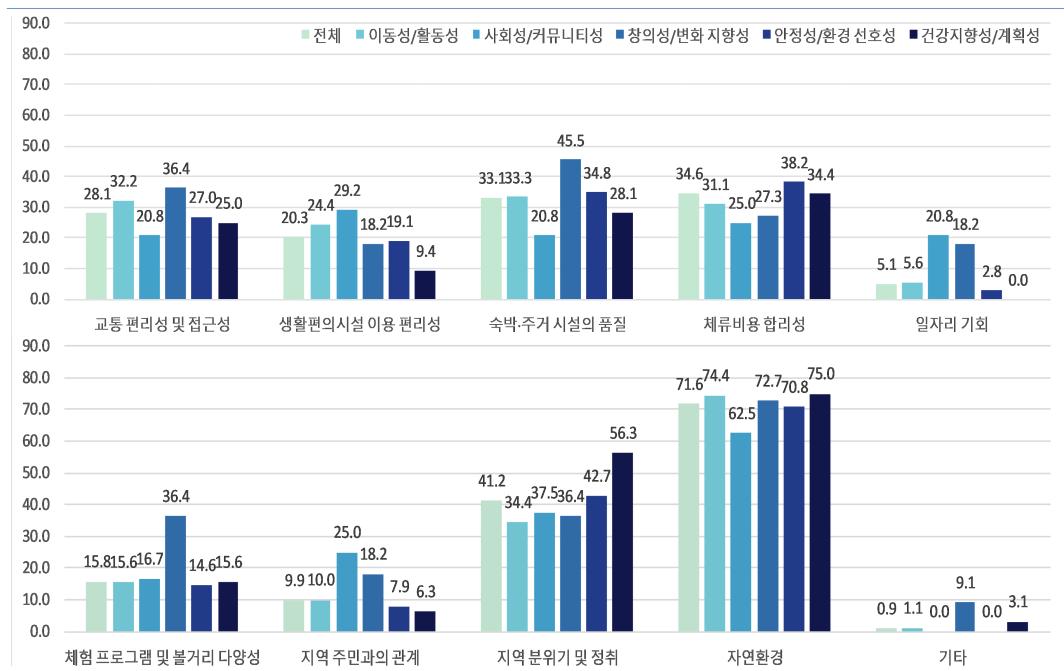
[표 부록-7]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 체류경험 이용시설 만족도(5점 만점)

(단위: 점)

구분	전체	라이프스타일				
		이동성/활동성	사회성/커뮤니티성	창의성/변화 지향성	안정성/환경 선호성	건강지향성/계획성
사례수	(500)	(144)	(43)	(22)	(246)	(45)
숙박·주거시설	3.90	3.88	3.67	3.68	3.94	4.02
업무·창업시설	3.68	3.31	4.00	3.67	3.88	0.00
생활편의시설	3.70	3.64	3.69	3.71	3.78	3.41
커뮤니티시설	3.75	4.18	3.54	3.20	3.73	3.67
학습·체험시설	3.86	3.91	3.56	3.56	3.95	4.00
문화시설	3.73	3.72	3.47	3.33	3.79	3.82
복지시설	3.84	3.80	3.92	4.00	3.79	3.83
기타	4.25	4.40	5.00	0.00	4.07	4.00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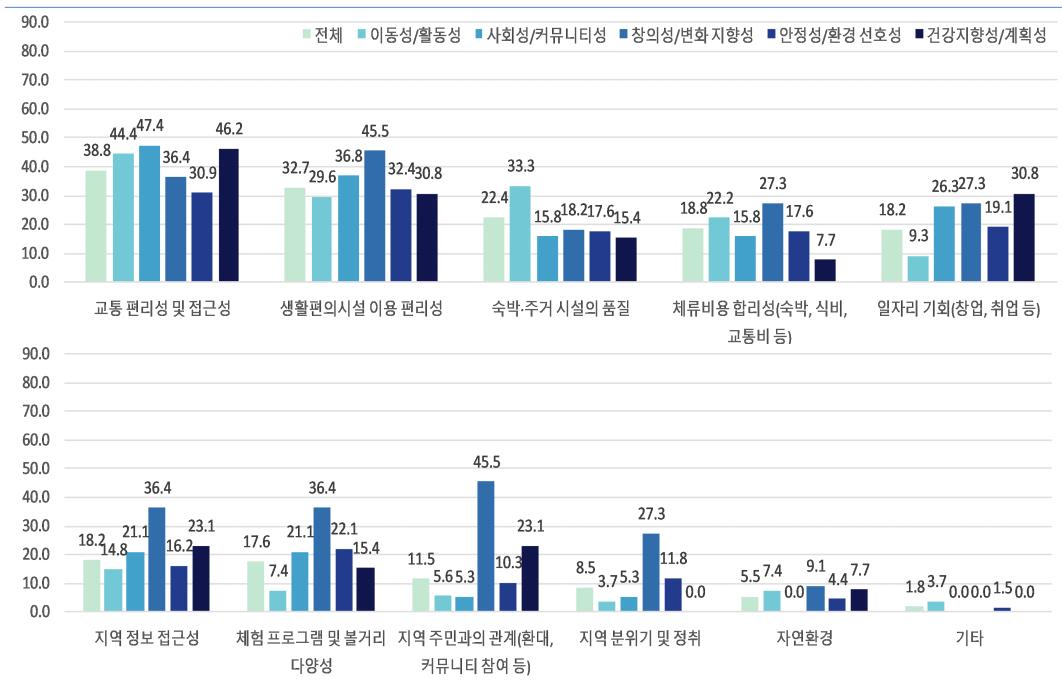
체류환경 중 만족했던 점은 자연환경이 모든 생활인구 유형에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창의성/변화 지향성의 경우, 숙박△주거시설의 품질, 교통 편리성, 체험 프로그램 및 볼거리 다양성에 대해서 만족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타유형에 비해 안정성·환경선호성은 체류비용 합리성에서, 사회성/커뮤니티성은 생활편의시설 이용 편리성, 지역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부록-18]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에서 체류환경에 만족한 점(%)

출처: 연구진 작성

체류환경에서 불편한 점은 창의성·변화 지향성에서 지역주민과의 관계, 지역 분위기, 지역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인식비율이 높았고, 이동성·활동성은 숙박·주거시설 품질을 응답한 비율이 타 유형에 비해 높았다.



[그림 부록-19]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 지역에서 체류환경에 불편한 점(%)

출처: 연구진 작성

■ 라이프스타일별 생활거점 구성요소 인식

라이프스타일별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요소 중 대부분 공간(HW)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생활인구 확대의 필요요소 중 공간(HW)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지향성·계획성만 유일하게 정책지원(서비스)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부록-8] 생활인구 라이프스타일별 생활거점 구성요소 우선순위 인식

(단위: 건, %)

구분	전체	라이프스타일				
		이동성/활동성	사회성/커뮤니티성	창의성/변화 지향성	안정성/환경 선호성	건강지향성/계획성
사례수	500	144	43	22	246	45
공간(HW)	48.4	43.8	48.8	59.1	52.4	35.6
정책지원(서비스)	37.6	41.7	25.6	22.7	36.2	51.1
프로그램(SW)	14.0	14.6	25.6	18.2	11.4	13.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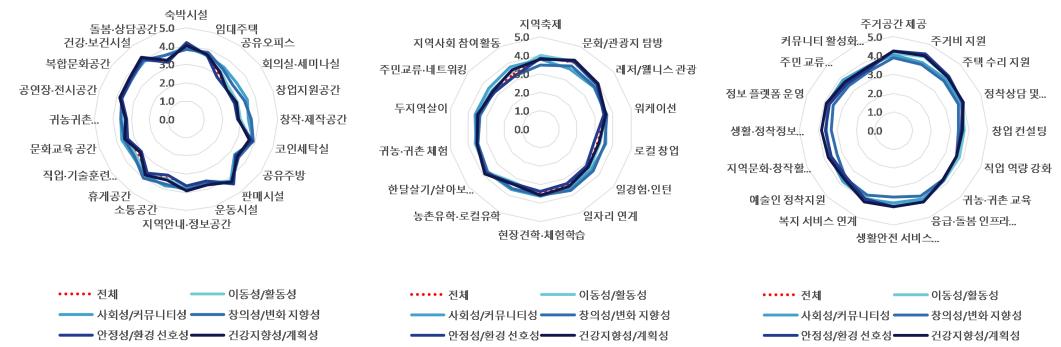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공간(HW)의 경우, 모든 라이프스타일이 판매시설, 건강·보건시설에 대한 필요인식이 높았다. 업무·창업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유형에서 5점 만점에 3.0이하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사회성·커뮤니티성, 창의성·변화지향성은 타유형에 비해 필요하고 인식하였다.

프로그램(SW)의 경우, 대부분의 라이프스타일이 유사하게 인식하였으며, 관광·휴양 활동에서 이동성·활동성의 지역축제, 대부분 유형의 문화·관광지 탐방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지원(서비스)의 경우, 이동성·활동성은 타유형에 비해 주거공간 제공, 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지원

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안정성·환경선호성, 건강지향성은 응급돌봄 인프라 구축, 생활안전 서비스 등 복지 관련 정책 서비스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타유형에 비해 높았다.



[그림 부록-20] 라이프스타일별 인구감소지역 방문 기간, 목적, 지역 선택 이유

출처: 연구진 작성

[표 부록-9]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시 필요한 공간(HW) 인식(5점 만점)

(단위:건, 점)

구분	전체	라이프스타일				
		이동성/활동성	사회성/커뮤니티성	칭의성/변화지향성	안정성/환경 선호성	건강지향성/개학성
사례수	(500)	(144)	(43)	(22)	(246)	(45)
숙박·주거시설	숙박시설	4.14	4.20	3.93	3.82	4.20
	임대주택	3.69	3.65	3.67	3.86	3.70
업무·창업시설	공유오피스	3.10	3.22	3.56	3.41	2.90
	회의실·세미나실	2.86	2.92	3.42	3.18	2.73
	창업지원공간	2.94	2.98	3.51	3.36	2.78
	창작·제작공간	2.96	3.00	3.40	3.59	2.82
생활편의시설	코인세탁실	3.77	3.69	3.88	3.86	3.80
	공유주방	3.39	3.42	3.30	3.55	3.35
	판매시설	4.31	4.24	4.16	4.23	4.40
	운동시설	3.58	3.57	3.70	3.68	3.53
커뮤니티시설	지역안내·정보공간	3.72	3.77	3.77	3.86	3.63
	소통공간	3.36	3.42	3.81	3.73	3.20
	휴게공간	3.72	3.81	3.77	3.95	3.63
학습·체험시설	직업·기술훈련 공간	3.19	3.34	3.53	3.50	3.04
	문화교육 공간	3.46	3.50	3.70	3.55	3.37
	귀농·귀촌 교육시설	3.34	3.41	3.56	3.59	3.25
문화시설	공연장·전시공간	3.72	3.74	3.70	3.68	3.69
	복합문화공간	3.76	3.74	3.72	3.68	3.76
복지시설	건강·보건시설	4.03	3.97	3.93	4.00	4.07
	돌봄·상담공간	3.37	3.34	3.70	3.68	3.30

출처: 연구진 작성

[표 부록-10] 라이프스타일 유형별 타지역 정기적 방문 및 체류 의향에 프로그램(SW)이 미치는 영향(5점 만점)

(단위:건, 점)

구분	전체	라이프스타일					
		이동성/활동성	사회성/커뮤니티성	창의성/변화지향성	안정성/환경선호성	건강지향성/계획성	
사례수	(500)	(144)	(43)	(22)	(246)	(45)	
관광/ 휴양 활동	지역축제	3.88	4.01	3.79	3.50	3.86	3.80
	문화/관광지 탐방	4.06	4.12	3.65	3.82	4.10	4.16
	레저/웰니스 관광	3.86	3.84	3.67	3.68	3.90	3.98
	워케이션	3.55	3.59	3.63	3.64	3.50	3.62
창업· 일자리 활동	로컬 창업	3.17	3.28	3.60	3.55	2.98	3.22
	일경험·인턴	3.30	3.41	3.51	3.59	3.18	3.31
	일자리 연계	3.37	3.43	3.56	3.68	3.26	3.44
학습활동	현장견학·체험학습	3.49	3.58	3.63	3.59	3.38	3.58
	농촌유학·로컬유학	3.31	3.24	3.65	3.59	3.26	3.36
지역살이 활동	한달살기/살아보기	3.77	3.69	3.74	3.68	3.80	3.89
	귀농·귀촌 체험	3.57	3.65	3.58	3.45	3.54	3.51
	두지역살이	3.52	3.54	3.65	3.36	3.50	3.47
커뮤니티 활동	주민교류·네트워킹	3.31	3.40	3.58	3.23	3.22	3.33
	지역사회 참여활동	3.36	3.49	3.74	3.23	3.20	3.56

출처: 연구진 작성

[표 부록-11] 생활인구 유형별 생활인구 확대에 대한 정책지원(서비스)의 도움 정도 인식(5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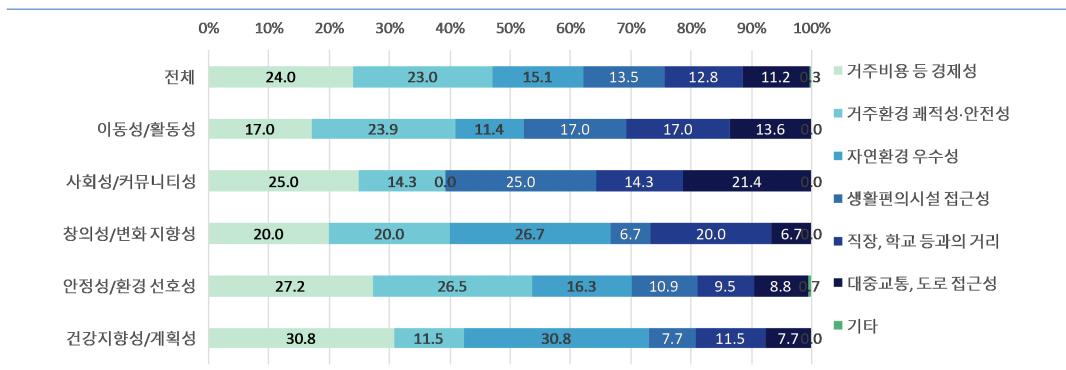
(단위:건, 점)

구분	전체	생활인구 유형					
		이동성/활동성	사회성/커뮤니티성	창의성/변화지향성	안정성/환경선호성	건강지향성/계획성	
사례수	(500)	(144)	(43)	(22)	(246)	(45)	
주거지원	주거공간 제공	4.20	4.17	4.02	3.86	4.26	4.27
	주거비 지원	4.28	4.24	3.93	3.82	4.41	4.31
	주택 수리 지원	4.04	4.03	3.88	3.77	4.10	4.02
	정책상담 및 정보제공	3.93	3.92	3.86	3.73	3.96	4.00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	3.64	3.76	3.70	3.41	3.58	3.62
	직업 역량 강화	3.64	3.77	3.58	3.59	3.58	3.62
	귀농·귀촌 교육	3.73	3.77	3.77	3.68	3.72	3.69
의료· 돌봄지원	응급·돌봄 인프라 구축	4.06	4.06	3.95	3.77	4.09	4.11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3.97	3.97	3.84	3.55	4.03	4.02
	복지 서비스 연계	3.92	3.85	3.91	3.73	3.95	4.09
문화예술 지원	예술인 정착지원	3.61	3.61	3.84	3.59	3.56	3.69
	지역문화·창작활동 지원	3.62	3.65	3.65	3.27	3.60	3.73
정보제공	생활·정책정보 안내	3.62	3.62	3.58	3.32	3.63	3.82
	정보 플랫폼 운영	3.72	3.72	3.79	3.50	3.70	3.84
커뮤니티 지원	주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	3.58	3.58	3.84	3.41	3.54	3.64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3.60	3.71	3.70	3.41	3.53	3.64

출처: 연구진 작성

■ 라이프스타일별 지역 정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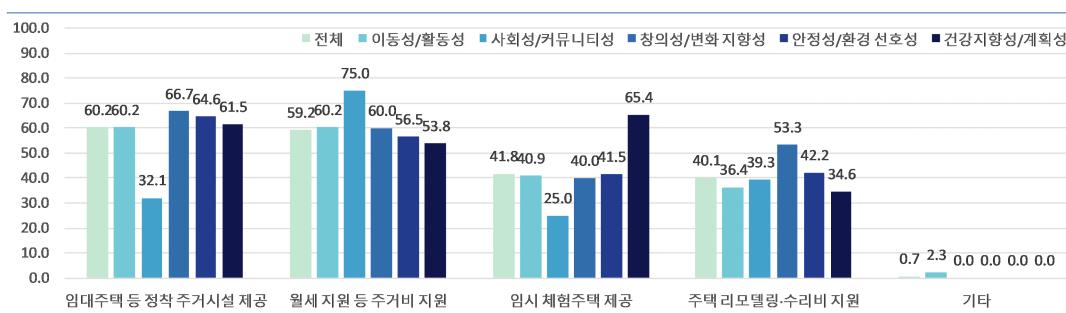
라이프스타일별로 정착 의향이나, 정착시 선호 주택유형 등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향후 이주·정착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이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이 있었다. 사회성·커뮤니티성은 다른 유형과 다르게 자연환경 우수성에 대한 응답자가 한 명도 없었고, 대중교통 접근성과 경제성, 생활편의 접근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건강지향성·계획성은 타 유형에 비해, 경제성과 자연환경 우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그림 부록-21] 라이프스타일별 향후 이주·정착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1순위, %)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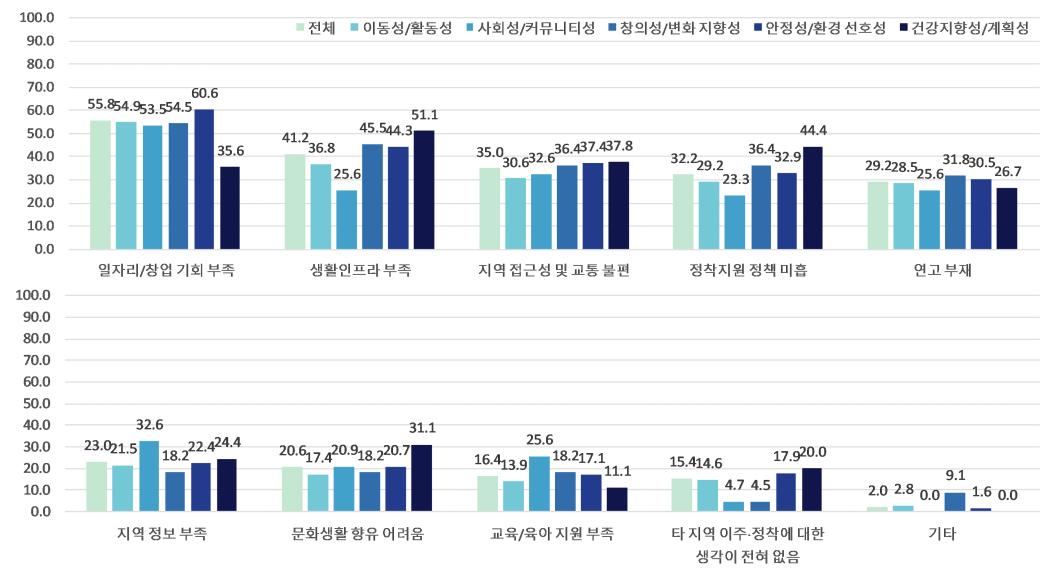
향후 이주 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의 경우, 대부분 정착 주거시설 제공을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으며, 사회성·커뮤니티성은 주거비 지원을 더 필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유형에 비해 건강지향성·계획성은 임시체험주택 제공을, 창의성·변화지향성은 주택 리모델링 수리비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부록-22] 라이프스타일별 향후 이주·정착 시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

출처: 연구진 작성

향후 이주·정착에 있어 방해요소로는 모든 라이프스타일이 유사하게 일자리·창업기회 부족, 생활인프라 부족을 주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건강지향성·계획성의 경우, 타유형에 비해 정착지원 정책 미흡과 문화생활 향유 어려움도 방해요소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부록-23] 생활인구 유형별 향후 이주·정착 방해요소(%)

출처: 연구진 작성

이 조사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ID -

생활인구의 인구감소지역 체류 인식 및 생활거점 수요조사

안녕하십니까?

건축공간연구원(AURI)은 국무총리실 산하 건축·도시분야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생활거점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의 응답 내용은 통계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은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소중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비밀이 엄격히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방보람 부연구위원, 장민영 연구위원 (☎ 044-417-9868, 9870)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7층, 건축공간연구원

SQ.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시/도 지도 선택]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⑮ 경남 |
| ⑯ 제주 | ⑰ 세종 | | | |

SQ1-1. (SQ1)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시/군/구 지도 선택]

SQ2.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특성은 다음 중 어디에 가깝습니까?

- ① 도시 지역
- ② 도시와 비도시 지역(농촌·어촌·산촌) 성격이 혼재된 지역
- ③ 비도시 지역(농촌, 어촌, 산촌)

SQ3.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출생연도: _____)

- | | | | | |
|----------|----------|----------|----------|----------|
| ① 19~29세 | ② 30~39세 | ③ 40~49세 | ④ 50~59세 | ⑤ 60~69세 |
|----------|----------|----------|----------|----------|

SQ4.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남성 | ② 여성 |
|------|------|

A. 체류 경험 및 특성

A1. 귀하는 최근 1년 동안, 현재 거주지 이외에 1일 이상 체류하신 곳이 있습니까?

- | | |
|--------------|--------------|
| ① 있다 → A1-1로 | ② 없다 → 조사 종료 |
|--------------|--------------|

A1-1. 최근 1년 동안, 1일 이상 체류하신 지역(시/군/구)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시/도 → 시/군/구 목록 선택]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체류지로 89개 '인구 감소 지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조사 종료

A1-2. 1일 이상 체류하신 지역 중 가장 자주 가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금부터는 귀하께서 가장 자주 가고 계신 '(A1-2)'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A2. (A1-2)은 얼마나 자주 가고 계십니까?

(※ 응답하기 편한 단위 하나를 선택하시고 횟수를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①1년/②1개월/③1주)에 _____회 방문 ④ 1회성 방문

A3. 귀하가 (A1-2)을 한 번 가시면, 평균 며칠 정도 머무르십니까?

(※ 1회성 방문이면, 그 당시 체류 기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 | | |
|----------------|----------------|------------------|
| ① 1일 | ② 2~3일 | ③ 4~5일 |
| ④ 6~7일(일주일 정도) | ⑤ 8~15일(보름 정도) | ⑥ 16일~1개월(한달 정도) |
| ⑦ 1~3개월 미만 | ⑧ 3개월 이상 | |

A4. (A1-2)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가십니까? 해당되는 체류 목적으로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통근/통학(직장, 학교)
- ② 관광/휴양(축제, 관광지, 휴양지 방문)
- ③ 업무/비즈니스(출장, 기업 협업, 박람회 참가 등)
- ④ 정기적 교류(지역사회 소통, 문화교류, 지역민 교류, 자매결연행사 등)
- ⑤ 체험·임시거주(살아보기, 한달살이, 귀농·귀촌 체험 등)
- ⑥ 특별한 목적(장기근로, 취업준비, 기타 특수목적)
- ⑦ 기타(_____)

A5. 그렇다면, 해당 목적을 위해 다른 지역 말고 (A1-2)으로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 1순위(), 2순위() [1순위 필수]

- ① 현재 거주지와 가까워서
- ② 직장, 학교 등 체류 목적지가 있어서
- ③ 자연환경(산, 바다, 공원 등)이 좋아서
- ④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고속도로, 철도 등)
- ⑤ 생활 인프라(의료, 상업, 문화시설 등)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 ⑥ 고향, 가족, 지인 등 연고가 있어서
- ⑦ 체류 지원 정책(살아보기 프로그램, 지원금 등)이 있어서

⑧ 기타(_____)

A6. 귀하가 가장 최근에 (A1-2) 체류 시 머물렀던 숙소는 어디입니까?

- ① 호텔, 호스텔, 콘도 등
- ② 모텔, 여관 등
- ③ 민박,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한옥)체험주택 등
- ④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등
- ⑤ 셰어하우스, 코리빙(Co-living) 등
- ⑥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단기 임대주택
- ⑦ 농촌 체류형 숙소, 농막, 귀농귀촌형 쉼터 등
- ⑧ 별장, 세컨드하우스
- ⑨ 지인의 집, 관사, 사택 등
- ⑩ 기타(_____)

A6-1. 해당 숙소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 1순위(), 2순위() [1순위 필수]

- ① 숙소 이용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 ② 숙소 공간(방 크기, 청결도 등)이 쾌적해서
- ③ 숙소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교류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이 매력적이어서
- ④ 숙소/거주시설 내 취사, 조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 ⑤ 비용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지인의 집, 별장, 세컨드하우스 등)
- ⑥ 기타(_____)

A6-2. 해당 숙소의 지역 내 위치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읍내, 전통시장, 면사무소 인근)에 있음
- ②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있음
- ③ 자연환경 인접지역(해변, 호수, 산림 등)에 있음
- ④ 기타(_____)

A6-3. 귀하가 그 위치의 숙소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주된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 1순위(), 2순위() [1순위 필수]

- ① 체류 목적지(직장, 학교 등)와 가까워서
- ② 자연환경이 주변에 있어서(숲, 바다, 강 등 자연 인접성)
- ③ 대중교통, 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 ④ 생활편의시설(마트, 병원, 카페 등)이 가까워서
- ⑤ 거주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해서
- ⑥ 거주 비용이 저렴해서(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
- ⑦ 기타(_____)

A7. 귀하가 그 동안 (A1-2)에 머무르면서 참여해 보신 활동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관광/휴양 활동(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워케이션(일+휴식) 등)
- ② 창업·일자리 활동(로컬 창업, 일경험·인턴, 일자리 연계)
- ③ 학습활동(현장건학·체험학습, 농촌유학·로컬유학)
- ④ 커뮤니티 활동(주민 교류, 네트워킹, 동호회나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참여활동)
- ⑤ 참여한 활동이 없다

A8. 귀하가 그 동안 (A1-2)에 머무르면서 이용해 보신 시설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 ① 업무·창업시설(공유오피스, 회의실·세미나실, 창업지원공간 등)
 - ② 생활편의시설(코인세탁실, 공유주방, 판매시설, 운동시설 등)
 - ③ 커뮤니티시설(커뮤니티 라운지, 소모임 등의 소통공간, 휴게공간 등)
 - ④ 학습·체험시설(직업·기술훈련 공간, 마을학교, 농업기술센터, 귀농교육장 등)
 - ⑤ 문화시설(공연장, 전시공간, 복합문화공간 등)
 - ⑥ 복지시설(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돌봄공간, 상담공간 등)
 - ⑦ 기타(_____)
 - ⑧ 숙소 이외 시설을 이용한 적 없다 → **A9로**

⑧ 숙소 이외 시설을 이용한 적 없다 → A9로

(A8. 이용한 시설만 제시)

A8-1. 귀하가 그 동안 **(A1-2)에** 머무르면서 **가장 가주 이용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이용한 순서대로 최대 3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 ▶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1순위 필수]

① 숙박·주거시설	② 업무·창업시설
③ 생활편의시설	④ 커뮤니티시설
⑤ 학습·체험시설	⑥ 문화시설
⑦ 복지시설	⑧ 기타()

(A8. 이용한 시설만 제시)

A8-2. 귀하가 이용하신 시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어느 정도 만족	매우 만족
1) 숙박·주거시설	①	②	③	④	⑤
2) 업무·창업시설	①	②	③	④	⑤
3) 생활편의시설	①	②	③	④	⑤
4) 커뮤니티시설	①	②	③	④	⑤
5) 학습·체험시설	①	②	③	④	⑤
6) 문화시설	①	②	③	④	⑤
7) 복지시설	①	②	③	④	⑤
8) 기타(_____)	①	②	③	④	⑤

A9. 귀하는 (A1-2)의 체류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한다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스러운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A9-1로			→ A9-2로	

A9-1. (A1-2)의 체류 환경 중 가장 불만족스럽거나 불편했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① 숙박·주거 시설의 품질 | ②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 |
| ③ 자연환경 | ④ 생활편의시설 이용 편리성 |
| ⑤ 지역 정보 접근성 | ⑥ 일자리 기회(창업, 취업 등) |
| ⑦ 체험 프로그램 및 불거리 다양성 | ⑧ 지역 주민과의 관계(확대, 커뮤니티 참여 등) |

A9-2. (A1-2)의 체류 환경 중 가장 만족스럽거나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숙박·주거 시설의 품질
 - ② 교통 편리성 및 접근성
 - ③ 자연환경
 - ④ 생활편의시설 이용 편리성
 - ⑤ 지역 정보 접근성
 - ⑥ 일자리 기회(창업, 취업 등)
 - ⑦ 체험 프로그램 및 볼거리 다양성
 - ⑧ 지역 주민과의 관계(환대, 커뮤니티 참여 등)
 - ⑨ 지역 분위기 및 정취
 - ⑩ 체류비용 합리성(숙박, 식비, 교통비 등)
 - ⑪ 기타(_____)

A10. 귀하가 (A1-2)에 체류하시면서 느꼈던 개선점이나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 (예: 숙박 개선, 프로그램 다양화, 교통편 개선, 주민 교류 확대 등)

B.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필요 요소

- ▶ 체류형 생활인구란?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특정 지역에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방문·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 각 지역에서는 이러한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간(시설)', '프로그램(활동)', '정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요소]

공간(시설)	프로그램(활동)	정책지원(서비스)
		

구분	분류	세부
공간 (시설)	숙박·주거시설	숙박시설, 임대주택
	업무·창업시설	공유오피스, 회의실 세미나실, 창업지원공간, 창작·제작공간
	생활편의시설	코인세탁실, 공유주방, 판매시설, 운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지역안내·정보공간, 소통공간, 휴게공간
	학습·체험시설	직업·기술훈련 공간, 문화교육 공간, 귀농귀촌 교육시설
	문화시설	공연장·전시공간, 복합문화공간(서점, 북카페, 팝업공간 등이 모여있는 장소)
	복지시설	건강·보건시설, 돌봄·상담공간
프로그램 (활동)	관광·휴양 활동	지역축제, 문화/관광지 탐방, 레저/웰니스 관광, 워케이션(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근무 형태)
	창업·일자리 활동	로컬 창업, 일경험·인턴, 일자리 연계
	학습활동	현장검학·체험학습, 농촌유학·로컬유학
	지역살이 활동	한 달살기/살아보기, 귀농·귀촌 체험, 두 지역살이
	커뮤니티 활동	주민 교류·네트워킹, 지역사회 참여 활동
정책지원 (서비스)	주거지원	주거공간 제공, 주거비 지원, 주택 수리 지원,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일자리 지원	창업 컨설팅, 직업 역량 강화 지원, 귀농·귀촌 교육
	의료·돌봄 지원	응급·돌봄 인프라 구축,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
	문화예술지원	예술인 정착 지원, 지역문화·창작활동 지원
	정보제공	생활·정착정보 안내, 정보 플랫폼 구축
	커뮤니티 지원	교류 프로그램 운영,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귀하가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체류하신다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B1. 귀하가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체류한다면, 다음의 공간(시설)이 귀하 본인에게 얼마나 필요로 하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분류	공간	전혀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숙박·주거시설	1) 숙박시설(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③	④	⑤
	2) 임대주택(셰어하우스, 공공임대 등)	①	②	③	④	⑤
업무·창업시설	3) 공유오피스	①	②	③	④	⑤
	4) 회의실·세미나실	①	②	③	④	⑤
	5) 창업지원공간(창업보육실, 창업카페 등)	①	②	③	④	⑤
생활편의시설	6) 창작·제작공간(공동작업장, 스튜디오 등)	①	②	③	④	⑤
	7) 코인세탁실	①	②	③	④	⑤
	8) 공유주방	①	②	③	④	⑤
	9) 판매시설(편의점, 지역상점 등)	①	②	③	④	⑤
커뮤니티시설	10) 운동시설(헬스장, 체력단련실)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안내·정보공간(관계안내소, 안내센터)	①	②	③	④	⑤
	12) 소통공간(커뮤니티 라운지, 소모임공간)	①	②	③	④	⑤
학습·체험시설	13) 휴게공간(공용 휴게실, 쉼터)	①	②	③	④	⑤
	14) 직업·기술훈련 공간	①	②	③	④	⑤
	15) 문화교육 공간(마을학교, 지역 아카데미)	①	②	③	④	⑤
문화시설	16) 귀농귀촌 교육시설(농업기술센터, 귀농교육장)	①	②	③	④	⑤
	17) 공연장·전시공간	①	②	③	④	⑤
	18) 복합문화공간(서점, 북카페, 팝업공간 등이 모여있는 장소)	①	②	③	④	⑤
복지시설	19) 건강·보건시설(건강증진센터, 보건소 등)	①	②	③	④	⑤
	20) 돌봄·상담공간	①	②	③	④	⑤

B2. 거주지 외 다른 지역 체류 의향에 다음의 '프로그램(활동)'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프로그램(활동)을 제공한다면, 이 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체류할 마음이 생긴다)

분류	프로그램(활동)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음	보통	다소 영향을 줌	매우 영향을 줌
관광·휴양 활동	1) 지역축제	①	②	③	④	⑤
	2) 문화/관광지 탐방	①	②	③	④	⑤
	3) 레저/웰니스 관광(휴양림, 치유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4) 워케이션(일과 휴식을 함께 하는 근무 형태)	①	②	③	④	⑤
창업·일자리 활동	5) 로컬 창업	①	②	③	④	⑤
	6) 일경험·인턴(체험형 일자리, 단기 채용)	①	②	③	④	⑤
	7) 일자리 연계(로컬기업/지역 일자리 연결)	①	②	③	④	⑤
학습활동	8) 현장견학·체험학습(지역자원 연계 현장학습)	①	②	③	④	⑤
	9) 농촌유학·로컬유학(장기 전입형 교육 체험)	①	②	③	④	⑤
지역살이 활동	10) 한달살기/살아보기(단기 임시 체류)	①	②	③	④	⑤
	11) 귀농·귀촌 체험(시범가주형 체류, 귀농 사전체험)	①	②	③	④	⑤
	12) 두지역살이(5도2촌, 계절형/순환형 체류)	①	②	③	④	⑤
커뮤니티 활동	13) 주민 교류·네트워킹(주민모임, 초청행사 등)	①	②	③	④	⑤
	14) 지역사회 참여활동(동호회, 자원봉사 등)	①	②	③	④	⑤

B3.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정주인구(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들)가 아닌 체류형 생활인구(정기적으로 며칠씩 머무르는 사람들)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정책지원(서비스)'가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분류	세부 항목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다소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주거지원	1) 주거공간 제공(임대주택, 체험주택)	①	②	③	④	⑤
	2) 주거비 지원(월세 보조, 체험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3) 주택 수리 지원(리모델링, 보수비 지원)	①	②	③	④	⑤
	4) 정착상담 및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 지원	5) 창업 컨설팅(창업기획, 멘토링)	①	②	③	④	⑤
	6) 작업 역량 강화(직업훈련, 실무워크숍)	①	②	③	④	⑤
	7) 귀농·귀촌 교육(귀농·귀촌학교, 기술교육)	①	②	③	④	⑤
의료·돌봄 지원	8) 응급·돌봄 인프라 구축(응급시설, 돌봄인력)	①	②	③	④	⑤
	9)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방범, 재난 대응)	①	②	③	④	⑤
	10) 복지 서비스 연계(지역복지, 의돌봄)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 지원	11) 예술인 정착지원(창작공간 제공, 생활비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12) 지역문화·창작활동 지원(축제연계, 지역 콘텐츠 제작)	①	②	③	④	⑤
정보제공	13) 생활·정착정보 안내(리플렛, 홍보물 등)	①	②	③	④	⑤
	14) 정보 플랫폼 운영(지자체별 체류 이주 등 관련 정보 통합제공)	①	②	③	④	⑤
커뮤니티 지원	15) 주민 교류 프로그램 운영(간담회, 공동 활동 등 관계형성)	①	②	③	④	⑤
	16)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공간 운영, 소규모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⑤

B4. 체류형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간(시설)', '프로그램(활동)', '정책지원(서비스)' 중 어떤 영역을 더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해야 할 순서대로 선택해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 필수]

① 공간(시설)

② 프로그램(활동)

③ 정책지원(서비스)

B5. 그 외 인구감소지역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자유롭게 기입해 주십시오.

3

C. 지역과의 관계 및 정착 의향

C1.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귀하는 어느 정도 거리(시간)까지의 지역이라면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일정 기간 체류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당되는 범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30분 이내 거리 ② 1시간 이내 거리 ③ 2시간 이내 거리
 - ④ 3시간 이내 거리 ⑤ 3시간 이상 거리여도 상관없음
 - ⑥ 협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정기적으로 갈 생각이 없다 → **C5로**

귀하가 현재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체류하신다고 가정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C2. 귀하가 현재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 체류하신다고 할 때, 가장 선호하는 숙박시설은 무엇입니까?
(※ 1회성 방문이 아닌 정기적으로 체류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 ① 호텔, 호스텔, 콘도 등
 - ② 모텔, 여관 등
 - ③ 민박,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한옥)체험주택 등
 - ④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등
 - ⑤ 셰어하우스, 코리빙(Co-living) 등
 - ⑥ 오피스텔, 고시원 등 단기 임대주택
 - ⑦ 농촌 체류형 숙소, 농막, 귀농귀촌형 쉼터 등
 - ⑧ 별장, 세컨드하우스
 - ⑨ 지인의 집, 관사, 사택 등
 - ⑩ 기타()

C3. 귀하가 거주지 외 다른 지역 체류 시, [하루 숙박비로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1일 숙박시 만원까지 낼 의향이 있음

C4. 귀하는 향후 현재 거주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정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C4-1. 현 거주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정착하시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직장, 학교 등 체류 목적지가 있어서
 - ② 자연환경(산, 바다, 공원 등)이 뛰어나서
 - ③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고속도로, 철도 등)
 - ④ 생활인프라(의료, 상업, 문화시설 등)가 잘 갖추어져 있어서
 - ⑤ 고향, 가족, 지인 등 연고가 있어서
 - ⑥ 체류 지원 정책(살아보기 프로그램, 지원금 등)이 있어서
 - ⑦ 기타()

C4-2. 이주·정착 희망지(정주 희망지)를 선택하실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실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주십시오. (보기 로테이션)

▶ 1순위(_____), 2순위(_____) [1순위 필수]

- ① 직장, 학교 등과의 거리
- ② 자연환경 우수성
- ③ 대중교통, 도로 접근성
- ④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 ⑤ 거주환경 쾌적성·안전성
- ⑥ 거주비용 등 경제성
- ⑦ 기타(_____)

C4-3. 귀하가 정주를 희망하는 지역의 유형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 ① 도시적 기반이 갖추어진 중심지(읍내, 전통시장, 면사무소 인근)
- ② 농촌·마을 집단 거주지(마을회관, 경로당 등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 ③ 자연환경 인접지역(해변, 호수, 산림 등)
- ④ 기타(_____)

C4-4. 정주 시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 | | |
|-------------|--------------|-------|
| ① 단독주택 | ② 연립주택/다세대주택 | ③ 아파트 |
| ④ 기숙사/사택 | ⑤ 오피스텔 | |
| ⑥ 기타(_____) | | |

C4-5. 귀하께서 정주 시 선호하는 주거 절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소유
- ② 전세 임차
- ③ 보증금이 있는 월세
- ④ 보증금이 없는 월세(사글세, 연세 포함)
- ⑤ 무상 거주(지인 집, 관사, 사택 등 임대료 없이 거주)
- ⑥ 기타(_____)

C4-6. 정주 시, 집을 소유하지 않고 북은 날만큼 임대료(주거비용)를 지불한다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숙박할 기간 단위를 선택하시고 금액을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①1일/②1주/③1개월)에 _____만원까지 낼 의향이 있음

C4-7. 귀하가 현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정주하려고 할 때, 필요한 주거지원 정책은 무엇입니까? 필요한 주거지원을 모두 선택해 주시고, 그 외 추가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기타 응답란에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임대주택 등 정착 주거시설 제공
- ②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
- ③ 주택 리모델링·수리비 지원
- ④ 임시 체험주택 제공
- ⑤ 기타(_____)

C5. 귀하가 현재 거주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주·정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역 접근성 및 교통 불편
- ② 일자리/창업 기회 부족
- ③ 지역 정보 부족
- ④ 연고 부재
- ⑤ 생활인프라 부족
- ⑥ 교육/육아 지원 부족
- ⑦ 문화생활 향유 어려움
- ⑧ 정착지원 정책 미흡
- ⑨ 타 지역 이주·정착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음
- ⑩ 기타(_____)

C6. 현재 거주지 외에 가보고 싶은 시군이 있습니까? 3곳만 응답해 주십시오.

[시/도 → 시/군/구 목록 선택]

DQ. 응답자 특성

DQ1. 다음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설명 중 **본인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유형	설명	특징/핵심 키워드
① 이동성/활동성	▶ 다양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성향.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태도	여행, 이동, 활발한 활동, 이동 빈도 및 활동 반경 넓음
② 사회성/커뮤니티성	▶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향. 사회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타인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경향	모임 참여, 교류 성향, 인간관계 중시, 커뮤니티 소속 욕구
③ 창의성/변화 지향성	▶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창의적으로 도전하려는 성향. 안정보다는 새로움과 다양성을 추구	트렌드 민감성, 변화 선호, 창업 지향, 도전 정신
④ 안정성/환경 선호성	▶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선호하며, 한곳에 오래 머무르려는 성향. 심리적 안정과 환경적 편안함을 중시	자연환경 선호, 조용한 환경, 정주성향 강함
⑤ 건강지향성/계획성	▶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중요시하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생활하려는 성향. 준비성과 자기관리가 높은 스타일	건강관리 관심, 계획적 생활, 목표 지향성

DQ2.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D03.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DO4.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PO5. 현재 함께 거주하고 계신 가구원 **수**는 모두 몇 명이니까? (※ 가족이지만 따로 살고 계신 분은 제외)

▶ 본인 포함 총 명 → 1인 가구 D06으로

D05-1 현재 함께 살고 계신 가족 구성원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영·유아(신생아~만 6세) ② 초등학생 자녀 ③ 중/고등학생 자녀
④ 65세 이상 고령자 ⑤ 해당되는 국선원 위증(모두 성인)

D06 귀하는 현재 어떤 익을 하고 계신니까?

DQ7.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 재학 ③ (전문)대학 졸업
④ 대학원 재학 ⑤ 대학원 졸업

DQ8. 실례지만, 귀하를 포함한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보너스, 임대소득 등 기타 수입 포함)

- | | | |
|----------------|----------------|------------------|
|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300만원 미만 | ③ 300~400만원 미만 |
| ④ 400~500만원 미만 | ⑤ 500~600만원 미만 | ⑥ 600~700만원 미만 |
| ⑦ 700~800만원 미만 | ⑧ 800~900만원 미만 | ⑨ 900~1,000만원 미만 |
| ⑩ 1,000만원 이상 | |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

부록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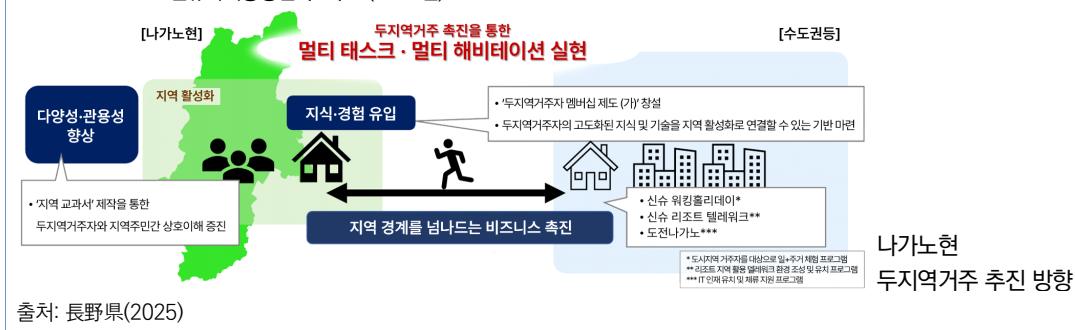
일본의 두지역거주 생활거점 사례: 나가노현 시오지리시(長野県 塩尻市)

■ 나가노현의 두지역거주 정책 추진 현황

- 나가노현 광역활성화계획(두지역거주) 수립(2025.02.10. 공표)
 - 나가노현은 일본 최초로 '광역활성화계획(두지역거주)'를 수립하였으며, 현 내 지자체 및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두지역거주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으로 다양한 생활방식과 일하는 방식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 나가노현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 두지역거주 촉진 민관협력 플랫폼'을 활용해 국가 차원의 관련 정책 건의 활동을 추진 중

※ 나가노현 광역활성화계획(두지역거주) 개요

- 계획기간 : 2024~2028년도
- 계획 방향 : '멀티 태스트(Multi-task), 멀티 해비테이션(multi-habitation) 실현'
- 주요내용
 - 나가노현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특정거주거점시설 및 특정거주중점지구 지정
 - (적용 기초지자체(시정촌)) 시오지리시
 - (특정거주거점시설) 7개소 / (특정거주중점지구) 3개 지구
※ 시오지리시 특정거주촉진계획과 동일
- 계획 목표 : '두지역거주등멤버십제도(가)' 창설 및 등록자수 2만명 이상 달성
※ '신슈미래공창전략' 목표 (2030년)



- 나가노현의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⁷⁷⁾
 - 현내 기초지자체(시정촌) 및 민간기업 등과 연계해 두지역거주 관련 정보제공,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음

77) 二地域居住の促進について, 長野県, <https://www.pref.nagano.lg.jp/shinko/iju/2chiiki.html> (검색일: 2025.05.13.)

- 두지역거주 관련 이용 가능 시설, 이주 세미나 등의 안내 및 오프라인 이주상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나가노현에 두지역거주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할인, 중개 수수료 할인 등 제공하는 무료회원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표 부록-12] 나가노현 두지역거주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구분	내용	운영주체/담당부서
니분노나가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노현의 두지역거주 정보 사이트 • 두지역거주 실천자 인터뷰와 현내에서 리모드 워크가 가능한 시설, 로컬 프로젝트 정보 게재 	나가노현 기획진흥부 지역진흥과
낙원신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슈 지역의 전원생활을 소개하는 이주 포털 사이트 • 3대 대도시권에서 개최하는 '낙원 신슈 이주 세미나'에 대한 정보 제공 	전원생활 '낙원신슈' 추진협의회/ 나가노현 기획진흥부 지역진흥과 신슈생활촉진계
이주상담창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노현청 외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3대 대도시권에 각각 상담 창구 위치 • 전문 상담원과 나가노현 직원이 상담 	나가노현 기획진흥부 지역진흥과 신슈생활촉진계
라쿠엔 신슈 페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노현에 이주·두지역거주 희망자에게 이주·두지역거주 전후에 필요한 서비스와 특전을 제공하는 무료회원제 • 서비스 및 특전내용 소개 	전원생활 '낙원신슈' 추진협의회/ 나가노현 기획진흥부 지역진흥과 신슈생활촉진계

출처: 二地域居住の促進について, 長野県, <https://www.pref.nagano.lg.jp/shinko/iju/2chiiki.html> (검색일: 2025.05.13.)
를 참고하여 작성

■ 시오지리시의 특정거주촉진계획 및 생활거점 조성 사례

- 나가노현 시오지리시 특정거주촉진계획 수립(2025.03.27. 공표)⁷⁸⁾
 - 시오지리시는 나가노현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로, 교통의 요충지이자 풍요로운 자연환경, 쾌적한 도시기능을 가진 도시로 발전해 옴
 - 자연·농촌 풍토의 혜택, 우수한 육아·주거환경, 대도시 및 인근 도시와의 뛰어난 접근성 등 기존부터 이어져 온 전원도시의 강점과 더불어 최근에는 시민교류센터, 스나바, core 시오지리 등 '도전자 친화적 환경'과 '지식 교류 거점'이라는 지역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역 과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관계인구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배경하에 시오지리시는 '주거', '일자리', '커뮤니티'의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을 통합 지방창생을 목표로 하는 '특정거주촉진계획'을 나가노현 내 최초로 수립함
 - 본 계획에서는 특정거주촉진구역(3개), 특정거주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특정거주거점시설(7개) 및 특정거주자의 생활 편리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관련시설(7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 촉진구역별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시도를 선도적 모델로 추진하여 지역 내·외를 연결하고, '다채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도시, 전원도시 시오지리'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함

78) 塩尻市(2025a, 3월 27일 보도자료), 塩尻市(2025b)를 참고하여 작성

※ 시오지리시 특정거주촉진계획 개요	
□ 계획기간 : 2025년 4월~2030년 3월	
□ 계획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삶의 질 및 행복감 향상 ② 교류인구, 관계인구의 방문 및 소비 증가 ③ 두지역거주를 포함한 생산연령 인구의 정주 증가 	
□ 주요 기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거주촉진구역) ① 다이몬지구(大門地区) ② 키타오노지구(北小野地区), ③ 나라카와지구(檜川地区) • 특정거주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 • 특정거주거점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 생활 편리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 두지역거주의 효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 계획 목표 및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표1) 업무거점시설 '스나바'의 누적 등록자수 (2025년 1월(예상) 310명 → 2030년 3월 470명) • (지표2) 주거거점시설 이용자 수 (2025년 1월(예상) 1,363명 → 2030년 3월 4,427명) 	
출처: 塩尻市(2025a)을 참고하여 작성	

- 특정거주촉진구역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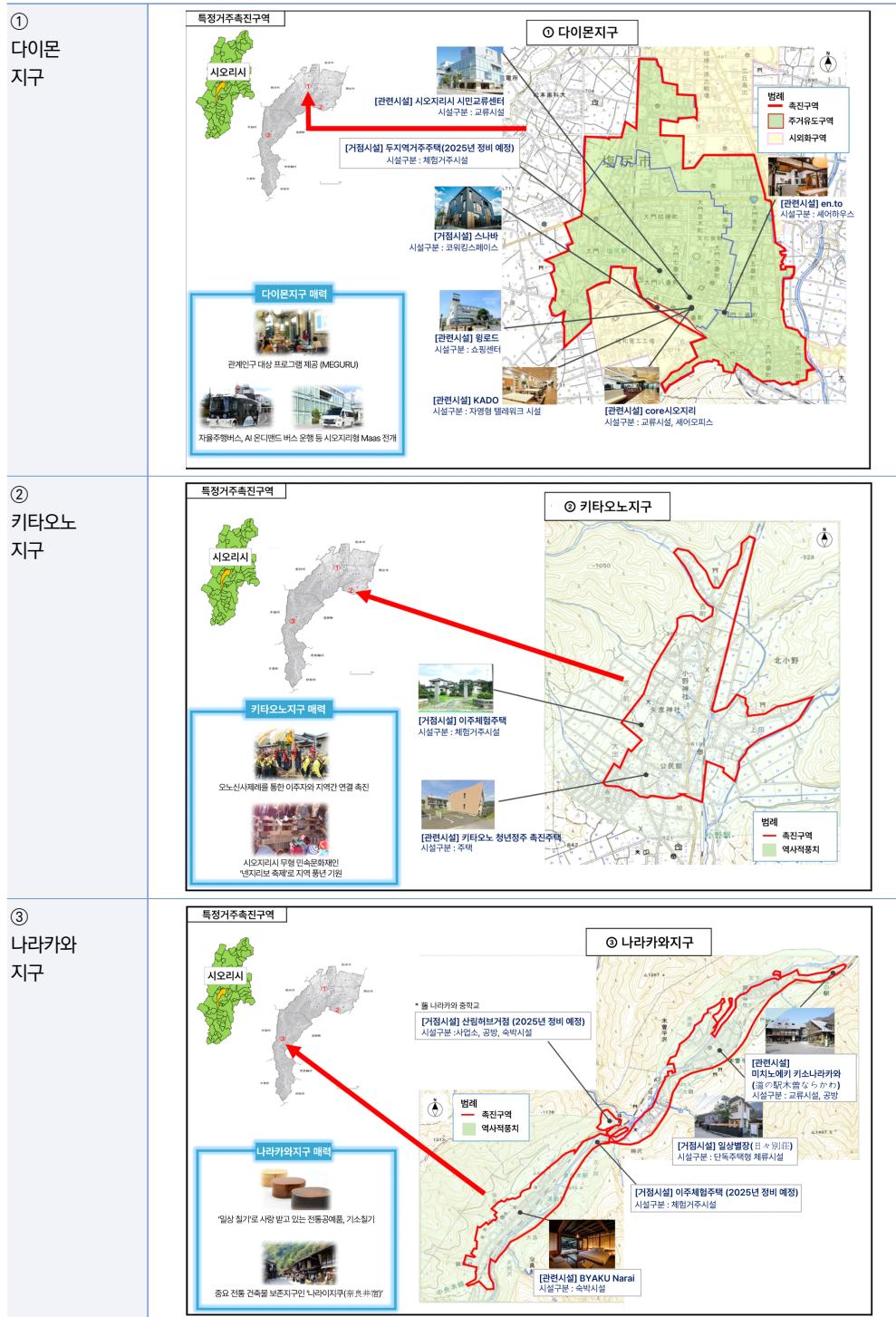
- (① **다이몬지구**) 시오지리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곳으로 JR역과 인접해 있으며, 다수의 거점 시설이 밀집한 곳. 지구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이며, 관계인구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MEGURU), 자율주행 버스나 AI 온디맨드 버스 운행 등 시오지리형 MaaS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시설 3개, 관련시설 4개)
- (② **키타오노지구**) 시오지리시의 남동부에 위치한 중산간 지역으로 이주자 중심의 지역자원 재해석 및 그랜드 디자인 수립 등의 시도가 있었던 곳. 지구 전체가 도시계획구역 외에 위치 하며, 시오지리시 무형민속문화재 '넨지리바 축제' 등을 통한 이주자와 지역과의 관계 증진 을 지향(거점시설 1개, 관련시설 1개)
- (③ **나라카와지구**) 시오지리시의 남서부에 위치한 곳으로 고령화율이 50% 이상이며, 지구 전체가 도시계획구역 외에 해당, '일상용 칠기'로 주목받는 기조 칠기,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 존지구인 '나라이주쿠'가 있는 역사문화마을이 있는 지역(거점시설 3개, 관련시설 2개)



[그림 부록-24] 시오지리시 특정거주촉진구역 및 특정거주거점시설

출처: 연구진 촬영

79) 塩尻市(2025b), 시오지리시청 기획과 담당자 인터뷰(2025.05.27.)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그림 부록-25] 시오리리시 특정거주 촉진구역

출처: 塩尻市(2025b, pp.1-3)

• 특정거주거점시설

- 특정거주거점시설은 코워킹, 셰어하우스, 체험주택, 숙박·공방 복합시설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이 있으며, 특정거주촉진구역별로 여리 용도의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거점시설은 2010년대 중반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계획 중
- 거점시설의 운영주체는 자체체, 공사, 민간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협력하고 있으며, 체류·교류·정착의 연계를 위한 다종적 공간 구성으로 지역의 생활거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부록-13] 시오지리시의 특정거주거점시설 및 관련시설 개요

구역	구분	용도	시설명	정비주체	비고
다이몬지구 (大門三番町)	특정거주 거점시설	코워킹 스페이스	스나바	일반재단법인 시오지리시 진흥공사	2018.03. 정비 완료
		셰아하우스	en.to(엔토)	en.to	2024.03. 정비 완료
		체험거주 시설	두지역거주 주택	(주)시오지리마치겐키컴퍼니	2025.04.~ 2025.08.
	관련시설	교류센터	시오지리시 시민교류센터	시오지리시	2010.08. 정비 완료
		쇼핑센터	윙로드	시오지리시, 주식회사 델리시아(デリシア)	2010.08. 정비 완료
		자영형 텔레워크 시설	KADO	일반재단법인 시오지리시 진흥공사	2019.03. 정비 완료
		교류시설, 셰어오피스	core시오지리	일반재단법인 시오지리시 진흥공사	2023.03. 정비 완료
키타오노지구 (大字北小野)	특정거주 거점시설	체험거주 시설	이주체험 주택	(주)시오지리마치겐키컴퍼니	2021.09. 정비 완료
	관련시설	주택	키타오노지구 청년정주 촉진주택	시오지리시, 키타오노재산구(北小野財産区),	2012.03. 정비 완료
나라카와지구 (大字奈良井)	특정거주 거점시설	사업소, 공방, 숙박시설	산림허브 거점	일반재단법인 시오지리시 진흥공사 (주)솔트타ーミナル	2025.04.~ 2026.03.
		단독주택 체류시설	히비벳소 (日々別荘)	일반재단법인 시오지리시 진흥공사 (주)시오지리마치겐키컴퍼니	2020.11. 정비 완료
		체험거주 시설	이주체험 주택	(주)시오지리마치겐키컴퍼니	2025.04.~ 2025.08.
	관련시설	교류시설, 공방	미치노에키 키소나라카와	시오지리시, 일반재단법인 시오지리·기소지역 토착산업진흥센터	2022.03. 정비 완료
		숙박시설	BYAKU Narai	일반사단법인 시오지리시산림공사, 주식회사 솔트터미널	2021.03. 정비 완료

출처: 塩尻市(2025b, pp. 5-6)를 참고하여 작성



[그림 부록-26] 시오지리시의 특정거주거점시설 및 관계시설 사례

출처: en.to, <https://entocinfo.wixsite.com/ento/>, core塩尻, <https://core.shiojiri.com/facility/>,

しおじり街元気カンパニー, <https://shiojiri-genki.com/service/otameshi/>,

ライフデザインオフィス堀内, <https://life7design.com/works/works-h/89>,

日々別荘, <https://hibi-besso.jp/>, 道の駅木曽ならかわ, <https://kiso.or.jp/> (검색일: 2025.04.13.)

• 시오지리시의 두지역거주 관련 주요 지원사업

- 시오지리시에서는 공공(시오지리시, 시오지리시진흥공사), 민간주체(주)시오지리마치engkap, 컴퍼니, NPO법인 MEGURU, 그밖의 지역 내 인적자원(시오지리시산림공사, 주)솔트터미널, (주)나라이마치야도 등이 함께 두지역거주 사업을 추진 중
- 공공은 주택, 교통, 교육 등 생활 인프라 정비와 제도적 지원, 민간주체들은 주거 매칭과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유입~초기 정착 단계'를 중심으로 지원, 그밖의 지역 주체들은 지역자원을 거점화하여 관계인구 및 체류형 인구와의 연결고리 형성에 기여

[표 부록-14] 시오지리시의 두지역거주 관련 단체

구분	운영주체	개요
Civic Inovation 거점/스나바	시오지리시 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고 싶은 마을을 함께 만든다’를 비전으로 시민, 기업, 행정이 모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장소 시민 주체의 혁신을 통해 지역 과제 해결과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지원 2024년도 국토교통성 ‘이주 등의 촉진을 위한 실증조사’ 채택 단체
시오지리의 인사부/ MEGURU	NPO법인 MEGURU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기’를 통해 사람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순환 모델 실현 지역의 인사부로서 다양한 인재 활용과 지역 활성화 추진 부업-겸업 인력 매칭 및 관련 인구 창출 사업 담당 지역 과제 해결과 새로운 일하는 방식 창출을 위해 노력 관동경제산업국 지역인사부 모델 단체 및 경제산업성 지역전략 인재 확보 등 실증사업 추진
관계인구·체류형 교류 거점/ en.to	en.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어하우스형 속박시설을 제공하여 단기부터 중장기까지 다양한 체류 수요에 대응 지역 안팎의 사람들이 교류하고 지역 생활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커뮤니티 형성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
AI 온디맨드 버스·자동운전/ 지역DX센터 Core 시오지리	시오지리시 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 온디맨드 버스와 자율주행 실증 실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교통 구축을 목표로 함
공공형 크라우드 소싱-텔레워크 지원/ KADO	시오지리시 진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도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지원하는 사업. 지역 DX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의 워크 스타일 혁신을 추진
이주정책·시범주택·지역 브랜딩/ 시오지리가치 겐키컴퍼니	시오지리가치 겐키컴퍼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주 희망자를 위한 지원과 체험주택 제공 지역과의 연계 강화, 새로운 삶 지원
두지역거주 추진계획	시오지리시 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지역을 오가는 두 지역 거주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다거점 생활을 지원하고, 지역과 도시 사람들이 공생·연계하는 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음 다양한 일하는 방식·생활방식의 실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

출처: NPO법인 MEGURU, https://note.com/npo_meguru/n/na2cfb7617dde?sub_rt=share_pb&fbclid=IwY2xjawleCpBleHRuA2FbQlxMAABHYgoerDdZDPdG444fcih3upid7G28yGJbu5RIfmcfJMD_Bf7VpzGJQdw_aem_hyJXQcVG9EK7YPg3p7dXA (검색일: 2025.05.13.)

- (공공) ①두지역거주자 및 빈집 소유자 대상 빈집 개보수 및 철거비 지원, ②광역적 교육 수용 (외지 취학), 커리어 교육 등 정착자 대상 교육 환경 정비, ③자율주행버스, AI 온디맨드 교통 (MaaS) 도입을 통한 교통 편의 개선, ④에어리어 매니지먼트(Area Management) 및 시가지 재생 계획 수립을 통한 주민 주도 도시재생 추진
- (민간) ①이주 및 두지역거주 희망자 대상 상담 창구 운영 및 웹 정보 제공, ②빈집 활용 희망자 및 소유자 대상 빈집뱅크(매각·임대 매칭) 운영, ③이주자 및 관계인구 유치를 위한 지역 체험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이벤트 운영
- (기타 지역주체) ①산림, 거리 경관, 고택 등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거주 프로그램 운영, ②방문·체류형 거주를 매개로 한 지역경제 순환 모델(산림 그랜드 사이클) 전개